

# 남북대화 제1호

( ~ 1973. 4)

## < 목 차 >

### 7.4 남북공동성명

#### 남북관계 개관

####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

1. 회의의 경과
2. 이후락 공동위원장 만찬연설
3.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 남북적십자 제6차 회담

1. 회담의 경과
2. 이범석 한적 수석대표 기자회견

#### 기 타

1. "북한은 이산가족찾기를 바라는가"
2. "조총련 단원이 본 북한"

## 7.4 남북공동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를 보았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북과남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련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념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울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 남북관계 개관

1972년 7월 4일 상오 10시, 남북으로 갈라져 4만세기를 살아 온 5천만 한국인들은 박수로 새 시대의 도래를 반겼고 전세계는 경탄의 눈길을 한반도에 모았다.

남북한은 서울과 평양에서 7·4남북공동성명을 동시에 발표한 것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긴장을 해소하며 「우선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민족의 단결을 도모하고」 나아가 분단조국의 통일을 자주적 평화적으로 달성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한이 남북쌍방간의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 ① 상호 중상·비방의 중지, 대소간 무력도발의 지양, 군사적 충돌의 방지
- ② 쌍방간의 다양한 여러 가지 교류의 실시
- ③ 인도적 남북적십자회담의 조속한 성공 지원
- ④ 우발적 군사사고의 미연 방지와 남북간의 여러 가지 문제들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남북 직통 전화의 가설 운용
- ⑤ 서울측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평양측의 김영주 노동당 조직지도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합의했다고 내외에 천명했다.

이보다 앞서, 박정희대통령은 광복 4만세기를 맞이한 1970년 8월 15일 경축사를 통해 미·소를 양극으로 하는 진후 냉전구조의 와해와 더불어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물결을 이룬 국제현실주의의 조류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한반도 상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국의 평화통일 기반을 쌓아 올리기 위한 「평화통일기반조성구상」을 내외에 선언한 바 있다.

박대통령의 이 「8·15구상」에 입각해서 1971년 8월 12일 대한 적십자사는 북한 적십자회에 대해 인도적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했으며, 북한적십자회측에서 이를 수락하여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박대통령은 남북적십자회담이라는 인도적 차원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남북관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겨레의 비원인 분단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길을 개척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72년 5월초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비밀리에 평양으로 보내 김일성 및 그의 실제인 김영주와 일련의 회담을 갖도록 했다.

박대통령의 슬기로운 판단은 결국 전세계를 경탄케 한 7·4남북공동성명을 탄생시키기에 이른

것이다.

7·4남북공동성명은 분명 4반세기 동안 타의에 의하여 강요된 분단 속에서 서로 적대하는 이민족간의 관계보다도 더 살벌한 관계를 유지해온 남북한간에 새롭고도 희망찬 새로운 국면을 열어 놓았다.

그것은 7·4남북공동성명이 남북한의 민족적 유대를 확인하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단일민족의 차원에서 남북간에 평화적 관계를 정립하여 이를 개선 발전시키며 나아가 같은 민족으로서 나라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겠다는 민족의지를 강력하게 표현했기 때문이다.

7·4남북공동성명으로 말미암아 지리하게 끌여오던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은 1년만에 그 막을 내리게 되고 1972년 8월부터 본 회담으로 접어 들었으며, 1972년 11월에는 남북조절위원회가 정식으로 발족하게 되었다.

남북간에는 두 갈래의 대화통로가 열린 것이다. 이로써, 남북조절위원회에서는 25명, 남북적십자 회담에서는 59명이라는 적지 않은 인원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서울과 평양 사이를 오가며 엄청나게 서로 달라진 사회체제와 가치관을 서로 눈으로 익히고, 서로 만나 흥금을 터놓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얘기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로부터 1년,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에는 또 하나의 역사적 이정표가 마련되었다.

1973년 6월 23일, 박정희대통령은 7개 항목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선언하여 남북대화를 통하여 바야흐로 기틀이 잡혀가고 있는 한반도상에서의 항구적인 평화의 기초를 더욱 굳건히 하는 위대한 결단을 내린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서 그동안의 남북대화경과를 회고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며,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해서 경주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고 침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선언했다.

또 박대통령은 『우리는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대통령의 이 같은 결단은 한반도상의 객관적인 정세를 현실로서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항구적인 평화를 한반도상에 구축하며, 나아가서 진정한 평화 속에서 분단조국의 통일을 추구하려는 슬기로운 영단이며 위대한 영도력의 과시였다.

전세계는, 양의 동서를 가리지 않고, 박대통령의 결단에 찬양을 아끼지 않았다. 세계의 여론은

박대통령의 영도 아래 대한민국이 북한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노력이 현실에 입각하여 , 그리고 실현 가능하고도 국제정세에 부합하는 방법에 의하여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 남북관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평화적 통일에 이바지하려는 성실한 노력임을 올바르게 평가하게 된 것이다.

이로 말미암아 7·4남북공동성명은 더욱 빛이 나게 되었다. 남과 북간에는 이제 보다 허심탄회한 자세에 돌아가서 7·4남북공동성명정신에 충실하게 바탕해서 남북간의 오해를 덜고 불신을 몰아내며 이해와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문제를 더욱 진지하게 협의할 수 있는 여건이 더욱 보장된 것이다.

7·4남북공동성명 발표 이후의 남북대화의 경과는 결코 만족할 만한 것은 아니었다.

박대통령은 6월 23일의 특별성명에서 이제 만 2년이 가까와 오고 있는 남북대화의 성과가 기대했던 것과는 먼 것이라고 개탄했다.

박대통령은 북한측이 「통일」을 위한 대화를 일방 진행시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대외적으로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우리가 기대했던 대화의 성과를 거두기까지는 아직 많은 난관이 예상되며 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실제로 작년 8월에 시작된 남북적십자 본 회담은 그동안 여섯 차례의 본 회담을 열었지만 국제적십자 심인사업의 견지에서 볼 때 단순하기 이를 데 없는 사업인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의 사업실천방법 및 절차의 토의에서 아직 아무런 진전을 이룩하지 못하고 있다. 또 남북조절위원회도 세 차례의 공동위원장 회의의 단계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합의, 채택되고 대남·대북방송, 휴전선에서의 대남·대북 「스피커」 방송, 상대방측 지역에 대한 「비라」살포 중지 등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등 진전이 기록되었지만 정작 남북조절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 발족된 뒤로는 현안문제에 관해 아무런 합의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 공히 대화의 진전이 정돈되어 있는 원인은 쌍방의 기본 립장에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임은 물론이다.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대한민국 측은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에 관한 대한민국 측의 기본립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조절위원회가 명실 겸전하게 7·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한 남북문제의 협의·해결기구로서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위원회의 실무기능을 하루 빨리 정비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민국 측은 조절위원회는 물론 간사회의와 공동사무국의 운영세칙을 하루 속히 합의, 채택하고 공동사무국을 조속히 설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또 대한민국 측은 남북간에 장차 점차 폭이 넓어질 협력관계의 시작을 알리는 상징으로 판문점에 공동사무국 건설을 남북이 공동

으로 건축할 것도 제외하고 있다.

대한민국 측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는 상호 사상과 리념, 제도의 극단적인 차이와 6·25라는 동족상잔의 전화, 그리고 그 뒤에도 계속된 무장간첩 남과사건 등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심화된 상호 오해와 불신으로 특징지어져 있었으므로 이러한 오해와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모든 일을 한꺼번에」라든가 「어려운 일부터 먼저」라는 접근방법을 택할 것이 아니라 『쉬운 일, 비록 적은 일이라도 상호 마찰요인이 적은 일부터 시작함으로써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실적을 쌓아 올려가자』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 측은 우선 조절위원회 안에 경제와 사회·문화분과위원회를 발족시키고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폭 넓은 교류와 협력을 실천에 옮김으로써 「서로 자기 사회를 상대방에게 완전히 개방하자」는 제의를 했다.

그러나 북한측의 태도는 달랐다. 북한측은 남북관계에 있어 우선 해결을 요하는 문제로 군사문제를 들고 나왔다. 그들은 이 군사문제 해결을 대화진전의 「선행조건」으로 제기했다. 『군사문제의 우선 해결이 없이는 대화의 진전도 남북관계의 개선도 통일문제와 관련된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있을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측은 또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도로 통일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의 정당·사회단체 대표 및 각계 각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의 개최를 요구했다.

북한측은 또한 조절위원회 산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 5개 분과위원회의 일괄설치를 완강히 고집하고 있다.

북한측은 각종 운영세칙의 제정, 공동사무국의 설치 등 조절위원회의 실무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문제에는 이상하게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서울 측은 남북대화를 통하여 남북관계를 건설적 생산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몇 가지 원칙을 북한측에 제시했다.

그것은 남북 쌍방이,

- 상호 체제부정을 지양하고,
-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이해하며,
- 각기 상대방의 체제 내부문제를 비난 간섭하지 않고,
- 각기 자기 체제에 입각하여 국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며,
- 체제를 초월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가고,

○ 체제와 체제간에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한 성실한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의 제시에 대해 북한측에서는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오직 군사문제 즉 외군의 철수, 병력감축 등을 골자로 하는 「평화협정체결 선행」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적 남북적십자회담의 경우도 쌍방의 기본립장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지속되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의제 제1항의 「주소」 및 「생사」의 「확인」 및 「통보」는 이미 국제적으로 훌륭한 절차와 관례가 서 있는 전통 있는 적십자 봉사활동임을 상기시키면서 쌍방 적십자사가 중개자가 되어 적십자 국제위원회산하 심인사업본부에서 각국 적십자사에 권장하고 있는 심인서식에 준한 단일서식을 제정하여 문서교환방식에 의해 그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의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적십자회측은 이산가족·친척 심인사업실시의 「선행조건」으로 대한민국의 ①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② 반공단체해산, ③ 반공정책 포기 등 소위 「법률적, 사회적, 조건·환경 개선 선행」 주장을 내놓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측은 주소와 생사의 확인과 통보도 적십자가 굳이 개입할 필요없이 당사자 본인이 직접 상대방 현지에 가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찾도록 하자고 주장하고 있으며 또 이른바 「적십자료해 해설인원」을 상대지역의 리 또는 동에 1명씩 파견하자는 주장을 내놓았다.

또 북한 적십자회 측은 이산된 가족과 친척을 찾는 당사자나 협조자, 관계자 그리고 소위 「료해해설인원」들이 상대측 지역으로 갔을 때 언론·출판·집회·통행의 자유와 모든 편의를 보장하며 그들의 인신과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권을 인정하라는 등 일종의 치외법권을 인정할 것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어떠한 각도에서 보더라도, 북한 적십자회에서 의제 제1항과 관련해서 내놓은 이러한 제안은 의제 제1항의 사업을 순수한 인도적 사업으로 상정해서 내놓은 것이라고는 결코 볼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히 대한민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정치적 주장인 것이며 적십자 봉사활동 수행에 있어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념적 논쟁의 개입을 금지하는 적십자원칙에도 명백히 어긋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남북조절위원회나 남북적십자회담이나 남북쌍방이 가지고 있는 기본립장에는 이상에서 본 것과 같이 커다란 거리가 있는 것이다.

적십자회담에서 북한측이 내놓고 있는 「법률적, 사회적, 조건·환경 개선」 선행 주장이나 「적십자료해 해설인원」 파견주장이라든가, 남북조절위원회에서의 북한측의 군사문제 우선 해결고집 등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는 것은 대화를 성공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확히 음미해 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들인 것 같다.

남북대화가 본 궤도에 올라 남북관계의 실천적인 개선이 이루어지기 시작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그들의 폐쇄사회를 개방하고 국내외의 정세에 현실적으로 적응하며 소위 「혁명」과 「투쟁의 로선」이 현실적으로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하나의 「환상」임을 깨닫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대화의 당면한 제일의적인 과제도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비현실적인 「환상」이 환상임을 깨달도록 해주는 데 있는 것이다.

이러한 「환상」이 깨질 때 비로소 남북대화는 착실한 전진을 시작하여 민족의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조국의 평화통일에 이르는 길을 넓게 열어 놓게 될 것이다.

남북대화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는 특히 대화가 본격화된 7·4남북공동성명 이후 1년간의 대화의 궤적이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족의 염원이 걸려 있는 남북대화는 박대통령이 6·23특별성명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꾸준히 참고 기다리는 인내와 대화의 통로를 소중하게 가꾸고 키우는 성실한 자세로 이끌어 나감으로써 7·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한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남북대화 주요 일지>

72. 7. 4 남북공동성명 서울과 평양서 동시발표

※ <기본정신>

- 전쟁 재발 억제
- 민족적 단결 모색
- 평화통일 촉구

<합의사항>

- 상호 중상·비방 중지, 무력도발중지, 군사적 충돌방지
- 다방면적 교류 실시
- 적십자회담 적극 지원
- 서울-평양 직통전화 가설 운용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운영 (공동위원장 : 서울측 이후락 중앙정보부장, 평양측 김영주 조직지도부장)

72. 8. 11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종결

72. 8. 22 남북을 왕래하는 남북적십자회담 관계인원의 신변 안전보장 성명 발표

- ※ 서울측 : 이후락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 평양측 : 사회안전성

72.8.29~9.2 남북적십자 제1차본회담(평양)

- ※ 쌍방대표 7명, 자문위 7명, 수행원 20명, 수행취재기자 20명 (한적 수석대표 이범석, 북적 대표단장 김태희)

72.9.12~16 남북적십자 제2차 본회담(서울)

72. 9. 28 이후락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남북관계의 대국적인 취재보도를 요망하는 공한을 5개 국내언론단체에 발송

72. 10. 12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차회의 (판문점 : 서울측 이후락 공동위원장, 평양측 박성철 공동위원장 대리 참석)

72.10.23~26 남북적십자 제3차 본회담 (평양)

※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토의 개시

72.11. 2~4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회의(평양)

※ 참가인사

서울측 : 이후락 공동위원장

장기영 전부총리

최규하 대통령특별보좌관

강인덕 중정제9국장

정홍진 중정협의조정국장

평양측 : 박성철 공동위원장대리

유장식 노동당조직지도부 부부장겸 대외 사업부장

이경석 내각참사

한웅식 노동당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직속책임지도원

김덕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직속책임지도원

<합의사항>

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명교환

나. 대남·대북방송, 휴전선대남·대북 확성기 방송, 상대측 지역에 대한 「비라」 살포, 1972 11. 11 영시 기해 중지키로 합의

<기타행사>

김일성과 회담

서울측 이후락공동위원장과 4명의 보좌단 참석, 평양측 김일성외로 김일부 수석, 박성철 공동위원장 대리, 김중린 노동당대남사업부장, 유장식 조직지도부 부부장 등 배석

72. 11. 11 영시를 기해 대남·대북방송 중지, 휴전선 「스피커」 방송 중지, 상호 「비라」 살포중지에 관한 합의 발효

72.11.22~24 남북적십자 제4차 본 회담(서울)

72. 11. 30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3차 회의(서울)

72.11.30~12.2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회의 (평양측 이경석 내각참사가 이완기 내각참사로 교체된 외로는 쌍방 모두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참가자 전원이 조절위원으로 확정)

- 73. 3. 10.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간사회의 (판문점 판문각)
- 73. 3.14~16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 (평양)
- 73. 3.20~23 남북조절위원회 제5차 본 회담 (평양)
- 73. 4. 24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간사회의 (판문점 자유의 집)
- 73. 5. 23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간사회의 (판문점 판문각)
- 73. 6. 10 북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회의 합의 사항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상의 4개 지역에서 확산기에 의한 대남 방송 일시 재개
- 73. 6. 11 북한측, 직통전화를 통해 상호 중상·비방중지를 재제의. 서울측 이를 접수
- 73. 6.12~14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 (서울)
- 73. 6. 23 박정희대통령 「평화통일외교선언」 발표

##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

### 1. 회의의 경과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는 1973년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2박3일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평양측 일행 25명(위원5명, 수행원 10명, 보도진 10명)은 6월 12일 상오 10시 판문점을 통과하여 회의개최 장소인 서울에 들어왔다.

평양측 위원 5명은 영빈관에, 수행원과 보도진 20명은 타워호텔에 숙소를 정했다.

평양측 일행은 6월 12일 제1일 회의와 6월 13일 제2일 회의를 마치고 6월 14일 상오 10시 판문점을 통과하여 평양으로 돌아갔다.

제1일회의는 6월 12일 하오 2시부터 약 30분간 영빈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쌍방의 회의참석자는 다음과 같다.

서울측 : 공동위원장	이후락
부위원장	장기영
위 원	최규하
위 원	강인덕
간사위원	정홍진
평양측 : 공동위원장대리	박성철
부위원장	유장식
위 원	이완기
위 원	한웅식
간사위원	김덕현

제1일 회의에서는 평양측의 기초발언만 듣고 산회하였는데, 평양측은 지난 3월 평양에서 개최되었던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회의 때와 같은 내용의 주장을 되풀이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평양측은 군비축소, 병력감축, 군장비도입 중지, 미군철수, 평화협정체결 등 소위 군사 5개 항목의 선결, 정당·사회단체 등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되는 정치협상회의 개최,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5개분과위원회의 일괄 설치 등 3가지 제안을 되풀이 한 것이다.

제2일 회의는 6월 13일 하오 3시부터 하오 5시까지 영빈관 회의실에서 열렸다.

제2일 회의에서는 서울측의 기초발언을 듣고 뒤이어 쌍방의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서울측은

첫째로, 조절위 간사회의 및 공동사무국의 운영세칙을 조속히 결정하여 조절위의 운영을 정상적인 본 궤도에 올려놓을 것.

둘째로, 회의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시설을 구비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공동사무국 건설을 공동건축할 것.

셋째로,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상호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에 대하여 정직할 것.

넷째로, 조절위 안에 경제와 사회 문화분과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여 경제분야에서 남북간에 광범한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경제적으로 공동리익을 추구하는 조치를 실천에 옮기며, 사회·문화분야에서도 광범한 교류를 실시하여 사회적 공동리익과 편리를 추구하고 민족고유의 문화를 창달하는 사업들을 실천에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뒤 기자회견에서, 평양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첫째로, 남북간의 합의사항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을 만큼 남북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면 군사문제등도 자연히 다루어지게 될 것이며,

둘째로, 각계각층 인사들의 정치협상을 개최하자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적 「슬로건」에 불과하며, 또한 이 문제는 장차 정치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문제인 것이며,

셋째로, 분과위 설치에 대해서는 「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각 분과위는 조절위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5개분과위는 점차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백히 해 놓고 있으며, 또한 회담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만큼 일방이 2개를 주장하고 타방이 5개를 주장할 때 그 2개가 공통사항일 경우에는 공통되는 그 2개에 먼저 합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사리에 속하는 것이라고 날날이 그 부당성을 지적해 주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양측은 군비축소 등 군사문제 선결과 5개분과위 동시 발족 등 그들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서울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하므로써 아무런 진전도 보지 못한채 회의 일정을 끝냈다.

## 2. 이후락 공동위원장 만찬연설

일시: 1973. 6. 12

장소: 서울 삼청각

박성철 공동위원장대리선생,  
평양에서 오신 귀하신 동포 손님 여러분, 또 내빈 여러분!

오늘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를 이곳 서울에서 갖게 되어 남북이 이렇게 다시 자리를 같이 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또 의의있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남북간에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지도 벌써 한돌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구체적인 남북관계의 진척은 이렇다할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으며, 나는 이를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은 6·25 동란이라는 동족상잔 4반세기에 궁한 남북단절은 동족인 우리 사이에 이민족처럼 많은 불신과 오해, 증오와 회의들을 낳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엄연한 현실을 냉철하게 음미함이 없이, 한꺼번에 모든 것을 잊고 「과거는 과거, 장차는 장차」로 단순한 한 과정으로 쉽게 넘기기에 너무나도 쓰라리고 깊은 민족의 상흔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나는 오늘의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과연 해야 할 일이 무엇이며, 또 무엇을 하는 것이 조국을 위해 가장 효과적일 것이냐 하는 문제들을 이 자리를 빌어서 제기함으로써 서울측 공동위원장으로 남북관계에 대한 나의 소신을 피력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남북 상호간에 불신과 오해를 몰아내고 상호 이해와 신뢰의 새로운 남북관계의 바탕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우리 쌍방이.

- 7·4남북공동성명을 민족의 평화현장으로 성실히 지켜 나가야 하며,
- 인도적 적십자회담을 하루바빠 성사시켜 이산가족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어야 하며,
- 우리 남북조절위원회의 경제분과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남북간에
  - 경제인의 교류
  - 물자의 교류

- 과학기술의 교류
- 자원의 공동개발
- 상품전시회의 교환개최
- 상사의 교환 상주 등

경제적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조치들을 실천에 옮겨야 하며,

● 또 사회·문화분과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켜 남북간에

- 학술, 문화분야의 교류
- 체육분야의 교류와 국제경기 단일팀의 구성
- 영화·무대예술의 교류
- 고고학과 민족사의 공동연구와 개발
- 고유언어의 보존을 위한 연구
- 각종 사회인사와 단체의 교류
- 기자의 교류와 상주
- 서신·전신·전보등 통신의 교류
- 관광분야의 교류등

사회적 공동이익과 편리를 추구하며 민족고유의 문화를 창달하는 사업들을 실천에 옮겨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의 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남북 쌍방이 이렇게 구체적인 교류와 협력의 분야들을 개척함으로써 「서로가 서로의 사회를 서로에게 완전히 개방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상호간에 불신과 오해를 추방하고 남북간에 새로운 이해와 신뢰의 관계를 구축하는 첩경이라고 확신하는 바이며, 그렇기 때문에 남북 상호간의 「상호 사회 개방」이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보다도 앞서야 될 과제라는 나의 소신을 재삼 강조하는 바입니다.

최근 평양측에서는 평화협정, 군축, 정당·사회단체 연석회의 등 남북간의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하자는 식의 말들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과제들이 언젠가는 남북간에 토의되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는 이미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우리의 남북관계는 남달리 비극적인 과거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은 방법들에 의해 상호 이해와 신뢰의 바탕을 먼저 구축함이 없이 지금 당장 그러한 문제들에 대한 토의에 들어간다면, 그것은 오히려 대사를 흐르치기 쉽다는 나의 걱정스러운 견해를 밝히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거니와, 우리가 경제와 사회·문화분야에서 광범한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상호의 사회를 완전 개방」 하는 일, 이것이야말로 상호이해와 신뢰의 바탕 마련을 위해 당면한 우리의 과제이며, 또 남북관계의 참된 개선, 발전을 바라는 우리 쌍방의 성실한 자세를 겨레 앞에 보여 줄 수 있는 쉬운 일이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는 바입니다.

남북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쉬운 일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자세, 이것이 우리로서 바람직한 자세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민족장래의 운명이 걸려있는 큰 일을 하면서 쉬운 일은 버려 두고 구태어 어려운 일에 집착하여 우리의 전진을 스스로 가로 막을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박성철 공동위원장대리선생! 그리고 평양에서 오신 동포여러분!

나는 우리가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이번 회의에서야말로 남북관계의 전진을 위해 큰 성과를 이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 마지않는 바이며, 또한 여러분의 서울 체재가 즐거운 것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는 바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남북의 동포 여러분!

남북조절위원회의 회담성공을 위하여, 또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여러분, 다 같이 건배합시다.

### 3.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일시: 1973. 6. 14. 10:00

장소: 서울 영빈관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이후락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를 끝마쳤습니다. 대충 제가 먼저 회담의 경과와 내용을 가능한 한 소상히 보고 드리고 이어서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주장한 것은 지난번 평양 제2차 회의에서 주장하던 내용과 거의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그것은 즉 세 가지인데, 첫째 하나는 외군을 몰아내고 군비를 축소하고 외국에서 무기를 가져오는 것을 중지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평화협정을 먼저 체결하자 하는 주장이었고,

둘째는 정당, 사회단체, 각계각층 인사를 망라한 광범위한 정치협상을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개 분과위원회를 동시에 다 발족시키자 하는 것이 그쪽의 세 번째 주장이었습니다. 먼저 그쪽의 주장에 대해서 우리측의 견해를 밝히기 전에 우리가 주장한 네 가지의 제안들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는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해서 거기에 수반될 운영세칙을 아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운영세칙 3가지를 먼저 합의보자 하는 것이고

둘째는 관문점에다가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사무국용의 건물을 공동으로 빨리 건립하자, 이것이 둘째 주장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실제로 회의를 하자면 응당 운영세칙과 그 회의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시설이 마련되어야만 하는데 이것은 가장 사무적이고, 실무적이고 또 우리가 회의를 할려면 응당 갖추어야될 요건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째로 제가 주장한 것은 우리 남북 쌍방이 서로 합의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불신풍조를 몰아내고 또 우리가 서로 보다 정직하자 하는 것이 나의 세째 제의였습니다.

그 이유는 7·4 남북공동성명이나 또는 조절위원회 합의사항 이후에 그 합의사항이 그대로 지켜지지 않고 대남방송이나 대남비난이나 또는 폭력혁명지령이나 무장간첩 사건이나 여러 가지 합의사항에 어긋난 행위가 있는데 우리가 이러한 것을 하지 않고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해야만 되는 것이며, 나아가서 보다 더 정직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무엇이나 하면 간첩사건이 났을 때 이것을 통고를 하면 "그것은 우리가 보낸 것이 아니다", "남쪽에서 날조했다", 이런 식의 불성실하고 부정직한 태도를 가지고는 회담이 되지 않는다. 회담을 하려면 보다 더 정직하게, 만일에 간첩을 보냈으면, "어떻게 어떻게 해서 보냈다", "미안하다". 이러한 정직성을 수반한 자세에서 회의를 진행시키지 않으면 회담의 진전이 어렵다 하는 의미에서 나는 이것이 의제로서 가당하지 않을지

모르지마는, 그러나 회담을 진지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어느 모로는 어떠한 의제보다도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네째 나의 주장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경제분과위원회와 사회·문화분과위원회 이 두 분과위원회를 먼저 구성을 해서 발족을 시키자 하는 것이 나의 제의였습니다.

이것은 남북조절위원회 합의서에 보면 5개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서에 말하기를 분명히 "각 분과위원회는 사업의 진척에 따라서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만큼 5개 분과위원회 중에서 우선 우리 국민들의 생활에 가장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그러한 경제와 사회·문화 분과위원회부터 설치를 해서 운영해 보자 하는 것이 저의 제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무엇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미 제가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이 문제를 나열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남북교류를 넘원하고 있느냐 하는 우리의 진의를 새삼 밝혀 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경제분과위원회나 사회·문화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우리들이 할 일을 나는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것은 첫째, 경제인을 교류시키자, 그리고 물자의 교류, 과학기술의 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서로의 상품전시회 교환개최, 상사의 교환 상주, 그리고 학술 문화분야의 각종교류, 체육분야의 교류와 국제 단일경기팀의 구성, 그리고 영화 무대예술의 교류, 고고학과 민족사의 공동연구와 개발, 또한 고유언어의 보존을 위한 연구, 각종 사회인사와 사회단체의 교류, 기자의 교류와 기자의 상주, 서신·전화·전보 등 통신의 교류, 관광교류, 그 이외에 적십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인도적 문제해결, 이러한 등등을 제의했습니다.

군사문제도 급하고 정치문제도 급하지만, 먼저 우리 국민대중들의 생활에 가장 관계가 있는 이러한 교류부터 먼저하자, 나아가서 우리가 서로 흥금을 터 놓고 쌍방의 사회를 완전히 상대방에게 개방하는 것만이 남북의 불신을 몰아내고 신뢰를 되찾고, 또 서로 믿는, 또 서로 이해하는 첫 걸음이다 하는 것을 저는 강조를 했던 것입니다.

이어서 어제 회의에서 그쪽에서 제안한 평화협정, 또는 정당 사회단체 교류 또는 5개 분과위원회의 동시 발족 문제 등에 대한 나의 답변으로서 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근본적인 취지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화협정을 체결할 시기는 언제냐, 그것은 남북간에 모든 국민들이 「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다시는 전쟁이 없을 것이다」 하는 남북간에 확고한 신념적 신뢰가 조성되었을 때 다시 말하면 우리 남북간에 한번 약속하면 절대 서로 지키더라 하는 그러한 실증을 국민 앞에 보이고 또 국민이 안심을 하고 있는 그러한 바탕 위에서 평화협정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지금 이미 합의된 사소한 문제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이러한 판국에 더더군다나 국민의 사활에 직결되는 평화협정을 그렇게 단순히 체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의 체결은 보다 더 신뢰의 바탕을 구축하고 난 뒤에, 또 남북간의 여러 가지 합의사항은 모두 다 성실히 지켜지더라 하는 실증을 보인후에야 이 협정은 거론될 문제이지, 지금 간단한 문제에 남북에 합의를 해 놓

고도 지켜지지 않는 그러한 여건 속에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돌한 일이다. 하니까 이것은 내가 평화협정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네들의 발언가운데 『이렇게 가다가는 자칫 잘못하면 「두개의 한국」의 가능성도 있다』 하는 그러한 어구가 있어서, 나는 「두개의 한국」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북한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서 그 우려를 갖게 된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공관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미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북한이 외교관계를 갖겠다고 파고 드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결국 「두 개의 한국」을 가져오는 결과 밖에 초래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더군다나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국제기구에 북한도 들어 올리고 애쓰고 있고 심지어 그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UN의 기구인 세계보건기구에까지도 꼭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러한 자세는 결국은 「두개의 한국」을 그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니냐하고 주의를 환기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간단하게 『그것은 「두개의 한국」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답변을 하더라는 것을 첨가보고 드립니다.

그 다음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의 인사를 망라한 정치협상을 하자는 문제에 대해서는 나는 이렇게 그 부당성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완전히 사회를 개방하고 경제분과위원회와 사회·문화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면 그중에 대부분은 해결될 문제가 아니냐, 또 장차 정치분과위원회가 설치되면 그것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각계각층의 모든 사람을 모아서 정치협상을 하자는 것은 결코 어떠한 결과를 진지하게 추구하는 그러한 회담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의 정치적 「슬로건」적인 그러한 결과밖에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진정 우리가 조국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결과를 추구하려면 막연하게 대다수의 인사를 무책임하게 모아서 왈가왈부, 중구난방,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조국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다만 서로가 북은 북, 남은 남이 조절위원회의 회의에 앞서서 많은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해서 그것을 대변하는 자세로서 회의에 임하는 것이 진정 조국문제를 푸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각종 분과위원회를 탄생시키고 각종 회의를 탄생시키는 산파역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각 분과위원회나 또는 각종 회담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는 것은 그 분과위원회나 회담의 역할에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앞으로 많은 각종 회담을 알선을 하자, 그러나 조절위원회라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각종 회의나 각종 분과위원회를 탄생시키는 산파역을 하는 것이지 조절위원회 몇 명이 앉아서 모든 것을 결론내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데 꼭 정치협상 같은 그러한 좁 범위가 큰 정치회담이 필요하다면 응당 정치분과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논의될 문제다. 그 분과위원회는 30명이 되든 50명이 되든 상호 합의해서 결정할 문제이고, 또 정치분과위원회가 또 새로운 정치 회담을 발족시킬 것이냐 아니면 분과위원회가 직접 할 것이냐 하는 것도 그 분과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가 아이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먼저 그러한 쌍무적 정치협상보다도 우선 우리끼리 조절위원회를 본궤도에 올리는 이러한 노력이 아쉽다 하는 것으로 저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 다음에 5개 분과위원회를 같이 발족시키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것은 실질적으로 지난번 내가 이북에 가서 이북의 최고위층을 만났을때나, 또는 우리 박대통령께서 주신 교시도 우리가 쉬운 것부터 하나 하나 축적을 해 나갈 때 회담의 성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지금 당장 군사분과위원회, 정치분과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오히려 대사를 그르치기 쉽다. 하니까 우선 상대방이 다섯 개를 요구하고 우리가 두 개를 요구하고 있다면 회담은 상대가 있는 만큼, 쌍방간에 공통분모가 되는 두 개, 즉 경제와 사회문화 분과위원회 이것부터 먼저 하는 것이 타당하고, 거기에 나아가서 그 진척에 따라서 또 탄 분과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면 그때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저의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총과 칼에 달려 있다 하는 것이 그쪽의 주장이었습니다. 하니까 『총과 칼을 놓자, 총과 칼을 놓으면 상호의심은 서로 풀린다』, 그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는 그것을 반대로 본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나는 『총과 칼을 다 놓으면 서로 오해나 의심이 풀린다』 그렇게는 보지 않는다. 오히려 『서로 오해나 의심을 완전히 풀기만 하면, 총과 칼이라는 것은 놓지 말아라 해도 놓게되는 법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쌍방간에 그러한 가치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회담상대가 있고 또 회담을 진지하게 물고 나가기 위해서는 내가 더 이상 회담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옳다 생각해서 이상 대충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회담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회담에도 아무런 합의사항이 없으니까 회담은 진전이 없었느냐, 나는 그렇게는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남북간의 회담이라는 것이 한 두 번에 해결될 문제도 아니고, 또 합의가 나왔다고 해서 큰 진전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합의가 없다해서 큰 진전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나는 이번 회의에서 쌍방이 이상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두 번이나 진지하게 의견을 교환했다는 그 자체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에 큰 진전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회의 때에는 어느 한쪽의 의견이 관철되거나, 또는 어떻게 대안이 관철되거나,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하튼 우리는 꾸준히 노력을 해서 좋은 결과가 있게끔 힘을 다할 것을 우리측 위원일동을 대표해서 공동위원장으로 국민여러분들에게 다짐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나의 보고를 끝마치고 여러분들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 북쪽에서는 간첩을 남파하고 그리고 휴전선일대에서 대남방송을 재개하는 등 7·4공동성명에서 천명한 여러 가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토의가 있었습니까?

답 :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토의를 보다 깊게 했습니다. 토의를 깊게 했고, 또 사실 회의가 있기 전날 11일에 『우리 다시는 그런일 하지 맙시다』 하는 저쪽의 제의가 있어서 합의를 했는데요, 여하튼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진지한 토의가 있었고, 그런 일을 하지 않게끔 새삼 다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좀더 두고 보도록 합시다.

질문 : 조금 전에 밝히신 바와 같이 남북사회의 완전개방, 경제·사회 문화분과위원회의 설치, 물자·학술·통신 등의 교류, 상호 방문 등 우리측 제의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답 : 평양측 반응을 그대로 소개하는 것은 내가 대단히 말하기 곤란한데요, 여하튼 뭐 군사문제부터 먼저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은 원칙적으로 좋은 것인데 여하튼 군사문제부터, 말썽나는 것부터, 의논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는 남북문제를 이렇게 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회를 개방을 해서 서로가 속속들이 서로의 체제를 보고 느끼고 하지 않는 한 남북문제는 나는 진전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총이나 칼을 놓는 것도 좋지만 서로의 체제를 모르고, 서로의 내부를 모르고, 서로의 사회를 모르고, 서로를 개방하지 않는 마당에, 그러한 총칼을 놓는 그러한 문제라는 것은 내가 보건대 이것은 너무나 비현실적이며, 더군다나 우리 한반도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아주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그분들은 총을 놓고 칼을 놓읍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지금 한반도의 입장에 있어서 총도 놓고 칼도 놓읍시다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감상적인 표현, 시적인 표현이지, 결코 한반도 정세를 냉철히 본 정치적인 표현은 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사회를 완전히 개방하는 것은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통일문제를 앞당기는 근본적인 것이다 하는 나의 신념에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질문 : 이번 회담중에 적십자회담의 촉진에 관한 어떠한 토의가 있었는지, 만일 있었다면 어떠한 내용의 것이 있었는지 말씀을 해주십시오.

답 : 적십자회담의 촉진에 관해서는 원칙적인 토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빨리 성사시킵시다』 하는 원칙적인 토의이었고 또 그쪽에서도 「그렇게 합시다」 하는 원칙적인 견해이었습니다. 요 다음에 적십자회담이 있으니까 그때 보아야만 진척도를 알 수 있겠습니다.

질문 : 이 회견의 서두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통일을 지향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대화에서 평양측이 우리와 정식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와 소위 외교관계를 맺는 현상은 다시 말해서 「두개의 한국화를 사실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를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 문제에 관한 그 토의에 평양측의 반응은 어떠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구체적으로는 그것이 의제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았는데 그 문제가 대두된 것은 북한측에서 발언한 기본 입장에서 그 용어가 한 구절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보고 주의를 환기시켰어요. 「두개의 한국」을 지양하고 통일해야 되는데 실제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지 않지 않느냐, 예를 들면 우리가 이미 외교관계를 갖고 있는 그러한 국가들에 가서 북한이 우리도 외교관계를 가집시다 하는 것은 결국은 「두 개의 한국」을 자인하고 또 「두 개의 한국」으로 고정화시키는 결과가 되지 않느냐, 더군다나 수많은 국제기구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데 그들이 자꾸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진정 한국은 「하나의 한국」이라면 나는 그런 노력은 하지 말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쪽의 대답은 그것은 「두개의 한국」을 고정시키는 것이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질문하신 분의 질문취지와 같이 그네들이 벌써 「두 개의 한국」으로 가고 있다는 그러한 사실은 내가 보건대 그쪽에서 그것이 그렇지 않다고 말은 하더라도 행동은 결국 그렇게 흐르고 있다는 그 사실은, 이것은 질문하신 분이나 답변하는 나 자신이나 부정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것이 나의 직감입니다. 여하튼 그쪽의 답변은 「두개의 한국」으로 고정시키는 정책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은 하더군요. 그러나 그렇게 파고드는 외교적인 노력의 결과는 무엇이나, 결국 「두개의 한국」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내가 답변하기 전에 질문하신 분이 그러한 경향을 시인하고 질문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하지 않겠습니다.

질문 : 평양측 공동위원장이인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이 이번 제삼차회의에도 불참했는데 어떤 소식이라도 듣고 계시는지요?

답 : 공식적으로는 역시 병중이라는 통보와 소식을 받았고 그 이상 구체적인 소식은 못들었어요. 처음부터 오늘까지 아직도 병중이다 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질문 : 이번 회의에서 이후락공동위원장께서 조절위원회 운영 세칙, 간사회의 운영세칙, 공동사무국 설치문제 등을 제의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쪽의 반응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쪽의 반응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 : 내가 그쪽을 깐다든지, 그쪽을 갖다가 예를 들면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발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질문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예를 들면, 어떤 법이 나오면 그 법에 따른 시행령이 나오고 시행령이 나와야만 법이 운영되는데 지금 현재는 시행령 없는 법 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 조절위원회 회의입니다. 그러니까 진정 이 조절위원회를 갖다가 착실하게 전진시킬려면 그 조절위원회를 밑받침할 수 있는 운영세칙을 만들고 또 공동사무국을 만들고 하는 것이 나는 탄 사업보다도 가장 앞서야 될 기본적인, 또 필수적인, 또 응당해야 될 그러한 우리 기초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반응이 없고 그저 군사, 정치, 여기에 대해서만 주장합니다. 운영세칙 같은 것은 대부분 이미 서명하면 될 수 있을 정도의 합의에 가까운 내용이 되어 있는데 결국 그런 문제는 실제 관심이 없는 것 같이 보였고 다만 정치문제, 군사문제, 정치협상, 이런 데에만 관심을 두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조절위원회가 지금까지는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확실히 조절위원회가 본궤도에 올라가려면 운영세칙이나 공동사무국 건물 공동건립부터 빨리 해야된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을 했습니다. 또 그쪽에서도 원칙적으로 동의는 하면서도 결국 주장의 초점은 정치협상이라든지 평화협정 이런 것이었다는 것을 소개드립니다.

탄 질문이 없으십니까. 탄 질문이 없으시면 내가 끝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조절위원회가 대략 9월경에 있겠지요. 그때까지 남북쌍방이 보다 더 연구를 하고 또 우리가 두 번이나 진지한 의견교환을 한 만큼 다음 회의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진전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나는 이번 회의에서 아무런 합의가 없었다고 해서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합의가 되든 안되든 간에 꾸준히 우리의 기본입장을 주장하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듣고 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도 착실하게 해결해 나가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장할 것을 주장해서, 기본입장을 고수해 가면서 진지하게 남북간의 통일문제, 평화통일, 이것을 다루어나갈 나의 결의를 한번 더 다짐하면서 일응 3차 회담의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남북적십자 제6차 회담

### 1. 회담의 경과

제6차 남북적십자회담은 73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3박 4일의 일정으로 서울에서 열렸다.

북한적십자회 대표단 일행 59명(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기자단 25명)은 제6차 본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5월 8일 오전 10시 판문점을 거쳐 서울에 도착하여 타워호텔에 숙소를 정했다.

북적 대표단 일행은 5월 9일 제1일회의와 5월 10일의 제2일회의를 마치고 5월 11일 평양으로 돌아갔다.

제1일회의는 5월 9일 오전 10시부터 1시간 40분 동안 대한적십자사 회담사무국 대회의실에서 진행되어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의 실천절차와 방법에 대한 토의를 전개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적측은 제3차 본회담이래 의제 제1항 실천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줄곧 주장해 온 「남한에서의 법률적, 사회적 장애 제거와 조건 환경 개선」과 「요해해설인원 파견」 등을 한데 묶은 이른바 「수정제안」이란 것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도에 의하면 북한측은 이 수정제안에서 의제 제1항의 「선행조건」으로

첫째, 대한민국이 ①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철폐하고 ②모든 반공단체들을 해산하며 ③반공정책을 포기함으로써 『법률적 사회적 조건·환경을 개선하라』고 주장했다.

북적 대표단은 둘째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과 친척의 주소 및 생사의 「확인」과 「통보」는 『적십자가 굳이 개입할 필요없이 당사자 자신이 상대측 지역으로 가서 자유롭게 다니면서 찾고자 하는 가족과 친척을 알아내면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측은 또한 이들 당사자는 물론 그들의 협조자 및 관계자들이 상대측 지역으로 갈 때는 그들에게 「언론·출판·집회·통행의 자유와 모든 편의」를 보장하고 「그들의 인신과 휴대품의 불가침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북적 대표단은 셋째로 쌍방이 서로 상대측 지역의 리 또는 동 단위로 1명씩 소위 「요해 해설인원」을 파견하여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실태를 요해하며 오해와 불신임을 제거하고 상호 신뢰와 민족적 단결과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하며 흩어진 거래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 사업을 보장하기 위한 해설사업을 하고 갈라진 거래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효과적인 방도를 연구 제기하게 할 것』을 제의했다.

이상과 같은 북적측의 새 제안은 말이 새 제안이지 그 내용은 종래의 제안을 그대로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었다.

제2일 회의는 5월 10일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동안 속개되었는데 이범석 대한적십자사 수석대표는 북적측 제안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의제 제1항의 실천방안으로 제3차 본회담(72. 10. 24)때 한적측이 제안한 4개항목이 국제적십자 기본원칙과 관례, 인도주의정신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거듭 설명하면서 의제 제1항의 실질토의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을 촉구하였다.

한적측은 의제 제1항 사업이 이산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당초의 의뢰인에게 「통보」해 주는 단순한 사업이며 이에 관해서는 국제적십자 심인사업 활동에서 오랫동안 실시해온 훌륭한 절차와 관례가 있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한적측은 이에 따라 주소와 생사에 관한 조회를 의뢰하는 의뢰서와 조회한 결과를 통보해 주는 회보서의 서식은 적십자 국제위원회 산하 심인사업 본부에서 관용하는 양식에 의거한 단일서식으로 하며 남북적십자가 적법한 중개자가 되어 문건교환에 의해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의해 왔다.

한적 이범석 수석대표는 이번 회담에서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되는 인도적 여러사업과 그 사업의 추진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여러사업은 여하한 기존 법률적 사회적 저해를 받지 않을뿐더러 더우기 인도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적극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명백한 방침』이라고 말하고 남북적십자회담이 대한민국측의 제의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사실, 또 그동안 한쪽에서 59명씩이라는 대표단 인원이 아무런 법률적 사회적 박해를 받음이 없이 남북을 오가고 있을 뿐 아니라 그들은 그들의 숭고한 인도적 노력때문에 오히려 찬양과 존경의 대상이 되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예시하면서 회담에서 더 이상 정치문제를 둘러싼 논쟁을 벌이지 말고 적십자원칙과 정신에 입각해서 의제 항목에 대한 토의를 진행시킬 것을 북적측에 거듭 촉구하였다.

이 수석대표는 또한 북적측의 이른바 「법률적, 사회적 조건·환경 개선」 주장은 문자 그대로 대한민국의 국내 법질서에 대한 명백한 내정간섭이며 정치적 주장임을 들어 이는 적십자 봉사활동에 있어 정치적 논쟁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적십자 기본원칙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북적측은 적십자 심인사업의 원칙과 관례를 무시한 정치적 비현실적 주장을 고집하고 한적측의 합리적인 제안을 거부함으로써 제6차 본회담에서도 실질문제에 관해 아무런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다음 제7차 본회담을 7월 11일 평양에서 열기로 하고 회담일정을 모두 끝냈다.

## 2. 이범석 한적 수석대표 기자회견

일시 : 1973. 5. 11 (남북적십자 제6차회담 종료후)

장소 : 한적 회담사무국 기자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계신 내외기자 여러분!

이번 서울에서 개최된 제6차 남북적십자 회담을 원만히 끝마치게 된 것을 여러분과 더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의 지상목표가 숭고한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으로 끊어진 혈육들의 정을 잇고 이산가족과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자는데 있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일입니다.

이와 같은 남북적십자회담의 알찬 진전을 위하여 우리 대표단은 이번 회담에서도 의제 제1항에 관한 우리 제안의 정당성을 북한적십자회칙에 올바르게 이해시키고자 성실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칙은 이번 회담에서도 소위 법률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해야 되는 것이 선결이라는 그들의 중전의 태도를 고집했기 때문에 회의의 큰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뚜렷한 성과는 없었지만 그래도 양측이 허심탄회하게 서로의 기본입장과 자세를 솔직히 이야기하고 상호간에 이해를 돕기 위한 노력을 경주했다는 것은 앞으로의 회담 진전을 위하여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 그럼 첫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6차회담에서 쌍방의 기본입장을 좁히는데 있어서 5차회담때 보다 어느 정도의 진전이 있었는지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기본입장을 좁히는데 있어서는 별로 진전이 있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 간에 내세우는 그 기본입장과 자세가 서로 어느 정도의 강도성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끼고 그것을 타진하는 데에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한 기본입장을 내세우면서 그 강도를 우리가 느낄 때에 자연스럽게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책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강도에서부터 어떤 문제를 분석해 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앞으로 이 회담을 진전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 지난 3차 평양회담 때부터 문제가 되어온 환경·조건조성문제가 이번 제6차회담에서는 어떻게 토의가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북한적십자회칙에서 의제 제1항의 타결을 논하는 마당에서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여러 가지 그 장애물이 제거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야기는 3차때 시작을 해서 4차, 5차, 6차 이번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정치적인 논쟁은 적십자회담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고 이

러한 것은 논의하는 것 그것 자체가 적십자의 원칙에서 어긋나는 점이라는 것을 들어서 그 동안에 북한적십자회로 하여금 그러한 주장을 철회하도록 온갖 힘을 다 써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법률적, 사회적 장애를 제거해야 된다는 주장을 그냥 되풀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다루어서 우리 입장을 명백히 밝혀 주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되는 제사업과 그 사업의 추진 그리고 여기서 파생되는 제 사업은 여하한 기존의 법률적, 사회적 장애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인도적 자유원칙에 입각하여 적극 그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인 이상 우리 남북적회담에서 상대방의 어떠한 법률적, 사회적 문제에 관하여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인도주의회담인 적십자회담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제적십자 규약이나 적십자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한 점을 들었고 적십자는 법률적, 사회적 이러한 문제에 구애를 받지 않고 추진하는 것이 우리 대한적십자사의 전통이고 이것이 국제적십자의 전통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십자의 정신과 적십자원칙에 입각한 인도적 문제는 법률이전, 정치이전, 체제이전의 숭고하고도 절실한 인간 본연의 문제는 분명히 밝혀 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현시점에서 북한지역의 정치적, 법률적, 사회적 현실을 언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또한 분명히 해두었습니다.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있는 것은 남북적십자사업을 오로지 적십자원칙과 인도주의 정신으로 실시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이기 때문이라는 점도 또한 밝혀 두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번에 밝힌 이와같은 우리의 태도, 또는 정부의 방침은 그들이 듣고도 앞으로 계속해서 이 문제를 철회하지 않고 주장할 것인가 하는 것은 두고 보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서는 이 문제를 논의하면 회담의 진전에는 별로 큰 기대를 걸 수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 우리 대표단의 솔직한 의견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상이 다르고 정치체제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역사가 다르고 말이 전연 다른 나라 적십자사와 다른 나라 민족간에도 이산가족 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는 같은 민족끼리 같은 말을 쓰고 같은 역사를 가지고 같은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끼리도 이 사업을 이렇게 지지부진한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다마는 지금 현재까지는 이번 회담까지는 그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아직은 고집을 하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 북한적십자회는 의제 제1항에 관련한 사업으로 이 환경여건 조성 문제외에 필요한 지역에 「적십자 요해해설인원」을 파견하자는 등의 안을 내 놓았었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이에 관한 토의도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 3차때에 북적이 내놓은 안을 보면 「요해해설인원」을 필요한 곳에 파견을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한줄 반정도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래 제가 그동안 여러차례에 걸쳐서 그 「요해해설인원」에 관한 설명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대체로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무엇을 하자는 것이며 몇 사람이 어디서 등등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동안에 별로 설명이 없었습니다. 마는 이번에 거기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약간의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급을 보고서 저희 대표단이

어떠한 느낌을 가졌겠는가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중에 하나 중요한 것을 이야기 하면 그 사람들이 「요해해설인원」은 말이지요. 양측에 서로 동, 리에 한사람씩 두자는 것입니다. 동, 리에 관하여 내무부에 조사했더니 35,997명의 「요해해설인원」을 여기에 내려 보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휴대품의 자유, 통신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등을 다 주자, 저는 그 이상 더 언급을 안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안이 있었다 하는 사실만은 여러분들에게 제가 밝히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 말씀해 주십시오.

질문 : 당초에 회담쌍방은 가족 친척에 대해서 서로 굉장히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임했던 것 같은데 그동안 한적측이 가족 친척의 범위를 상당히 양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에서 이번 회담중에 가족 친척의 범위가 어떻게 정립됐는지 혹은 진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 아직까지 없습니다. 이번 회담에서도 없고 지금 가족, 친척은 한마디로서 간단합니다. 저쪽에서는 무어라고 이야기 하느냐 하면 신청자가 그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 본인의 호소에 의한다. 우리말로 하면 신청자가 이 사람은 내 가족이다 하면, 이 사람은 내친척이다 하면 이것으로 성립이 된다. 우리는 그것은 안된다. 피신청자도 그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러해야만 양측의 자유의사가 전부 존중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양측 주장이 아직도 맞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번에도 가족 친척의 범위에 대해서는 진전이 없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문 : 이번 이산가족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기 위한 그밖의 구체적인 방법이 이번 회의에서 토의되었는지 그리고 토의가 되었다면 내용이 어느정도 진전이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답 : 이 알아내기 위한 방법은 지금까지 매회의때마다 논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알아내고 알리는 방법을 서면으로 신청을 받아 가지고 각 적십자사가 그 서류를 서로 교환해 가지고 그 각 적십자사가 그 서면의 의뢰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서 다시 교환하는 소위 문서교환 절차에 의해서 알아내며 알려주자 이것이 우리 주장인 것입니다. 거기서는 무엇이라고 주장을 했느냐 하면 자유스럽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알아내자 그것입니다. 간단히 이야기해서 그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가 예를 들어가면서 이야기하고 설명을 가했습니다마는 5차에까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전연 의견이 접근되는 징후가 없었는데 이번에 저 사람들이 알아내고 알리는 방법에는 자유로히 왔다 갔다하면서 소위 왕래하는 방법도 있고 또한 간접적이고 보충적인 방법도 있을 수 있다하는 표현을 함으로써 우리의 안의 타당성도 약간은 인정할 수 있다하는 정도의 태도로 나왔습니다.

질문 : 지금까지 말씀해주신 가운데에서 북적측이 적십자회담을 적십자적 테두리밖으로 이끌어 가면서 난관을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느껴지는데 그 이유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걸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답 : 글썬요. 북한적십자측이 남북적십자회담을 적십자테두리 밖으로 끌고 나간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순수한 적십자회담안에서 논의해서는 아니될 문제, 제기해서는 안되는 문제들을 들고 나오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난관이다. 그것이 사실 앞으로 회담을 진전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큰 「데드록」로 될 수 있다. 그거 왜 그사람들이 그러한 태도를 취할 것인가 취하고 있는 것인가 이것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기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아마 대동소이할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회담을 담당하고 있는 본인으로서 이야기를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한 저의 코멘트는 이 다음에 회담이 끝난 다음에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 기 타

### 1. "북한은 이산가족찾기를 바라는가"

(일본에서 발간되는 「내외특신」은 1973년 5월 1일자로 발간된 동지 5월호에 "남북통일을 바라지 않는 북한"이라는 제하의 정치평론을 게재하고 남북한 적십자단체간의 인도적 남북적십자회담이 교착된 원인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다 - 편집자)

지난 3월 22일 박성철 북한 부수상은 제5차 남북적십자회담에 참석한 한적 대표단을 위해 베푼 만찬회에서 『이산가족찾기나 경제 문화의 교류보다도 우선 군축으로 전쟁의 위험을 제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으며 다음날 23일자 북한 「로동신문」은 『한국과 미군이 합작해서 6 25 전쟁을 도발했다』고 역사적 사실을 부인하는 대한비난의 논설을 게재하였다.

「7 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에는 서울에서 신문의 호외가 나오는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만 1년도 경과되기 전에 남북교섭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같은 회담교착은 남북이 통일문제에 관한 의제순서에 대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의제순서에 대한 남북대립의 원인은 한국측이 우선 처리를 주장하는 「이산가족찾기」 문제가 북한측으로서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그 대응책으로서 북한이 군축을 끄집어 냈기 때문이며 이것이 회담을 정체시켰다고 보아도 틀림없는 것 같다.

북한이 「이산가족찾기」를 꺼리는 것은 한국전쟁시에 북한지역으로부터 3백만명의 피난민이 한국으로 월남하였으며 그 후 북한과의 사이에는 단절이 계속된 채이나, 남북간 통일문제에 대한 대화가 진전되면 당연히 이산가족의 연락, 소재지 확인이 필요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으로 월남한 북한잔류가족이나 친척관계자를 반혁명분자라 하여 처형하고 중노동의 현장에 배치전환하는 등 가혹한 제재를 가한 외에 구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강제이주시키는 등 차별대우를 하고 있는 점과 구습을 배제한다는 구실로 가족이나 선조, 친척관계를 명확하게 하는 호적부를 폐지했기 때문에 만약 한국측으로부터 「주소와 생사」에 대한 요구를 받아도 찾을 방법이 없는점 등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북한이 호적부를 폐지한 목적은 반김일성세력의 단결을 방지하고 강제노동과 강제이주를 용이하게 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두가지 불리점을 북한은 공개할 수도 없으며 「이산가족찾기」라는 인도적인 문제를 「통일의 대화」에서 거부할 수도 없는 것이 북한의 고민이다.

이런 궁지에서 헤어내기 위해 북한측이 내놓은 것이 이른바 「군축주장」인데 북한은 한국에 군축을 제안함으로써 한국내에 군비무용론을 일으키고 군사비의 증대가 국민생활을 압박하고 있

다는 선전으로 내부혼란을 조성시켜 이틈을 이용, 군사적 행동으로 남북통일을 실현하려는 속셈이다.

현재 북한이 6.25전쟁을 한국이나 미군이 도발했다면서 사실을 뒤집어 놓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까닭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여하간 북한은 아세아의 긴장완화정세에서 고립화를 면하기 위해 남북통일의 대화를 맞아들인 것인데 대화가 진전될수록 김일성정권의 허구에 찬 역사와 현상이 세계만민의 눈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게 불리함은 명백하다.



## 2. "조총련 단원이 본 북한"

(조총련에 소속된 재일동포들은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 1972년 9월 27일부터 11월 22일까지 북한은 「제7차 조국방문단」이라는 이름으로 45명의 조총련 간부들을 북한으로 초청했다. 다음은 일본의 어느 정보기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온 조총련의 어느 간부로부터 전해 들은 북한방문 소감을 동아일보 동경주재 신용순 특파원이 취재하여 동아일보 1973년 5월 7일자에 보도한 내용이다 - 편집자)

「북한방문단」 일행 45명은 4개반으로 나눠 모든 행동은 각반단위로 이루어졌다. 여기에는 언제나 북한안내인이 따랐고 단장, 부단장, 반장, 단원이라는 철저한 조직이었다. 행동예정표는 일체 발표되지 않았고 언제나 집합장소와 집합시간만이 사전에 통고될 뿐이었다. 버스에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야 겨우 어딘지를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해 일부 단원들은 사전에 예정을 알려달라고 단장을 통해 요구한 일도 있었으나 모두 거절 당했다. 단원 5, 6명에 한 사람꼴로 안내인이 따랐는데 철저한 감시를 했고 개인의 자유행동은 전혀 용인되지 않았다. 특히 출신지 방문에는 한사람 앞에 안내인 한 사람이 붙어 다녔으며 어찌나 감시가 심했는지 친척과 이야기도 못했다.

단체행동에는 단장 부단장은 승용차, 일반은 버스를 이용하였고 호텔도 조총련간부들은 텔레비존이 있는 큰 방에 묵었으며 차별대우는 철저했다.

비교적 식사는 좋은 편이었다. 한국요리를 주로해서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왔으나 술은 거의 「인삼주」였고 북한에서 만든 위스키, 뱀술, 맥주, 사이다도 가끔 나왔다. 맥주는 일본것에 비해 맛이 없었다. 매일밤 술을 마실 수는 있었지만 그곳에 사는 일반 사람들은 관혼상제나 그밖의 특별한 날 이외는 마실 수 없는 것 같았다. 술을 마시려면 당국의 허가를 받은 다음 주진표를 얻어 특별배급을 받도록 돼있었다.

이번 방문단을 위해 특별침실차 일량이 배당되었는데 이것은 일반인과 격리하기 위한 것으로 느껴졌다. 호텔은 국제호텔에 묵었는데 여기에는 「체코」, 「유고슬라비아」 등 외국인뿐이었다. 호텔로부터의 외출은 반드시 안내원이 따랐고 단독외출은 일체 허용하지 않았다. 일행가운데 어느 한사람이 외출금지를 무시하고 혼자 외출했다가 불과 2백m도 못가서 감시원에게 붙들려 다시 되돌아온 일도 있었다.

일행은 거의 전원이 카메라를 갖고 갔었으나 사진촬영이 허가된 곳은 평양 시내 모란봉공원, 금강산, 기타 제각기의 고향뿐이었다. 견학한 곳은 북한당국이 기념촬영을 한 다음 앨범을 만들어 일본으로 돌아올 때 한권씩 줬다. 방문단이 청진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가는 곳마다 수천명씩 환영객이 동원되어 꽃다발을 주는 등 야단법석이었다. 가장 인상에 남은 것은 청진에서 일본으로 돌아오기 위해 배를 탔을 때였다.

방문단은 저녁에 도착했는데도 청진에는 몇시간전부터 동원된 사람들로 꽉차 있었으며 어찌나 날씨가 추웠는지 꽃다발을 주는 어린이들은 입이 얼어붙어 말도 못하는 것 같았다. 방문단은 각자

의 신청에 따라 출신지를 방문하고 친척방문과 성묘를 했다. 그 기간은 전 북한방문 두달동안의 스케줄 가운데 불과 닷새뿐이었다.

어느 사람은 두군데를 방문하는 통에 왕복 2일간을 소비, 고향에서는 불과 3일밖에 있을 수 없었다. 여기에서도 언제나 안내원이 동석했기 때문에 형제, 친척들과도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다. 친척들의 인사말도 거의 똑같이 「김일성 덕택으로 잘 살고 있으니 안심하라」는 것 뿐이었다.

그러나 옷차림을 보면 말과는 달리 생활이 어려운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 또 방문단들도 잘못 말했다가는 일본에 못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또는 친척들이 나중에 화를 입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별로 말을 하지 않았다. 안내원은 첫날을 빼고는 매일 함께 자며 함께 행동했다. 친척에게 한상자 7원(일본원으로 1천 50원)짜리 과자를 선물했는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월평균 월급이 70원(일본원으로 1만원상당)으로 좀처럼 사기 힘든 것 같았다.

그들은 1백원(일본돈으로 1만 5천원)짜리 지폐는 거의 본일도 없는 눈치였다. 안내원이 변소 간사이 몰래 1백원짜리와 일본에서 가져간 팔목시계를 주었더니 친척들은 좋아하면서 이것은 1년분의 봉급과 같다고 말했다. 작년 8월 25일 송북선으로 귀국한 사람들을 만나려고 신청을 냈으나 이들은 청진에서 한달동안 학습을 마치고 지방으로 배치되었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고 거절당했다.

또 방문단의 누군가는 송북한 일본인 부인을 만나려고 했으나(남편은 귀국후 사망) 『미용원에 근무하고 있고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간단한 진갈만 있었고 본인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에서 살기 어려워지면 송북할 생각도 있었으나 이번 북한방문으로 이런 생각은 완전히 가셔 버렸다. 만일 간다고 해도 한 10년쯤 있다가 노동당원이 된 다음에나 조총련의 단단한 추천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 남북공동성명이나 남북적십자 회담에 대해서 반응을 보려고 했으나 일반인은 물론 친척들도 일체 말하려 들지 않았다.

또 『몇년전에 미국이 달로 우주비행사를 보내 달에서 우주인이 걸어 다니는 장면이 일본텔레비존에도 나왔고 세계에서 무슨일이 나면 그것이 즉각 중계방송된다』고 이야기했더니 친척들은 『달에 사람이 간다니 그런 바보같은 소리가 어디있느냐』면서 『미국의 모략이라』고 우겨대는 통에 혼이 난일까지 있었다. 50여일 북한을 돌아보고 느낀 것은 한마디로 『개인의 자유는 전연없고 생활도 편안하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 송북한 사람들은 송북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사실이였다.

그러나 일본에 돌아가서 이같이 말할 수 없기때문에 『북한에서는 성대한 환영을 받았다. 한번 가보라』고 말을 사전에 맞추기도 했다.

북한방문단은 한사람앞에 일화 십만원 이상씩을 거둬 김일성에게 자동청소기 두 대(4천만원)을 선물했는데 김일성으로부터는 양복지 한벌과 인삼 한상자 인삼주 5병 서류함 1개씩을 받았다.

# 남북대화 제2호

(1973. 4 ~ 1973. 9)

# < 목 차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	3
제1부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	5
1. 북한의 대화 중단 선언 .....	5
2. 이후락위원장, 북한성명 철회촉구 .....	7
3. 북한의 진의는 무엇인가 .....	9
4. 대화의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	16
5. 남북대화의 전망은 어떠한가 .....	19
[부록] .....	21
(1)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성명(8.29) .....	21
(2) 남북조절위원회 이후락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내용 .....	24
제2부 남북관계의 현안문제 .....	30
1. 남북관계의 현안문제는 무엇인가 .....	30
2.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의 정당성 .....	32
3. 북한의 소위 「5대강령」의 허구성 .....	34
4. 결    론 .....	40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남북 조절위원회는 1972년 7월 4일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 사이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각 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나.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다.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적 및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라.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마. 대외활동에서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하며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3.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 위원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으로 한다.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은 장관(상) 또는 차관(부상)급으로 하되 사전협의를 거쳐 각각 쌍방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간사회의를 둔다.

간사회회는 쌍방 공동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제반 문제 등을 협의 결정하고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간사회회는 쌍방 간사위원과 각각 간사 2명으로 구성한다.

다.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규정한다.

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사무국을 판문점에 둔다.

공동사무국장은 쌍방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그 밑에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둔다.

4.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관문점에서도 할 수 있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는 2~3개월에 1차, 간사회회의는 1개월에 1차 진행하며, 이밖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남북조절위원회는 공개회의 또는 비공개회의로 한다.

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간사회회의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수의 전문인원들과 공동사무국 요원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마. 남북조절위원회의 최종합의는 쌍방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합의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동시에 발표한다.

바.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은 따로 규정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6. 이 합의서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1972년 11월 4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이후락 부장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 부장

## 제1부 남북관계의 새로운 국면

### 1. 북한의 대화 중단 선언

1973년 8월 28일 하오 6시,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 북한측 공동위원장인 김영주의 이름으로 사실상 남북조절위원회를 통로로 하는 남북대화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장문의 성명을 방송, 발표했다.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과 함께 7 4 남북공동성명의 북한측 서명자이면서도 그 동안 「신병」을 이유로 대화에 직접 참가하는 것을 회피해 온 김영주는 이날 예고 없이 발표된 성명에서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 개인과 대한민국의 안보 및 통일정책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야비하고도 저열한 욕설로 비방을 퍼붓고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과는 더 이상 회담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일방적인 선언을 한 것이다.

김영주는 동 성명에서 "김대중씨 납치사건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가 주도했다"고 독단하는가 하면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는데 반대하고, 말로는 「완전개방」을 말하면서 남북간의 「합작」과 교류를 위한 실제적 조치에는 반대했다"고 주장하고, 대한민국 정부가 "반공정책을 강화하여 「애국역량」을 탄압하고 민족분열을 고정화하여 「2개의 조선」을 조작하고 있다"고 강변하는 등 격렬한 대남비난을 퍼부었다.

김영주 성명은 그 자신과 함께 7 4 남북공동성명의 서명자이며 또 7 4 남북공동성명 제6항에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으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 이후락 공동위원장에게 「깡패」, 「두목」, 「도당」, 「파쑸」 등 야비한 인신공격을 감행하면서 이후락 공동위원장을 상대방으로 하는 회담의 계속을 일방적으로 거부한 것이다. 성명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는 악의를 고려할 때 이 성명은 북한이 사실상 남북대화의 중단을 선언한 것이라고 보아 틀림없다.

북한은 8 28 김영주 성명에서 "대화 계속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성명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할 때 이것은 문자 그대로 궤변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북한은 대화 계속의 절대적 조건으로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이후락 공동위원장 대신 서울측 공동위원장이 되는 사람은 "민족적 양심이 있고 민족분열의 고정화를 반대하며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하는 사람"이라야 한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민족적 양심이 있고 민족분열의 고정화를 반대하며 진정으로 평화통일을 염원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대한민국 정부의 안보 통일정책과 반공정책에 반대하며 남북한의 「유엔」 동시가입 용의를 표명한 박정희 대통령에 반대한다"는 것을 뜻한다.

북한의 이러한 「조건」이 무리한 것이라는 사실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이것은 "합의를 위해" 내놓은 「조건」이 아니라 "합의를 양기 위해" 내놓은 「조건」으로 결국 당분간 대화를 끊겠다는 북한측의 속셈을 명백히 해 준 것밖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대화 계속의 「조건」으로 북한이 내세운 문제는 그뿐이 아니었다. 북한은 8 28 김영주 성명에

서 대화 계속의 「조건」으로 대한민국이 ①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존중하고, ② 「2개의 조선」 노선을 취소하며, ③ 「조국통일을 위해 싸우는 사람들」에 대한 탄압을 그만두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 등 「인민」들의 민주주의적 자유와 정당 사회 단체들의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④ 체포 투옥된 「애국자」들을 석방하라는 요구 조건을 내놓았다.

이 가운데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존중하라"는 요구는 7 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과 원칙을 파괴하는 측이 대한민국인가, 북한인가에 대한 해답이 자명한 만큼 순전한 적반하장의 억지임은 물론이다.

그밖에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3개 항목을 다른 말로 풀이하면 그뜻은 이러한 것이다. 즉, 그것은 대한민국이, ① 6 23 평화통일외교 정책선언을 취소하고, ②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포함하여 반공정책을 그만두며, ③ 반공법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하여 법의 판결에 의해 복역 중인 간첩들을 석방하라는 얘기인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체제가 북한 체제 쪽으로 「동질화」되기 전에는 대화를 다시 않겠다는 북한의 속셈을 스스로 폭로한 것이다. 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프롤레타리아」독재로 구별되는 상이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남북한이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한 대화"를 통해 민족의 단합과 평화, 그리고 통일을 추구하기로 합의했음을 내외에 천명한 7 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사고방식의 노출인 것이다.

더 더구나 북한은 대화의 계속을 위한 또 하나의 「조건」으로 남북조절위원회의 개편 문제를 들고 나왔다. 즉, "남북조절위원회에 남북의 각 정당 사회단체 및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들을 포함시키라"는 것이다.

남북조절위원회의 현재의 구성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동 합의서에 의거하여 위원회의 개편 문제는 위원회 스스로가 논의 결정할 문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하나의 권능기구로서 그 기능도 제대로 발휘하기 전에 그 개편 문제를 위원회의 테두리 밖에서 주장하고 이것을 대화 계속의 「전체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는 북한의 저의는 무엇인가?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북한의 8 28 김영주 성명의 진의는 명백하다. 그것은 사실상 일방적인 대화 중단 선언인 것이다. 「대화 계속」의 「조건」으로 그들이 제시하고 있는 구구한 요구들은 그들의 8 28 성명이 사실상 「일방적 대화 중단 선언」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은폐하고 그 책임을 모면해 보려는 연막에 불과한 것이다.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구축되고 통일을 위한 꾸준한 발걸음이 착실하게 계속 되기를 갈망하는 남북의 5천만 겨레의 염원과 온 세계의 주시 속에 그 동안 계속되어 온 남북대화는 북한의 돌연한 성명으로 말미암아 중대한 국면에 접어든 것이다.



2. 이후락위원장, 북한성명 철회촉구  
-인내와 성실로 대화 계속을 다짐-

남북조절위원회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은 8월 29일 상오 10시 서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의 당국자들에게 "다시 한번 이성으로 되돌아가 7·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한 8월 28일자 성명을 즉시 철회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북한의 8·28 성명이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임을 조목 조목 논박하고, "평화를 갈망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여망을 외면하고 그 어느 누구든지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민족반역행위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그 동안 남북한간에 진행되어 온 남북대화의 목적이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②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③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남북의 5천만 민족의 영원한 복지와 번영의 길을 개척하려는 숭고한 것"임을 상기시키면서 대한민국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성실과 인내로 남북대화를 계속 이끌어 감으로써 겨레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굳은 결의에 추호의 변함도 없다"고 다짐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8월 28일 발표된 북한의 성명은 "단적으로 말하여 박대통령각하의 6·23 평화통일외교선언이 국내외로 큰 지지를 받게 되고 다가오는 「유엔」총회에서도 그들의 입장이 열세로 몰리게 됨을 자인하고 당혹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는 임시변통"이라고 풀이하고 결국 "평화를 지향하는 대화의 진행을 기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개탄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그가 작년5월 일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하여 김일성 및 김영주와 회담했을 때 이미 그 자신의 신분이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다스리는 기관인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명백히, 그리고 떳떳하게 밝혔으며 이에 대해 김일성 자신이 "나는 공산당을 잡는 사람이 찾아왔으니 믿지, 다른 사람이 왔다면 불신임했을 수도 있다"고 말한 사실이 있음을 밝히면서 "이제와서 그들이 내가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고 또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자를 다스리는 것을 가리켜 「애국지사를 처형하는 민족반역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전후가 모순되는 자가당착의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 남북조절위원회와 간사회의, 그리고 공동사무국의 운영 세칙을 조속히 채택하고 공동사무국을 조속히 발족시키며 공동사무국 건물을 판문점에 공동으로 건축하자는 대한민국의 거듭된 제의를 북한측이 계속해서 외면한 사실,

- 7·4남북공동성명의 중상·비방중지 조항과 작년 11월에 이루어진 상호비방 방송중지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에서 각종 대남비방 방송을 계속 격화시켜온 사실,

- 우리측이 제시한 「남북한 사회의 상호 완전개방」을 위한 폭 넓은 교류와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이를 거부한 사실,

- 평양측의 공동위원장이 「신병」을 핑계로 한반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예거하고 “과연 누가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위배했고, 과연 누가 남북간의 합의 사항을 위반했으며, 또 과연 누가 남북관계 개선의 구체화를 가로막았는가”고 반문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그가 작년 11월 평양에서 김일성을 만났을 때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우리로서 궁극적인 희망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이 필요없는 사회를 건설하는 것이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이 대남폭력혁명지령을 그만두어야 한다”고 못박아 말했음을 밝히면서 “만약 북한이 공동성명의 정신을 충실히 지켜 간첩을 남파시키지 않았던들 우리가 간첩을 잡을 이유가 없으며 또 북한이 대남폭력혁명지령을 내보내지 않았던들 국가보안사범의 체포 또한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북한측의 8·28성명의 대남비방 사항을 이렇게 논박하면서 “만약 그들의 논법대로 한다면, 6·25의 도발자요, 따라서 수 백만 동포를 학살할 북한노동당, 그뿐 아니라 수많은 진정한 애국지사들을 소위 반동분자로 규정하여 무참히 처형하고 또 지금도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아오지 탄광에서 죽음의 노동에 몰아넣고 있는 북한노동당의 조직지도부장 김영주와는 본인도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역시 성립되는 것”이라고 통박하고 “그러나 민족의 대사에 감정을 개입시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일체 과거의 감정을 초월하여 오로지 인내와 성실로 대화를 계속해 왔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3. 북한의 진의는 무엇인가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은 8월 29일의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소위 8·28 김영주 성명으로 사실상 남북대화의 일시 중단을 선언한 동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견해를 피력했다.

그것은 첫째, 북한은 기본적으로 대화를 원하지 않고 있다. 둘째, 박 대통령의 6·23선언이 국제적으로 크게 「어필」하게 됨에 따라 북한은 크게 당황하고 있다. 셋째, 최근 「모스크바·유니버시아드」 불참에서 나타난 것처럼 소련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국제 사회에서의 북한의 입장이 고립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짜증을 배출할 구실을 찾기에 급급하던 차에 최근 일부 외신들이 김대중씨 납치사건을 중앙정보부와 관련시켜 여러 가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떠들썩해지자, 여기에 편승해서, 일방 대한민국 안보의 기둥인 중앙정보부의 동요를 노리면서 다른 일방으로는 대화 중단의 구실을 찾고자 했다는 것이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의 판단은 옳은 것이었다.

북한은 8·28 김영주 성명의 「명분」을 소위 김대중씨 사건에 두고 동 성명의 대부분을 문제의 사건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와 그 책임자인 이후락 공동위원장에게 야비한 중상·비방을 퍼붓는데 할애했다.

이 문제에 대해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8월 29일의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해명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이 날 회견에서 “내가 확인한 바로는 단 한 명의 중앙정보부 부원도 이 사건에 개입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실히 단언한다”고 말하고 “만의 일이라도 앞으로 조사 결과 중앙정보부의 부원이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나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 어떠한 책임도 지겠다는 것을 확실히 말해 둔다”고 못을 박은 것이다.

북한은 김대중씨 사건을 8·28 성명의 「명분」으로 삼았지만 그러한 북한측의 주장이 억지라는 것을 가려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하여 매달 한번씩 판문점에서 간사회의를 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측은 문제의 김대중씨 사건이 발생하기 훨씬 전인 7월에 대한민국측의 거듭된 제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뚜렷한 이유도 없이 간사회의 개최를 거부했다. 8월에 들어와서도 북한은 역시 간사회의 개최를 외면했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이 소위 김대중씨 사건 이전에 대화의 중단을 궁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의 산 증거가 아니고 무엇인가. 북한은 대화 계속에는 흥미가 없었으며, 오로지 어떠한 「명분」으로 대화중단을 합리화시키느냐는 문제를 놓고 부심하여 왔던 것이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조절위원회 회의를 2~3개월에 1회씩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가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북한은 늦어도 9월 중순 이전에 평양에서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최해야만 하는 입장에 있었다. 박두하는 9월을 앞두고 일단 대화의 중단을 결심한 북한으로서는 그 「명분」 확보가 큰 고민 거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러한 절박한 심리 상태에 있던 북한은 김대중씨 사건을 싸고 국제적으로 구구한 억측이 난무하게 되자, 이것을 걸어 8·28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른 것이다.

북한의 8·28성명이 김대중씨 사건을 이유로 삼은 것은 한낱 핑계에 불과하며 그 진의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대화를 중단시키려는데 있었다는 것은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대화를 중단시키려 하는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북한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그 동안 남북대화에 응해 왔는가를 규명함으로써 얻어질 수가 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이 8월 29일의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혔듯이 대한민국이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인내와 성실로써 남북대화의 길을 개척한 데에는 남북의 5천만 겨레들의 염원을 대변하는 뚜렷한 대의명분이 있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남북대화의 「이니셔티브」를 취했을 당시만 해도 한반도의 정세는 북한의 계속되는 호전적 태도와 도발행위로 말미암아 일촉즉발의 위험성을 지닌 극동의 「화약고」였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위험한 정세에 대처해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항구적인 평화의 기틀을 구축하며 나아가서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으며 그러한 적극적인 조치의 일환으로 남북대화를 시작한 것이다.

남북대화는 분명히 남과 북의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체제간의 대화였다. 남북대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론 남북의 통일이었다. 그러나 남북의 정치적 통일은 남북이 지닌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체제의 차이 때문에 그 동안 아무런 효과적인 방안이 나서지 않았던 것은 굳이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는 사실이다. 남과 북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 「프롤레타리아」 독재로 구별되는 극단적으로 상이한 체제를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상이한 체제간의 통일은 필연적으로 양자택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남북한간에는 “서로 합의할 수 있는” 통일방안이 안출되지 못해 온 것이다.

남북한간에 그 동안 합리성을 지닌 통일방안이 제기되지 않은 것은 아니다. 통일과 관련해서 체제를 선택하는 문제는 국민 대다수의 의사에 따르는 것 이상의 합리적인 방안이란 있을 수 없다.

그러한 뜻에서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가 견지해 온 통일방안, 즉 「유엔」 감시하의 남북한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자유로운 총선거에 의한 통일이야말로 가장 객관적 타당성을 지닌 합리적인 방안이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이 통일방안은 물론 북한에 의해 거부되었다. 그 이유는 자명한 것이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한의 인구가 3천 5백만 대 1천 5백만으로 현격한 불균형을 이루고 있을 뿐 아니라

경제적인 낙후에도 불구하고 공산정권의 기초를 안정시키기 위한 강탈적인 방법으로 완고하기 짝이 없는 교조주의와 폐쇄주의에 입각한 우민정책으로 공산당의 유일체제를 쌓아 올린 북한으로서 사회의 개방에서 오는 위험부담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통일방안은 가장 객관적인 보편타당성을 지닌 합리적인 방안이면서도 북한의 거부로 말미암아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가 없었다.

그러면 북한은 분단조국의 통일문제에 관해 어떠한 태도와 정책을 견지해 왔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북한의 목표는 일관해서 공산화통일이었다. 하나의 역사적 단계로서 북한은 한때 대한민국의 무방비를 틈타 무력적화통일을 정면으로 시도했다. 일요일인 1950년 6월 25일 새벽을 틈타 북한이 일으킨 6·25동란이 그것이다. 3년여에 걸쳐 한반도 전역을 처참한 전쟁의 불바다로 만든 북한의 과렴치한 동족상잔 행위는 「유엔」의 결의에 의한 국제정의의 막강한 힘과 자유를 수호하려는 국민들의 부동의 결의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 뒤로 북한은 입만 열면 언필칭 「평화통일」 「자주통일」을 운운해 왔다. 그러면 그들이 말하는 「평화통일」 「자주통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었는가? 그것은 시종 일관 적화통일이었으며 다만 전면전쟁으로 확실한 승산이 서지 않음에 따라 전술만을 바꾼 것이었다.

북한은 이제 간단없이 계속되는 무장 간첩의 대남 침투와 대중의 봉기 선동에 의해 남한에서의 폭력혁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전술을 바꾼 것이다. 북한의 전술은 대한민국의 국민 일반, 특히 농어민, 노동자 등을 상대로 반정부 운동을 선동하고 반공정책의 완화를 획책하며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유리한 때를 골라 반정부 폭력혁명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적화통일을 달성한다는 것이었다.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노선이 그것이다.

북한은 1971년 4월 그들의 최고인민회의에서 외상 허담의 보고 형식으로 소위 「8개항목 평화통일방안」이라는 것을 내놓고 눈감고 아옹하는 식의 평화공세를 대대적으로 전개했다. 그러나 허담의 소위 「8개항목 평화통일안」은 그 내용의 비논리성이나 불합리성은 차치하고 그 모두에 밝히고 있는 「선행조건」 때문에 그 정체는 양두구육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었다.

허담의 「평화통일방안」은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선행조건」으로 “남조선에서 현정권이 타도된 뒤 진정한 인민의 정권이 서거나 「애국적인 민주인사」가 정권에 올라 앉을 것”을 요구하고 그러한 사태가 이루어진 뒤에 “협상을 통해 평화통일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었다.

북한이 말하는 「인민」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의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즉, 「노동자·농민·병사·근로 인텔리」의 네 가지 계급에 속한 사람들만이 소위 「인민」인 것이다. 북한의 「민족」을 운위할 때 그 뜻 또한 같다.

북한의 속셈은 다시 말해 남한에 그들이 말하는 소위 「무산 계급이 주도하는 계급정권」이 세워진 뒤에 「평화통일」을 이룩하겠다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려는 이

러한 통일방안이 결코 평화통일 방안이 아니라는 것은 더 설명할 필요조차 없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뒤에도 북한의 이러한 기본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그 산 증거가 1972년 7월 3일 북한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발표한 「조국통일과 남조선혁명의 호상관계에 관하여」라는 정책논문이다.

이 논문에서 북한은 통일문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기본 방침을 천명했다.

“조국통일은 남조선에서 미군이 물러나가고 「인민민주주의혁명」이 승리하여 「인민」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잡으며 북반부의 사회주의 역량과 남조선의 「민주주의 역량」의 단합된 힘에 의하여 우리 조국의 통일은 성취될 것이다.”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호상관계에 있어,

공통점은,

- ①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두 가지 혁명과업이 조선혁명의 종국적 승리를 위한 투쟁과업이며 그를 앞당기기 위한 전제로 된다.
- ② 그러나 조국통일은 남조선혁명이 수행되는 조건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 그것은 반드시 남조선에서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함으로써만 이룩될 수 있다.
- ③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에 있어 주된 투쟁 대상은 미군이며 미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는 것만이 선결조건이다.

차이점은,

- ① 남조선혁명은 남조선 지역에 해당되는 문제이며 조국통일문제는 남북을 포괄하고 있다.
- ② 남조선혁명의 혁명과업은 남조선 「인민」들을 민족적·계급적으로 해방하기 위한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과업을 제기하고 있으며 조국통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기치 밑에 「민족해방혁명」을 전국적 범위에서 완수하는 것을 자기 과업으로 하고 있다.
- ③ “조국통일을 실현하는데는 평화적인 방도와 비평화적인 방도가 있지만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는 오직 폭력적 방법밖에는 없다.”

이것은 사실 가공할 만한 정책선언이었다. 그것은 더구나 동 논문발표의 「타이밍」으로 보아 더욱 그러했다.

왜냐하면 남북간에는 이미 5월의 이후락 부장의 평양 비밀 방문의 결과로 역사적인 7·4 남북

공동성명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평양측의 김영주와의 사이에 서명까지 끝나 7월 4일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발표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판국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 발표 하루 전을 골라 북한이 문제의 호전적인 정책논문을 내외에 발표했다는 데서 우리는 북한의 본심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것은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과는 관계없이 대남폭력혁명 추진에 의한 적화통일을 계속 추구하겠다는 명백한 신호였던 것이다.

그러면 이렇듯 전략적 목표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엇 때문에 대화에는 호응했는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다.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한 것은 남북간의 대화가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혁명」을 촉진시키는 유력한 수단으로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대화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노렸는가.

첫째로, 북한은 대한민국 국민일반의 반공의식의 이완을 노렸다. 북한측이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소위 「선결조건」이라고 고집함으로써 회의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이른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 조성」 주장이야말로 북한측의 이러한 속셈을 웅변해 주는 산 증거인 것이다. 그들은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공 경각심을 헤이시킴으로써 대한민국 내에서 북한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소위 「혁명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하려 한 것이다.

둘째로, 북한이 노린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였다.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북한이 주장해 온 이른바 「군사적 대치 상태의 우선 해소」 주장이 바로 그것이었다. 북한측은 이 주장과 관련해서 5개항목의 군사제안을 내놓았지만 이 군사 5개 항목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철수 조항이었다. 앞으로 소개된 북한측의 자료가 명시하는 것처럼 소위 「남조선혁명」추진의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1차적 목표는 주한미군의 철수였다.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의 가장 큰 지장 요인이 주한미군의 존재인 것처럼 왜곡해서 선전함으로써 국내 및 국제적으로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여론의 조성을 꾀한 것이다.

그밖에 북한이 노린 것은 대화를 통해 북한의 대외적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었다. 북한 지역의 전 주민을 외부세계와 완전히 차단시킨 채 김일성에 대한 광신적인 개인숭배를 조장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에 유례가 없는 일인독재체제를 완성한 북한은 그 체제의 폐쇄성, 교조성,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한 각종 무력도발 행위는 물론 「멕시코」 「세일론」 같은 나라들에 대한 「폭력혁명」 수출기도에서 나타난 호전성 때문에 심지어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도 두통거리가 되어 있었다. 북한은 대화에 호응함으로써 위장된 것이나마 평화지향성을 내외에 보여 주어 국제적 「이미지」의 개선을 노린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속셈은 남북대화가 시작된 뒤 북한이 해외에서 벌인 치열한 소위 「평화외교공세」에 의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일단 대화가 시작되자 북한의 이러한 속셈들은 중대한 시행착오임이 드러났다.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① 대한민국에서의 반공의식은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② 한반도에서의 평화유지 및 전쟁억지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존재는 재확인되었으며 ③ 세계의 이목은 과연 남북

대화가 진정 평화를 지향하고 있는가를 냉정하게 지켜보는 태도를 취한 것이다. 북한의 속셈은 모두 빗나가고 말았다.

뿐만 아니라 서울과 평양 사이를 왕래하며 계속되는 대화는 북한체제의 유지에 심각한 위협 요인마저 조성하기에 이르렀다.

북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북한 체제의 통치는 사실 기만에 의한 통치였다. 그것은 외부세계와의 완벽한 정보 차단에 의한 세상 물정을 모르는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소위 사회주의체제의 절대적 우월성을 맹신케 함으로써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대화로 말미암아 남북간에 제한된 범위로나마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북한의 이러한 기만적인 통치방식은 곧 마각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었다. 개방적인 대한민국의 체제와 폐쇄된 북한의 체제는 특히 경제 분야에서 이미 격단의 차이가 생기고 있음이 목격된 것이다.

이러한 진실에 대한 개안이야말로 북한의 체제유지적 입장에서는 심각한 위협 요인이 아닐 수 없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득은 없고 위험은 너무나 큰 것이었다. 대화는 더 이상 확대도 진전도 시킬 수 없었다. 작년말 전반적인 정세 평가를 통해 북한은 이러한 결론을 내렸음이 분명하며 이에 따라 금년에 들어서면서 북한의 대화에 대한 열의는 눈에 띄게 냉각된 것이다.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금년 6월에 들어서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의 안보와 평화를 위해 과감하고도 획기적인 정책의 현실화를 단행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이 그것이다. 한반도에 평화를 구축하고 평화를 토대로 하여 통일을 추구하려는 대한민국의 이 새로운 외교정책에 대해 세계는 「선견지명이 있는 결단」으로 격찬의 박수를 보냈다.

북한의 「달레머」는 심각한 것이었다.

선택의 길은 분명했다. 북한이 6·23 선언을 받아들일 경우 한반도에는 항구적인 평화는 보장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전 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명분」삼아 주민들에게 일촉즉발의 전쟁 분위기를 고취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엄격한 내핍생활을 강요해 온 북한으로서는 6·23선언의 정신을 받아들일 때 주민들에 대한 통치의 「명분」을 잃는 위험 부담을 면할 수가 없었다. 결국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하나였다. 그것은 곧 일시적으로나마 대화를 중단시키는 것이었다. 대화의 중단에 의해 북한의 폐쇄 사회가 대한민국의 개방사회에 의해 감염되는 것을 막고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는 다시 긴장조장에 의한 통치로 돌아가며 6·23선언에 대한 북한측의 거부 의사를 보다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화의 중단이 불가피했던 것이다.

그러나 대화 중단에는 뚜렷한 「명분」이 없었다. 「명분」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북한은 7·8 양월간에 뚜렷한 이유도 없이 남북조절위원회 간사회의 소집을 기피하는 등 엉거주춤한 태도를 보여왔다.

그러한 북한에게 절호의 기회가 생겼다. 김대중씨 사건이 그것이다. 북한은 이 기회를 십분 이용하고 나섰다.



이것이야말로 북한의 8·28 김영주 성명에 담겨진 북한의 진의였다.

#### 4. 대화의 촉진을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

표면화시키지는 못하면서도 북한이 대화를 중단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대한민국이 간취 못한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측은 북한측이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조성」주장을 이유로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데서 북한의 속셈을 읽었고 또 금년에 들어와서 남북간 회담의 명목적인 개최조차 기피하고 있는 데서 북한의 고민하는 모습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러한 정세하에서 대한민국은 대화에 활력소를 불어넣기 위한 몇가지의 적극적인 「이니셔티브」를 취했다.

예컨대 7월의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대한적십자사측이 제의한 남북 상호간의 추석성묘방문단 상호교환 제의와 8월초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이 서울에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 배구지도자강습회에 북한배구협회의 참석을 초청하는 대한배구협회의 초청장을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 것 등이 그 좋은 예이다.

대한적십자사는 남북적십자회담에서 의제 제1항 「이산가족·친척의 주소와 생사의 확인 및 통보」를 실천하는 방법에 관해 좀처럼 합의가 이루어질 전망이 서지 않게 되자 지난 7월 평양에서 열린 제7차 회담에서 “금년 추석을 전후해서 남북 쌍방이 합의하는 일정한 수의 추석성묘 방문단을 조직해서 상대측 지역의 조상의 묘소에 성묘를 하게 하자”고 제의했다.

추석성묘는 우리 나라의 오랜 전통이자 미풍양속이다. 더구나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 때는 금년 추석(9월 11일)을 2개월 앞두고 있을 때이므로 한적의 제의는 시의에 알맞는 성실한 제의가 아닐 수 없었다.

그러나 북측은 일언지하에 한적의 제의를 거부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이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을 먼저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었다.

사실은, 만약 한적이 제의한 추석성묘방문단 상호 교환이 이루어졌다면 북한측의 소위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조성」 선결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인 고집이었는가를 실증할 수 있는 훌륭한 기회가 되었을 것이었다. 북한의 거부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의 진전을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려 했던 대한적십자사의 성의있는 노력은 무위로 돌아가야 했다.

이와는 따로 8월초 대한배구협회는 지난 5월 「마닐라」에서 열린 「아시아」 배구연맹 총회의 결의에 따라 8월 10일부터 20일까지 서울에서 열리게 된 제2회 「아시아」 배구지도자 강습회에 대한민국과 국교가 없는 공산권국가에 대해서도 초청장을 발송키로 방침을 결정, 몽고와 월맹에 대한 초청장은 연맹을 통해 보내는 한편 북한에 대한 초청장의 전달을 남북조절위원회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에게 의뢰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기꺼이 그 전달 역할을 수락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이 문제에 남북조절 위원회가 개입할 경우, 그것은 남북조절위원회에 활력소를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남북조절위원회도 남북적십자회담과 마찬가지로 금년에 들어와서는 교착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다.

대한민국측이 우선 경제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광범위한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여 쌍방사회를 서로 개방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상호신뢰의 분위기를 쌓아 올릴 것을 주장한 데 대해 북한측은 오로지 군사문제 우선해결 주장을 고집한 채 회담의 진전을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만약 북한이 수락만 한다면 북한배구지도자들의 남한방문은 남북간의 이해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남북간에 실질적으로 교류를 트는 돌파구의 구실을 할 수 있다는 데서 그 의의를 크게 평가한 것이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만약 북한배구지도자들이 서울에 올 경우 그들의 서울 체재기간 중 그들의 신변의 안전과 모든 편의를 보장하고 대한배협의 초청장을 북한배협에 전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초청장과 함께 판문점을 경유하여 평양측 공동위원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대한민국의 성의가 담긴 이 초청장을 접수하지도 않았다. 북한은 바로 그 이튿날인 8월 2일 초청장을 대한민국으로 되돌려 보낸 것이다.

결국 무언가 대화의 돌파구를 트려는 대한민국측의 노력은 번번히 북한측에 의하여 거부되고 말았다.

그러면 북한은 무엇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러한 성의있는 노력들을 번번히 거부했는가.

그 대답은 간단하다. 그것은 북한이 남북간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하나의 사업으로서 교류나 협력이 실천에 옮겨지는 것을 바라지 않았기 때문이다.

남북대화는 어차피 당장 남과 북의 상이한 체제간의 양자택일이 불가능한 이상 남과 북의 상이한 체제가 잠정적으로나마 평화스럽게 병존하는 것을 상기하는 것이 아닐 수 없었다.

이렇게 두 체제가 병존하는 단계에서의 남북관계는 남과 북이 각기 자기의 체제를 발전시키면서 상호 교류의 폭을 넓히고 협력관계를 심화시킴으로써 평화적 관계를 정착시키고 쌍방간의 오해와 불신관계를 이해와 신뢰관계로 대치시켜 같은 민족의 차원에서 장차 국민들이 통일한국을 위한 체제선택의 길을 열어 주는 것이라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남북관계는 당분간 필연적으로 두 체제간에 어느 체제가 더 올바르게 국민의 복지에 이바지하고 민족의 번영에 기여하는 체제이냐를 평가할 수 있는 선의의 경쟁관계가 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대통령은 이미 1970년 8월 15일 광복절 25주년 경축사에서 북한에 대해 “더 이상 무고한 북한 동포들의 민생을 희생시켜 가면서 전쟁 준비에 광분하는 죄를 범하지 말고, 보다 선의의 경쟁, 말하자면 민주주의와 공산독재의 그 어느 체제가 국민을 더 잘 살게하며 더 잘 살 수 있게 하는 여건을 가진 사회인가를 입증하는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경쟁에 나서라”고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새로운 남북관계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는 이러한 두 체제간의 선의의 경쟁을 아직 수락할 수가 없었다. 북한은 그동안 대화의 진행 과정을 통해 남과 북의 체제간에는 이미 현저한 우열의 격차가 생겨 있으며 현 시점에서의 「선의의 경쟁」은 북한의 체제유지에 중대한 문제점을 제기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북한의 입장에서 가장 두려운 사태는 남북관계가 일정한 한계 이상으로 발전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추석성묘방문단의 상호교환이라든가, 북한 배구지도자들의 서울방문 등이 이루어질 경우 이것은 남북간의 교류관계를 기정 사실화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게 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으로서는 앞에서 언급된 바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사교류가 구체적으로, 또 성공적으로 실천에 옮겨질 경우 그들의 대화지연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소위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 개선 선행주장이 호소력을 잃게 된다는 점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북한은 이러한 기본태도와 우려 때문에 대화의 돌파구를 마련하려는 대한민국측의 성의있는 제의들을 번번히 거부한 것이다.

## 5. 남북대화의 전망은 어떠한가

8월 29일의 기자회견에서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은 “남북대화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계속해야 된다”고 단언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그 이유를 “대화만이 남북간에 서로 오해를 풀고 전쟁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알찬 방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북한의 8·28 김영주성명으로 말미암아 남북대화는 비록 잠정적으로나마 중단된 것이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다. 북한의 8·28성명은 남북조절위원회에 국한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는 별도로 인도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은 적어도 논리적으로는 8·28성명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남북조절위원회나 남북적십자회담이나 대화에서 북한이 추구하고 있는 목표는 동일한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중단시킨 마당에 북한이 남북적십자회담을 진척시키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남북적십자회담 역시 사실상 중단에 가까운 정돈상태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아 틀림없을 것 같다.

그러면 남북대화의 장래는 어찌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은 단정적으로 낙관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이 공동위원장은 8월 29일의 기자회견에서 자신은 “김영주 평양측 공동위원장의 성명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의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그 까닭은 같은 민족끼리의 대화는 계속해야 된다는 것이 5천만 민족의 염원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확실히 그렇다.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내다 볼 때 남북한간의 대화는 조만간 재개되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보아 틀림이 없다.

그것은 이후락 공동위원장이 올바르게 지적한 것과 같이 한반도에서 다시는 동족상잔의 비극적인 총성이 울릴 것을 바라지 않는 남북한의 5천만 겨레들이 대화의 계속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첫째 가는 이유가 아닐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내부 사정도 다시 「대화가 없는 암흑시대」로 되돌아가 그들의 소위 「인민경제분야」를 계속 희생시켜가면서 종전의 긴장조성정책을 무한정 계속해 나갈 수는 없는 일이다. 남북대화의 진행과 더불어 북한의 무슨 방법으로든지 일부 군사부담을 줄여서라도 주민들의 소비 수준을 향상시키려 애쓰고 몸부림치는 여러 가지 흔적을 남겨놓고 있다. 이러한 경향과 추세는 결국 북한 내에서도 북한으로 하여금 지금의 완고한 자세를 버리고 진지하게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응하게 하는 내부압력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다.

또한 국제정세로 보아도 대화의 중단이 장기간 용납될 수는 없다. 오늘날 국제정세의 대조류는 현상고정화에 의해 긴장완화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도도한 물결을 이루고 있으며 「혁명적 동기」보다는 「현실적 리해관계」에 입각해서 국가간의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흐름을 이루고 있다.

남북한간의 평화적 관계 정립과 남북관계의 점진적이고도 실천적인 개선을 외면하고 대남폭력

혁명과 적화통일에만 집착하고 있는 북한의 고집스런 자세가 공정한 국제여론에 의해 언제까지나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전망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북한의 교조적이고도 호전적 자세는 새로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국제질서에도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대화 재개를 낙관하고 있는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은 대화 재개의 방법과 관련하여 가능한 두 가지의 선택적 방법론을 피력했다.

그 하나, 즉 가장 이상적인 방법은 북한이 이성으로 되돌아가 일방적인 8·28성명을 철회하는 것이며, 또 하나는 쌍방 합의하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방법이 그것이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재개될 경우, 재개되는 대화가 성공적인 결실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대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북한이 소위 「남조선혁명」에 의한 적화통일 기도가 전혀 실현성이 없는 「환상」이라는 점을 확실히 깨닫고 남북대화를 「체제와 체제간의 대화」로 승화시키는데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측의 이러한 깨달음과 동의가 없는 한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그 대화는 또다시 남북간에 격렬한 「정치투쟁」의 한 형태가 되고 그 결과는 동상이몽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남북대화는 조만간 결국은 재개될 것이 틀림없다. 그 이유는 상호 오해와 불신, 증오와 적대, 반목과 질시 등 남북간에 얽혀 있는 감정적 대립은 남북간의 대화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이다.

[부록]

(1)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성명(8.29)

국민 여러분!

남북조절위원회 김영주 평양측 공동위원장은 8월28일 오후 6시 돌연 성명을 발표하고 "중앙정보부가 김대중 납치사건을 주도하였다"느니,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인 본인이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구체화하려 하지 않고" "말로는 완전개방을 떠들면서 실제적 대책을 취하는 것은 회피하며" "반공정책을 강화하여 수많은 친공인사를 체포, 압박하고" "수많은 간첩을 잡아 죽이며"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을 체포, 구금했다"느니, 또 박 대통령각하의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이 "2개의 한국을 획책하는 것"이라느니 하는 등등의 이유로 나, 이후락과는 남북조절위원회를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겠다는 일방적인 선언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북한측의 일방적인 성명으로 말미암아 그동안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분단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모색하여 5천만 민족의 영원한 복지와 번영의 길을 개척하려는 숭고한 목적 아래 진행되어 온 남북대화는 중대한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돌연한 태도는 단적으로 말하여 박 대통령각하의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이 국내외로 큰 지지를 받게 되고 다가오는 「유엔」 총회에서도 그들의 입장이 비세로 물리게 됨을 자인하고 당혹한 나머지 이를 모면하려는 임시변통이며 평화를 지향하는 대화의 진행을 기피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돌이켜 보면 작년 5월 2일 본인은 죽음을 각오하고 박 대통령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을 방문하였으며 성의를 다하여 북한측을 설득시킴으로써 남북대화의 통로를 마련하였던 것입니다.

박 대통령각하께서는 본인의 사명을 명백하게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의 위험을 억제하고, 남북간에 평화적 관계를 정립하며, 나아가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애당초 본인이 북한을 방문할 때 본인은 본인의 신분을 감춘 일이 없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이라는 직책을 분명히, 그리고 떳떳하게 밝혔으며 또 본인의 소임은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등의 위반자를 다스리는 기관의 책임자라는 것을 김일성씨에게도 명백하게 밝혀 주었던 것입니다.

그때 김일성씨도 본인을 보고 "나는 공산당 잡는 사람이 찾아왔으니까 믿지 다른 사람이 왔다면 불신임할 수도 있다"고 함축성 있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기왕의 일을 두고 볼 때 이제와서 그들이 반공법을 위반한 공산주의자들을 체포, 처벌한다 하여 본인을 "애국지사를 처형하는 민족반역자"로 규정한다는 것은 전후가 모순되는 자가당착의 처사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만일 그러한 논법이 성립된다고 한다면 6·25전쟁의 도발자요, 따라서 수백만 동포를 학살한 북한노동당, 그뿐 아니라 수많은 진정한 애국지사들을 소위 반동분자로 규정하여 무참히 처형하고, 또 지금도 수많은 애국지사들을 아오지 탄광에서 죽음의 노동에 몰아넣고 있는 북한노동당의 조직지도부장 김영주와는 본인도 자리를 같이 할 수 없다는 논리가 역시 성립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민족의 대사에 감정을 개입시킨다는 것은 극히 위험한 일이며,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일체 과거의 감정을 초월하여 오로지 인내와 성의를 가지고 대화를 계속하여 왔던 것입니다.

북한은 어제의 성명에서 본인과 또 대한민국에 대해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위반했다느니, 남북관계개선의 구체화에 반대했다느니 여러 가지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반문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알차고도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와 간사회의, 그리고 공동사무국 운영세칙을 조속히 마련하자, 공동사무국을 조속히 발족시키자, 또 공동사무국 건물을 판문점에 공동으로 건축하자는 제의를 거듭했지만 이러한 제의를 외면한 쪽은 바로 북한측입니다.

북북이 7.4남북공동성명에서 상호 중상·비방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바 있고 또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에서 상호 대남·대북방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종 대남비방방송을 계속함으로써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도 바로 북한측입니다.

우리가 남북이 서로 사회를 개방할 것을 주장하고 이를 위해 쌍방이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실시할 것을 구체적으로 제의했으나 이것을 거부한 것도 바로 북한측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위 평양측을 대표하는 공동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신병을 핑계로 한 번도 회의장에 나타나지 않는 불성실한 자세를 보여 준 것도 바로 북한측인 것입니다.

과연 누가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위배했고 남북간 합의사항을 위반했으며, 또 과연 누가 남북관계개선의 구체화를 가로 막았느냐 하는 것은 자명한 것이며 북한측의 트집이야말로 바로 적반하장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박 대통령각하의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을 가리켜 「2개의 한국」음모 운운이라고 헐뜯고 있습니다. 그러나 6·23선언이야말로 7·4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하여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또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조국통일을 촉진시키려는 현실적인 평화통일 정책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만약 북한이 공동성명의 정신을 충실히 지켜서 간첩을 남파시키지 않았던들 우리가 간첩을 잡을 이유가 없는 것이며, 또 북한이 대남폭력혁명지령을 내려보내지 않았던들 반공보안 사범의 검거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본인은 작년 11월 평양에서 김일성씨를 만났을 때 "반공법과 국가 보안법이 필요없는 사회를 갖는 것이 우리의 희망"이라고 말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북한이 대남폭력 혁명지령을 그만 두어야 한다"고 분명히 못박아 말한 일이 있습니다.

어제 그들이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말한 모든 문제의 씨앗은 바로 그들 스스로가 뿌린 것들인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본인은 확신하거니와 남북의 5천만동포들은 평화적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의 대헌장인 7·4남북공동성명의 건재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갈망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흥망을 외면하고 그 어느 누구든지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파괴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민족반역행위로서 역사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본인은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입장에서 북한의 당국자들이 다시 한 번 이성으로 되돌아가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난폭하게 유린한 소위 8월 28일자 성명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인은 오늘 이 기회를 빌어 우리측은 어떠한 난관이 있더라도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성실과 인내로 이끌어 감으로써 겨레의 기대에 부응하겠다는 굳은 결의에 추호도 변함이 없음을 거듭 국내외에 천명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2) 남북조절위원회 이후락 공동위원장 기자회견 내용

위원장

온 국민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문제인 만큼 기자 여러분께서 국민을 대신해서 충분히 무제한으로 질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 자

북한측이 최근에 와서 갑자기 7·4남북공동성명정신을 위반하고 우리쪽을 비방하고 나오는 그 저의가 무엇이며 그 배경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는 수차 회답에 임한 책임자로서 이렇게 봅니다.

첫째, 그 동기는 원칙적으로 이 대화를 그들은 원하지 않고 있다, 나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이러한 소위 단교적인 선언은 우리의 6·23선언이 국제적으로 「어필」하고 있으니 거기에 당황한 하나의 궁극적인 조치다, 이렇게 봅니다. 또 곁들여서 이네들이 노리는 것은 소위 항상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수법으로서 그것은 최근 일어나고 있는 김대중 사건이 마치 중앙정보부와 관계가 있다 하는 식으로 세계의 지면들이 떠들자 거기에 편승해서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기둥인 중앙정보부를 흔들어보자는 것이 또한 그들의 기본적인 목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한가지 최근 북한이 고립화되어 가는 심경, 최근 「모스크바」에서 있었던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소련과 북한 관계, 이러한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국제적인 정세에서 하나의 신경질적인 표현, 이것이 이러한 선언이 아닌가 판단합니다.

기 자

이부장께서 평양을 방문, 처음 방문하실 때 5월 2일인데 작년 그 때 아마 비장한 결심으로 가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년 지나서 이런 중대한 고비를 맞이한 데 대해서 어떤 심경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대화는 꼭 어떤 방법으로든지 계속해야 합니다. 대화만이 서로 오해를 풀고 전쟁을 막는 가장 알찬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입장에서 대통령 각하의 뜻을 받들어 평양을 갔고 그 때에 내 자신도 비장한 결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일방적인 성명을 듣고 나니 정말 착잡한 심정,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 없습니다. 과연 누가 애국자냐, 참으로 나라를 걱정하고 통일을 원한다면 비록 불만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그러한 비열한 술법으로써 회답을 중지할 수 없지 않겠느냐? 이러한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과연 사람으로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러한

술법임을 새삼 느껴 마지 않습니다.

여담입니다마는 제가 5월 2일 평양에 갔었을 때에 김일성이가 나를 보고 세 차례 네 차례 말하기를 "부장선생 민족의 영웅이요, 영웅이요"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듣고 싶어서 들은 것이 아니요, 하지만 불과 1년 몇 개월 전에 나를 보고 민족의 영웅이요, 영웅이요, 하던 김일성이가 이제 오늘에 와서는 나를 정반대로 민족의 반역자로 규정합니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김일성이가 왜 그렇게 갑자기 심경이 변화되었나, 나는 이것을 세 가지로 생각합니다. 영웅이 되었다가 반역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첫째, 김일성이가 사람을 볼 줄 모른다하는 것이 하나고, 둘째는, 김일성씨가 나를 한번 이용해 보려고 하다가 이용할 수가 없다하는 것이 둘째 이유고, 세째는, 그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항상 자기목적과 자기수단 이외에는 가리지 않는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의 감정적 즉흥적 폭발, 이러한 것들이 담겨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처음 평양에 가서 대화의 길을 열어놓고 대화가 이와 같이 어렵게 된 판국에 있어서 착잡한 심경입니다.

다음 질문에 주십시오.

기 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성명에서 28일, 그러니까 어제 저녁 오후 6시에 평양방송을 통해 부장과는 대화를 앉겠다, 이러한 급작스러운 성명을 발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북한측이 나오는 진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아까 그 진의는 대략 설명드렸는데, 처음 질문과 같은 질문인 것 같습니다. 여하튼 궁극적으로는 6·23선언에 대한 반대이고...술직이 말씀드려서 지금 갑자기 아주 돌변한 반응은 국제적으로 중앙정보부가 여러 가지 의심을 받고 있고 악평을 받고 있으니까, 이 차체에 중앙정보부를 한 번 없애 버리자 하는 공산주의자의 술법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 자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김대중씨를 중앙정보부가 납치했다고 하는 항간의 유언비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시간이 흐르면 알겠지요. 그것은 질문받기 전에 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또 세계 여론이 다 그렇게 억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앙정보부가 오늘의 국제적인 정세를 여러 가지로 보아서 그러한 무모한 짓을 할 기관은 아니며, 그 정도의 양식은 갖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중앙정보부 부원은 아무 관계도 없다 하는 것을 확실히 천명합니다. 또 지금 특별 수사본부가 생겨서 엄중히 조사를 하고 있으

니까 경과는 알겠지만 만에 일이라도 중앙정보부 부원이 단 한사람이라도 끼어 있다면 나는 거기에 대한 모든 책임, 어떤 책임도 지겠다 하는 것을 확실히 말씀드립니다.

다음 질문해 주십시오.

기 자

김대중씨의 해외활동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중앙정보부장으로서 김대중씨의 해외활동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할 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중씨가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이 말씀이시죠?

기 자

활동을 한 그것하고 그것이 우리 법에 어긋난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또 중앙정보부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또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대중씨가 해외에서 어떤 활동을 했느냐, 물론 중앙정보부장이 국민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러나 지금 이 기회에 이 자리에서는 그 답변을 회피하는 것이 내 나름대로 현명할 것으로 생각을 해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미안합니다.

기 자

김대중씨 사건으로 일본 국내에서는 여러 가지 잡음이 일고 있고 심지어 주권침해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모양인데 이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대중씨 사건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나는 그것이 주권침해다 무어다 하는 그런 문제, 다시 말해 특정사건을 둘러싼 주권침해론에 대해서는 개입이나 논평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가지 일반론으로서 또 내 개인의 소견으로서 일반론을 말한다면 최근 일본의 여론이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그러한 여론이 비등되고 있는데……나는 어느 나라든 그 주권은 존중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여론은 대환영이고, 나는 지지합니다. 마땅히 주권은 존중되어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에서 주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일반론으로서 나는 지지하고 찬성합니다.……다만 곁들여서 한 가지 또 내가 소감을 말씀드린다면 남의 주권이 그렇게 귀중하다는 것을 우방 일본 국민들이 좀더 일찍이 인식하게 되었었던들 과거 우리 한국의 여러 가지 불행도 없었을 것이고 또 조국의 분단도 없었을 것이고 또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회견하는 이

러한 구차스러운 남북관계에 대한 기자회견 같은 것도 없었을 것이 아니었겠느냐 하는 그러한 안타까움을 일반론으로서 개인소감으로 덧붙여 드리는 바입니다.

기 자

북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연방제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나는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지켜보고 있는 중앙정보부장입니다. 북한의 연방제라 하는 것은 솔직이 말해서 눈감고 아웅하는 적화통일방식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나 즉, 연방제를 만들자 하는 것은 현재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이라든지 또는 한일조약 그리고 일체의 외국 관계, 이러한 것을 단절시켜서 한국에서 외국군을 철수시키고 그리고 한꺼번에 남한을 적화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속임수입니다. 얼핏 볼 때에는 연방제라는 것이 둘이 다 같이 공존할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저의는 무엇이나 하면 바로 그러한 것이 그 저의다 하는 것을 확실히 밝혀 둡니다.

기 자

그 동안에 남북대화를 이부장께서 계속해 오셨는데 남북대화를 해 오시면서 느끼신 소감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남북대화를 통한 나의 소감을 말하려면 시간이 한이 없습니다. 사실 체제가 다른 체제끼리의 대화는 정말 힘듭니다.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기에 얼핏 대화를 한 마당에 우리가 좀 양보하고 저쪽에서 좀 양보하면 회담이 성립되지 않느냐 이렇게도 간단하게 생각되지만 실제 공산주의자와 대화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양보할 아무것도 없고 양보받을 것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평화적으로 평화관계를 유지해 가다가 국민 대다수 의사에 따른 통일방식을 택하는 그것 밖에 없는데 무엇을 양보합니까. 결국은 일부를 양보하느냐, 전부를 양보하느냐, 그것 밖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또 공산주의자들의 대화라는 것은 항상 그 대화자체가 해결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선전을 위한 대화입니다.

거기에 대한 고충, 내자신이 평양을 갔다 왔고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수많은 대화를 해 보았지만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대화가 공산주의자와 대화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대화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표현해서 내 소감으로 대합니다.

기 자

모두에 성명을 발표하신 다음에도 끄트머리에 "남북대화는 어떠한 난관이 있어도 계속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기로는 우선 내달에 그 동안의 경과로 보아서 남북조절위원회가 열릴 것으로 기대해 왔습니다마는 이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남북대화의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주 위원장이 이러한 성명을 발표했지만 나는 남북대화에 대하여 비판하지 않습니다. 왜 비판하지 않느냐 하면, 같은 민족끼리 대화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이 5천만 민족의 생각이고 나는 대화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 봅니다.

그 방법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되겠지요. 이것은 내 개인 의견입니다마는 첫째, 제일 좋은 방법은 북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한 성명을 철회하는 방법이고 또 하나는, 만일에 쌍방이 합의한다면 남북간에 전부 다 위원을 교체해서 새로운 조절위원회를 발족시키는 방법……여러 가지 있겠지요. 이것은 장차 내가 예측할 수 없는 문제이지만 가능성을 일응 이야기한 것이고 이렇듯 저렇듯 간에 남북회담은 나는 계속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기 자

약 20일이 있으면 「유엔」 총회가 예년대로 다시 열립니다. 이번에는 북한이 움저버 자격으로 처음으로 「유엔」 총회에 참석을 하게 되는데 남북이 대좌하여서 한국문제 토의에서 불꽃 튀기는 대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번의 북한의 8·28성명이 한국문제 토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어제 성명 말씀이지요? 글썄 그것은 자기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계산해서 발표한 것이니까 내가 자기들 계산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짐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어제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유엔전략의 하나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데 그 계산이 자기네들 계산대로 맞아 떨어질지 아닐지 나는 그것은 짐작할 수 없는 것이고, 또 그들이 계산한 숫자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알 바도 없습니다. 다만 어제 그 성명발표는 분명히 「유엔」 대책에 자기 나름대로의 일환으로 나는 간주합니다.

대변인

다음은 외신 사이트에서 질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실 분은 거수를 해 가지고 자유롭게 질문을 해 주십시오.

기 자

김대중씨 사건과 연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언급하신 일본 조야에서 일고 있는 소위 주권침해설, 이와 관련해서 9월 7,8일로 예정되었던 한일각료회담은 양국정부의 합의에 의하여 연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사건이 한일 경제 협력관계 일본측에서는 대한원조의 중단을 재검토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일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 일본 대사를 역임하신 경험에 비추어서 앞으로의 한일관계 특히 경제적 측면에서의 한일관계가 어떠한 국면으로 갈 것인지 논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질문하신 분이 내가 김대중 사건에 대해서 많이 말했다 하는 데 많이 말한 것 없어요. 나는 질문을 한 데 대해서 간단히 말했고, 김대중 사건 또 일본의 주권침해문제, 이것도 분명히 특정사건이 주권침해론에 대해서 개입하고 싶지 않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가 아까 말한 것은 일반론의 주권존중설에 대해서 내가 지지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한 것 뿐이고,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한일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내가 답변할 소관외의 문제입니다. 다만 나도 전에 주일대사를 지낸 한 사람으로서 한일양국관계는 어느 나라보다도 우호관계가 유지되어야 한다 하는 저의 의견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협력관계나 무엇이나 그러한 문제는 내가 답변할 위치에 있지 않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대변인

질문을 계속해 주십시오.

기 자

지금 남북대화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5천만의 염원이었습니다마는 어제 북한측의 8·28성명과 지금 조철위원장의 이번 성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남북대화가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참으로 암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26일 「슐레징거」 미국방장관이 앞으로 한국에 있어서 불원한 장래에 동서독 관계와 같은 어떤 남북관계의 안정된 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 때까지는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없다. 그 불원한 장래라는 것은 12개월 내지 18개월로 본다. 이러한 것이 외신으로 들어온 바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과연 미국에서 보고 있는 남북관계는 어떻게 평가를 했고, 현재 이 벽에 부딪치는 듯한 남북대화의 관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남북관계, 남북회담이라는 것은 한국에 관심이 있는 나라라면 다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실히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고……그러나 대화라는 것은 항상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한쪽이 아무리 성실하게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불성실하면 안 되는 것이고 하니까 여하튼 앞으로 회담의 전망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장은 내가 대화책임자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별개문제로 하고 우리의 입장으로서 남북대화는 기어코 계속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비굴하게 북한측에 대해서 지나친 양보, 지나친 저 자세로 그러한 방식의 대화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상응한 입장과 상응한 이해 여기에서 출발해서 대화는 계속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성실한 노력을 다할 것을 한 번 더 천명합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끝내겠습니다.

장시간 감사합니다.

## 제2부 남북관계의 현안문제

- 박정희대통령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의 합리성과  
북한의 소위 5대강령의 허구성 -

### 1. 남북관계의 현안문제는 무엇인가

제1부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제2차 대전의 종결과 더불어 전후냉전체제의 양극구조는 한반도의 허리를 잘라서 국토를 분단해 놓았다. 그 이후 28년간 남북한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프롤레타리아」독재주의로 구별되는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체제를 발전시켜 왔다.

그동안 한반도는 3년여에 걸친 6·25라는 치참한 동족상잔의 전화를 겪었고 그 뒤에도 적화통일을 노리는 북한측의 계속되는 각종 도발행위로 말미암아 긴장이 가실 날이 없었다. 이러한 긴장상태의 지속은 남북 쌍방 공히 국민일반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노력에 큰 차질을 초래해 왔다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한반도의 긴장은 북한에서 김일성 우상화를 완성시키는 과정에서 더욱 격화되었다. 북한은 주민들을 광신적인 개인숭배사상으로 무장시키기 위해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전쟁열을 고취시키고 갖가지로 소위 「대남혁명공작」을 전개해 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긴장 조성정책은 김일성 우상화가 완성되려 할 무렵인 1968년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박정희대통령 암살을 목적으로 청와대 기습을 노렸던 1.21사태나 무장간첩의 대규모 동해안상륙사건, 그리고 「푸에블로」호 사건과 EC-121사건들이 모두 이 해에 발생한 것이다.

북한에 의해 광적으로 조성된 이러한 긴장상태는 그대로 방치될 수 없었다.

한반도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물론 남북의 통일에 있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의 시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통일은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두 개의 이질적인 체제 중에서 택일하는 것뿐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통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 그것은 북한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에 의한 체제의 선택에는 결단코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북한은 언제나 입만 열면 「자주·평화통일」을 얘기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어디까지나 공산화 통일이었고 그들의 「평화통일 방안」은 한결같이 민주적 방식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른바 「인민민주주의혁명」 방식에 의한 「남조선혁명」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인민민주주의혁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농민·어민 등 서민대중으로 하여금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하여 합법적인 기존 정부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적화통일 방정식이 거래의 염원인 통일을 촉진하는 길이 될 수는 없었다.

이러한 북한의 태도로 말미암아 통일의 길은 오히려 더욱 멀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통일이 이렇게 어려워진 이상 한반도의 긴장상태를 완화·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차선의 해결책이 절실하게 요망되었다. 긴장의 완화를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상호의 관계를 평화적 관계로 정립시키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상호의 관계를 개선해 나감으로써 통일에의 길을 단축시키는 노력이 긴급하게 요망되기에 이른 것이다.

더군다나 1960년대 후반부터 국제정세는 탈냉전현상을 지향하기 시작했다. 모든 국제적 분규를 현상고정방식에 의해 해결함으로써 긴장의 완화와 상호관계의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탈「이데올로기」의 현실주의의 물결이 밀어 닥친 것이다.

박정희대통령은 이러한 대내외 사정을 심분 고려한 나머지 북한의 광적인 긴장조성 정책을 억제하고 국제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결단을 내렸다.

북한에 대해 체제간의 「선의의 경쟁」을 제의한 1970년의 8·15평화제의를 그 효시였다. 박대통령의 현명한 「이니시어티브」에 따라서 대한적십자사는 1971년 8월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여 인도적 차원에서 남북대화의 길을 열었다. 박대통령의 지시에 의해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일신의 위협을 무릅쓰고 평양을 방문하여 역사적 7·4 남북공동성명을 생산해 냈으며 이에 의거하여 남북간에는 남북조절위원회라는 정치적 대화의 통로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대화는 주지하는 바와 같이 진전을 이룩하지 못했다. 그것은 대화를 통해 소위 「남조선 혁명」에 의한 적화통일을 촉진해 보려던 북한이 사태의 진전이 여의치 않게 되자 오히려 대화를 정돈시켰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박정희대통령은 또 하나의 위대한 정책 결단을 내렸다. 금년 6월23일 내외에 천명한 「평화통일에 관한 외교정책선언」이 그것이다.

1970년부터 시작해서 남북관계에 관해 박대통령이 내린 일련의 정책결단은 한결같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항구적인 평화를 촉진하며 남북관계를 평화적인 선의의 경쟁관계로 유도하여 분단조국의 통일을 촉진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남북관계가 당면해 있는 현안문제인 것이다.

## 2.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선언의 정당성

박대통령이 6월 23일 내외에 천명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평화통일 외교정책은 다음과 같은 7개 항목으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연합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 천명한다.

박대통령은 또 이 7개 항목의 새 외교정책 중 대북한관계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해 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박대통령의 6·23선언은 박대통령 스스로 6·23선언발표에 즈음한 특별성명에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내외정세를 냉엄하게 평가할 때 6·23선언에서 밝힌 새 외교정책이야말로 "긴장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임에 틀림 없다.

6·23선언은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과 동시 국제기구 참여의 길을 스스로 열어놓음으로써 국제적 긴장요인의 하나를 과감히 제거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국제평화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려는 강력한 의지의 표명일 뿐 아니라 북한을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하여 남북이 통일

되는 날까지 남과 북의 두 체제가 평화적 관계를 정립·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결단이기도 했다.

박대통령은 특히 6·23선언의 제2항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하여 남북대화의 일반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했다.

이럼으로써 박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남북한이 당분간 각기 자기 체제를 다른 일방의 간섭 없이 발전시키면서 한반도상에서 전쟁의 위협이 없는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세계여론은 박대통령의 6·23선언을 찬양해 마지 않았다. 박대통령의 현실적인 대북한정책, 긴장완화를 위한 노력, 평화에 대한 사명감은 세계여론에 강력하게 「어필」한 것이다.

사회주의진영 국가의 반응도 호의적인 것이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문호개방정책은 사회주의진영국가들에 의해서도 현실적인 정책으로 공감을 얻은 것이다. 세계의 모든 여론은 사회주의진영의 종주국인 소련이 「모스크바·유니버시아드」에 참가하는 한국선수단에게 「비자」를 발급해주고 한국선수단의 체소기간중 여러 가지로 친절을 베푸는 것은 소련당국의 6·23선언에 대한 호의적인 반응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유독 북한만은 강경하게 반발했다. 북한은 6·23선언이 「두 개의 한국화」에 의해 민족분열을 영구화시키는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북한이 「모스크바·유니버시아드」에 불참한 것은 소련이 6·23선언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 데 대한 항의였으며 8·28 김영주성명으로 대화를 중단시킨 것은 6·23선언이 국제적으로 「어필」하는데 대한 신경질적 짜증의 폭발이었다.

이제 남북한의 그 어느 쪽이 한반도에서의 평화의 구축에 반대하며 긴장의 완화에 역행하고 있는가는 분명해졌다. 그것은 북한인 것이다.

### 3. 북한의 소위 「5대강령」의 허구성

6월 23일 상오 10시 박대통령이 서울에서 「평화통일외교정책」을 선언하자 북한의 주도 김일성은 그로부터 10시간 뒤인 하오 8시 평양에서 열린 「후사크」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서기장 일행 환영 군중대회를 빌어 소위 조국통일에 관한 「5대강령」을 내 놓았다.

문제의 소위 「5대강령」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것은 첫째,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상태를 해소하고 긴장상태를 완화한다. 둘째, 정치·군사·외교·경제·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다방면적인 「합작」과 교류를 실시한다. 셋째, 통일문제를 위한 「대민족회담」을 소집한다. 넷째, 남북에 현존하는 두 제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연방제를 실시하며 연방국호는 「고려연방제」이라 한다. 다섯째,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에 반대하며 「유엔」 가입은 연방제 실시 후 「고려연방국」의 국호로 한다는 것이다.

북한의 이 「5대강령」은 전체적으로 허구적인 가설로서 북한이 의중에 두고 있는 적화통일기도를 감춘 위장제의이며 각 항목은 사실상 상호 연관조차 안 되는 오로지 선전효과만을 노린 「슬로건」의 나열이었다.

이제 소위 「5대강령」의 각 항목을 검토해 봄으로써 그들 항목들이 얼마나 무책임하고 허구적인 것인가를 살펴보자.

우선, 첫째 항목의 「군사적 대치해소」운운은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북한측이 주장해 온 이른바 「군사문제우선해결」론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다.

북한이 주장해 온 「군사문제우선해결」주장의 내용은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군사 5개항목」의 선결주장이다.

북한이 내놓은 「군사 5개항목」이란, ①군비경쟁의 중지, ②남북한군대의 각각 10만 이하로의 감축, ③미군철수, ④외국으로부터의 군장비 도입중지, 그리고 ⑤이 4개 항목의 실천을 보장하는 「평화협정」의 체결 등이다.

북한측의 이 5개 항목 제안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그 저의는 물어볼 필요도 없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북한측의 자료가 명백히 해 놓고 있듯이 북한이 「남조선혁명」을 추구하는데 있어서 「주된 투쟁대상」은 「미군」이기 때문이다.(27 「페이지」 참조)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서울측은 "군사문제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해결해야 될 기본문제의 하나"임을 인정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전후를 바꾼 무책임한 주장"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서울측은 군사문제는 국가의 안보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이 문제의 해결을 남북간에 상당한 정도의 신뢰관계의 축적이 선행된 뒤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실 동서고금의 역사를 통하여 적대국간의 군축협상이 성공을 거둔 사례는 거의 한번도 없었음을 주목할 때 서울측의 주장은 전적으로 정당한 것이었다. 더구나 대한민국은 해방 이후 남한 지역에 주둔했던 미군이 철수하고 대한민국 국군이 채 정비되지 않은 틈을 타서 전면 무력남침을 감행한 북한으로 말미암아 6·25의 처참한 전화를 겪은 쓰라린 기억을 가지고 있다. 군축이란 고도의 관리 및 사찰방안의 수립이 필요한 것이나, 북한측의 주장은 이러한 관리 및 사찰제도는 외면하고 덮어 놓고 군축을 하자는 맹랑한 것이었다. 이러한 북한의 군축제안이 과연 성실한 제안이냐는 데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다.

서울측의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군사문제 해결의 중대성을 강조하면서 "군사문제는 남북의 국민들이 남북간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된 뒤가 아니면 해결될 수 없으며 남북간에 이루어진 조그만 합의사항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지금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더 나아가 "남북간 긴장의 완화는 군대를 맹목적으로 줄인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남북의 지도자들이 전쟁을 앞장겠다는 확고 부동한 결의만 가지고 있으면 긴장은 완화되는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북한의 「군사문제 우선해결」 주장은 결국 남북관계의 개선이라는 견지에서 볼 때 불순한 제의를 감춘 무책임한 선전에 불과한 것이다.

두번째의 소위 "다방면에서의 「합작」과 교류"주장은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북한측이 주장한 이른바 「5개 분과위원회 동시 일괄설치」 주장이다.

이 항목이야 말로 소위 「5대강령」의 각 항목들이 얼마나 적반하장의 기만적인 주장들인가를 웅변해 주는 좋은 사례이다.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북한이 내놓은 소위 「5개분과위 일괄설치」 제안은 "하자는"제안이 아니라 서울측이 내놓은 합리적인 제안에 "반대하기 위한"제안이었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위원회 안에 정치·군사·경제·외교·문화 등 5개분과위를 설치하되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이 진척되는 데 따라 설치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각 분과위의 설치가 축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해 놓았다.

서울측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사업을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로 말미암은 마찰요인이 비교적 적은 분야에서부터 실시한다"는 원칙아래 5개 분과위 중 경제와 사회·문화분과위를 먼저 설치하고 이를 통해 경제인과 물자 및 과학기술의 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상품전시회의 교환개최, 상사의 교환상주 등과 학술·문화·체육·무대예술의 교류와 고고학·민족사·고유언어에 대한 공동연구, 기자를 포함한 사회인사와 단체의 교류, 통신·관광분야에서의 교류 등 폭넓은 교류와 협력을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북한의 「5개분과위 일괄설치」 주장은 서울측의 이러한 합리적인 제안을 반대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전부가 아니면 무"라는 기만적인 제안이었다.

북한의 제안은 이렇게 "합의를 맺기 위한 제안"이기 때문에 아무런 구체성이 없었다. 북한측은 "5개분과위설치에 합의해도 분과위들의 활동이 시작되려면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분과위 설치 주장이 가까운 시일 안에 해당 분야의 사업 실시를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 다음 세번째의 소위 「대민족회의」 소집 주장은 북한이 그들의 대화를 통한 대남혁명 추진 기도를 역력히 보여 준 산 증거이다.

북한의 소위 「대민족회의」 소집 주장의 부당성은 첫째로, 그것이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 7·4남북공동성명은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간의 모든 현안문제를 처리·해결하기 위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규정했으며 이에 따라 남북조절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는 제치놓고 소위 「대민족회의」를 열어 통일문제를 처리·해결하자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대민족회의」란 무엇을 말하는가.

북한은 50년대 초반부터 통일문제해결을 위한 이른바 「남북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의 개최를 주장해 왔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이 연석회의 제의는 기만적인 것이었다.

예컨대 북한은 1950년 6월 6일 "평화통일의 모든 필요한 조건과 수속을 토의·결정하기 위하여 남북조선 전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를 38도선 연선의 해주나 개성 두 도시 중 한 군데에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에 걸쳐 개최하자"고 공개적으로 제안했다. 그러나 북한은 그로부터 3주일 후인 6월 25일 전면적인 무력남침을 개시함으로써 전기 제의가 속임수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1953년의 휴전 이후에도 북한은 기회 있을 때마다 문제의 연석회의 주장을 내놓았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북한은 「정당·사회단체 대표자연석회의」 주장을 「정치협상회의」 주장으로 대체시키고 그 참석대상은 "정당·사회단체 대표자 및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자"로 할 것을 주장했다. 여기서 북한이 말하는 「인민」의 개념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의 1972년판 헌법이 명시하는 바와 같이 「노동자·농민·병사·근로인텔리」를 말한다.

결국 북한의 「정치협상회의」 주장은 대한민국정부는 물론 자본가·기업가 및 광범위한 중산층은 「반동계급」으로 몰아 배제하고 대중을 상대로 한 「반정부통일전선」을 형성하여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를 폭력으로 전복시키겠다는 기도를 감추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은 6월 23일 소위 「5대강령」을 내놓으면서 그 제3항에서 종래의 「정치협상회의」를 다시 「대민족회의」라고 개칭하여 그 개최를 제안했다. 그러나 김일성은 이 「대민족회의」 제의에서 북한의 기도를 조금 더 명백하게 들어 내놓았다. 북한은 종래 「정치협상회의」의 참석 대상

은 "정당·사회단체대표자 및 각계각층 「인민」의 대표자"라고 막연하게 표현해 왔으나 이번에는 「대민족회의」의 참가대상을 "북반부의 노동자·농민·근로농민·근로인텔리·청년학생·병사, 남조선의 노동자·농민·청년학생·지식인·군인·「민족자본가」·「소자산계급」등 남북의 각계각층 「인민」들과 각 정당·사회단체"라고 나열함으로써 북한의 「대민족회의」 주장이란 소위 「통일전선」공작의 일환임을 스스로 밝혔다.

이렇게 숨겨진 기도의 불순성·부당성은 차치하고 양측의 「당국」이 배제된 「오합지중의 모임」에서 도대체 어떻게 실천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방안」이 안출될 수 있는가.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에서 서울측의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바로 이러한 의문을 제기하면서 "북한측의 소위 「정치협상회의」 제의는 실현성을 도외시한 정치적·선전적 「슬로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는 것이다.

네번째로, 북한은 「남북한연방제」를 제의하고 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할 것을 주장했다.

국호를 「고려연방공화국」으로 하자는 주장은 국민일반의 복고주의적 취향에 「어필」하겠다는 알팍한 수작 이외는 아무 것도 아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와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연방제」가 실현 가능한, 현실적 타당성을 지닌 방안인가의 여부이며 국호문제는 그 뒤에 오는 부수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말하는 「연방제」의 정체는 무엇인가. 북한은 60년 8월 14일 김일성연설을 통해 남북한연방제 실시를 처음 주장하면서 그 내용에 관해서는 "남북한에 현존하는 정치제도는 그대로 두고 두 정부의 독자적인 활동을 보장하는 동시에 두 정치대표로 구성되는 「최고민족위원회」를 조직하여 주로 남북한의 경제·문화발전을 통일적으로 조절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것은 북한이 말하는 소위 「연방제」하에서 남북한은 정치제도와 국방외교분야에서는 독자성을 견지하면서 경제·문화분야에서 융합을 도모하자는 것으로 말이 「연방」이지 사실은 「국가연합」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바꾸어 말하면 바로 서로 상이한 체제를 지닌 남북한의 「공존」을 북한이 주장한 것이다.

1970년대 초반에 들어와 북한은 「남북한연방제」실시 주장을 주무기로 하는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이번에는 「연방제」의 내용을 "남북의 현존 정치제도는 그대로 두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정부의 대표로 「최고민족회의」를 조직하여 정치·경제·군사·문화의 제문제를 해결하자는 것"(1972.9.17 김일성의 일본매일신문과의 회견)이라고 새로운 각색을 했다. 더 나아가 북한은 소위 「5대강령」에서는 남북한이 하나의 「연방」으로 단일회원국으로 「유엔」에 가입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문제의 「연방」이 외교분야에서도 단일화된 노선을 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

북한의 이 「연방제」실시 주장이야 말로 발상 당초부터 오늘까지 그 내용의 변천 과정이 웅변해 주듯이 세상의 이목을 흐려보려는 선전적인 속임수 이외에 아무 것도 아니다.

북한은 「연방제」 하에서 "남북한은 현존하는 정치제도를 그대로 둔다"고 말하고 있다. 남북한의 현존하는 체제는 워낙 극단적으로 이질적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남북간의 대화마저 그 진전을 용납치 않고 있는 것이 엄연한 실정이다.

그렇게 서로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두 개의 체제가 하나의 「연방제」 하에 통일적인 정치·군사·외교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인가. 북한은 그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일언반구의 언급을 않고 있으며 바로 거기에 북한의 「연방제」가 감추고 있는 함정이 있는 것이다.

8월 29일의 기자회견에서 서울측의 이후락 공동위원장은 바로 정곡을 찔러 그 함정을 갈파했다. 그것은 북한의 「연방제」 주장에는 아직 감추어 두고 있는 「선행조건」이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대한민국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파기하고 한일협정을 폐기하며 모든 우방들과의 관계를 청산하며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라"는 것이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대한민국의 안보와 발전을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손에 맡기라는 얘기가 된다.

북한의 소위 「남북한연방제」 주장은 이렇게 허구적인 주장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에 반대하고 「고려연방공화국」이라는 국호에 의한 단일회원국으로서의 가입을 주장했다.

소위 「고려연방공화국」 운운이 전혀 허구적이고 가공적인 주장임은 이미 상론한 바와 같다.

이 항목과 관련해서 문제의 초점은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에 반대하는 북한의 동기가 어느 만큼 순수한가의 여부에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불반대정책이 "민족의 분열을 영구화하며 「2개의 한국」을 조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측의 이러한 주장이야말로 전후가 모순되는 자가당착의 억지임은 북한 스스로의 행적이 입증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북한 스스로가 1949년과 1951년 두 차례에 걸쳐 북한만의 단독 「유엔」 가입 신청을 「유엔」에 내놓았으며, 법률적으로는 이 신청이 아직도 유효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연방제」 주장에서 "남북한이 각기 자기의 현존정치제도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말함으로써 남북한의 「공존」을 북한 스스로가 주장하고 있다.

셋째로, 북한은 북한 스스로가 사실상 스스로의 외교활동을 통해 「2개의 한국」 노선을 추구해 왔다. 그러면서 말로만 「2개의 한국」 노선에 반대한다는 기괴한 이율배반적인 언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특히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대화를 구실삼아 대한민국과 이미 수교중인 국가들에 대해 치열한 수교공세를 폈으며, 최근에는 IPU(국제의원연맹)는 물론 그들이 동시가입을 그렇게 반대한다는 「유엔」 산하 기구인 WHO(세계보건기구)에도 가입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 자신도 6월 23일 소위 「5대강령」을 운위하는 가운데 “우리는 물론 우리 공화국에 대해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호혜평등의 원칙에서 국제관계를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선이야말로 과연 「2개의 한국」을 스스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밖에 무엇인가.

이상에서 고찰한 바처럼 북한의 남북한동시 「유엔」 가입에 대한 반대는 자신의 꼬리를 스스로가 짓밟는 모순덩어리인 것이다.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할 경우 그것이 남북통일을 저해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박정희대통령은 6·23특별성명에서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아래 . . .” 라는 엄격한 단서를 붙여 이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를 명확하게 밝혀 놓았다.

요컨대,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에 극렬하게 반대하는 북한의 태도에서 우리는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요구하는 「유엔」 헌장의 권위와 권능을 받아들임으로써 「남조선혁명」이라는 폭력적 수단에 의한 적화통일기도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고집스런 자세를 읽을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내놓고 있는 소위 김일성의 「평화통일 5대강령」의 정체는 이상에서 다각적으로 고찰한 것처럼 허구에 찬 선전 「슬로건」에 불과한 것이며 5천만 남북의 겨레들이 갈망해 마지 않는 긴장완화와 평화조성은 외면하는 발상에서 나온 주장인 것이다.

#### 4. 결 론

우리는 이제 남북관계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불행하게도 남북대화가 일단 중단되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았다. 또 이 중단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것도 알았다.

또한 우리는 여러가지 국내외의 요인들을 감안할 때 일시적인 중단에도 불구하고 남북대화는 언젠가는 재개되지 않을 수 없다는 우리 나름의 결론을 갖게 되었다는 것도 알았다.

그러면 대화가 이렇게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할 것인가. 남북한의 5천만 겨레들은 분명 대화의 계속을 갈망하고 있다. 또 세계의 공정한 여론도 이것을 바라고 있다. 대화의 계속은 희망을 상징하지만 대화의 중단은 불안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것은 중단된 대화를 다시 재개하기 위한 참을성 있고 성실한 노력, 그것인 것이다.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이 8·29 기자회견에서 술회한 것처럼 우리는 이번 기회에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참으로 어려운 대화의 상대라는 것을 다시금 인식했다. 이러한 인식의 재확인이야말로 우리에게는 값진 체험이다. 왜냐 하면, 이러한 인식을 재확인함으로써 우리는 북한 공산주의자와의 대화에 지나치게 성급하고 감상적인 기대를 갖지 않게 되는 것이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성에 입각하여 대화에 임하도록 하기까지에는 배전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어려운 대화를 끝내 성공시키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우리의 체제에 대한 확고부동한 신념이며 국력의 극대화이다. 신장된 국력과 이에 바탕한 국민총화의 강력한 뒷받침, 이것이야말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다시 대화의 마당으로 끌어들이고 대화를 성공으로 이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

대화재개의 여건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유신체제의 기반을 더욱 굳건히 다져 안으로 근면과 노력으로 능률을 극대화시키고 밖으로는 6·23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모든 국가와의 관계를 적극·과감하게 개선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그 요체가 되는 것이다.

그렇다고 대화의 진전이 우리 자신의 노력만으로 좌우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된다.

많은 전문가들은 최근 소련과 중공간의 격화되는 알력으로 말미암은 북한과의 북방 삼각관계의 불협화파가 이번 북한으로 하여금 8·28 성명과 같은 발작적인 태도를 취하게 한 중요한 요인의 하나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더욱 격화되고 있는 소·중공관계의 부조에 비추어 볼 때 한반도문제, 특히 남북관계에 대한 소·중공양국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느냐는 의문에 대한 해답은 지극히 불투명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견지에서 지난번 「모스크바·유니버시아드」에 한국이 참가하게 되자 북한이

스스로 불참함으로써 원래 비회원국인 중공과 결과적으로 보조를 같이 했다는 데에는 우연의 사실로만 보아 넘길 수 없는 심각한 일면이 있음을 느끼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국제관계의 변화하는 모습도 냉철히 지켜 보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국제정세의 추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이러한 국제정세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 활용하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대화의 계속을 보장하는 길이며, 대화의 성공을 기약하는 지름길인 것이다.

# 남북대화 제3호

(1973. 9. ~ 1973. 12)

## < 목 차 >

1. 우리는 대화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	1
2. 대화부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	3
3. 8.28 김영주 성명의 진의는 무엇인가 .....	9
4. 남북적십자 회담은 왜 중단되고 있는가 .....	11
5. 대화정상화의 전망은 어떠한가 .....	13
6. 「유엔」 총회 「합의성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	15
7. 대화는 어떠한 조건 위에서 전진할 수 있는가 .....	16
<자 료 편> .....	19
1.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 .....	19
2. 7·4 남북 공동 성명 .....	22
3.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	24
4. 28차 「유엔」 총회 「합의성명」 .....	26
5. 남북관계 주요 일지 .....	27

## 1. 우리는 대화에서 무엇을 바라는가

나라가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남북으로 분단돼 있는 현실상황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무엇인가. 두말 할 필요도 없이 그것은 분단된 나라를 다시 하나로 통일하는 것이다.

박정희대통령은 1972년 6월 23일 내외에 천명한 새로운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의 첫 항목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 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고 언명함으로써 온 국민의 희망과 일치된 정부의 결연한 결의를 피력했다.

그러나 우리 민족 지상의 과제인 나라의 통일은 그렇게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여건을 안고 있다. 그것은 한반도의 남북 쌍방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이념과 가치관, 그리고 역사관이 극단적으로 다른 두 체제로 대립되어 있으며 쌍방은 각기 자기 체제를 고수하려는 확고부동한 결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한반도의 현실 상황을 감안한 나머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평화적 통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차선의 방안으로 대화를 선택했다. 대화를 통해 적대적인 두 체제간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한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을 추방하고 긴장을 완화하며,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의 성공을 바탕으로 하여 자주적 평화통일을 도모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러한 대화의 목표를 우리는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에 명문화시켜 놓았다.

남북 쌍방은 공동성명에서 분단조국의 통일은 자주적 노력과 평화적 방법에 의하여 달성한다는 원칙에 합의를 보았으며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오해와 불신을 푸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함으로써 우선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기로』 한 것이다.

긴장을 완화하고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공동성명은 이를 위해서 남북 쌍방이 취할 조치들을 다음과 같이 열거해 놓고 있다.

- 상호 중상·비방중지, 대소간 무장충돌 지양, 군사적 충돌방지
- 다방면적인 제반 교류의 실시
- 남북적십자회담의 촉진
- 남북직통전화의 가설·운영
- 합의사항 추진, 남북간의 제반 문제 개선·해결, 통일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로서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운영

남북대화의 목적은 이상 열거한 7·4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들을 성실하게 실천에 옮김으로써 우선적으로는 전쟁을 방지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를 정착시키고, 오해와 불신의 제거, 이해와 신뢰의 증진을 통해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적 자주통일의 길을 넓혀 가자는 것인 것이다.

박정희대통령은 남북공동성명이 제시하고 있는 이러한 대화의 목표를 높이 평가하여 6·23선언의 제3항에서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서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 2. 대화부진의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남북대화는 7·4남북공동성명이라는 역사적인 합의문서가 생산됨으로써 쌍방이 완전히 의견의 일치를 본 목표를 가지고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성명 이후 1년반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구체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지난 1년반의 대화의 경과는 비단 대화의 전진적인 성과가 없을 뿐 아니라 그나마 그 동안 쌍방간에 이루어진 일부 합의사항이 일방에 의해 공공연히 유린되고 새로운 긴장이 일방에 의해 도발되며 대화의 통로가 일방적으로 단절되고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양상이 남북공동성명 이전을 방불케 할 정도로 악화되는 일련의 우려할만한 사태 발전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대화의 부진과 남북관계 후퇴의 원인에 대한 고찰은 대화내적 요인과 대화외적 요인에 대한 규명이 병행되어야 한다.

### 가. 대화내적 요인

남북대화의 진전이 교착된 직접적인 원인은 남북간의 기존 합의 사항을 분명히 의도적 계획적으로 무시, 외면하고 유린하는 북한측의 불성실한 태도에 있다.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무시, 외면하고 유린하는 북한의 행동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가.

남북대화의 교착으로 부터 중단을 불가피하게 만든 북한의 행동은 우선 쌍방간에 합의된 대화의 통로를 변경시키려는 집요한 노력으로 시작되었다.

남북 쌍방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관계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를 협의, 해결하는 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창설했다.

7·4남북공동성명은 남북 쌍방을 대표한 서울측의 이후락부장(당시 중앙정보부장)과 평양측의 김영주부장(노동당조직지도부장)이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합의, 서명했으며 또 쌍방은 1972년 11월 정식으로 합의, 채택하여 발효시킨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장관(상)」 또는 차관(부상) 급으로 할 것에 합의했다. 쌍방은 위원회를 사실상 쌍방의 「당국」 간의 기구로 운영할 것에 합의한 것이다.

쌍방은 동 합의서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했다. ①통일문제 ②정당·사회단체·개별인사간의 정치적 교류 ③경제·문화·사회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④긴장완화·군사충돌 방지, 군사적 대치의 해소 ⑤대외활동에서의 공동보조 추구등을 협의 해결하고 실천을 보장하는 기능들이 그것이다.

북한은 위원회가 1972년 11월 정식으로 발족되자 미처 제반 위원회의 업무 기능도 정비되기 전에 합의된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의 변질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1973년 3월 평양에서 열린 위원회의 제2차회의에서 북한측은 「군사문제의 우선 해결을 위하여」라는 명목으로 위원회의 개편을 주장하는가 하면,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남북 정당·사회단체들과 각계 각층 「인민」들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의 소집을 요구했다.

같은 해 4월 16일 김일성은 『남북조절위원회에 정당·사회단체들이 참가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개편하든가 또는 통일문제의 해결을 위해 조절위원회와는 별도로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자』고 주장했다. 북한은 위원회의 개편 또는 대화통로의 변질문제를 위원회 테두리 밖으로 끌어내기 시작한 것이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동 합의서의 수정·보완은 위원회의 합의에 의거하여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놓았다. 북한은 이러한 일련의 합의사항들을 공공연하게 유린하기 시작한 것이다.

도합 세 차례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측은 위원회의 업무기능 정상화와 쌍방간의 합의사항들의 실천을 구체화할 것을 주장한 대화통로의 변경문제에 관한 자기측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시종했다. 대화의 교착은 너무도 당연한 귀결이었다.

북한은 또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들고 나와 이것을 선행조건으로 고집함으로써 대화의 진전을 가로 막았다. 군사문제 우선해결 주장이 그것이다.

남북대화의 진전과 성공은 7. 4남북공동성명의 제2항부터 5항까지의 여러 가지 조치들이 차근차근 실천에 옮겨져 남북간의 긴장이 현실적으로 완화되고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증진되는 일련의 사태발전이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전제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분명히 의도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는 태도를 취했으며 또 그러한 「과정」이 충족되지 않고서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하나의 「환상」을 조작하여 이를 대내외 선전에 활용하는데 급급해 왔다. 말하자면 『통일이 이루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마차를 말 앞에 세우는 식의 비현실적인 사고방식을 내세운 것이다. 소위 「군사문제 우선해결」주장은 바로 그러한 발상에서 나온 것이고 따라서 상대측과의 합의를 목적으로 한 것이기 보다 선전효과를 강렬하게 의식한 주장이었다.

북한이 대화의 진전을 의식적으로 기피하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 위원회 회의에서 내놓은 제안이 각 항목 상호간에 모순을 들어내고 있는 데서도 명백하게 들어났다. 예를 들어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북한측이 제시한 제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관계 개선의 관건은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에 있다. 따라서 남북간에는 ① 군비경쟁의 중지 ② 병력의 감축 ③ 외군의 철수 ④ 군 장비도입의 중지 ⑤ 평화협정 체결 등 군사 5개 항목이 우선적으로 토의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개편하여 군 책임자를 여기에 참가시키든가 아니면 위원회의 군사분과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둘째, 위원회의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등 5개 분과위원회는 동시에 일괄해서 설치해야 한다.

셋째, 통일문제를 논의 해결하기 위해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북한의 이 3개 항목 제안은 문면에서 읽을 수 있듯이 첫째 항목과 둘째 항목이 상호 모순되는 것이며 또 셋째 항목은 위원회의 합의된 기능을 부정하는 항목인 것이다. 이것은 어느 모로 보나 합의를 목적으로 내놓은 제안이 아니었다.

북한이 남북간에 이루어진 합의사항을 아무 미련 없이 파기하고 있는 대표적인 경우는 상호 비방 방송 중지에 관한 합의의 경우이다. 남북 쌍방은 1972년 11월 상호 중상·비방 중지를 약속한 남북공동성명 제2항의 구체화를 위해 1차적으로 서로 대남·대북 방송과 휴전선에서의 「스피커」 방송, 선전 「빠라」 살포 중지에 합의, 이를 11월 11일을 기해 발효시켰다. 그러나 이 가운데 상호 비난방송 중지에 관한 합의는 처음부터 하나 마나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북한은 한달이 못가 대한민국에 대한 전면적인 비방방송을 재개한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에게 선전과 선동은 정치투쟁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상호 비난방송 중지에 관한 합의 후에는 즉각적인 후회가 뒤따랐는지도 모른다.

하여튼 북한은 대남 비난방송을 재개한 후 1972년 11월 11일부터 1973년 11월 30일까지의 사이에 북한의 정규방송 TV망을 통해 총 10,282건의 대남 비난 방송을 실시한 것으로 집계 되었다. 북한의 대남 비난 방송은 대한민국의 사회현실과 정부의 내외정책을 악의적으로 왜곡·변조하여 사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으로 특히 1973년 후반기에 와서는 대한민국 지도층 인사들에 대한 악랄하고도 야비한 지명인신공격을 더욱 격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소위 「통혁당의 목소리」라는 유령 지하방송국을 북한지역 내에서 운영하면서 같은 기간 중에 총 10,764건의 대남 비난 방송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 유령 방송은 특히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공공연하게 반정부 봉기를 선동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앞날에 중대한 암영을 던져 주고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를 교착시킨 대화내적 요인은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다. 북한은 급기야 1973년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공동위원장 김영주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을 통하여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시켜 버렸다.

#### 나. 대화 외적 요인

북한은 무엇 때문에 대화를 교착시키고 더 나아가 대화를 중단시켰는가.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남북관계의 대화외적 측면에서 찾지 않을 수 없다.

그 원인은 한 마디로 북한이 대화 이전은 물론 대화 이후에도 오로지 소위 「남조선 혁명」 이론에 입각한 대남적화통일 목표를 계속 추구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대화 이전은 물론 대화 이후에도 소위 「남조선 혁명」을 통한 대남적화통일을 계속 추구하고 있다는 증거는 북한 당국자들의 입과 북한측의 문헌을 통해서 찾아 볼 수가 있다.

우선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하루 전에 북한에서 발표된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의 호상관계에 관하여」라는 정책논문을 보자.

이 논문은 분단한국의 통일은 『남조선에서 미군이 물러 나가고 「인민민주주의 혁명」이 승리하여 「인민」들이 자기들의 정권을 잡을 때 성취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조국통일의 「전제 조건」이 『남조선에서 반제·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 혁명의 완수』라고 못박고 『남조선 혁명을 수행하는 데는 오직 폭력적 방법 밖에 없다』고 단정하고 있다. 이 논문은 분단한국의 통일은 반드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 밑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못박아 북한이 생각하는 통일은 오로지 적화통일임을 강조하고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평화적·비평화적 방도가 있을 수 있으나 평화적 통일은 오로지 남조선 혁명이 수행되는 조건 위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해 북한 「평화통일론」의 스스로의 한계성을 명백히 해 놓았다.

이 논문의 기조는 같은 해 10월 5일 북한로동당 대표자회의 6주년에 즈음한 김일성의 연설에 의해 재확인 되었다. 이것은 남북간에 이미 7. 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난 뒤의 일이었다.

김일성은 이 연설에서 조국의 통일은 「남조선 혁명」이 수행됨으로써만 이루어 질 수 있다고 강조하고 『남조선에서 반혁명을 타도하고 혁명의 승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혁명역량을 준비하여야 한다』면서 「남조선 혁명」은 반드시 폭력적 방법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북한이 추구하는 폭력에 의한 「남조선 혁명」이란 곧 그들이 말하는 소위 「인민민주주의 혁명」 방식에 의한 혁명을 말한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합법적인 정부와 헌정체제를 철두철미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들 사이에 합법·비합법적 모든 방법으로 침투하여 국민들을 사상적·계급적으로 조직 선동하여 폭력봉기를 일으키게 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부와 헌정질서를 일거에 무너뜨린다는 것이다.

북한은 또 주한미군의 철수 문제에 있어서도 미군의 철수를 『남조선 혁명의 선결조건』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들이 주장하는 미군철수 주장이 한반도의 평화 증진이라는 평화지향적 측면보다 「남조선 혁명」의 촉진이라는 침략지향적 측면에서 발상된 것이라는 점을 스스로 명백히 해 놓고 있다.

이러한 북한의 대남정책은 그것이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나 목표 추구의 방법에 있어서나 7. 4 남북공동성명이 명시하고 있는 남북대화의 목표나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한 방법론적 과정으로 설정해 놓은 합의사항들과는 본질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아닐 수 없다.

당연히 여기에는 하나의 의문이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면 북한은 어찌서 대한민국의 「당국」을 상대로 하는 대화에 응했으며 7. 4 남북공동성명에는 왜 합의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대답은 불가능하다. 이 의문에 대해서는 오로지 북한만이 정확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단지 추리는 가능하다. 하나의 가능한 추리는 북한이 사회주의 진영 안의 국제적 경제협력 구조의 결함과 북한 자신의 정책의 차질로 말미암아 경제면에서 기술의 낙후, 노동력의 부족, 그리고

과대한 군비유지가 경제에 주는 과중한 압박 등으로 말미암아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따라서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경제적 난국 타개의 돌파구를 찾으려 했을지도 모르는 것이다.

이것은 분명 희망적이고 긍정적인 추리였다. 이 추리가 적중했다면 남북대화는 어느 정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룩해야만 했다. 남북간에 어느 정도 긴장의 완화를 지향하는 구체적인 사태 발전이 이루어 졌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추리는 반드시 적중하지는 않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왜냐 하면 대화 개시 후의 남북관계의 발전은 이 추리가 적중했을 경우 예상되는 사태발전의 추이와는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다.

보다 근사한 추리는 달리 가능할 지도 모른다. 그것은 북한의 지도층이 북한 특유의 오도되고 경직된 사고구조로 말미암아 북한이 남북대화에 호응함으로써 그들이 추구하는 「남조선 혁명」에 의한 대남적화통일 목적을 촉진하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상의 착오를 범했을 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광란적인 김일성우상화에 의한 철저한 유일사상에 기초하고 있는 북한의 지도체제는 대단히 도식적이고 단순한 논리에 입각해서 주민들을 통치하고 있다. 그것은 북한적 사회주의가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에 비해 월등하게 우월한 제도라는 논리이다. 이러한 논리 구조에 의거해서 북한의 눈에 비추어진 대한민국의 실정은 가난과 굶주림에 시달리고 실업과 기아가 판치는 곳인 것이다.

북한에서 통용되는 남한관이 그러한 것인만큼 북한의 지도층이 대화를 통해 일방 남한의 「당국」을 달래면서 다른 일방으로는 대화의 과정에서 확보되는 남한 국민들과의 접촉면을 통해 남한 국민들을 자극·선동하여 소위 「남조선 혁명」 촉진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성립될 여지가 있다.

서울에서 처음 열린 남북적십자회담에서 굳이 고집하여 자문위원들의 「축하 연설」이라는 명목으로 김일성을 선전하는 상투적인 정치적 연설을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강행한 것이라든가, 대한민국에 대해 반공법·국가보안법 폐기, 반공단체의 해산, 반공활동의 금지 등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이라든가, 적십자 사업의 영역에서는 상식적으로 용납하기 어려운 이른바 「적십자 요해해설인원」 교환과견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든가, 대화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일률적으로 이른바 「언론·출판·집회·통행 등 모든 활동의 자유와 편의, 그리고 신체 및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권」 등을 요구하고 있는 등의 일련의 북한측 태도는 분명히 당초 북한이 대화에 응한 동기에 관한 두번째의 추리와 합치되는 데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의식할 수 있다.

남북대화를 교착과 중단으로 몰아간 북한의 태도변화는 분명히 1973년 초부터 표면화 되기 시작했다.

북한이 이러한 태도변화를 일으킨 동기 역시 북한이 당초 대화에 응한 동기에 관한 두번째의 추리에 입각해서 풀어야 할 때라야 추리가 가능한 것 같다.

남북대화의 진행은 제한된 상태로나마 남북한간의 인사왕래를 결과했고 이러한 인사왕래는 남북

한 사회의 상호 노출과 비교의 기회를 제공했다. 그 결과 북한은 남북한 사회가 경제적 발전의 정도나 사회개방의 정도에서 현저한 격차를 이미 들어 내고 있으며 잠재적 발전 능력에 있어서도 큰 차이가 있음을 목격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목격의 결과는 북한체제 자체에 대한 무시 못할 불안요인 내지 위협부담 요인을 조성했다. 북한체제의 안정은 밀봉된 사회체제 내에서 일방적인 하향식 교양에 의하여 주어진 가치에 대한 맹종적 신앙을 강요하는데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사회구조적 측면을 염두에 두고 볼 때 남북대화의 진행으로 남북의 사회가 서로 개방의 정도를 더해 갈 때 북한지도층이 자기 체제 불안요인의 증가를 의식하게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다.

또한 만일 북한이 대화를 「남조선 혁명」 축진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생각했었다면 북한지도층은 그러한 희망도 빛나간 희망이었다는 것을 조만간 깨닫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은 1973년 초부터 한 번 열었던 문을 닫기 시작했다. 대화는 교착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은 7. 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의도적으로 왜곡·변조하기 시작했고 대화의 궤도 밖에서 7. 4 남북공동성명을 일방적인 정치선전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또 대화통로를 변질시키려는 노력을 표면화시키기 시작했다.

북한은 쌍방의 「당국」 대 「당국」의 대화통로를 부정하기 시작했으며 대화의 통로를 「인민」 대 「인민」의 차원으로 격하시키기 위한 주장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북한은 특히 금년 하반기에 들어 오면서 남북대화를 주관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기구로서 남북의 「당국」 간의 기구인 남북조절위원회의 권능을 격하시키고 기능을 약화시키며 이에 대신하여 정치적 차원에서의 남북대화의 통로를 「인민」 대 「인민」의 차원인 이른바 정당·사회단체 및 각계 각종 「인민」 대표들간의 「정치협상회의」로 이전시키기 위한 조직적인 공작을 펼쳐왔다.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 정상화 거부도 그 것이며, 김일성의 소위 「평화통일 5대 강령」의 하나인 「대민족회의」 주장이 그 것이며, 8. 28 김영주 성명이 그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북한의 움직임은 공산주의 전략전술의 차원에서 볼 때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의 적용을 말하는 것으로 대화의 통로형성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당국」, 즉 정부를 고립시키고 「인민」, 즉 국민만을 상대로 해서 「합작」을 이룩하겠다는 것이다.

남북대화의 부진, 그리고 중단에는 이러한 대화외적 측면이 있는 것이다.

### 3. 8.28 김영주 성명의 진의는 무엇인가

1973년 8월 28일 북한이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이름으로 돌연 성명을 발표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대화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을 때 국내외의 그릇된 일부 여론은 이것을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에 대한 「기피 선언」이라고 해석했다.

이들은 서울측이 이후락 공동위원장만 교체하면 남북조절위원회는 즉각 재개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안이하게 이 성명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러한 안이한 견해는 특히 일본과 구미의 일부 유력지에 의해서 호응되기까지 했다.

그러나 사실은 이러한 견해는 옳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문제의 8. 28 성명을 자세히 검토·음미하지 못한 데서 결과된 분명한 착오였으며 그러한 견해가 옳지 않다는 것은 바로 그 다음 날인 8월 29일 서울에서 특별내외 기자회견을 가진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에 의해 적절하게 지적 해명되었다.

사실 당초 대한민국이 이후락씨를 대표로 하여 북한과 정치적 대화를 모색했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 이를 수락한 이면에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이후락씨가 당시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장직에 재직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작용하고 있었다는 데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서 충분한 사실의 뒷받침이 가능한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당시) 자신이 8월 29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하게 해명했다. 즉 그는 그가 1972년 5월 처음으로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했을 때와 다시 11월 두번째 평양을 방문했을 때 김일성 자신이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가르켜 『남조선에서 공산당을 때려 잡는 당신이 왔기 때문에 당신을 신임하지 만약 다른 사람이었다면 불신임할 수도 있다』면서 이후락씨를 지칭하여 「민족의 영웅」 「통일의 영웅」이라고 부르기까지 한 바 있다는 것을 공개한 것이다.

이후락씨는 1973년 11월 중앙정보부장직을 사임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직도 건강상 사정으로 내놓았으며 서울측은 장기영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위원장 직을 대리케 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이위원장의 사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재개에 동의를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대화재개를 위한 「선행조건」만을 강화함으로써 대화재개를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북한의 8. 28 성명의 의미는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8. 28성명으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대화를 중단시키면서 역시 같은 성명에서 제시한 대화재개의 조건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북한이 8. 28 성명에서 제시한 대화재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위원들에 대한 전면적 교체요구이다. 북한은 동 성명에서 서울측이 서울측의 위원들을 ① 6. 23 평화통일 외교정책에 반대하고 ② 북한의 이른바 평화통일 방안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바꿀것을 요구했다.

둘째 대한민국의 내외정책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다.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 ① 6. 23 평화통일 외교정책의 철회 ② 반공법·국가보안법의 폐기와 이들 안보관계법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 중지, 그리고 ③ 이들 안보관계법 위반죄수들의 석방을 요구했다.

셋째 남북조절위원회의 개편요구이다.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에 「당국자」들 뿐이 아니라 정당·사회단체 대표들과 각계 각층 「인민」의 대표들이 참가하도록 개편할 것을 요구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은 하나 같이 남북간의 기존 합의사항을 유린하는 것이며 남북대화의 「물」을 파괴하는 것이었다.

이들 요구사항들은 7. 4 남북공동성명에 대한 부당한 도전이며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전면적 무시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8. 28 성명을 통해 그들이 첫째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려 하며, 둘째 적어도 당분간 그들이 바라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남북대화를 재개하지 않으려 하며, 셋째 대화를 재개한다 해도 남북조절위원회라는 대화의 통로를 그들이 일방적으로 바라는 방향으로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북한측 8. 28 성명의 진의는 바로 그런 데 있었던 것이다.

#### 4. 남북적십자 회담은 왜 중단되고 있는가

남북적십자회담은 그동안 일곱차례의 본 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어 왔다. 일곱차례의 회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1천만 이산가족·친척들의 인도적 고통을 경감시켜 줄 목적을 지닌 적십자회담은 그동안 아무런 구체적인 성과를 이룩하지 못했다. 그나마 회담은 지난 7월 평양에서 열린 제7차 회담을 마지막으로 그뒤 5개월이 지나도록 회담개최마저 중단되고 있다.

적십자회담이 진전을 보지 못하는 기본적인 원인은 회담에 임하는 쌍방의 기본자세의 차이에 있었다.

대한적십자사는 국토 분단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남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들이라는 사실을 중시, 적십자인도주의 원칙과 적십자의 정치적 중립원칙, 그리고 국제적십자가 세계 모든 국가적십자 단체에 권장하고 있는 이산가족 재결합 사업 원칙에 쫓아서 남북한간에 존재하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모든 기타의 문제에 우선해서 이산가족 친척들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주장해 왔다.

북한적십자회측은 적십자 회담이라는 인도적 대화의 통로를 남북조절위원회라는 정치적 대화의 통로와 구별할 것을 거부해 왔다. 북한적십자회측은 남북한의 이산가족들의 인도적 고통을 해결하는 문제의 시급성을 인정할 것을 거부하고 이들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남북한의 정치적 통일문제의 일환으로 간주하여 양자를 동시, 일괄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북한측은 한국의 경우 『최고의 인도주의는 곧 통일이며 통일을 떠난 인도주의는 없다』고 강변해 왔다. 따라서 북한적십자회측은 적십자회담의 적십자적 순수성을 의식적으로 배척하고 적십자회담에서 계속 정치적 문제들의 토의와 해결을 고집해 온 것이다.

남북적십자회담의 의제는 5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그것은 ① 이산가족, 친척의 주소와 생사의 확인 및 통보 ② 이산가족, 친척의 재회와 방문 ③ 이산가족, 친척간의 서신교환 ④ 이산가족의 재결합 ⑤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등이다.

회담은 1972년 10월의 제3차 회담 때부터 의제 제1항을 상정, 그 사업실천을 위한 절차와 방법에 대한 토의를 시작했으나 위에 설명한 쌍방의 입장의 차로 말미암아 의제 제1항에 대한 실질도의 자체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적십자가 주관하는 국제적 이산가족 심인 사업의 확립된 사업관례에 비추어 볼 때 의제 제1항에 상정된 사업은 대단히 초보적이고 단순한 기초사업이다.

대한적십자사측은 이 사업의 실천방법과 절차에 관하여 적십자가 국제적으로, 또 보편적으로 관용하고 있는 사업방식에 준한 사업방식을 제안했다. 그것은 남북 쌍방의 적십자가 중개기구가 되어 휴전선 반대쪽의 가족과 친척을 찾기를 원하는 사람들로부터 조사 의뢰서를 받아 조사 의뢰 사실에 대한 사항을 조사·확인해서 회보서로 알려 주자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북한적십자회측의 제안은 전혀 엉뚱한 것이다. 북한적십자회측의 제안 요지



는 다음과 같다.

가. 이산가족·친척 심인사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먼저 적절한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을 조성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 다음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반공법, 국가보안법을 폐기해야 한다.

2) 반공단체들을 해산하고 일체의 반공활동을 금지해야 한다.

3) 남북을 오가는 사람들에게 언론·출판·집회·통행의 자유와 편의, 그리고 신체와 휴대품의 불가침권을 보장해야 한다.

4) 모든 정당·사회단체 및 공공기관들이 이 사업에 참여해야 한다.

나. 남북간에 「적십자 요해 해설인원」들이 매 리·동 1명씩 교환·파견되어야 한다. 이들의 임무는 군중해설 사업이며 이들에게도 언론·출판·집회·통행 등의 자유와 편의, 신체와 휴대품의 불가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다. 이산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의 확인 및 통보의 방법은 적십자가 개입할 필요없이 당사자가 직접 상대측 지역에 자유로이 가서 직접 확인하고 통보하도록 한다.

이러한 북한적십자회측의 제안 내용이 적십자회담에서 토의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인가의 여부에 대해서는 복잡한 논란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 적십자회측은 자기측의 제안을 한사코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회담은 한치의 진전도 이룩하지 못한채 회담만 계속해 왔다. 7월의 제7차 회담에서 대한적십자사는 회담교착 타개의 한 방안으로 의제와 상관 없이 금년 추석(9월 11일)을 전후해서 이산가족·친척들로 구성되는 추석성묘방문단을 상호 교환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적십자회측이 이나마도 거부한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북한은 8. 28 성명의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정치적 대화를 중단시키면서 분명히 명분상의 고려 때문에 성명에서 적십자회담에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양쪽에 똑 같은 정치적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 만큼 실질적으로 적십자회담도 중단시켰다. 대한적십자사측의 제8차 회담 개최를 위한 몇차례의 예비적 접촉 시도에도 불구하고 북한적십자회측은 이 접촉시도를 외면함으로써 회담개최를 불가능하게 해온 것이다.

## 5. 대화정상화의 전망은 어떠한가

1973년 11월부터 남북간에는 중단됐던 두 갈래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한 신중한 일련의 탐색적 접촉이 판문점을 무대로 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어떻게든 두 갈래 남북대화를 연내에 재개하려는 대한민국의 「이니셔티브」에 의한 것이다. 그러나 계속되는 접촉에도 불구하고 두 갈래 대화가 빠른 시일 안에 전면적으로 재개될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것은 북한측이 계속해서 회피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두 갈래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남북 접촉 경위를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대화 재개에 관한 보다 장기적인 전망을 진단해 보면 다음과 같다.

### 가. 남북조절위원회

남북조절위원회의 서울측은 11월 15일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평양측에 공한을 보내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제의했다. 서울측은 이 공한에서 위원회 제4차 회의의 개최 문제와 관련해서 쌍방간의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쌍방 간사위원간의 접촉을 제의하고 『만약 위원회의 재개를 위해 위원회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 평양측의 의견이라면 위원회의 개편문제를 포함해서 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평양측은 11월 16일 유장식 부위원장이 서울측의 장기영 부위원장에게 공한을 보냄으로써 북한측의 반응을 전해왔다.

그러나 서울측의 위원회 재개 제의에 대한 평양측의 반응은 소위 8.28 김영주 성명을 되풀이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의 중지를 요구하며 남북조절위원회는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개편할 것을 요구하는 소극적이고도 불성실한 것이었다.

서울측은 이에 쌍방 부위원장회의의 개최를 평양측에 제의, 그 결과로 12월 5일과 19일 두차례에 걸쳐 쌍방 부위원장회의가 판문점에서 개최되었으나 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문제는 쉽사리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 나. 남북적십자회담

대한적십자사는 역시 11월 15일 적십자사가 가지고 있는 별도의 남북직통전화로 북한적십자회에 「메시지」를 보내 서울에서 개최될 차례인 제8차 회담의 연내 개최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11월 16일 쌍방 연락 책임자들이 판문점에서 접촉할 것을 제의했다. 이 제의의 결과로 쌍방간에는 11월 22일 쌍방 연락 책임자회의가, 그리고 28일에는 쌍방 회담대표 1명씩이 참가하는 확대 연락 책임자회의가 역시 판문점에서 열렸다. 이러한 예비접촉에서 대한적십자사는 제8차 회담을 12월 19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이에 대한 북한적십자회측의 동의를 구했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측은 불법·부당한 일방적인 요구조건의 제시로 제8차 회담 개최제의를 사

실상 거부했다. 적십자회측이 내놓은 요구조건은 ① 대한적십자회담 대표단에서 비적십자요원을 제거하라는 것 ② 대한민국이 국가보안 사범들에 대한 단속을 중지하라는 것 ③ 서울은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의에 의해 서울에서 열릴 차례인 제8차 회담을 순번을 어기고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것 등이다.

북한적십자회측의 태도로 보아 적십자회담의 연내 재개는 무망한 것이었다. 대한적십자사는 쌍방간의 이견 조정의 계속을 위해 연락 책임자회의의 속개를 제의했으나 북한적십자회측은 이 제의마저 묵살해 버렸다.

#### 다. 장기적 전망

북한측의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태도로 미루어 대화의 전면적 재개가 당분간 가망이 없다는 것은 일치된 평가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장기적인 측면에서 전망할 때 남북대화는 결국 재개될 것이며 그 시기도 멀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전망이다. 그것은 최근의 국내외 정세의 추이를 감안할 때 지금은 완고한 북한에게도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안정된 평화의 정착이라는 당면의 과제가 거역할 수 없는 당위로서 부각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으로는 작금의 일정한 기간이 그들이 그렇게 추구해 마지 않는 소위 「남조선 혁명」에 의한 대남적화통일은 도저히 실현될 수 없는 「꿈」이며 그러한 「꿈」의 실현을 위해 쏟아 붓고 있는 막대한 물량과 정력은 불필요한 낭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귀중한 기간이 되어야 한다. 그러한 「꿈」의 실현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려는 결의에 충만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를 용납치도 않을 것이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대한민국의 경제력과 막강한 자위력이 그 틈을 주지 않을 것이며 또 국제정세가 그러한 방종을 허용하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견지에서 금년도의 제28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한국문제에 관한 「합의성명」의 내용과 또 그 「합의성명」의 채택을 결과한 국제정세의 흐름은 북한의 지도층에서도 진지한 검토와 음미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국제정세는 새로운 질서를 향하여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을 북한은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 6. 「유엔」 총회 「합의성명」의 의미는 무엇인가

1971년과 1972년의 2년에 걸쳐 「유엔」은 한국문제의 총회상정을 보류하는 결정을 내려 왔다. 그것은 남북한간에 대화가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남북한이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에 착수한 이상 「유엔」이 한국문제에서 비켜 서서 대화의 진행에 영향을 줄지도 모르는 어떠한 조치도 이를 삼가는 신중한 태도를 지킨다는 것은 현명하고도 논리적인 처사였다.

상황은 금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남북대화는 기복을 보이면서 아직 계속 중이고 대화의 구체적 성과는 아직도 생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유엔」은 지난 2년간의 관례를 깨고 금년에 제28차 총회에 한국문제를 상정·토의해야만 했다. 한국문제에 관한 「알제리아」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사태의 전개는 순전히 북한의 희망에 의한 것이었다. 금년 초부터 대화를 냉각시키고 상투적인 평화통일 선전공세로 역점을 바꾼 북한은 지난 9월 초 「알제리아」수도 「알지에」에서 비동맹국가 정상회담에서 한국문제에 대한 친북한적 결의안이 채택되자 이를 근거로 「유엔」에서의 표 대결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승리를 자만한 나머지 「알제리아」등 35개국으로 하여금 북한 일변도적인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유엔」에 제출하고 이의 총회상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한반도문제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정당한 입장과 한반도의 공정한 현실과약을 내용으로 하는 독자적인 한국문제에 관한 결의안을 27개 우방국가로 하여금 공동제안케 함으로써 표 대결에 대비한 포석을 완료했다.

그러나 한국문제에 관한 남북한의 표 대결이 결코 생산적인 것일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우방국가들과의 긴밀한 제휴아래 「알제리아」안 공동제안국들과 활발한 접촉을 통해 표 대결을 회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전개했다. 북한은 이러한 노력에 마지막 순간까지 저항했지만 「유엔」의 결정은 참으로 현명한 것이었다.

「유엔」은 쌍방 공동제안국들의 동의를 얻어 한국문제에 관한 두 결의안을 모두 표결에 붙이지 않기로 결정했으며 정치위원회와 총회에서 각기 만장 일치로 채택된 「합의성명」을 통해 남북한 쌍방에게 7. 4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남북대화를 계속하고 또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함으로써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이다.

이것은 남북대화의 조속한 전면 재개를 바라는 막강한 국제적 압력인 것이며 최근에 와서 대화 계속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굳혀온 북한에게는 하나의 각성제가 아닐 수 없었다.

「유엔」은 또한 대한민국의 동의 아래 「언커크」가 스스로 요청한 「언커크」해체 결의를 승인함으로써 「유엔」은 한반도문제에 관해서는 남북한간에 이견이 없는 문제에 국한해서 결정을 내린다는 관례를 만들었다.

## 7. 대화는 어떠한 조건 위에서 전진할 수 있는가

박정희대통령은 6. 23 평화통일 외교정책 제2항에서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남북한은 서로 내정간섭을 하지 말아야 하며 침략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뜻을 밝혔다.

남북대화가 성공을 거두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반드시 지켜야 할 「경기규칙」이 있다. 그것은 박대통령이 갈파한 것과 같이 남북간에 평화가 유지되어야 하며 서로 내정간섭과 침략을 하지 않는다는 전제가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다. 남북의 어느 일방에 의해 평화가 위협을 받고 또 다른 일방의 내정이 간섭을 받으며, 다른 일방에 대한 침략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남북대화가 결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도 자명한 이치인 것이다.

금년 3월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서울측의 이후락공동위원장은 대화의 성공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조건으로 다음의 6개 항목을 명시했었다. 그것은 남북 쌍방이,

- 상호 체제 부정을 지양하고
-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이해하며
- 각기 상대방의 체제 내부분제를 비난·간섭하지 않고
- 각기 자기 체제에 입각하여 국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며
- 체제를 초월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가고
- 체제와 체제간에 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한 성실한 대화를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남북대화는 어디까지나 체제와 체제간의 대화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오늘날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문제는 한반도와 남북관계의 현실을 현실 그대로 직시함으로써만 실현성 있는 해결방안이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어떠한 「환상」이나 「환각」도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엄연한 현실은 무엇인가. 그것은 남과 북이 사상과 이념, 제도와 역사관 및 가치관을 극단적으로 달리하는 두 개의 체제로 분단되어 있다는 사실이 그것이다. 이 엄연한 현실에는 어떠한 도호도 분식도 있을 수 없는 것이다. 남북대화의 목표는 남북 두 체제의 이러한 극단적인 이질성을 민족의 동질성이라는 용광로에 넣어서 긴장완화와 이해 및 신뢰의 분위기 조성이라는 화학반응을 거쳐서 통일을 이룩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북한은 의도적으로 한반도의 엄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과 소요되는 시간

을 무시한 채 「하나의 민족」이라는 감상적인 입장을 앞세워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한 내정간섭을 정당화시키려는 교활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 북한방송에 의한 대남비난방송의 경우가 그렇고 또 대한민국의 내외 정책과 법질서, 그리고 사회현상에 대한 터무니 없는 간섭이 그것이다.

북한은 또 대한민국의 6·23평화통일외교정책 제5항이 「남북한 동시 「유엔」 가입 불 반대」 표명 조항을 이유로 하여 6·23선언이 「두 개 한국의 고정화」 정책이요 「민족분열을 영구화시키는 음모」라고 근거도 없는 중상·비방을 퍼붓고 있다. 이것 역시 남북한이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을 고의로 외면하고 하나의 환각을 강매하는 열은 수작 외에는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다시 돌아가서 한반도의 현실은 무엇인가. 불행하게도 한반도는 지금 「두 개의 체제」로 분단되어 있으며 결코 「하나」가 아닌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개의 체제」를 「하나」로 합쳐 통일조국을 복원하려는 막중한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우리의 성실과 인내를 다하고 있는 것이다. 이념과 역사관, 가치관을 달리하는 두 체제를 하나로 합치려는 우리의 노력은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며 더구나 최근 북한이 보여 주고 있는 현실 외면적·대화부정적 태도를 감안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하는 그 날은 오히려 더욱 요원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인 것이다.

박정희대통령의 6·23선언은 이러한 현실상황을 십분 감안한 현실적·합리적·건설적인 정책구상인 것이다.

박대통령은 남북한의 동시 「유엔」 가입 문제에 관하여 6·23선언에서 『「유엔」의 다수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한반도에 남북한이 병존하고 있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통일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예상 외의 장시일을 요하리라는 것은 틀림없는 전망이다. 북한이 언필칭 연방제를 운위하지만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간에 기술적으로 어떠한 방법에 의해 연방 구성이 가능할 것이며 또 그러한 두 개의 이질적인 체제간에 「유엔」의 단일 회원국으로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단일외교정책의 형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런가 하면, 1973년 6월 23일의 연설에서 남북연방제를 주장하고 『두 개의 조선에 견결히 반대한다』고 강변한 북한의 김일성은 바로 그 자리에서 북한은 『북한에 우호적인 모든 나라들과 호혜·평등에 기초해서 국가관계를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한입으로 두 말을 하는 강심장을 보여 주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소위 「등거리 외교」를 부르짖으면서 대한민국의 수교국가들에 대해 동시 수교공세를 펴므로써 스스로 국제 관계에서 「두 개의 한국」노선을 추구해 왔으며 지난 12월 초에는 남북한과 동시수교를 하겠다는 「인도」와 「방글라데시」의 제의를 아무런 이의없이 받아 들여 「뉴·델리」와 「다카」에 대한민국과 함께 공관을 설치하고 있는 것이다. WHO와 IPU 동시가입에서 보여준 바 있는 북한의 이율배반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구태어 더 논란할 여지가 없다.

이러한 현실 상황을 냉철하게 고려할 때 박대통령이 6·23선언에서 표명한 남북한동시 「유엔」 가입 불반대 표명은 진정으로 평화지향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결단이며 오로지 평화가 확고히 다져진 바탕 위에서 통일의 길을 넓혀가려는 의지의 표현인 것이다.

남북대화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북한이 가면적이고 자가당착적인 현실부정 자세를 버려야 한다.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진정한 사명감을 갖추어야 하며 무력은 물론 「혁명」과 「투쟁」에 의한 적화통일 기도를 버리고 대한민국에 대한불법·부당한 내정간섭을 중지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남북 간의 모든 문제를 기존 합의사항에 쫓아서 오로지 대화를 통해 협의·해결한다는 성실한 대화의 자세를 확립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일들이야말로 말로 거창한 민족적 사명을 지닌 남북대화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전에 충족되어야 할 전제조건들이다.

<자 료 편>

1.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

나는 오늘 우리가 그 동안 추진해 온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하던 38선이 그 후 철의 장막으로 변하고,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 동안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민주정부수립을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미소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결국 한국문제는 국제연합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2차 국제연합총회는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위해 임시한국위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 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동란으로 무수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국토는 초토화되었으며, 3년간의 전란 끝에 휴전은 성립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통일은 요원해 졌습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15선언」에서 남북한 간의 긴장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북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불신요소를 남겨 둔 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문제의 일괄 선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진행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시키는 행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남북대화의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조류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주변정세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통일이 단시일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련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 관계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 중의 잠정 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둔다.

친애하는 남북동포 여러분 !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 앞에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겨레의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매진합시다.

1973년 6월 23일

대통령 박정희

## 2. 7·4 남북 공동 성명

최근 평양과 서울에서 남북관계를 개선하며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회담이 있었다.

서울의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이 1972년 5월 2일부터 5월 5일까지 평양을 방문하여 평양의 김영주 조직지도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으며 김영주 부장을 대신한 박성철 제2부수장이 1972년 5월 29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을 방문하여 이후락 부장과 회담을 진행하였다.

이 회담들에서 쌍방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하루 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공통된 염원을 안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 과정에서 쌍방은 오랫동안 서로 만나보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 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완전한 견해의 일치점을 보였다.

1. 쌍방은 다음과 같은 조국통일원칙들에 합의를 보았다.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2. 쌍방은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로 상대방을 중상 비방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무장도발을 하지 않으며 불의의 군사적 충돌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합의하였다.

3. 쌍방은 끊어졌던 민족적 연계를 회복하며 서로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 사이에 다방면적인 제반교류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였다.

4. 쌍방은 지금 온 민족의 거대한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이 하루빨리 성사되도록 적극 협조하는데 합의하였다.

5. 쌍방은 돌발적 군사 사고를 방지하고 남북 사이에 제기되는 문제들을 직접,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과 평양 사이에 상설 직통전화를 놓기로 합의하였다.

6.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이후락 부장과 김영주 부장

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7. 쌍방은 이상의 합의사항이 조국통일을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온 겨레의 한결같은 염원에 부합된다고 확신하면서 이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온 민족 앞에 엄숙히 약속한다.

서로 상부의 뜻을 받들어

이후락

김영주

1972년 7월 4일

### 3.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남북조절위원회는 1972년 7월 4일부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고 남북 사이의 관계를 개선 발전시키며 각분야에서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 합의된 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가. 합의된 조국통일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나.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 사이의 광범한 정치적 교류를 실현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다.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적 및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라. 남북 사이의 긴장상태를 완화하며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군사적 대치 상태를 해소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마. 대외활동에는 남북이 공동보조를 취하며 단일민족으로서 민족적 긍지를 선양하는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3.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쌍방에서 각각 공동위원장과 부위원장 1명, 간사위원 1명, 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 위원 수는 필요에 따라 증가시킬 수 있다.

공동위원장은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으로 한다.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은 장관(상) 또는 차관(부상)급으로 하되 사전협의를 거쳐 각각 쌍방 공동위원장이 임명한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간사회의를 둔다.

간사회회는 쌍방 공동위원장의 위임에 의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제반문제 등을 협의, 결정하고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간사회회는 쌍방 간사위원과 각각 간사 2명으로 구성한다.

다. 남북조절위원회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 분과위원회를 둔다.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이 진척되는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따로 규정한다.

라.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사무국을 판문점에 둔다.

공동사무국장은 쌍방이 각각 1명씩 임명하며, 그 밑에 필요한 수의 인원을 둔다.

4. 남북조절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

가. 남북조절위원회는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판문점에서도 할 수 있다.

나. 남북조절위원회 회의는 2~3개월에 1차, 간사회회의는 1개월에 1차 진행하며, 이밖에 쌍방의 합의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다. 남북조절위원회는 공개회의 또는 비공개회의로 한다.

라. 남북조절위원회 회의와 간사회회의에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필요한 수의 전문인원들과 공동사무국 요원들을 참가시킬 수 있다.

마. 남북조절위원회의 최종합의는 쌍방 공동위원장들이 합의문건에 서명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합의사항은 쌍방의 합의에 따라 공동사무국을 통하여 발표한다.

바.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세칙은 따로 규정한다.

5. 이 합의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수정, 보충할 수 있다.

6. 이 합의는 쌍방이 서명하여 교환한 때로부터 효력을 가진다.

1972년 11월 4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이후락 부장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 부장

#### 4. 28차 「유엔」 총회 「합의성명」

「유엔」 총회 의장은 한국문제에 관한 두 개 결의안의 제안국들과 협의한 결과 이 두 결의안을 이번 「유엔」 총회에서는 표결에 회부치 않기로 합의했음을 발표하도록 권한을 부여 받았다. 또한 의장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내도록 승인 받았다. 「유엔」은 남북한이 1972년 7월 4일 다음과 같은 3개 재통일 원칙을 마련한 7·4공동성명을 발표한 것에 만족하며 이를 지지한다.

- (1) 한국의 통일은 외세에 의존이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2) 한국의 통일은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 (3) 한국의 국민적 대단합이 촉진되어야 한다.

「유엔」은 남북한이 대화를 계속하고 7·4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해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한국 재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기를 촉구한다.

「유엔」 총회는 「유엔」 한국통일부흥위원단(언커크)의 즉각 해체를 결의한다.

## 5. 남북관계 주요 일지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1972. 7. 4 남북공동성명 서울과 평양에서 동시 발표

1972. 8.11 남북적십자 예비회담 종결

1972. 8.22 남북을 왕래하는 남북적십자회담 관계인원의 신변안전보장성명 발표.

※서울측: 이후락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평양측: 사회안전성

1972. 8.29 남북적십자 제1차 본 회담(평양)

~9. 2. ※쌍방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 20명, 수행 취재기자 20명, (한적 수석대표 이범석, 북적 대표단장 김태희)

1972. 9.12 남북적십자 제2차 본회담(서울)

~16

1972. 9.20 가. IPU 이사회, 북한가입 토의 1년 연기 결정.

나. 유엔운영위, 한국문제 토의 1년 연기안 가결.

1972. 9.22 제27차 「유엔」 총회, 한국문제 토의 1년 연기안 가결.

1972. 9.28 이후락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남북관계의 신중한 보도를 요망하는 공한을 5개 국내 언론단체에 발송.

1972.10.12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1차 회의.

(판문점, 서울측: 이후락 공동위원장, 평양측: 박성철 공동위원장대리 참석).

1972.10.23 남북적십자 제3차 본 회담(평양).

~26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토의 개시

1972.11. 2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평양)

~4

※참가인사

서울측: 이후락 공동위원장

장기영 전 부총리



강인덕 중정 제9국장  
정홍진 중정 협의조정국장  
평양측: 박성철 공동위원장 대리  
유장식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겸 대외사업부장  
이경석 내각참사  
한용식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직속 책임지도원  
김덕현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위원회 직속 책임지도원.

※ 합의사항

가.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서명 교환.

나. 대남·대북방송, 휴전선대남·대북확성기 방송, 상대측 지역에 대한 「비라」 살포, 1972. 11. 11 영시 기해 중지키로 합의.

1972.11.11 영시를 기해 대남·대북 방송 중지, 휴전선 「스피커」 방송 중지, 상호 「비라」 살포 중지  
에 관한 합의 발효.

1972.11.22 남북적십자 제4차 본 회담(서울)  
~24

1972.11.30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3차 회의(서울)

1972.11.30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회의(서울)  
~12.2

1972.12.28 북한 김일성, 「남북한에 공평한 정책 촉구하는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과 수교용의」 표  
명.

1973. 3. 4 제주도 우도에 무장간첩 3명이 출현하여 해초건조장 경비병 1명 살해후 도주.

1973. 3. 7 북한군 중부전선 비무장 지대에서 군사분계선 표말 보수중인 한국군 장병에 총격을  
가하여 장교 1명, 사병 1명 살해.

1973. 3.10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간사회회(판문점 판문각).

1973. 3.14 남북조절위원회 제2차 회의(평양).  
~16

1973. 3.20 남북적십자 제5차 본 회담(평양).  
~23

1973. 4.16 김일성, 「시하누크」 환영대회에서 「남북조절위원회의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와 각계 각층 인사들을 참가시키든가, 조절위와 별도로 남북한 정당, 사회단체 대표 및 각계 각층 인사가 참가하는 정치협상 개최」 주장.
1973. 4.17 중부전선 군사분계선 남방 비무장 지대에 무장공비 3명 출현하여 2명 사살되고 1명 도주.
1973. 4.24 북한 IPU에 가입.
1973. 5. 5 전남 금당도에 북한 무장간첩 2명 침투, 그중 1명 사살, 1명 도주.
1973. 5. 8 남북적십자 제6차 본 회담(서울).  
~11
1973. 5.18 북한, 세계보건기구(WHO)가입.
1973. 6.10 북한,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 합의사항을 위반하고 휴전선상의 4개 지역에서 확산기에 의한 대남방송 일시 재개.
1973. 6.11 북한측, 직통전화를 통해, 상호 중상, 비방중지를 재제의, 서울측, 이를 접수.
1973. 6.12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서울).  
~14
1973. 6.23 박정희대통령, 「평화통일외교선언」 발표.
1973. 6.26 북한 김일성, 「유엔」 동시 가입 반대 의사 표명.
1973. 6.27 북한, 「유엔」 본부에 상주 「업저버」 사무소 설치 신청.
1973. 6.29 「발트하임」 「유엔」 사무총장, 북한에 「업저버」 사무실 설치 허용 통보.
1973. 7.10 남북적십자 제7차 본 회담(평양)  
~13 ※한적, 추석성묘단 교환 방문 제의했으나 북적측 거부.
1973. 8. 1 이낙선 배구협회장, 남북조절위를 통해, 8.10서울서 열리는 제2회 「아시아」 배구 「코치」 강습회에 북한 참가를 초청.
1973. 8. 2 북한 동 초청을 거부.

1973. 8.28 김영주(남북조절위 평양측 공동위원장), 남북대화 일방적 중단 선언.
1973. 8.29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 8.28 김영주 성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동 성명의 철회와 대화 재개를 촉구.
- 1973.11.14 북한 부외상 이종목, 제28차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서 「유엔」 군사 해체를 주장하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에 반대.
- 1973.11.15 김용식 외무부장관, 제28차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서 ① 「유엔」 군의 철수는 평화 보장을 위한 대안 조치가 없는 한 불가하고 ② 통일은 평화적 방법으로 이루어야 하며, ③ 남북대화의 성공을 위해 인내로 노력하겠다고 연설.
- 1973.11.15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대화 재개 위해 간사위원회의 개최 제의.
- 1973.11.15 한적, 제8차 적십자회담의 년내 개최 협의를 위해 쌍방 연락책임자 회의를 11.16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제의.
- 1973.11.16 남북조절위원회 유장식 평양측 부위원장, 장기영 서울측 부위원장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대한민국이 ① 6.23선언을 취소하고, ②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단속을 중지하며, ③ 남북조절위원회를 각 정당 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하는데 동의할 경우 대화재개를 협의하겠다』고 주장.
- 1973.11.16 북적, 11.15 한적 제의에 대해 아무런 회답 없음.
- 1973.11.17 북적, 11월 21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연락책임자회의 갖자고 수정 제의.
- 1973.11.17 한적, 북적의 수정 제의를 수락.
- 1973.11.21 남북조절위원회 장기영 서울측 부위원장, 유장식 평양측 부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회의 조기 개최 및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인원개편 문제 토의를 위해 11월 27일 오전 10시 판문점에서 회의를 갖자』고 제의.
- 1973.11.21 쌍방 연락책임자회의(10:00~10:50)에서 한적이 제8차 본 회담을 12월 19일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했으며 북적은 다음 연락책임자 회의에는 본 회담 대표 1명의 참석을 제의
- 1973.11.21 제28차 「유엔」 총회 정치위원회, 한국문제에 관해 「합의성명」 채택.

※글자

① 7.4공동성명의 3개 조국통일원칙에 대한 만족표명

② 남북간의 대화계속과 다방면적인 교류 및 협력의 실시를 촉구

③ 「언커크」의 즉각 해체 승인

1973.11.22 한적, 11월 24일 오전 10시 2차 연락책임자 회의 개최제의.

1973.11.22 북적, 11월 28일 오전 10시 회의를 갖자고 날자를 수정제의.

1973.11.22 한적, 북적 수정제의를 수락.

1973.11.27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장기영부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유장식 부위원장 명의 서한을 통해 서울측의 부위원장회의 개최 제의에 동의하고 개최 일자를 12월 5일로 수정제의.

1973.11.27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평양측 수정 제의를 수락.

1973.11.28 1차 실무대표자 회의(10:00~11:30)에서 북적은 12월 19일 서울에서 제8차 본 회담을 열자는 한적 제의를 거부.

1973.11.28 「유엔」 총회, 한국문제에 관한 「합의성명」 만장일치로 채택.

1973.12. 1 북한측, 군사정전위서 백령도 등 서해안 5개, 도서 인접해역을 북한 영해라고 주장하고 5개 도서에 항해하는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을 선언.

1973.12. 1 국방부, 1973.11.19~12.1까지 6회에 걸쳐 북한 해군함정이 서해안 백령도 연평도등 5개 도서지역의 우리측 영해를 침범한 사실을 발표하고 북한의 도발행위를 경고.

1973.12. 3 이후락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건강상 이유로 사임. 서울측 장기영 부위원장의 위원장 직무대리 결정.

1973.12. 5 남북조절위원회 제1차 부위원장회의(관문점 관문각 10:00~12:30)에서 서울측, 제2차 부위원장회의 일자를 12.12로 제의.

참석자 : 서울측 장기영 부위원장  
평양측 유장식 부위원장

1973.12.11 평양측, 제2차 부위원장회의 일자를 12월 19일로 수정제의.

1973.12.11 서울측, 평양측 수정 제의를 수락.

1973.12.13 한적 이범석수석대표, 제8차 본회담 개최문제에 관해 북적측의 성의를 촉구하는 서한

을 북적 김태희대표단장에게 발송.

1973.12.19 판문점에서 남북조절위 제2차 부위원장회의 개최.

# 남북대화 제4호

(1973. 12 ~ 1974. 2)

# < 목 차 >

제1부 대화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	3
1. 8·28 이후의 북한 정책동향 .....	3
2.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의 경과 .....	6
3. 남북조절위원회 개편안 토의 .....	8
4. 평양측 개편안의 정체 .....	12
5. 남북적십자회담 실무대표 접촉 .....	17
제2부 북한의 새로운 무력도발 .....	18
1. 북한 포함, 공해에서 한국어선 격침 .....	18
2.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1차항의 전문 .....	20
3.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2차항의 전문 .....	21
4.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3차항의 전문 .....	22
5. 북적에 보낸 한적 전문 .....	24
6. ICRC에 보낸 첫번째 한적 전문 .....	25
7. ICRC에 보낸 한적 서한 .....	26
8. ICRC에 보낸 두 번째 한적전문 .....	27
제3부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보장 .....	28
1. 박대통령 남북 상호불가침 협정제의 .....	28
2. 북한판 「평화협정」 주장의 허구 .....	30

## 제1부 대화정상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 1. 8·28 이후의 북한 정책동향

남북조절위원회와 남북적십자회담의 두 갈래 남북대화를 중단시킨 작년 8월의 이른바 8·28 김영주성명 이후 북한의 대내외정책동향은 북한이 평화적 남북관계의 제도화를 거부하고 남북대화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명백하고도 급격한 방향전환을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 주었다.

1973년 9월 9일 북한의 이른바 「정권수립기념일」 날 북한의 김일성은 남북한간의 「접촉」과 「대화」 계속의 필요성이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그러한 공식발언은 이것이 마지막이었다. 같은 날 있었던 북한의 김일의 발언은 북한이 남북대화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더 이상 존중하지 않으려 하고 있음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었다.

김일은 이른바 「9·9절 기념보고대회」에서 『통일문제는 개별인사나 어느 통치집단에 의해서 좌지우지 될 수 없다』면서 「통일문제」는 『「당국자」의 범위를 벗어나 전민족의 범위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해 소위 「대민족회의」를 소집할 것을 역설했다.

김일의 이러한 발언은 북한이 7·4남북공동성명에 명시되고 그 뒤에 쌍방간에 합의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해서 구체화된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무시하겠다는 북한측의 정책적 의도를 들어 내주는 것이었다.

이에 이어 북한은 남북대화 시작이후 2년 동안 유엔에 상정이 보류되어온 한국문제를 「알제리아」 결의안의 형식으로 1973년의 제28차 유엔총회에 굳이 상정시켜 대한민국과 표의 대결을 획책하기 시작했다. 북한은 제28차 유엔총회에 제출한 「비방록」에서 ① 북한의 「정권」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 실시된 선거」를 통해 수립되었고 ② 6.25동란이 대한민국과 미국에 의해 일으켜졌다고 엄연한 역사적 사실을 과립치하게 변조하는가 하면 ③ 남북대화의 정체원인이 미국에 의한 「남조선강점」과 「내정간섭」에 있다는 터무니없이 날조된 중상. 비방을 서슴지 않으므로써 7·4 남북공동성명의 모든 합의조항들을 공공연히 짓밟았다.

1973년 10월 28일 북한의 김일성은 평양을 방문한 「불가리아」 정부대표단 환영식에서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나라의 평화통일을 이룩할 수 있으며 「분열주의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이해 11월 제28차 유엔총회는 한국문제에 관해 「표의 대결」을 회피할 것을 희망하는 대한민국의 입장을 받아 들여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된 북한의 저항을 뿌리치고 『남북한이 대화를 계속하고 7·4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하여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현시킴으로써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촉진할 것을 촉구하는』 「합의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정책은 유엔의 권고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치달았다.

북한은 1973년 10월말부터 1953년의 한국동란 휴전협정에 의거하여 이론의 여지도 없이 대한민국의 영토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0년 동안 대한민국의 각종 민간선박들이 아무런 방해도 받음이 없이 안전항해를 해온 서해안 5개 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해 당치도 않은 소위 「영해권」을 주장할 뿐 아니라 그 지역에 군함을 파견하여 대한민국 측 선박들의 안전항해를 위협함으로써 한반도 상에 새로운 긴장상태를 조성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정치권력 구조면에서도 그 동안 남북대화에 주동적으로 참여했던 자들이 권력의 중심부에서 소외, 탈락 되어가고 있는 현저한 징후가 있다는 사실이 북한정세동향을 분석·평가하는 내외의 전문가들에 의해 지적되기 시작했다.

북한은 또한 1973년 후반부터 북한의 군비를 공격형으로 더욱 강화하는 급격스러운 움직임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북한은 1973년부터 1974년초까지의 사이에 특히 신형전투기와 「오사」 및 「코마」급 유도탄함정 및 잠수함등 공격형 무기들을 급격하게 증강시키고 작전용 항공기지를 휴전선가까이로 부쩍 남하시키는 심상치 않은 군사동향을 보여 주었다.

북한이 1974년 2월 15일 서해의 공해상에서 어로중인 대한민국측 비무장민간어선을 그들의 포함으로 무차별 포격하여 그중 1척을 격침시키고 다른 1척을 납치하는 만행을 저질음으로써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사실은 최근의 북한의 내외 동향과 관련시켜서 검토할 때 결코 우발적인 단독사건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김일성의 1974년 1월 1일 이른바 「신년사」에서는 전례없이 남북대화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이 『지금 「남조선」의 청년학생들과 인민들은 「남조선」 당국자들이 민주주의를 말살하고 인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하며 미일 「침략자」들에게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는」 반인민적이고 매족·배족적 행위를 반대하여 싸우고 있다』고 묘사하고 『우리는 「남조선」의 모든 「진보적 역량」과 힘을 합쳐 나라의 분열을 영구화하려는 안팎의 「분열주의자」들을 반대하여 건결히 투쟁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북한의 정책자세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명백히 해 주었다.

더 나아가 1974년 2월 8일 소위 「인민군 창설」 기념식에서 북한군의 「상장」으로만 소개된 이용무는 「보고연설」을 통해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남아있는 한 「조선」에서 긴장상태는 가질 수 없으며 우리 인민은 침략과 전쟁의 위협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다』고 단언하고 『「분열주의자」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으며 조국통일은 오직 「투쟁」을 통해서만 이룩할 수 있다』는 가공스런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다.

작년의 소위 8·28성명 이후 북한당국의 지도층의 공식발언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이러한 북한의 정책변화는 오늘날 남북관계가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잘 말해주고 있다. 북한은 분명히 그 동안의 남북대화 진행을 후회, 남북관계를 7·4남북공동성명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려 한동안 평화 「무드」가 계속되었던 한반도의 정세를 과거의 「냉전구조」로 복원시키는 시대착오적인 노력에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7·4남북공동성명에 기초를 두고 있는 남북대화가 처해 있

는 오늘의 배경상황인 것이다.

## 2.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의 경과

남북조절위원회의 남북 쌍방은 작년 12월이래 판문점에서 세 차례의 부위원장회의를 열고 중단된 남북조절위원회를 재개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해 왔다.

이미 주지하는 바와 같이 남북조절위원회는 작년 8월 북한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이래 재개의 기약이 없는 중단 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북한이 작년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 김영주의 이름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제시한 남북대화 중단 선언의 이유는 남북대화가 서로 상대방이 있는 교섭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리하고도 일방적인 것이었다.

북한은 이 성명에서 대한민국의 외교정책을 멋대로 왜곡 해석하여 비난하고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해 부당한 간섭을 하는가 하면 상대방의 대표들을 회담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일방적인 이유를 내세워 기피하고 일방적인 조건에 의한 교체를 요구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해서 7·4남북공동성명의 명백한 기본정신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명문규정을 정면으로 파기하는 일방적인 개편 주장을 내놓고 이것이 회담재개의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측은 다음날인 8월 29일 남북조절위원회의 이후락 서울측 공동위원장(1973년 12월 3일 사임)의 성명을 통해 북한측 8·28성명의 부당성을 날날이 지적, 반박하고 회담의 즉각적인 재개를 요구했다. 그러나 회담은 재개되지 않았다.

이유는 여하간 남북대화의 석연치 않은 중단과 중단상태의 장기화는 이 대화의 진전과 성공을 바라마지 않는 남북한 거래들의 절대적 기대와 분단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기대하는 전 세계 여론에 배치되는 사태였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못한 사태는 무한정 방치될 수 없었다.

대한민국은 중단된 대화를 재개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에 착수했다.

작년 11월 15일 서울측은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남북조절위원회를 조속히 재개하는데 동의할 것을 평양측에 촉구하는 한편 회담의 재개와 관련해서 쌍방간의 견해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예비접촉을 제의했다.

평양측의 1차적인 반응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서울측의 거듭된 제의의 결과로 남북 쌍방간에는 일련의 부위원장회의가 개최되기에 이르렀다. 서울측의 장기영 부위원장과 평양측의 유장식부위원장은 1973년 12월 5일 판문점 평양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제1차 회의를 가진데 이어 12월 19일에는 판문점 서울측 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제2차 회의를, 그리고 1974년 1월 30일에는 다시 판문각에서 제3차 회의를 가졌다. 쌍방은 제4차 부위원장회의를 오는 2월 27일 자유의 집에서 속개하기로 일단 합의를 보고 있다.

그 동안에 열린 세 차례의 부위원장회의도 북한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말미암아 대단히 어렵고도

복잡한 날자협의를 거쳐 열려야만 했다.

당초 서울측은 작년 11월 22일 제1차 부위원장회의 개최일자를 11월 27일로 제안했었다. 그러나 평양측은 11월 27일에 와서 회의날자를 12월 5일로 바꿀 것을 제의, 서울측이 이에 동의함으로써 회의가 성립되게 되었다.

12월 5일의 제1차 부위원장회의에서 서울측은 제2차 부위원장회의를 12월 12일에 열자고 제의했다. 평양측은 12월 11일에 와서야 회의 날자를 12월 19일로 수정 제의하여 서울측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회의가 역시 성립되었다.

서울측은 제2차 부위원장회의에서 제3차 부위원장회의 날자를 12월 26일로 제의했다. 그러나 평양측은 이를 거부하고 제3차 회의는 신년초에 열자고 제의했다. 새해에 들어와서 서울측은 1월 9일, 제3차 회의 날자로 1월 16일을 제안하는 전화통지문을 평양측에 보냈다. 평양측은 이에 대해 1월 15일에 와서야 회의 날자를 1월 21일로 수정, 제의하는가 하면 1월 19일에는 다시 "며칠간의 연기"를 제의, 결국 26일에 와서야 제3차 회의 날자가 1월 30일로 결정되었다.

### 3. 남북조절위원회 개편안 토의

#### 가. 부위원장회의의 토의안건

남북조절위원회부위원장회의의 토의안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과연 남북조절위원회는 개편되어야 하는가를 결정하고 만약 반드시 개편이 필요하다면 어떻게 개편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였다.

북한이 소위 8. 28성명에서 대화재개의 조건이라고 내놓은 요구사항들은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거론한다면 대한민국으로서는 일고의 여지도 없는 일방적인 주장들이었다.

첫째로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일부 서울측 위원들이 대한민국 중앙정보부요원들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상호 사전협의를 거쳐서 그들의 위원임명을 양해하여 위원회를 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돌연 그들의 중앙정보부원신분을 트집잡아 그들을 일방적으로 기피했을 뿐 아니라 그 후임에는 가당치 않게도 「6.23평화통일외교정책에 반대하고 공산주의를 반대하지 아니하는 자」 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둘째로 북한은 박정희대통령이 1973년 6월 23일 내외에 선포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민족분열을 영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멋대로 왜곡·독단하고 이의 철회를 요구했다.

세째로 북한은 북한당국의 비밀지령에 따라 갖가지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대한민국의 정부를 전복하고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공작임무를 수행하는 북한의 남과 간첩들에 대한 법률적 제재를 가리켜 「애국적 민주역량에 대한 탄압」이라고 강변하면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네째로 북한은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남북한의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일체의 조절기능을 남북조절위원회에 부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문제는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분리시켜 「남북정치협상회의」에서 해결하자』는 등의 궤변을 농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개편하여 당국외에도 정당·사회단체와 각 계각층 「인민」들의 대표들이 위원회에 참가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 주장을 내놓았다.

이러한 북한측의 요구조건들은 한마디로 말해 대한민국더러 대한민국의 체제와 정책을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주문대로 뜯어 고치고 난 뒤라야 대화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그 부당성에 대해서는 구구한 설명이 불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나 분단 4반세기를 넘기고도 불안정한 휴전체제 속에서 긴장이 가시기는 커녕 더욱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에 모처럼 안정된 항구적 평화와 평화적 재통일의 서광을 비쳐준 남북대화는 결코 포기될 수 없었다.

작년 11월 15일 평양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서울측은 남북조절위원회가 하루속히 재개되고

중단된 남북대화가 조속히 다시 정상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누누히 강조·역설하고 『만약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회의 개최 이전에 남북조절위원회의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위원회의 개편안을 포함하여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회의 개최에 필요한 제반 구체적 절차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해결하기 위해』 쌍방간에 예비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했다.

평양측은 그 다음날인 11월 16일자 회한에서 여전히 대한민국에 대한 내정 간섭적인 비난을 펴 부르면서도 『남북조절위원회는 정당사회단체 대표들로 구성되도록 개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서울측이 이 조건에 동의한다면 서울측과 남북조절위원회의 개편문제를 비롯하여 그 운영문제를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알려 왔다.

결국 쌍방 부위원장회의의 의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위원회의 개편 및 운영 문제로 쌍방간에 양해가 성립된 것이다.

그러나 부위원장회의가 열리자 북한측은 정작 위원회의 개편문제에 대한 토의는 기피하고 엉뚱한 시비로 회의의 진전을 지연시키는데만 전념했다. 작년 12월 5일의 제1차 부위원장회의에서부터 서울측은 위원회의 확대·개편에 긍정적인 고려를 할 뜻을 명백히 하고 위원회의 개편문제를 북한측이 제기했으니 만큼 북한측의 구체적인 개편안을 내놓아 토의를 진행시킬 것을 거듭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위원회의 개편문제에는 언급을 회피하고 북한의 소위 「평화통일 5대 강령」과 「군사 5개항목 우선 해결」 주장을 되풀이하는가 하면 대한민국의 6·23선언을 시비하고 남북조절위원회는 제쳐놓고 엉뚱하게 이른바 「대민족회의」 소집을 주장하는 등 선전적인 발언으로 시종 했다.

#### 나. 남북 쌍방 개편안 제안

##### <서울측 안>

각기 10명 내외, 당국자·정당인·사회단체인사 혼성구성

##### <평양측 안>

각기.

당국에서 5명이상

60~70개 정당·사회단체에서 5~20명씩, 각계각층 개별인사

1974년 1월 30일의 제3차 부위원장회의 다음날인 1월 31일 오전 11시 30분 남북조절위원회 이동복 서울측 대변인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평양측은 1월 30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부위원장회의를 끝낸 뒤 이날 오후 4시 20분 평양방송을 통해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내용을 일방적으로 왜곡하여 공개했다.

평양측이 공개한 제3차 부위원장회의 내용은 회의내용을 사실대로 공정하게 공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측의 발언만을 마치 회의의 전체내용인양 일방적으로 선전한 것으로 그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일일이 논평할 가치도 없다.

특히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위원회의 개편문제에 관해서는 우리측이 작년 12월 19일의 제2차 부위원장회의에서 위원회의 위원 수를 한쪽에서 10명 내외로 확대, 개편하여 당국자 정당인, 사회단체인사들을 참가시키자는 융통성 있는 안을 제시했던 바 평양측은 제3차 부위원장 회의에서 각기 일방에서 당국 외로 60내지 70개의 정당·사회단체에서 매정당·사회단체별로 5명이상 20명까지의 대표를 내고 거기에 더해서 「각계각층」의 개별인사까지 참여 시켜 결국 한쪽에서 최소한 3백명 이상의 방대한 인원이 「위원」으로 참가하는 기구로 개편하자는 안을 내놓았다.

이러한 평양측의 태도는 남북조절위원회를 명실상부한 남북관계의 조절기구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소위 「대민족회의」로 변질시켜 정치적 선전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평양측의 이러한 태도로 미루어 평양측은 남북조절위원회를 7·4남북공동성명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것이 아니라 평양측 스스로의 다른 내부사정이 있거나 또는 우리측의 내부정세를 오판, 편승하여 다른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려는 의도를 들어 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평양측이 하루 빨리 이성을 되찾아 이러한 무리한 제안을 버리고 남북대화를 조속히 정상화시켜 남북관계를 착실하게 개선 발전시킴으로써 진정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자세로 돌아와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우리는 계속 성실과 인내로 대화를 추진시켜 나갈 결의임을 다시 한번 밝혀 두는 바이다.』

서울측의 이 성명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분명히 이례적인 조치였다.

이에 대해 이동복 서울측 대변인은 배경설명을 통해 이러한 성명의 발표는 평양측에 의한 일방적인 관례의 파기로 말미암아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분명히 하고 『진실을 알리기 위해』 다음과 같은 보충설명을 했다.

첫째, 부위원장회의는 당초 평양측의 요청에 의해 비공개 회의가 된 것으로 평양측은 심지어 회의의 현지취재만이라도 가능하게 하기 위해 회의당일 취재기자들의 판문점 출입만이라도 허용하자는 서울측의 거듭된 제의마저 빈번히 거부한 바 있다.

둘째, 평양측은 회의당일인 1월30일 오후 4시 20분 아무런 예고나 사전 협의 없이 평양방송을 통해 성명도 밝혀지지 않은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의 발표 형식으로 제3차 부위원장회의의 내용을 공개했으나 그 내용은 회의 벽두에 유장식 평양측 부위원장이 「인사발언」의 형식으로 발언한 상투적인 대남 비난발언만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선전발언이 장기영 서울측 부위원장에 의해 날날이 논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측 부위원장의 발언부분은 일방적으로 악랄하게 왜곡·변조하여 공개했다.

세계 평양측은 거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이른바 조절위원회개편안을 제안하면서 거기에 덧붙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중앙정보부원은 안된다』 느니 『통일에 반대하는 단체는 배제되어야 한다』 느니 하는 일방적이고도 기준이 모호한 부대조건을 첨부함으로써 평양측의 소위 개편안이 실현가능성을 도외시한 또 하나의 선전용 제안임을 분명히 했다.



#### 4. 평양측 개편안의 정체

7·4남북공동성명은 그 제6항에서 『쌍방은 이러한 합의사항을 추진시킴과 함께 남북 사이의 제반문제를 개선·해결하며 또 합의된 조국통일 원칙에 기초하여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기로 합의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러한 합의사항」이란 무엇을 뜻하는가. 7·4남북공동성명을 한차례 읽어 본다면 그것은 동 성명 제2항에서 제5항까지의 합의사항들을 의미한다는 것이 자명해 진다. 즉 ① 상호 중상, 비방의 중지, ② 대소간 무장도발의 중지와 군사적 충돌의 방지, ③ 다방면적인 제반교류의 실시, ④ 적십자회담의 촉진, ⑤ 남북직통전화의 가설 운영등이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더 나아가서 「합의된 조국통일원칙」 즉, 동성명 제1항의 통일원칙에 입각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기능까지도 남북조절위원회에 부여했다.

7·4남북공동성명이 남북조절위원회에 부여하고 있는 기능은 결국 동 성명에 합의, 명시된 여러 가지 조치들을 구체화시키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 집행을 조정하는 기능인 것이다.

이러한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는 남북조절위원회가 쌍방간의 당국주도형의 기구가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사실에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남북한이 오늘날 극단적으로 상이한 정치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엄연한 현실이다. 대한민국 정부와 북한정권당국은 본질적으로 구조를 달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에 입각한 대의제도에 바탕을 두고있는 반면, 북한의 정치체제는 「푸로레타리아」 계급독재이론을 표방하는 「노동당유일체제」이다. 대한민국에서는 정당이란 정치적 견해를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는 임의단체이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정당」이란 오직 노동당뿐이며 노동당은 정권위에 군림하는 사실상의 통치조직이다. 북한을 비롯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정권당국은 단순히 노동당(공산당)의 하수기관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우 공민권은 법률이 정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모든 국민에 의하여 행사되지만 북한의 경우는 그들의 이른바 「헌법」에 의해 공민권의 행사는 소위 「인민」, 즉 「노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텔리」에게 국한되어 있다.

남북한의 정치체제는 이렇게 그 구조면에서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남북한 쌍방간의 대화는 쌍방의 당국간에 운영되는 수 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그 가장 올바른 방도는 쌍방의 당국자간에 진행되는 것이며 설사 직접 당국자간에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도 그대표는 쌍방의 당국이 각기 자기 체제의 고유한 방식에 의해서 임명하여 전권을 위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주권의 개념이 다르고 정당의 조직원리가 다르며 사회단체의 성격이 다른 두 체제간에는 달리 공통의 기준에 의해 대표를 내놓을 방법이 없는 것이다.

바로 그러한 사리때문에 남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가 대한민국정부와 북한정권의 두 당국사이의

기구로 구성, 운영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의 일치를 보아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서도 위원회를 각기 5명씩의 「장·차관급」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합의한바 있는 것이다.

물론 남북조절위원회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 사업의 실천을 관장하는 기구인 만큼 장차 사업의 진척에 따라 각사업 분야별로 업무를 전문화시키고 또 분야별로 참여의 폭을 넓혀야 될 필요성이 제기되리라는 것은 당연히 예견되는 일이었다. 이에 대비하여 남북 쌍방은 남북조절위원회안에 「정치, 군사, 경제, 문화, 외교」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하고 각기 필요에 따라 설치하기로 합의한바 있다.

그러면 북한측이 내놓은 남북조절위원회 개편안은 과연 어떠한 안인가.

북한은 동개편안에서 개편되는 남북조절위원회에는 쌍방에서 각기 당국외로 60~70개 정당, 사회단체와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개별인사가 참여하되 위원의 수는 당국에서 5명이상, 정당 사회단체에서 그 「규모」와 「성격」에 따라 5명이상 20명까지 내놓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결국 한쪽에서 줄잡아 350명 또는 그 이상의 위원이 나와 쌍방을 합치면 7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방대한 군중집회적인 기구로 만들자는 것이다.

북한이 내놓은 소위 조절위원회개편안은 한마디로 어불성설의 일고의 가치도 없는 가공적인 안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그러나 문제는 북한이 그러한 가공적인 안을 회의에서 공식으로 제기했고 또 그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했을뿐 아니라 북한이 가지고 있는 보도매체를 총동원하여 그러한 개편안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는데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동 개편안 제안의 뒤안에 숨겨져 있는 북한의 속셈은 무엇인가 하는점을 우리는 일응 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측의 개편안이 가공적인 안이라는 것은 우선 그것이 사실상 실현불가능한 안이기 때문이다.

북한측의 안은 남북조절위원회에 쌍방에서 각기 60~70개의 정당사회단체가 참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북한측은 그들이 말하는 정당, 사회단체는 국내뿐 아니라 국외의 단체도 포함시켜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대한민국에 대해서 『「통일에 반대하는」 단체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다. 그외에도 북한측은 이른바 「각계각층」을 대표하는 개별적 인사가 참여할 것도 아울러 요구하고 있다.

북한이 말하는 「60~70개 정당, 사회단체」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하나의 짐작이 가능하다. 즉 북한이 북한지역내에 존재하는 정당, 사회단체의 연합체라고 주장하는 이른바 「조국통일 민주주의전선」에 근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다. 북한은 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에 가입된 정당, 단체의 수가 70여개라고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이 만약 그렇다면 북한이 말하는 「60~70개 정당, 사회단체」 운운 주장은 실로 허황하기 짝이 없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문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이란 1949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거기에 가입되었다

는 정당, 단체들이란 대부분이 당초부터 간판만 있을뿐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것들이며 그나마 대부분이 지금은 사실상 소멸되고 현재까지 북한에 실재하고 있다는 정당, 단체라는 것들은 노동당외로는 노동당에서 파견하는 노동당원에 의해서 간판이 유지되거나 조직이 관리되는 위장 들러리 단체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노동당외로 북한에 존재한다는 정당인 「천도교청우당」과 「조선민주당」은 모두 노동당에서 파견한 노동당원이 「당」의 수석부위원장으로 둔갑을 하여 유명무실한 중앙당부서뿐인 「당」이라는 이름의 유명조직을 관리하고 있다. 그밖의 모든 다른 사회단체들도 예외가 아니다. 다시 말해 노동당을 제외하고 북한에 존재한다는 정당, 단체는 북한에도 「복수정당」 「복수단체」가 있는 것처럼 꾸며 바깥 세상의 이목을 현혹시키기 위한 이름만의 꼭두각시들이며 이것이 바로 북한이 말하는 소위 「노동당유일체제」의 정체이다.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노동당의 정책은 북한정권의 정책이며 다른 「정당, 사회단체」의 구실은 입을 모아 노동당의 정책을 지지 찬동하는 들러리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는 것이다.

북한의 「정당, 사회단체」 운영실태는 이렇게 허구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당, 사회단체」들을 60~70여개나 참여시키자는 북한측의 이른바 조결위원회개편안은 그 자체가 하나의 허구에 불과하다.

북한은 또한 이 「개편안」에서 대한민국측에 대해 『통일에 반대하는 단체는 배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통일에 반대하는 단체」란 무엇을 말하는가. 그 기준은 어디에 있는가.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열망하는 소박한 민족감정을 지니지 않은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도대체 대한민국의 정당, 사회단체 가운데 어느 정당, 어느 단체가 과연 이러한 절대적인 국민적 염원을 외면하고 통일 그 자체에 반대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북한의 속셈은 추측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북한은 만일의 경우 대한민국측이 북한측의 이른바 「개편안」의 취지에 동의하여 그 구체적인 선정기준을 놓고 토의가 전개되는 경우라도 그들의 비위에 맞지 않는 대한민국의 특정정당이나 특정사회단체에 대해서는 「통일에 반대하는 정당이나 단체」라는 독단적인 어거지 주장을 내세워 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려는 암계를 이 「조건」 속에 감추어 두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암계야 말로 북한의 소위 「개편안」이라는 것이 남북간에 합의를 목적으로 제안한 것이 아니며 다른 저의에서 정략적으로 내놓은 것임을 웅변해 주는 증거인 것이다.

북한의 소위 「개편안」에는 또 다른 함정이 감추어져 있다. 이른바 「각계각층」의 「개별인사」 참여주장이 그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소위 「각계각층」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북한의 김일성은 1973년 6월 23일 남북간의 이른바 「대민족회의」 소집을 운운하는 가운데 북한이 말하는 「각계각층」을 이렇게 정의했다. 김일성에 의하면 북한이 말하는 「각계각층」이란 『북반부의 노동자, 농민, 근로농민, 근로인텔리, 청년학생, 병사와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군인, 「민족자본가」, 「소자산계급」』을 말한다는 것이다.

남북한이 두 체제간의 문제를 협의 해결하는데 있어 정부당국에 의해 대표되지 않는 이른바

「각계각층」이 따로 있다는 북한의 논리는 그 자체가 상대할 가치도 없는 공산당식의 억지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공산당식 계급관념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자기들 멋대로의 계급과 계층으로 분류하고 그러한 분류를 받아들일 것을 상대방에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북한이 공산주의 계급관념에 입각해서 자기 지역내의 주민들을 어떻게 계급, 계층별로 구분하든지 그것은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며 우리가 시비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반대로 북한이 자기들의 공산주의 계급관념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계급, 계층별로 분류하고 이것을 대한민국에게 받아들이라고 요구한다는 것은 대한민국더러 대한민국의 체제를 공산주의체제로 스스로 바꾸라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내정간섭적인 주장인 것이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현존현정질서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이며 북한이 어떠한 정략적인 저의를 가지고 그러한 허구적인 이른바 「개편안」을 내놓은 것인가를 능히 짐작할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산 자료이다.

요컨대 북한의 「개편안」은 북한이 생각하는 한반도통일정책은 예나 지금이나 조금도 변함이 없이 소위 「남조선해방혁명」을 통한 적화통일이며 남북대화는 한반도 평화의 정착과 통일문제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상관없이 오로지 「남조선해방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수단으로써만 그 가치를 인정하고 있음을 명백히 해주었다는데에 그 뜻이 있다.

어찌해서 그러한가.

북한의 「남북조절위원회개편안」은 한마디로 남북조절위원회를 소위 「대민족회의」로 변질시키자는 주장이다.

북한이 주장하는 이른바 「대민족회의」는 분단된 한반도의 남북문제를 쌍방간의 협상과 타협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는 발상에서 출발한 것이 아니다. 북한의 이 주장은 상대방 체제에 대한 비합법적인 내부전복공작에 의해서 상대방 체제의 내부붕괴를 초래함으로써 적화의 목적을 달성하는 케케묵은 공산주의 투쟁방식인 이른바 「통일전선」 전술을 한반도의 경우에 적용하겠다는 음흉한 술책의 산물인 것이다. 「스탈린」이래 세계도처의 지역을 적화시켜 가는 과정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적세력이 강력할때에는 정면대결을 회피하고 그 대신 적세력중에서 핵심세력을 분리, 고립시키는 한편 중립 또는 부동세력을 핵심세력에서 이간시켜 이들을 상대로 「혁명세력」을 부식시켜 나감으로써 「혁명」 목적을 달성한다』는 소위 「통일전선」운동을 하나의 주요 전술로 사용해 왔다. 중국대륙의 적화과정이나 「체코슬로바키아」의 경우 등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북한의 이른바 「대민족회의」주장은 그들이 종래 끈덕지게 선전전에서 이용해온 소위 「남북정당, 사회단체대표자연석회의」 또는 「남북정치협상회의」 주장의 이름만을 요란스럽게 바꾼 것으로 1973년 6월 23일 북한의 김일성에 의하여 주장되었다.

북한의 이른바 「남북정치협상회의」주장은 북한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서 분단조국

의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간의 일체의 문제를 협의, 조정, 해결하는 기능을 남북조절위원회에 부여하기로 동의함으로써 사실상 북한 스스로가 이를 포기한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김일성은 그 자신의 동의하에 만들어진 남북조절위원회가 겨우 구성 발족된 직후인 1973년 4월 16일 『남북조절위원회에 정당, 사회단체대표와 각계각층 인사들을 참가시켜 그 폭을 넓히든가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도로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대표와 각계각층 인사들이 참가하는 정치협상회의를 소집하여 통일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함으로써 남북조절위원회의 합의된 기능과 구성의 변질을 시도하기 시작했다.

김일성은 1973년 6월 23일 소위 「남북정치협상회의」를 이른바 「대민족회의」로 둔갑을 시켰고 이번 「남북조절위원회개편안」이라는 이름의 제안을 통해 남북조절위원회 자체를 이른바 「대민족회의」로 변질시키자는 주장을 노골화한 것이다.

북한이 남북조절위원회의 「대민족회의」화에서 노리는 목적은 뻔하다.

그들은 북한의 「노동당유일체제」의 수직적이고 일원적인 폐쇄체제와 대한민국의 평면적이고 다원적인 개방체제의 차이를 의식하고 이를 역이용하여 대한민국의 정부와 국민사이를 이간시켜 국론의 분열을 획책함으로써 내부혼란을 조성하고 이것을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인민민주주의혁명」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북한이 한반도에 적용하려 하고 있는 북한식 한국판 「통일전선」운동의 정체인 것이다.

북한이 이번의 황당무계한 「남북조절위원회개편안」의 제안으로 노리는 효과는 그밖에도 또 하나를 들 수 있다. 그것은 어떻게든지 동결된 남북대화의 해빙을 억제하면서 그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이다.

북한자신도 남북조절위원회를 7백명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군중집회적인 방만한 기구로 바꾸자는 무책임하기 이를데 없는 그들의 소위 「개편안」을 대한민국측이 받아들여리라고 생각했을리는 없다.

북한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대내외여건으로 말미암아 현단계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화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실현불가능한 가공적인 안을 내놓으므로써 토의의 교착상태를 지속시키면서 그에 대한 책임을 모면하려는 생각에서 이번의 「개편안」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 5. 남북적십자회담 실무대표 접촉

남북조절위원회와 함께 인도적인 남북적십자회담도 중단상태가 계속되고 있다.

1973년 11월 15일의 대한적십자측 제의로 이루어진 두 차례의 쌍방 실무대표들간의 접촉에서 북한적십자회측은 ① 한적대표단에서 이른바 「비적십자요원」을 제거하라. ② 대한민국에서 이른바 「애국인민」에 대한 탄압을 중지하라. ③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평양에서 개최하자는 등의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움으로서 쌍방간에 합의된 순서에 의해 제8차 회담을 1973년 12월 중에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한적측의 제의를 거부했다.

제7차 남북적십자회담은 1973년 6월 평양에서 열렸으며 남북쌍방간에 이루어진 회담의 서울·평양 윤번개최합의에 따라 제8차 회담은 당연히 서울에서 개최될 차례인 것이다.

대한적십자사의 이범석 수석대표는 1974년 2월 11일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개최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남북쌍방의 회담대표 각 1명과 쌍방연락단장이 참가하는 실무접촉을 1974년 2월 15일 판문점에서 가질 것을 제의하는 「메시지」를 북적 김태희 대표단장에게 보냈다.

이에 대해 북적측은 쌍방간의 실무대표접촉일자를 2월 25일로 수정 제의해 왔다.

## 제2부 북한의 새로운 무력도발

### 1. 북한 포함, 공해에서 한국어선 격침

1974년 2월 15일 오전 10시10분경 서해의 백령도 서방 30마일의 공해상(북위 38도 05분, 동경 124도 01분)에서 고기잡이를 하던 2척의 대한민국측 어선이 북한포함들로부터 갑작스러운 무장 공격을 받았다.

아무런 사전경고없이 포문을 연 북한포함들의 포화에 의하여 수원 제32호(84.4톤)는 3분만에 현장에서 격침되었으며 풀어 놓았던 그물을 끊어버리고 현장을 벗어 나려 했던 수원 제33호(84.4톤)는 속도가 빠르고 중무장된 북한포함들에 의해 얼마 못가 불들렸다.

현장에서 격침된 수원 제32호의 어부 14명은 대부분 갈아 앉는 배와 운명을 같이 했으며 밝혀지지 않은 극 소수의 어부들만이 북한포함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들은 수원 제33호의 어부 14명과 함께 밝혀지지 않은 북한지역의 어느 지점으로 선체와 함께 납치되었다.

이 사건은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무력도발행위로 말미암아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상태를 단적으로 들어 내준 소름끼치는 해적행위였다. 북한포함들은 일단 납치해서 북쪽으로 예인하던 수원 제33호를 풀어 놓아 주고 대한민국쪽으로 돌아가라고 지시했다가 잠시 뒤에 불안에 떨며 귀항을 재촉하는 수원 제33호를 다시 붙잡아 북쪽으로 끌내 끌어 가고 말았다.

수원 제33호의 용감한 선장 박종주씨와 통신사는 그들의 배가 북한포함들에 의해 납치, 예인되어 가는 동안 대한민국의 인천어로무선국과 무전연락을 유지, 그들이 납치되어 가는 공포의 순간 순간을 시시각각 타전했다. 이들의 용감한 무전상황보고는 그들의 어선에 옹아탄 북한수병들에 의해 그들의 무전실이 강점되는 순간까지 5시간여동안이나 끈덕지게 계속되었다.

북한의 이번 해상만행은 작년 10년말부터 북한이 대한민국이 영유하고 있는 서해안 5개 도서 인근수역에 대한 영유권과 이 수역을 통과하는 대한민국측 선박에 대한 검문검색권을 주장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해상무력의 시위를 벌이므로써 조성된 서해의 긴장상태를 절정에 끌어 올렸다.

공해상의 비무장민간어선에 대한 북한측의 일방적 무장공격인 이번 사건은 두말할 나위도 없이 7·4남북공동성명의 명문조항을 공공연하게 유린하는 배신적인 행위였다. 7·4남북공동성명은 제2항에서 남북 쌍방이 『서로 작거나 크거나간에 일체의 무장도발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불의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취한다』고 못박아 놓고 있다.

대한민국은 이 충격적인 사건의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대한적십자사는 즉각 북한적십자회에 전문을 보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이 사건의 수습에 북적이 개입할 것을 요

구하고 적십자국제위원회(ICRC)에 전문을 보내 국적의 개입을 요청했다. 남북조절위원회의 장기영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는 2월 16일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북한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 무력도발에 강경히 항의하고 이 사건의 정당한 수습을 요구하는 첫 번째 전화통지문을 김영주평양측 공동위원장에게 보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실로 상상을 초월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로 나왔다. 북한은 장기영 서울측 공동위원장대리의 첫 번째 항의전화통지문에 대해 같은날 역시 남북직통전화로 보내온 회답전화통지문에서 그들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대한민국측 어선들을 「간첩선」이라고 우기고 나온 것이다. 북한은 이들 비무장민간어선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했다』고 말해 무장공격 자체만은 시인했으나 그들이 납치해간 어선과 어부의 운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언급을 하지 않는 비인도적인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터무니 없게도 이번 사건이 대한민국에 의해 조작된 『민족분열을 추구하는 정치적 사기극』이라고 엉뚱한 증상비방을 하는가 하면 『치밀하게 준비된 대한민국의 계획적인 군사도발』이라고 덮어 씌우기까지 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작년말이래 서해에 존재하는 긴장상태를 내외에 실감나게 상기시켜 주었다. 이번 사건은 오늘날 한반도의 평화가 과연 남북의 어느쪽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지를 실증해 주는 한편 천사를 악마라고 우기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철면피한 정체를 백일하에 폭로시켜주는 살아 있는 증거가 되었다. 그러한 뜻에서 이번 사건이 과연 어떻게 수습되는가는 북한이 과연 그들이 외쳐대듯 평화를 바라는가 아니면 오로지 일촉즉발의 전쟁분위기를 고취하려 하는가의 여부를 판가름 해주는 시금석이 되게 되었다.

다음에 수록된 것은 이번 사건 발생 이후 남북조절위원회의 서울측이 평양측에 보낸 세차례의 항의전화통지문과 대한적십자사가 북한적십자회와 적십자국제위원회에 보낸 전문 및 서한들이다.



## 2.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1차항의 전문

남북조절위원회 김영주 평양측 공동위원장 귀하

본인은 1974년 2월 15일 오전 10시 10분경 서해안 백령도서쪽 약 30마일 공해상에서 우리측 비무장 어선 2척이 귀측 포함의 포격을 받아 그중 1척이 격침되고 다른 1척이 귀측 포함에 의해 납치, 예인된 중대한 고의적 무장도발행위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경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사건은 평화스럽게 어로작업중인 비무장 어선에 대한 불법적이고 비인도적인 무장공격이며 7·4남북공동성명 제2항 「대소간 서로 무장도발을 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정면으로 유린하는 것임을 지적, 다시한번 남북공동성명의 준수를 촉구하면서 엄중한 항의를 제기합니다.

귀측이 이러한 무장도발을 감행하는 진의가 과연 어디에 있는지 7·4남북공동성명 제2항의 위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으며 또한 귀측의 이러한 중대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결과에 대하여는 전적으로 귀측에 그 책임이 있음을 지적해 둡니다.

본인은 우선 손상을 입은 선체와 어부들을 즉각 송환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1974년 2월 15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

장기영

### 3.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2차항의 전문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김영주 공동위원장 귀하

2월 15일 서해상에서 귀측 포함들이 우리측 비무장 어선들을 불법적으로 무장공격함으로써 빚어진 남북간의 새로운 긴장상태와 관련하여 본인이 귀하에게 보낸 동일자 항의전화통지문에 대한 귀측의 2월 16일자 회답을 받았습니다.

본인은 동회답에서 귀측이 우리측의 비무장 어선을 간첩선이라고 진상을 왜곡날조하여 귀측의 불법적인 행위를 은폐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귀측의 무책임한 행동은 7·4남북공동성명에 입각한 남북관계에 영똥한 긴장을 조성하여 남북간의 평화를 위협하려는 계획적인 처사로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인은 서해의 북위 38°05', 동경 124°01'의 공해상에서 평화스럽게 어로중이던 우리 어선을 귀측 포함들이 포격을 가하여 이를 격침시키고 다수의 인명을 희생시켰을뿐 아니라 다른 어선을 납치하기까지한 이번의 명백한 불법행위가 7·4남북공동성명은 물론 인도적인 견지에서 과연 용납될 수 있는 일인가를 묻고자 합니다.

본인은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귀측이 내세우고 있는 불법, 부당하고 적반하장격인 억지 주장을 즉각 철회하고 이번 사태에 따른 사과와 피해어선 및 인명에 대한 적절한 변상과 함께 납치된 무고한 어부와 선체 그리고 희생된 어부들의 유해의 즉각적인 송환을 거듭 강력히 귀측에 요구하며 또한 이번의 불법 무도한 해적행위의 관련자를 엄중처단할 것을 귀측에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본인은 이번 사건이 최근 귀측이 우리에게 대한 비난방송과 비라살포 등 금지된 비방행위를 가일층 격화시키고 대내적으로는 일촉즉발의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발생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바이며 귀측의 이러한 무모한 도발행위가 초래할 우려스러운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귀측에 있다는 것을 거듭 경고하는 바입니다.

1974년 2월 16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  
장기영

#### 4. 서울측 공동위원장의 3차항의 전문

남북조절위원회

김영주 평양측 공동위원장 귀하

본인은 그동안 두차례의 전화통지문을 통해 2월 15일 서해의 공해상에서 귀측포함들이 어로중인 우리측 비무장 민간어선을 공격 그중 1척을 격침시키고 다른 1척을 납치하는 불법적이고도 비인도적인 해적행위를 한데 대하여 엄중한 항의를 제기한바 있습니다.

또한 본인은 이번 사태의 정당한 수습을 위하여 이번 사건은 명백히 귀측에 의해 저질러진 비인도적이고도 불법적인 행위임을 귀측이 솔직히 인정하여 정중히 사과하는 동시에 납치한 어선과 어부 및 희생된 어부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고 그밖에 사건의 수습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본인의 이 두차례 전화통지문에 대한 회답에서 귀측의 명백한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이미 저질러진 불법행위를 은폐하기 위하여 어업을 생계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선량한 어부들을 「간첩」으로 조작하고 어선을 「간첩선」으로 날조하는 등 인도적인 견지에서도 용서할 수 없는 2중의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귀측에서는 귀측이 저지른 불법적인 해적행위에 대한 내외 여론이 높아지자 이에 당황한 나머지 얼토당토 않게 이번 사건이 「민족분열을 추구하기 위한 정치적 사기극」이라는 엉뚱한 중상비방을 하는가 하면 심지어 우리측에 의한 「계획적인 군사도발」이라고 덮어 씌우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부들이 공해상에서 어로작업을 하는 것이 이른바 「민족분열」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이며 비무장민간어선에 탄 어부들이 공해상에서 평화스럽게 고기잡이를 하면서 도대체 어떻게 「군사도발」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러한 귀측의 터무니없는 엉뚱한 주장은 세계여론의 실소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귀측의 불법적인 해적행위로 말미암아 희생된 어선이 귀측이 말하는 「간첩선」이 아니고 또 어부들이 「간첩」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진실입니다.

이곳에서는 지금 귀측의 해적행위로 말미암아 불의의 참변을 만난 어부들의 가족들이 단장의 비탄에 잠겨있으며 이들 가족들 역시 귀측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된 거짓인가를 입증해주는 산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2월 15일 귀측포함들이 공해상의 우리측 어선들에게 불의의 불법포격을 가했을때 피격된 수원 제32호가 침몰직전까지 우리의 인천어업무선국에 무전으로 알려진 현장상황보고와, 귀측포함에 의해 불법납치된 수원 제33호가 납치되어가는 도중 귀측 무장병에 의하여 무전실이 강점되어 타전이 불가능해진 순간까지 무전으로 인천어업무선국에 피랍상황을 직접 보고해온 기록들

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전상황보고내용은 귀측포함들이 이들 어선을 「간첩선」으로 식별해서 공격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비무장민간어선인줄 알면서도 비인도적인 무장공격을 가했으며, 납치한 어선도 일단 놓아주었다가 「간첩선」주장을 조작하기 위해 다시 예인해 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본인은 귀측이 엄연한 진실을 어떻게 왜곡, 날조함으로써도 귀측이 저지른 불법, 무도한 해적행위의 진상을 은폐시킬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명백한 책임을 모면할 길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더군다나 사건이 발생한지 이미 수일이 지나도록 사망한 어부와 피랍된 어부들의 숫자나 명단, 그리고 억류장소 등 인도주의에 입각한 기초적인 사실통보조차 하지 않고있는 귀측의 비인도적이고 비민족적인 처사는 우리 국민들은 물론 전세계 자유평화 애호인민들의 규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본인은 우리 국민들 가운데서는 지금 이러한 귀측의 평화를 파괴하는 폭행과, 잘못을 반성할줄 모르는 철면피한 태도를 규탄하고 이에 대한 응징을 요구하는 거센 분노의 물결이 일고 있다는 사실을 귀측에 알려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본인은 남북관계의 앞날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귀측이 이제라도 잘못을 시인, 사과하고 납치한 어부들과 어선, 그리고 희생된 어부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한편 인명의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고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엄중처단하며 이러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보장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만약 귀측이 본인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을 때 그로 말미암아 빚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오로지 귀측이 져야 한다는 것을 거듭 경고해 둡니다.

1974년 2월 19일

남북조절위원회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  
장기영

## 5. 북적에 보낸 한적 전문

발신일자 : 1974. 2. 16.

발 신 :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 용 우

수 신 : 북한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위원장 손 성 필

나는 1974년 2월 15일 상오 10시 10분경 서해안 백령도 서쪽 30마일 공해상에서 평화로이 어로 작업중이던 우리측 어선 수원 32호와 수원 33호 2척이 귀측 포함에 의해 격침 및 피랍된 사건의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와같이 비인도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에 대하여 본적십자사로서는 좌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번 사건으로 인한 피해당사자들과 가족들의 고통이 하루빨리 해소되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귀적십자회의 노력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즉각 취해지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1. 침몰 및 피랍된 어선의 어부들의 생사여부와 건강상태에 관한 즉각적인 통보.
2. 침몰된 수원 32호 어선의 어부 12명과 피랍된 수원 33호 어선의 어부 14명의 즉각송환.
3. 만일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유해의 즉각송환.
4. 억류기간중의 모든 어부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대우보장.
5. 수원 33호 어선의 즉각반환.

## 6. ICRC에 보낸 첫번째 한적 전문

발신일자 : 1974. 2. 16.

수 신 : 적십자국제위원회 총재

발 신 : 대한적십자사 총재

1974. 2. 15 상오 10시경 한국어선 "수원 32호" 및 "수원 33호" 2척이 서해 백령도 서방 30마일 공해상(북위 38도 5분, 동경 124도 1분)에서 평화스럽게 어로작업중 북한포함에 의해 피격 당했음.

그 중 12명의 어부가 탑승한 어선은 침몰됐으며 14명이 탑승한 어선은 북한으로 피랍됨.

사태 발생후 어부의 소식을 알 수 없음.

충격을 입은 가족들이 적십자사에서 도와주기를 호소하고 있음.

적십자 국제위원회가 북한 포함에 의해 야기된 비인도적이며 불법적인 사건의 해결에 나서 주기를 요청하며, 생사를 알려주고, 생존자는 피랍된 어선과 함께 송환하며, 사망자의 유해는 돌려 보내주도록 해주기 바랍.

귀 위원회의 신속한 조치가 있기를 요망하며 상세한 글을 추보하겠음.

## 7. ICRC에 보낸 한적 서한

발송일자 1974. 2. 20.

ICRC 총재  
에릭·마르틴 박사

친애하는 총재님

한국영토인 백령도 서방 30마일 공해상(북위 38도 5분, 동경 124도 1분)에서 한국어선 2척(수원호 제 32호 및 제 33호)이 평화로이 어로작업을 하던중 1974년 2월 15일 오전 10시경 북한포함의 공격을 받은 불행사가 있었음을 전보로 통보하였거니와 이어서 귀하의 즉각적 주의환기를 위하여 이 서한을 보냅니다.

14명의 어부가 탑승한 수원호 제 32호는 침몰되었고 14명의 어부를 태운 또다른 어선은 북한에 납치되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관련된 어부의 명단은 별첨과 같습니다.

이 불행한 사건으로 말미암아 충격을 받은 어부의 가족들은 본적십자사에 대해서 ICRC와의 협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청해 왔습니다.

본 적십자사에서는 북한적십자회에 대하여 직접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마는 ICRC에서 이 문제에 개입하여 어부들의 생사와 상태에 관한 소식통보 및 생존자, 어선 및 사망자의 유해송환문제를 주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불행한 어부들의 유족들을 대신하여 이 문제해결을 위한 귀하의 노고에 대하여 미리 감사를 드리며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요청하시는대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총재 김용우

## 8. ICRC에 보낸 두 번째 한적전문

발신일자:1974. 2. 21

수 신:적십자 국제위원회 총재

발 신:대한적십자사 총재

2월 20일 21:40 평양방송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공해상에서 평화로이 어로작업중 북한으로 납치된 어부로 하여금 마치 간첩행위를 자행한 것처럼 조작된 자백을 육성으로 방송케 했습니다.

이미 통보한 바와 같이 납북된 어부전원은 순박한 어부들로서 오랫동안 어로생업에 종사해온 사람들입니다.

방송내용으로 보아 북한당국은 납치한 어부들로 하여금 간첩행위를 했다는 이와 같은 날조된 자백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가혹한 심신의 고통을 가했음이 명백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제네바협약의 명백한 위반이며 인도주의와 적십자원칙에 위배되는 범죄로서 규탄되어야 할 것입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며 급박해지고 있습니다. 인도주의의 수호자인 ICRC는 우리 어부들에 대한 이와 같은 비인도적인 처우를 즉각 중지하도록 북한당국에 촉구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ICRC가 북한당국에 대하여 어부들을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처우할 뿐만 아니라 하루 속히 그들의 생사여부와 상태를 알려주고 조속한 시일내에 무사히 귀환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해주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서한으로 보내겠습니다.



### 제3부 한반도 평화의 제도적 보장

#### 1. 박대통령 남북 상호불가침 협정제의

상호 무력침략포기  
상호 내정불간섭  
휴전협정효력존속

박정희대통령은 1974년 1월 18일 서울에서 가진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남북한이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한반도에 진정하고도 항구적인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고 통일에 이르기까지 과도적 평화적 공존의 토대로서 남북한이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할 것을 다음과 같이 제의했다.

『내가 말하는 불가침협정의 골자는 다음 세 가지로 집약할 수 있다. 그것은 첫째로 남북이 서로 절대로 무력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하자는 것이다. 둘째로는 상호 내정간섭을 절대로 하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로는 여하한 경우에라도 현행 휴전협정은 그 효력을 존속시킨다는 것이다. …… 이러한 불가침협정이 체결되고 만약 서로 성실히 준수만 된다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예방되고 평화는 유지될 것이다. …… 이 협정을 맺어 놓고 앞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평화공존을 해 나가면서 그 동안에 서로 대화를 활발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해서 통일의 기반을 하나 하나 다져 나가자…… 이것은 작년 여름 우리 정부가 발표한 6·23선언의 정신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박대통령은 이날 회견에서 북한이 말하는 소위 「평화협정」 체결주장에 구체적으로 언급, 북한의 동 제의는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침략 기도를 감춘 양두구육격의 위장평화제의라는 사실을 명백히 지적통박했다.

박대통령은 북한이 이른바 「평화협정」 주장을 통해 추구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철수, 병력의 감축, 군장비도입중지와 현존 휴전협정체제의 백지화이며 이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여 그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무력남침에 의한 적화통일야욕을 달성하겠다는 흑심을 감춘 것이라고 갈파했다.

박대통령은 북한의 소위 「평화협정」이 『과연 진정으로 평화를 위한 것인가』고 반문하고 『북한이 만약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새삼스럽게 「평화협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현존 휴전협정만 준수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북한이 과거 휴전협정의 여러 조항을 사문화시키면서 군비를 증강해 왔고 심지어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마저 지키지 않는 사례를 열거하면서 과거의 사례로 보아 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자기들이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할 때 시간을 얻기 위해, 또 상대방이 만심하도록 하기 위해 내세우는』 상투적인 전술용어라는 점을 지적, 이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을 환기시켰다.

박대통령은 『평화는 무슨 협정이다. 조약이다 해서 종이 한 장에 서명을 했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며 문제는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 서로 전쟁을 앓겠다는 그런 의사가 명백히 있느냐의 여부에 달린 것』이라고 갈파하고 『북한이 지금이라도 휴전협정을 준수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성실하게 이행하기만 하더라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고 평화는 정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아무리 갈망한다 하더라도 하루 이틀에 통일이 안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말하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와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평화적 공존을 해 나가면서 그 동안에 남북이 활발하게 대화를 하면서 교류도 하고 협력도 해서 평화통일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2. 북한판 「평화협정」 주장의 허구

북한은 1974년 1월 26일 8일동안의 침묵을 깨고 「노동신문」 사설을 통해 박정희대통령의 남북 불가침협정제의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북한은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이 요란하게 선전해 마지 않는 소위 「평화협정」 주장이 한낱 허구적인 주장이며 실제로는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아무런 성의가 없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 사설에서 대한민국의 남북불가침협정제이가 『평화요, 뉘요, 하고 떠들면서도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종식시키는데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이를 거부한 것이다.

북한은 이 사설에서 『2개의 「조선」을 조작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남조선」에 「일본군국주의세력」까지 끌어 들이면서 통일을 방해하고 있는 장본인도 「미제국주의자」들이며 「남조선괴뢰」들에게 무기를 대주고 그들을 우리와의 대결과 전쟁으로 부추기고 있는 것도 「미제국주의자들」이라는 실로 터무니없는 중상·비방을 퍼붓고 『우리는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남북이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계속 주장한다』는 강변을 되풀이했다.

대한민국의 남북불가침협정제이에 대한 북한의 공식반응으로 간주된 문제의 「노동신문」 사설은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가 얼마나 일방적인 것으로 또 그들이 주장하는 「평화협정」이 얼마나 기만적인 허구인가를 다시 한번 소름 끼치게 실감시켜 주고 있다.

이 사설은 북한이 말하는 한반도의 「평화」는 오로지 한반도의 적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며 소위 「평화협정」은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반도의 현존휴전체제의 파괴만을 목적으로 삼고 있음을 명백히 해준 것이다.

북한의 한반도 「평화」관과 소위 「평화협정」의 기만적 허구성은 한반도의 평화를 저해하고 한반도의 통일을 가로막는 원인이 주한유엔군의 일원으로 유엔의 깃발아래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있다는 역사부정적 자세에서 출발하고 있다.

1월 26일자 「노동신문」 사설은 김일성의 말을 인용,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 「침략정책」은 우리 민족의 모든 불행의 화근이며 우리나라의 통일을 방해하는 기본장애이고 「조선」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항시적 근원』이라는 적반하장격의 전도된 주장을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역사는 사실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 북한의 공산주의집단은 1945년의 해방뒤에 한반도전역에 걸쳐 유엔감시하의 자유총선거를 통해 통일된 독립정부를 수립하라는 유엔의 결의를 거부함으로써 한반도의 분단을 초래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은 해방조국의 즉각 독립에 반대하고 「모스크바」 3상회의에서 합의된 신탁통치안을 지지·찬성한 치욕의 기록을 가지고 있다.

- 북한은 1949년 남한에서 주한미군이 철수하여 군사적 공백상태가 조성되자 일요일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전면적인 불법남침을 감행하여 치참한 동족상잔의 전화를 일으킴으로써 민족분단의 상흔을 더욱 심화시켰다.
- 북한은 휴전성립이후에 열린 「제네바」 국제회의에서 현실과 유리된 비현실적인 주장을 내놓음으로써 휴전상태의 정치적 뒷수습을 가로 막았다.
- 북한은 1960년대 이후 휴전협정을 정면으로 위배, 군사력을 계속 증강하고 대한민국에 대해 무장공비의 남파 등 직접·간접침투를 격화시켜 한반도의 긴장을 계속 고조시켰다.

(문화공보부는 1974년 2월 9일 북한이 현재 정규군 47만, 각종 경비대 5만, 「노동적위대」 1백45만, 「붉은 청년근위대」 70만명 등 도합 2백 67만명의 무장병력을 가지고 있으며 고성능전투기 5백 98대를 포함한 항공기 8백여대, 잠수함 3척, 「코마」 및 「오사」 급 유도탄함정 18척, 포함 60척 등 3백 20여척의 각종 함정, 전차 1천 1백 80대, 장갑차 2백대, 각종 포 6천문, 50개소의 지대공 SA-2유도탄기지, 6개소의 「샘레트」 지대함유도탄기지 등의 장비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군사장비 가운데 「미그」 19, 「미그」 21 등 최신예기 상당수와 잠수함 「코마」 및 「오사」 급 유도탄함 등 최신예 함정들은 1972년의 7·4남북공동성명 발표이후 한편에서 남북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도입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 오늘날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 유엔군이 북한에 대한 침략을 목적으로 하는 무력이 아니라 하는 것은 굳이 장황스런 해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주한 유엔군은 1950년 6월 선전포고도 없는 불법남침을 감행한 북한침략군을 응징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유엔의 결의에 의해 파견된 국제십자군이며 지금 현재의 잔여 주둔병력은 북한의 계속되는 긴장 조성과 무력도발로 항상 위협을 받고 있는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전쟁억지력으로서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이야말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한반도정세의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이다.

주권국가인 대한민국이 「미제국주의자」의 「강점」아래 있다는 북한의 주장이나 주한 유엔군이 북한에 대한 「침략군」이라는 북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억지임은 물론이다. 게다가 「일본군국주의자」들이 지금 남한에 「상륙」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는 데까지 이르고 보면 이것은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우스꽝스런 희화적인 억지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최근의 북한측 주장에 의하면 풍광명미한 대한민국의 풍치를 찾아오는 일본의 「관광객」들까지도 「군국주의자의 앞잡이」로 묘사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억지가 이렇듯 희화적인 경지에까지 이르고 있지만 문제는 그들의 한반도 「평화」관과 소위 「평화협정」주장이 모두 그러한 희화적인 억지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는 데에 있다.

북한은 한반도의 엄연한 현실과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일방적으로 왜곡·변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러한 왜곡 변조된 역사를 가지고 그들의 기만적인 한반도 「평화」관과 소위 「평화협정」주장을 합리화시키는 적반하장의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박정희대통령이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을 「양두구육격의 위장평화제의」라고 갈파한 소이도 바로 거기에 있다.

북한은 그 동안 일반시민 생활을 무참하게 희생시키면서 모든 노력을 군수산업 육성에 집중시켜 지금은 상당한 규모의 무기와 전쟁장비를 생산해 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사회는 효과적인 사찰과 관리가 불가능한 폐쇄사회이다.

반면 대한민국은 모든 정보가 개방된 개방사회이며 평화산업에 치중한 경제건설의 결과로 방위수단을 주로 해외로부터의 도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상이한 두 체제간에 상호 적절한 정도의 신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른바 군비감축을 약속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홀로 무장해제를 하라는 얘기가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북한의 이른바 「평화협정」 주장이 기만적인 속임수라는 것은 다른 각도에서도 고찰될 수 있다. 그것은 한반도통일을 위한 과도적 조치로서의 「평화적 공존」에 대한 북한의 격렬한 반대에서 읽어질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은 1월 26일자 「노동신문」 사설에서 『평화적 공존이란 서로 다른 국가들사이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그것을 한민족, 한 나라안의 「내부문제」에 적용시킬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이것은 실로 중대한 발언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의 이론적 토대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김일성이 선전하는 소위 「남북연방제」 주장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이야말로 북한의 「평화협정」 주장과 「남북연방제」 주장이 오로지 선전효과만을 노린 허구적인 주장임을 명백하게 입증해주는 발언이기 때문이다.

왜 그런가.

우선 오늘날 남북한의 문제가 북한이 주장하듯 「한 나라, 한 민족의 내부문제」라면 북한이 말하는 「평화협정」의 체결은 그 필요나 이론적인 근거가 성립될 리가 없다. 「한 나라, 한 민족」 사이에 「협정」을 체결하자는 주장 자체가 모순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남쪽에 대한민국이라는 합법적 정부가 있고 북쪽에는 북한공산집단이라는 정치실체가 존재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한 나라, 한 민족」이라고 강변한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허구가 아닐 수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평화적 공존」 논리를 부정하는 북한의 자세는 김일성의 「남북연방제」 주장과 본질적으로 모순이 되는 것이다.

김일성은 그가 말하는 「남북연방제」는 『당분간 남북쌍방이 현존 정치체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남북한의 「정부」대표로 「민족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해 왔다. 그러면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은 김일성이 말하는 소위 「연방제」가 남북 두 체제간의 「평화공존」과 어떻게 다르냐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평화적 공존」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북한의 태도는 곧 김일성의 「남북연방제」주장은 거짓말이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평화협정」주장은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 주장이 아니고 한반도적화라는 침략적 목표달성에 장애가 되는 주한미군의 철수와 대한민국의 일방적 무장해제라는 북한의 불순한 정략적 목표에만 봉사하는데 목적을 둔 하나의 허구인 것이다.

(마감소식)

장기영 서울측 부위원장, 북한의 소위 「간첩선」 운운주장을 통박

남북조절위원회의 장기영 서울측 부위원장은 1974년 2월 27일 관문점에서 열린 제4차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 회의에서 여섯가지의 반박할 여지가 없는 구체적인 예증을 들어 2월 15일 서해의 공해상에서 북한포함들에 의해 격침된 수원 제32호와 납치된 수원 제33호가 「간첩선」이었다는 북한의 주장이 북한에 의해 사후에 조작된 터무니없는 사실의 날조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했다.

장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이른바 「간첩선」 운운주장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첫째, 북한이 격침한 수원 제32호와 납치한 수원 제33호는 북한이 주장하는 것처럼 「간첩선」으로 사용하기에는 너무나 낡은 노후선이었다. 이 두 배는 선령이 15년이나 되었고 최고속도가 시속 8「노트」에 불과했다.

둘째, 수원 제32호와 제33호는 오로지 어로용장비만을 갖고 있었다. 북한이 납치한 수원 제33호가 어로용 필수장비의 하나로 가지고 있었던 무전기는 사건당시 「배터리」의 출력부족으로 인천어업무선국과 직접교신마저 불가능한 형편이었다. 사건당일 수원 제33호의 선장과 통신사가 그들이 탄 배가 북한포함에 의해 납치, 예인되어가는 여섯시간동안 인천어업무선국에 시시각각 현장의 긴박한 상황을 무전으로 보고할 수 있었던 것은 때마침 사건현장부근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던 모란 제31호가 수원 제33호의 발신내용을 3각 중계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셋째, 이번 사건에 희생된 어부들이 단순한 어부라는 사실은 뒤에 남겨진 그들의 가족들이 입증해 주고 있다.

넷째, 수원 제32호와 제33호는 다른 어선들이나 마찬가지로 안전어로규칙에 따라 2월 7일 인천항을 출항한 이후 매 12시간마다 암호가 아닌 평문으로 그 배들의 당시위치를 인천어업무선국에 무전 보고했다. 「간첩선」이라면 결코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섯째, 북한은 이번 사건에 대해 『간첩선에 대해 자위권을 발동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경위로 보아 북한의 「자위권 발동」주장은 도저히 성립될 수 없는 억지이다. 그 까닭은 이렇다.

북한포함들은 2월 15일 오전 10시경 이들 어선들에 대해 1.5마일 밖에서 최초의 공격을 가해 수원 제32호를 현장에서 격침시키고 수원 제33호를 납치했다. 그렇다면 북한은 이날 오전 10시경 최초의 조우때 이들 어선을 소위 「간첩선」으로 식별하여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그 뒤 북한포함들의 행적은 이러한 가설과 부합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북한포함들은 3시간 뒤인 이날 오후 1시경 예인·복상중이던 수원 제33호를 방면해 주었을 뿐 아니라 격침현장에

서 건져내어 북한포함에 태워 가지고 가던 수원 제32호의 어부 김근식씨도 『판문점을 통해 귀환시켜 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시간여가 지난뒤인 오후 2시반경 북한포함들은 남하중이던 수원 제33호를 다시 쫓아와 이번에는 끝내 끌고 가버렸다. 그렇다면 북한은 오후 2시반경 문제의 어선을 「간첩선」으로 식별하여 이른바 「자위권」을 「발동」했다는 얘기가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보다 1시간전인 오후 1시경 수원 제33호를 일단 방면해준 북한포함의 행동은 도저히 설명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가설에 따른다면 오전 10시경의 최초의 공격은 무엇으로 설명이 되느냐 하는 의문이 당연히 제기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간첩선」에 대한 「자위권발동」 운운주장은 사후에 날조된 거짓 주장인 것이다.

여섯째로 북한은 수원 제32호와 수원 제33호가 「간첩선」이었다는 북한측 주장의 유일한 증거로 수원 제33호의 박종주선장과 갑판장의 소위 「자백서」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자백서」라는 것은 그 문안을 본 사람이면 누구나 그것이 분명히 허독한 고문에 의해 본인들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날조된 거짓 「자백서」임을 첫눈에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문제의 소위 「자백서」에는 북한에서만 통용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도무지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용어와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 「자백서」에는 「책임과장」 「책임선장」 「무전국장」 「정탐」 「정탐모략」 등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사용되지 않는 생소한 단어들과 『상금이 차례진다』 『알만하다』 『……할데 대하여』 라는 등의 북한특유의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다. 이렇게 대한민국에서는 전혀 사용되지도 않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알지도 못하는 용어나 표현들이 사용되었다는 것은 동 「자백서」가 박선장 자신에 의해 쓰여진 것이 아님을 뚜렷하게 입증해주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2월 15일 사건당시의 현장상황은 북한포함들이 시속 8노트의 수원 제33호를 무려 5시간 이상이나 끌고간 끝에 북한측 지역으로 예인해 갔음을 입증해 주고 있다. 이 배들의 이러한 항적은 그 자체가 이 사건이 육지로부터 30마일 이상 떨어진 공해상에서 발생했음을 웅변해 주고 있는 것이다.

장부위원장은 또 이날 회의에서 남북대화의 초창기에 북한의 김일성과 김영주가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내려보낸 무장특공대가 청와대를 습격하려 했던 사건을 솔직하게 시인, 『박대통령께 대단히 미안한 일이었다』고 사과한 일이 있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번의 경우에도 북한은 그때의 정신으로 돌아가 변명할 여지가 없는 불법행위를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한편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을 즉각 취하라』고 요구했다.

장부위원장은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북한은 ①북한의 명백한 잘못을 시인 사과하고, ② 납치한 어선과 어부들 및 사망자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며, ③ 인명의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을 보상하고, ④ 사건관계자를 엄단하며, ⑤ 이러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 남북대화 제5호

(1974. 2. ~ 1974. 7)

# < 목 차 >

제1부 남북대화의 역사적 배경 .....	3
1. 한반도의 분단 .....	3
2. 6·25사변-북한의 무력남침 .....	4
3.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 .....	6
4. 한국,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 .....	8
제2부 남북대화 .....	10
1. 대화의 개요 .....	10
2. 대화의 교착과 그 원인 .....	16
가. 기본입장의 차이 .....	16
나. 남북한 경제발전 격차의 인식(평화공존의 거부) .....	21
3. 대화의 현상 .....	26
4. 제29차 UN총회와 한국문제 .....	30
제3부 부    록 .....	31
1. 6·23 선언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 .....	31
2. 6·23선언 1주년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 .....	34

## 제1부 남북대화의 역사적 배경 (한반도 분단의 현실)

### 1. 한반도의 분단

1945년 8월 15일 제2차 세계대전은 일본의 무조건항복으로 종결되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은 한반도의 해방을 가져왔다. 일제의 패망에 따라 한반도와 한민족은 36년에 걸친 일본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것이다.

그러나 해방은 새로운 민족적 비극의 시작이었다. 해방과 더불어 한반도에는 국토분단의 비운이 찾아왔기 때문이다. 일본의 항복과 더불어 한반도의 허리를 가로지르는 북위 38도선을 사이에 두고 그 남쪽에는 미군이, 그리고 그 북쪽에는 소련군이 일본군의 무장해체를 목적으로 진주하게 됨으로써 한반도분단의 비극은 짙은 것이다.

1947년 11월 14일 UN은 제2차 총회에서 한반도 분단상태의 종식과 통일독립정부의 수립을 위해 1948년 5월 10일 한반도 전역에서 UN 감시하에 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실시하기로 결의하고 선거감시임무를 수행할 UN한국임시위원단을 구성했다. 그러나 북한지역의 소련군 점령당국은 UN한국임시위원단의 북한지역출입을 거부함으로써 전한국선거의 실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1948년 2월 26일 UN 소총회는 『선거가 가능한 지역에서의 선거실시』를 결의했으며 이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38도선 이남의 지역에서 UN감시하의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 의해 대한민국의 제헌국회가 구성되어 헌법을 제정하고 정부를 구성했으며 1948년 8월 15일에는 서울을 수도로 하는 대한민국의 건국이 세계만방에 선포되었다.

1948년 9월 9일 북한지역에서 소련군 점령당국의 비호를 받고 있던 공산주의자들은 북한공산정권(「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성립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그러나 1948년 12월 12일 UN 제3차 총회는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에 존재하는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천명하는 결의를 채택함으로써 대한민국의 법통을 재확인했다.

남북한은 1949년 1월 19일과 2월 10일 각기 개별적으로 UN가입신청서를 UN에 제출했다. 1949년 4월 8일 UN안보이사회는 남북한의 UN 가입신청을 심의한 끝에 대한민국의 가입신청은 찬9반2로 가결하고 북한의 가입신청은 찬2 반8로 부결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UN 가입은 소련의 거부권행사로 말미암아 실현되지 못했다. 1949년 12월 22일 UN 제4차 총회는 대한민국이 UN 회원국으로 가입할 모든 자격이 있음을 확인하고 안보이사회에 대한민국의 회원국가입을 승인할 것을 권고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2. 6·25사변-북한의 무력남침

1949년 38도선 이남에 진주했던 미군은 한반도에 조성된 심각한 군사적 불균형상태<sup>1)</sup>를 방치한 채 한반도로부터 철수했다. 당시 북한의 공산정권은 소련의 지원에 의해 전투기와 탱크 및 중포를 주축으로 하는 근대화된 장비로 무장된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었다. 반면 대한민국은 구식 개인화기로 무장된 수적으로도 열세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다.

북한의 공산정권은 남한지역에 조성된 군사적 공백상태를 이용,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라는 군사적 도박을 감행하기로 결심했다. 일요일인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은 38도선전역에 걸쳐 전면기습남침을 감행했다. 이로써 3년 동안에 걸쳐 한반도전역을 폐허로 만들고 무수한 인명을 앗아간 동족상잔의 비극이 시작되었다.

UN은 1950년 6월 27일 긴급안보이사회에서 북한을 「침략자」로 규정하고 모든 회원국에게 북한의 불법남침을 격퇴시키는데 필요한 군사적 및 기타 원조의 제공을 요청하는 결의를 채택했으며 이에 호응해서 16개국이 군대를 한반도에 파병했다. 1950년 7월 7일에는 UN 안보이사회 결의에 의해 UN군사령부가 창설되었으며 동년 10월 7일 UN 제5차 총회는 UN 한국통일부흥위원단의 설치를 결의했다.

1950년 겨울 UN군의 공세앞에서 궤멸직전에 있는 북한공산군을 구원하기 위해 중공이 한국동란에 참전했으며 UN총회는 1951년 3월 18일 중공을 「침략자」로 규탄하고 한반도로부터 중공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요구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피비린내 나는 한국동란은 1953년 7월 27일 UN군 사령관과 북한 및 중공군사령관 사이에 판문

1) 공식기록에 의한 6·25 개전당시 남북한의 병력과 장비비교는 다음과 같다.

★병 력

대한민국 : 지상군 8개사단(22개 연대) 67,416명(지원부대와 특과부대를 포함하면 94,974명)

해군	7,715명
공군	1,897명
해병대	1,166명
총	105,752명

북한 : 지상군 10개사단(30개연대) 120,880명(기타 특수부대포함하면 182,680명)

해군	4,700명
공군	2,000명
육전대	9,000명
총	198,380명

★장 비 :

대한민국 : 박격포 960문, 곡사포 91문, 대전차포 140문, 장갑차 27대, 항공기 22대, 경비정 28척

북한 : 박격포 1,727문, 곡사포 552문, 고사포 36문, 대전차포 550문, 전차 242대, 장갑차 54대, 자주포 176문, 항공기 211대, 경비정 30척

점에서 휴전협정이 체결됨으로써 전투행위가 종결되었다. 한반도에는 휴전이라는 이름의 불안정한 평화가 찾아 들었다. 한반도는 이제 북위 38도선 대신 155「마일」의 휴전선을 경계로 해서 양단되었다.

1954년 6월 휴전협정의 조항에 의거해서 한반도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해 「제네바」에서 정치회의가 소집되었다. 이 회의에서 대한민국과 15개 한국동란 참전 UN회원국들은 『통일독립된 민주적 한국정부를 수립하기 위해 UN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전한국총선거를 실시하자』는 통한방안을 제안했으나 공산측은 이를 거부했고 「제네바」 회의는 결렬되었다.

3년간에 걸친 한국동란의 와중에서 전국토의 폐허화로 인한 천문학적인 재산의 손실은 논외로 하고 인명에 있어서만 공산측에서 북한군 52만명, 중공군 90만명이, 그리고 UN군측에서 한국군을 포함하여 18만명이 생명을 잃었으며 대한민국측에서만 99만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거나 부상을 입었다. 전란기간중 북한은 8만5천명의 대한민국의 각계각층 인사들을 강제로 납치하여 북으로 끌고갔으며 북한지역에서는 3백만명이상의 주민들이 정든 고향과 가족·친척들을 북에 둔채 남부여대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지역으로 내려왔다. 한국동란 발발당시의 북한지역 인구는 1천2백만명(추정)으로 그 가운데 4분의 1이상이 남으로 넘어 온 것이다. 북한의 무모하고도 반민족적인 군사도박으로 말미암아 한반도분단의 비극은 더욱 심화되고 남과 북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 3. 한반도의 새로운 긴장

####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의 격화-

1953년의 휴전으로부터 1960년대 초까지 한반도의 남북관계에는 소강상태가 지속되었다. 북한은 전후복구에 바빴던 것이다.

1960년대 초부터 남북관계에는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광신적인 김일성 우상화를 통해 과거 소련의 「스탈린」 체제를 능가하는 1인 독재체제를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그 명분으로 소위 「남조선혁명」과 이에 의한 적화통일을 내세웠다. 북한은 이제 전술을 바꾸어 보다 우회적인 방법으로 적화통일이라는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북한지역을 세계에 유례가 없는 폐쇄사회로 밀봉해 놓은 북한정권은 주민들에게 원시적 자급자족체제인 북한의 이른바 사회주의체제를 『세계가 부러워하는 가장 진보된 선진사회』라고 선전·교양시키는 한편 대한민국은 『기아와 빈곤, 실업이 판을 치는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신편 식민지이며 이 때문에 끊임없는 인민의 항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그릇되게 묘사하고 『따라서 혁명으로 남한정권을 뒤엎고 인민을 해방시키는 것이 북한주민들의 신성한 의무』라는 허구적 논리를 주입시키기 시작했다.

북한정권은 이러한 허구적 선전을 뒷받침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사회질서교란을 통해 그들이 말하는 바 「남조선혁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무장간첩을 남파하여 갖가지 파괴활동을 자행하게 하는 한편 지하활동을 위한 간첩들을 밀파하여 대한민국 내에 묻어 두고 「라디오」 방송을 통한 암호지령과 기타 방법으로 소위 「남조선혁명」의 수행을 매일같이 독촉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70년11월2일 북한노동당 제5차 전당대회에서 행한 보고에서 소위 「남조선혁명」의 목적은 『구경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현 「반동정권」을 뒤집어 엮은 뒤 인민민주주의 정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공언했다.

북한이 남파한 간첩들의 대다수는 대한민국의 치안당국에 의해 적발, 체포되었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지역 주민들에게 이들 간첩들의 활동을 『남한인민들의 의거』라고 거짓 선전을 함으로써 이른바 「남조선혁명」 이론을 정당화시키는 구실로 활용했다.

해를 거듭할수록 「에스칼레이트」된 북한의 이러한 대남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은 격화일로로 걸었고 1968년에는 드디어 절정에 이르렀다.

1968년1월21일 북한이 남파한 31명의 무장특공대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암살하기 위해 대통령관저인 청와대를 습격할 목적으로 휴전선을 몰래 넘어 휴전선으로부터 40「마일」 거리에 있는 서울에 잠입했다. 이들은 청와대로부터 200「미터」 떨어진 곳까지 접근했으나 여기서 대한민국 경찰과 조우하여 급거 출동한 군·경수색대에 의해 1명의 투항자를 제외한 나머지 전원이 사살되었다. 또 이해 10월에는 4개조로 이루어진 120명의 북한무장공비를 동해안의 산악지대에 상륙·침투시켰다. 그러나 북한은 이 두 사건도 북한지역주민들에게는 『남한인민들이 일으킨 용감한 무장

봉기』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했다.

그로부터 4년뒤인 1972년 5월초 대한민국의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박정희대통령의 명에 따라 남북대화를 개척하는 사명을 띠고 비밀리에 평양을 방문, 북한의 김일성과 회담을 가졌을 때 김일성은 1968년의 두 사건에 대해서 그것이 북한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임을 솔직히 시인하고 정중하게 사과했다. 김일성은 『사건(1·21)청와대 습격기도)발생후 조사를 해보니 나도 모르게 당(북한노동당)내의 좌경맹동분자들이 그런 나쁜 짓을 저지른 것이 판명되었다』고 말하고 『뒤에 알아보니 그 자들이 또 한번 그런 나쁜 짓(동해안무장공비상륙사건)을 저질렀기 때문에 당시의 보위상(김창만) 총참모장(최광) 정찰국장(김정태)등을 모두 철직(파면)시켰다』고 말하면서 『박정희대통령에게 대단히 미안한 일이었다』고 거듭 사과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그때 뿐이 일이었다. 북한은 금년 3월6일 「뉴욕」에서 북한 UN대표부가 발표한 성명에서는 다시 옛날로 되돌아가 1968년의 1·21사태는 『남한의 애국적 인민무장집단이 일으킨 대담한 무장의거』라고 강변하고 있는 것이다.

1968년 1월에는 1·21사태말고도 미국 통신함 「푸에블로」호 납치 등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이 잇달아 발생했으며,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의 긴장은 최고조에 이르렀다.

#### 4. 한국, 북한과의 대화를 제의

##### -한반도평화의 정착과 통일기반 조성모색-

1968년에 들어와 절정에 이른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로 말미암아 가뜩이나 불안정한 한반도의 평화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대한민국의 경우 한반도평화의 유지는 대한민국이 성공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발전과 번영의 절대적 전제조건이었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대한민국은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세계최고의 경제성장율을 기록하면서 눈부시는 경제발전을 거듭하고 있었다. 그런데 1968년에 와서 더욱 격화된 한반도의 긴장상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의 토대인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한 것이다.

무언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러한 사태는 시정되지 않으면 안되었다.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분단된 한반도의 재통일여부에 귀착된다.

그러나 분단된 한반도의 통일문제야말로 오늘날 한반도가 처해 있는 엄연한 현실에 입각한 현실적인 고찰을 요구하는 문제이다.

오늘날 한반도의 남쪽에는 자유민주주의이념에 입각한 민주국가인 대한민국이 있고 북에는 공산주의이념에 입각한 공산 「푸로레타리아」 독재체제가 있다. 남북의 두 체제는 비단 이념과 사상과 제도를 달리 할 뿐 아니라 역사관과 가치체계, 그리고 생활양식까지도 극단적으로 달리 하고 있다. 이러한 두 체제의 대치속에서 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은 당연히 체제의 단일화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은 대한민국의 3,300만 국민은 자유민주주의이념을 깊이 신봉하고 공산주의를 배격하는 반면 1,400만의 인구를 장악하고 있는 북한공산정권은 공산화통일 이외의 어떠한 통일도 용납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론상 두 체제를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단일화하는 방안은 있다. 그것은 전체 한국민의 총의에 물어 다수가 택하는 바에 따라 체제를 택일하는 방안이다. 남북한 토착인구비례에 입각한 남북한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한국정부를 수립하자는 대한민국의 전통적인 통일방안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남한의 3,300만대 북한의 1,400만이라는 인구의 차이로 말미암은 열세의식과 또 남한의 개방체제에 대해 북한의 폐쇄체제가 지니는 취약점 때문에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결코 이러한 민주방식에 의한 통일을 수락하지 않는다. 따라서 북한은 적화통일달성의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선공산화」만을 추구하는 것이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며 따라서 통일이란 결코 단순한 과제가 아닌 것이다.

이러한 현실상황 속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한반도의 평화를 파괴하려는 북한의 책동을 억제하여 한반도에 보다 항구적이고 안정된 평화를 정착시키는 것이었다. 안정되고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의 정착은 남북한의 두 체제간에 상호부정과 간섭이 배제되는 평화적 관계의 정립에 의해서 선도되어야만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사리이다. 또한 남북한간의 이러한 평화적 관계야말로 비단 한반도정세의 안정뿐 아니라 나아가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어려운 노정의 착실한 시발점도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남북한의 통일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쌍방간의 화해와 동화의 과정은 쌍방간의 평화적 관계의 확보가 없이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1971년 8월 대한민국은 바로 이러한 정세관과 필요에 입각해서 남북적십자회담을 북한에 제의함으로써 남북대화를 시작했다. 남북적십자회담의 목적은 1945년의 타율적인 남북한 분단과 6·25 동란으로 말미암아 남북한에 흩어져 살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들의 상호주소, 생사의 확인, 상호방문과 상면, 상호 서신교환을 주선해 주고 당사자들의 원에 따라 재결합시켜 주자는 것이다. 이러한 인도주의사업의 결실은 틀림없이 남북한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며 상호 민족적 유대를 재확인시켜 주는 데 유익한 결과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남북대화를 비단 인도적 차원에만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정치적 차원에서도 별도의 통로를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아래 1972년 5월 2일 이후락 당시 중앙정보부장을 비밀리에 평양에 파견, 김일성·김영주등과 일련의 회담을 갖게 했으며 그 결과로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을 탄생시켰다. 이에 따라 남북한간에는 인도적 남북적십자회담과 함께 정치적 대화를 위한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되기에 이른 것이다.

## 제2부 남북대화

### 1. 대화의 개요

남북대화는 1971년 9월 20일 판문점에 있는 중립국 감독위원단 회의실에서 남북적십자본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예비회담의 제1차 회의가 열림으로써 시작되었다.

예비회담의 목적은 본 회담의 의제와 개최장소, 회담진행절차 및 개최일시 등을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예비회담의 진행은 순탄한 것이 아니었다. 예비회담은 인도적 적십자회담을 정치회담으로 변질시키려는 북한적십자회측의 거듭된 기도로 말미암아 끝없이 장기화되었다. 결국 예비회담은 25회의 전체회의와 16회의 비공개 실무회의를 거쳐 1972년 7월 4일 남북한간에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부록 1)이 발표된 뒤인 1972년 8월 11일에야 종결되었으며 동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평양에서 제1차 본회담이 열리게 되었다. 예비회담에서 쌍방은 본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열기로 했으며 5개 항목의 본회담의제<sup>2)</sup>를 채택했다. 쌍방은 쌍방의 대표단을 대표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취재기자 20명 등 도합 54명(잠시 뒤 기자 5명의 증가에 합의가 이루어져 59명으로 늘어남)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본 회담은 1972년 10월말 평양에서 열린 제3차 본 회담에서 의제 제1항 『이산가족·친척의 주소와 생사의 확인 및 통보』의 방법과 절차에 대한 토의에 들어갔다. 이에 대해 대한적십자사(한적)측은 국제적십자의 심인사업방식인 문건(심인의뢰서와 회보서)교환방식을 제안했으나 북한적십자회(북적)측은 난데 없이 대한민국에 대한 소위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조성」 선행주장<sup>3)</sup>을 들

---

2) 남북적십자본회담의 의제는 다음의 5개항목이다.

- 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려주는 문제
- 나)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간에 자유로운 방문과 자유로운 상봉을 실현하는 문제
- 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간에 자유로운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 라)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의 자자의사에 의한 재결합문제
- 마) 기타 인도적으로 해결할 문제

3) 본회담의제 제1항 「주소와 생사의 확인 및 통보」의 실시 방법 및 절차와 관련해서 북한적십자회가 내놓은 제안은 다음(요지)과 같다.

- 가) 대한민국은 먼저 반공법·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반공단체들을 해산하며 일체의 반공활동을 금지한다.
- 나) 적십자 심인사업의 당사자는 물론 협조자와 관계자들이 남북을 오갈 때 그들에게 언론, 출판, 집회, 동행 등의 모든 자유와 편의 그리고 그들의 신체와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 다) 쌍방은 「적십자 요해해설인원」을 상호 교환과견한다. 이들은 상대측 지역의 리·동에 1명

고 나와 회담을 교착상태로 몰아 넣었다. 북적측은 적십자회담을 정치적 선전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노력을 재개, 『한국에서 최고의 인도주의는 통일이며 따라서 통일문제와 분리된 인도적 문제는 없다』는 독단적인 논리를 앞세워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문제는 제쳐놓고 통일이라는 고도로 정치성을 띤 문제를 토론하자라는 억지 주장으로 회담을 공전시켰다.

적십자본회담<sup>4)</sup>은 1973년 7월 평양에서 열린 제7차 회담까지 도합 7회(서울 3회, 평양 4회)가 열렸으나 북적측의 태도에는 한치의 변화도 생기지 않았고 따라서 회담의 담보상태는 계속되었다. 제7차 본회담에서 한적측은 회담의 교착타개를 위한 하나의 돌파구로서 9월 11일의 추석을 전후해서 쌍방이 합의하는 일정한 수의 성묘방문단을 상호 교환할 것을 제안했으나 북적측은 『지엄문제』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그나마 적십자본회담은 1973년 8월 북한에 의해 남북조절위원회의 중단이 선언되면서 역시 북적측에 의해 아무런 이유의 설명도 없이 중단되었다.

남북적십자회담과는 별도로 7·4 남북공동성명 제6항에 의거해서 1972년 11월 30일 남북한간에는 남북조절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 발족되었다.

7·4 남북공동성명은 남북대화의 목적을 『서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결과로 생긴 남북사이의 오해와 불신을 풀고 긴장의 고조를 완화시키며 나아가서 조국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한 임무의 수행을 포괄적으로 남북조절위원회에 위임했다. 즉 동공동성명은 제6항에서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합의된 원칙에 입각해서 통일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을 추진하며 남북간의 제반문제를 개선, 해결하는 것』이라고 명문화한 것이다.

남북조절위원회의 발족에 앞서서 남북쌍방은 1972년 11월초 평양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 제2차 회의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부록 2)를 합의 채택했다.

---

씩 파견하고 이들에게는 언론, 출판, 집회, 통행 등의 모든 자유와 편의 그리고 이들의 신체와 휴대품에 대한 불가침권을 보장한다. 이들은 이산가족, 친척의 실태조사와 함께 「갈라진 겨레들의 고통을 해소하고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며 이해와 신뢰 그리고 민족적 단결과 화목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군중해설 사업」을 벌인다.

라) 이산가족, 친척 심인사업대상에 제일동포들을 포함시킨다.

마) 이산가족, 친척의 주소와 생사의 확인 및 통보에 적십자의 개입은 금지하고 당사자본인이 직접 자유롭게 상대측지역에 가서 돌아다니며 찾게 한다.

4) 남북적십자본회담은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제1차 평양	1972. 8. 29~ 9. 2
제2차 서울	1972. 9. 12~16
제3차 평양	1972. 10. 23~26
제4차 서울	1972. 11. 22~24
제5차 평양	1973. 3. 20~23
제6차 서울	1973. 5. 8~11
제7차 평양	1973. 7. 10~13

이 합의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①합의된 원칙에 따른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 ②정당·사회단체 및 개인간의 정치적 교류실현 ③경제적·문화적·사회적 교류와 협력의 실시 ④긴장상태의 해소와 군사충돌의 방지 ⑤대외활동에서의 공동보조 모색 등의 5개로 명시했다. 동합의서는 또한 쌍방의 위원수를 5명으로 하고 산하기구로 간사회의와 공동사무국을 두며, 장차 위원회안에 필요에 따라 정치·군사·경제·문화·외교 등 5개분과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2~3개월마다 1회씩 서울과 평양에서 열며 간사회의는 매월 1회 판문점에서 열도록 규정했다.

조절위원회의 회의는 1972년 11월말부터 12월초까지(서울), 1973년 3월(평양), 그리고 동년 6월(서울)등 도합 3회 개최되었다. 한편 간사회의는 1973년 3월에 구성되어 3.4.5월 3회에 걸쳐 열렸다.

그러나 조절위원회는 1973년초부터 교착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측은 조절위원회의 분과위원회중 경제분과위원회와 문화분과위원회의 우선 구성 및 경제와 사회·문화분야에서의 광범한 교류와 협력의 실시를 통해 우선 쌍방간에 신뢰분위기를 축적시킬 것을 제안했다.<sup>6)</sup> 그러나 북한측은 군

5) 남북조절위원회의 회의는 다음과 같이 개최되었다.

- ※ 이후락씨 평양비밀방문            1972. 5. 2~5
- ※ 박성철 서울비밀답방            1972. 5. 29~6. 1
- ※ 제1차 공동위원장회의            1972. 10. 12 (판문점)
- ※ 제2차 공동위원장회의            1972. 11. 2~4 (평양)
- ※ 제3차 공동위원장회의            1972. 11. 30 (서울)

- 제1차회의 서울            1972. 11. 30~12. 2
- 제2차회의 평양            1973. 3. 14~16
- 제3차회의 서울            1973. 6. 12~14

6) 남북조절위원회(1973. 3. 15 제2차 평양회의)에서 대한민국측이 내놓은 제안은 다음과 같다.

- 가) 남북조절위원회, 간사회의, 공동사무국의 운영세칙을 조속히 제정하고 공동사무국을 조속히 발족시키며 판문점에 공동사무국 건물을 공동으로 건축한다.
- 나) 남북조절위원회의 5개분과위원회중 우선 경제분과위원회와 사회문화분과위원회를 구성, 발족시켜 다음의 사업을 실천에 옮긴다.

#### 경제분야

- 경제인의 교류
- 물자의 교류
- 과학기술의 교류
- 자원의 공동개발
- 상품전시회의 교환개최
- 상사의 교환상주

사문제 우선 해결 주장과 5개 분과위원회 동시일괄설치 주장,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도로 이른바 통일문제를 해결할 「정치협상회의」를 병행시키자는 주장 등 사실상 7·4남북공동성명의 기저를 파괴하는 불합리·비현실적인 주장들<sup>7)</sup>을 들고 나와 회담의 진전을 정돈시켰다.

---

#### 사회문화분야

- 학술, 문화분야의 교류
- 체육분야의 교류와 국제경기 단일 「팀」의 구성과건
- 영화, 무대예술의 교류
- 고고학과 민족사의 공동연구
- 고유언어의 보존을 위한 연구
- 각종 사회인사와 단체의 교류
- 기자의 교류와 상주
- 서신, 전화, 전보 등 통신의 교류
- 관광분야의 교류

7) 남북조절위원회(전과 동, 제2차 회의)에서 북한측이 내놓은 제안은 다음과 같다.

가) ①무력증강과 군비경쟁의 중지 ②쌍방병력 각기 10만 이하로 감축 ③해외로부터의 무기, 작전장비, 군수물자도입의 중지 ④미군을 포함한 외군철수 ⑤평화협정체결 등 군사 5개항목을 우선적으로 협의, 해결한다. 이를 위해 남북조절위원회를 개편, 쌍방군 책임자들을 요원으로 참가시키든가 아니면 군사분과위원회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

나) 남북조절위원회의 5개분과위원회를 동시에 일괄해서 설치한다.

다)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남북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를 소집한다.

※ 북한의 이 제안은 북한의 태도가 이미 대화긍정적 태도에서 대화부정적 태도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해 주는 안으로 매항목이 대화의 진전을 억제하기 위한 함정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가)항은 남북한간에 군사문제의 우선해결이 없이는 다른 분야에서의 대화진전을 거부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을 밝히는 항목이다. 남북조절위원회에서 평양측 김영주공동위원장의 대리료 회의에 참가했던 박성철은 「군사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고는 대화의 진전도, 남북관계의 개선도, 통일과 관련된 어떠한 문제의 해결도 있을 수 없다」고 공언했다. 오늘날 남북한관계에 있어서 군사문제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또한 그 해결이 가장 어려운 문제임에도 틀림이 없다. 북한이 이 문제의 우선해결을 대화진전의 조건으로 내놓았다는 것은 바꾸어 말하면 대화의 진전을 허용치 않겠다는 말이 된다.

둘째 나)항에서 북한은 5개분과위원회의 동시일괄설치를 주장함으로써 우선 순위에 입각한 분과위원회의 축차적 구성의 길을 봉쇄했다.

세째 다)항에서 북한은 이미 남북조절위원회에 흥미를 잃고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변질시켜 파탄시키려는 기도를 들어내고 있다.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명백히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관계 전반을 개선, 해결하는 기능을 부여

1973년 8월 28일 북한은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 공동위원장인 김영주의 이름으로 성명<sup>8)</sup>을 발표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중단을 일방적으로 선언했다. 이와 함께 북한은 남북적십자회담도 중지시켰으며 이로써 남북대화는 두 갈래 모두 중단되었다.

1973년 11월 15일 대한민국은 북한에 대해 중단된 두 갈래 남북대화의 재개를 제의했다. 그 결과로 남북간에는 두 갈래의 접촉이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 하나는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sup>9)</sup>이고 다른 하나는 남북적십자회담 대표접촉<sup>10)</sup>이다. 둘다 접촉의 목적은 각기 중단된 대화선을 정당화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대화 부정태도는 여전히 견지되고 있으며 두 갈래 대화선의 정상화는 대한민국측의 끈질긴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원한 상태이다.

---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다)항에서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남북조절위원회에서 박탈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8) 북한은 이른바 8·28김영주성명에서 대화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는 김대중씨 사건을 구실로 대화의 중단을 선언했다. 그러나 8·28성명의 진의는 그것이 아니다. 8·28성명에 담겨진 북한의 진의는 적어도 북한의 생각이 달라질때까지는 대화를 재개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북한은 동성명에서 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①남북조절위원회의 서울측 위원중 중앙정보부요원(이후락 당시공동위원장)의 교체 ②6·23선언의 취소 ③공산주의자 처벌 중지 ④남북조절위원회의 확대개편(「정당, 사회단체대표 및 각계각층인사」 참여) 등 전혀 일방적이고도 강탈적인 요구를 내놓음으로써 사실상 대화의 재개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9)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는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판문점에서 열렸다.

제1차	1973년 12월 4일
제2차	1973년 12월 19일
제3차	1974년 1월 30일
제4차	1974년 2월 27일
제5차	1974년 3월 27일
제6차	1974년 4월 24일
제7차	1974년 6월 28일
※ 제8차	1974년 8월 21일(예정)

10) 남북적십자회담 대표접촉은 역시 판문점에서 다음과 같이 7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제1차	1973년 11월 22일
제2차	1974년 2월 25일
제3차	1974년 3월 11일
제4차	1974년 4월 3일
제5차	1974년 4월 29일
제6차	1974년 5월 22일
제7차	1974년 5월 29일(종결)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에서 대한민국측은 위원회 정상화의 한 방안으로 위원회의 확대개편을 고려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허황하고도 비현실적인 개편안<sup>11)</sup>을 제시함으로써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

남북적십자회담 대표접촉은 1974년 7월 10일부터 본회담 실무회의<sup>12)</sup>로 형태를 바꾸어 계속된다. 쌍방간에 합의된 실무회의의 임무는 「본회담의제의 예비적 토의」와 「본회담재개」문제이나 북측측은 본회담재개와 관련해서 불필요한 조건들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적십자본회담 역시 조속한 재개의 전망은 여전히 어둡다. 남북적십자회담의 교착상태에 관심을 표명한 적십자국제위원회(ICRC)는 적십자회담의 재개를 중재할 목적으로 적십자회담의 쌍방수석대표들이 「제네바」에서 국적주재하에 회담을 가질 것을 제의하는 서한을 1974년 4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북측에 보냈으나 북측은 6월26일 평양방송을 통해 국적의 중재제의를 『제3자의 개입』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다.

---

11) 1974년 1월 30일의 제3차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에서 북한은 다음과 같은 위원회 개편안을 내놓았다. 즉, 위원회를 쌍방에서 각기 당국대표 5명이상, 각기 60~70개의 정당·사회단체에서 각각 5명이상 20명이내의 대표, 그리고 각계각층의 개별인사들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한쪽에서 최소 350명에서 최대 1,400명의 대표를 내어서 위원회를 구성하자는 황당무개한 안이다.

1974년 2월 27일의 제4차 부위원장회의에서 북한측은 전기 개편안을 자진해서 철회했다. 북한은 그 대신 『남북조절위원회는 현재의 규모대로 운영하되 그와 함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남북정치협상회의」(「정당사회단체 및 각계각층 인민대표」참석)를 병행시키자』고 주장하고 있다.

12) 남북적십자회담 쌍방은 그동안의 관문점 대표접촉 대신 「본회담 실무회의」를 갖기로 합의, 그 첫 회의가 1974년 7월 10일 관문점에서 열렸다. 이 실무회의에는 쌍방에서 교체수석대표와 대표 각 2명이 참석했다. 이 「실무회의」의 목적은 「본회담의제의 예비적 토의」와 「본회담 재개문제」토의이다. 이 회의의 성격은 결국 1971년 9월 20일부터 1972년 8월 11일까지 관문점에서 진행된 예비회담과 유사한 고도의 인내가 요구되는 지루한 회담이 될것으로 보인다.

## 2. 대화의 교착과 그 원인

### 가. 기본입장의 차이

5천만 한국민족의 절대적인 염원과 전세계 여론의 기대 속에 시작된 남북대화는 무엇 때문에 교착되고 무엇 때문에 중단되었는가. 이 원인을 근본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남북대화에 임하는 남북한 쌍방의 기본입장에 대한 올바른 이해이다.

남북대화는 궁극적으로 분단된 한반도의 재통일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대화에 임하고 있는 쌍방의 기본입장은 즉, 쌍방이 추진하는 각자의 통일정책의 표현이기도 하다.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대한민국이 당초 남북대화를 북한에 제의한 근본목적은 대화를 통해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북한 역시 자신의 통일정책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이용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아래 대화에 응한 것이라는 사실이다. 대화에 임하는 쌍방의 기본입장은 바로 이것을 두고 말하는 것이다.

북한이 진행중인 대화를 교착시키고 나아가서 중단시킨 원인은 근본적으로는 한동안 대화를 진행시켜 본 결과 남북대화의 계속이 북한의 기본입장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의 교착과 중단의 원인을 보다 본질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대화에 임하는 쌍방의 기본입장이 무엇인가를 보다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음은 그러한 관점에 입각한 남북한 쌍방의 대화에 임하는 기본입장에 대한 고찰이다.

#### 1) 대한민국의 기본입장

대한민국이 대화를 통해 추구하고자 했던 목표는 대한민국의 통일정책이 추구하는 목표와 일치된다. 즉 대한민국이 대화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것은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일련의 중간과정을 마련하는 일인 것이다.

한반도의 재통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당면의 과제는 이미 한 세대에 이른 분단기간중 남북한에 실재하는 두 개의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체제간에 심화되어 있는 차이, 즉 역사관의 차이, 가치체계의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 생활방식의 차이, 그리고 언어의 차이 등을 해소, 동화시키기 위한 일련의 화해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에 옮기는 일이다.

한반도 남북관계의 현실은 남북한사이에 엄청난 불신의 벽이 가로 놓여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심화된 불신관계는 상호사상과 이념의 대립, 6·25라는 엄청난 전화, 휴전 후 계속된 북한의 대남 간접침략행위, 남한의 개방체제와 북한의 폐쇄체제의 차이, 그리고 극단적인 상호 부정 및 적대관계 등으로 말미암아 빚어졌다. 남북한간의 화해를 위한 어떠한 움직임도 그것은 1차적으로 이러한 불신관계의 해소와 신뢰관계의 회복에 이바지하는 것이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화해와 동화의 과정은 우선 한반도에 보다 안정된 평화의 정착이 선행되지 않고는 실현



불가능한 일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어느 누가 소위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운위하면서 그에 앞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킬 필요성을 부정한다면 그러한 「평화통일」은 실체가 없는 한낱 선전용어이외에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대한민국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성취하고자 했던 1차적 목표는 바로 진정한 평화통일의 실현을 선도하는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우선 한반도의 평화를 확보하는 일이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 대한민국이 대화를 통해 성취하고자 한 것은 북한공산주의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①한반도에서 정규전은 물론, 「게릴라」 전 등 비정규전과 간첩침투에 의한 간접침략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일체의 전쟁요인을 억지하고 ②남북한의 두 이질적 체제간에 과도적 평화공존관계를 확보하며 ③쌍방간에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고 그 폭을 점진적으로 넓혀 감으로써 상호 신뢰의 회복과 민족적 동질성의 복원을 도모하고 ④그렇게 함으로써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착실하게 축적시켜 나가는 일련의 화해와 동화과정의 확보였던 것이다.

남북대화에 임하는 대한민국의 이러한 기본입장은 대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여러 차례 천명되었다.

1973년 6월23일 박대통령에 의해 내외에 선언된 평화와 통일에 관한 대한민국의 새로운 외교정책(부록 3)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6·23선언으로 통칭되는 이 정책에서 박대통령은 분단된 한반도의 평화적 재통일이 대한민국정부가 성취하고자 하는 불변의 지상목표임을 강조하고 이의 성취를 위한 부단한 노력의 경주를 다짐했다. 그러나 박대통령은 남북관계의 현실에 비추어 평화적 통일의 달성까지 장기간의 시일이 소요될 것임을 예견하고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도적 잠정조치로서 ①남북한이 상호 내정을 간섭하지 않고 침략을 하지 않음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며 ②남북공동성명정신에 입각한 대화를 성실하게 계속하여 구체적인 대화의 성과를 생산토록 할 것을 제의했다. 또한 박대통령은 대한민국정부가 UN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대한민국의 단독가입은 물론이거니와 남북한의 개별 동시가입에도 반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백히 선언했다. 요컨대 박대통령은 이 선언을 통해 통일까지의 과도적 잠정조치로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관계를 정립하는 것을 북한이 수락하고 국제사회가 공인함으로써 우선적으로 한반도상에 안정된 평화를 정착시킬 것을 제창한 것이다.

박대통령은 1974년 1월 18일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한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을 제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평화지향적인 통일접근정책을 다시 천명했다.

박대통령은 이 회견에서 그가 제의하는 남북한 상호 불가침협정의 골자를 ①남북한이 절대로 서로 무력침략을 하지 않겠다고 만천하에 약속하고 ②서로 절대로 상대방의 내정을 간섭하지 않으며 ③여하한 경우에도 현존 휴전협정의 효력을 존속시키자는 것이라고 밝히고 『이 협정을 맺어 놓고 앞으로 통일이 될 때까지 남북이 서로 평화공존을 해나가면서 그동안에 서로 대화를 활발히 하고 교류와 협력을 실시해서 평화통일의 기반을 하나 하나 다져 나가자』고 역설했다.

6·23선언 1주년인 1974년 6월23일 박대통령은 다시 담화(부록 4)를 통해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하루 속히 무력이나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노선을 버리고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으로 돌아와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상호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즉각 호응하라』고 촉구했다.

박대통령은 이 담화에서 1973년 남북대화의 중단이후 북한에 의해 더욱 격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도발과 내정간섭 등 적대적 행동의 일체 중지를 촉구하고 『북한은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위한 협상에 응하라』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또한 『3천3백만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이 UN에 가입하는 것은 국제협조와 평화의 증진을 위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만약 인구 1천4백만의 북한이 우리와 함께 UN에 가입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거듭 천명했다.

진정한 평화통일의 현실적 전제조건으로 한반도 평화정착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대한민국의 평화지향적 통일접근정책은 1974년 7월 5일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가 주최한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에 관한 학술회의에서 있었던 김용식 통일원장관의 치사에서 거듭 재확인되었다.

김장관은 이날 치사에서 한반도 남북관계의 현실에 관해 『오늘날 남북한에는 외교·국방·재정 등의 분야에서는 완전히 서로 용납되기 어려운 「이데올로기」를 구성원리로 하는 이질체제가 확립되어 교육문화를 비롯하여 민족역사에 대한 개념과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심지어는 언어생활에 마저 이질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관찰하고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모색해야 할 통일은 통일성립의 조건이 나날이 개선되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에 그 목표를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장관은 『우리의 통일조건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선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관계에서 냉전논리의 청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우리는 통일문제에 관한 제도적 해결을 성급히 추구하기에 앞서 남북이 서로 내왕하고 물자를 교환하며 민족문화를 공동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상태를 시급히 회복하는데 통일노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장관은 이어 한반도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북한은 우리가 제의한 불가침협정체결에 동의하고, 대한민국을 소위 공산혁명의 수행대상지역으로 정의해온 비현실적 통일노선을 포기함으로써 평화통일에 대한 원칙적 장애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남북한의 동시 UN가입이 남북한간의 냉전적 대치상태의 해소에 기여할 뿐 분단을 고정시킬 법적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국제법의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2) 북한의 기본입장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의 기본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이른바 통일정책의 정체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 하면 북한의 경우에도 남북대화는 북한이 가지고 있는 북한관 통일정책추진의 수단이기 때문이다.

한반도의 재통일문제에 관해 북한역시 이른바 「평화통일」을 표방한다. 북한은 1945년 한반도의 분단 이후 무려 3백여회에 걸쳐 소위 「평화통일방안」을 제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인의 여지가 없이 명백한 사실은 북한이 말하는 북한판 「평화통일」은 이름만이 「평화통일」일뿐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화통일은 결코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방안은 「평화통일」의 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전혀 일방적인 이른바 「선결조건」의 충족을 요구한다.

북한이 요구하는 「선결조건」은 무엇인가. 그것은 북한이 말하는 소위 「남조선혁명」의 수행이다. 북한은 무엇을 가르켜 「남조선혁명」이라 일컫는가. 그것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식민지」로 그릇되게 묘사하면서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낸 뒤 북한의 배후조종하에 폭력혁명을 통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뒤엎고 그대신 공산정권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것을 가르켜 소위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 일컫는다.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말하는 것이다. 결국 북한의 「평화통일」방안은 이른바 「남조선혁명」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산화가 이루어진 뒤야 「평화통일」은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평화통일」의 「선결조건」은 대한민국의 「선공산화」이다.

북한판 「평화통일」의 허구성은 김일성 자신의 공식발언에 의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이 입증된다.

김일성은 1970년11월2일 북한노동당 제5차전당대회에서 그가 행한 사업총화보고가운데서 『조국통일의 전제는 「남조선혁명」의 수행』이라고 단정하고 「남조선혁명」의 목적은 『구경남한의 헌정권을 뒤엎고 「인민민주주의정권」을 세우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러한 혁명의 형태를 가리켜 북한은 「인민민주주의혁명」이라고 정의하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이 명시하고 있듯이 북한이 대한민국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맑스·레닌」주의당(공산당)과 「노동계급」의 영도하에 광범한 「애국적 민주역량」(반정부세력)과 결속, 「통일전선」을 형성하여 폭력으로 합법적 정부를 타도하고 「인민정권」을 수립하는 것』을 말하며 소위 「인민정권」하에서는 『토지와 산업이 국유화되고 국영경제체제하의 사회주의 경제형태가 지도적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사회주의혁명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요컨대 폭력에 의한 「공산화」혁명이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하지 않으면 안되는 문제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이 「폭력에 의한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정권」은 결코 특정정권을 지칭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단순하게 정권 그 자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북한의 「정치용어사전」이 명백히 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이 「타도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정권」 그 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체제」, 즉 「헌정질서」를 의미하거니와 김일성 자신도 남북한의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①남한에 있는 자본가의 공장과 외국인투자기업체의 국유화 ②남한에 있는 사유농지의 일체 몰수 ③남한과 미국, 일본간의 경제협력관계 단절이 선행되어야 한다.』(1974년 4월 17일 평양방송 김일성노작 해설에서 인용)고 말함으로써 북한이 말하는 「평화통일」의 「선결조

건」은 대한민국의 「특정정권의 타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체제의 공산화」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북한의 이러한 허구적인 「평화통일」방안의 정체는 남북대화가 시작된 후 7·4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기 하루 전인 1972년 7월 3일 북한의 중앙방송을 통해 발표된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호상관계에 관하여」라는 제목의 「정책해설」을 보면 더욱 선명해 지고 있다.

동 「정책해설」에서 북한은 『조국통일은 어디까지나 「남조선혁명」이 수행되는 조건에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단정하고 다시 『통일은 반드시 남한에서 「인민민주주의혁명」을 수행함으로써 이룩된다』고 부연하여 「남조선혁명」과 「인민민주주의혁명」은 동의어로 사용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 「정책해설」에서 북한은 『통일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기치 밑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여 그들이 말하는 통일은 오로지 「적화통일」임을 실토하고 있다.

동 「정책해설」의 보다 가공스런 대목은 다음의 대목이다. 즉 『통일을 실현하는데는 평화적 방도와 비평화적 방도가 있지만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는 오직 유일하게 폭력적 방법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대목이야말로 그 명백한 문면이 웅변해 주고 있는 것처럼 북한은 통일에 관해 대한민국의 「선적화」에 의한 통일이 아닐 경우에는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대목이다.

문제의 대목은 보다 알기 쉽게 풀이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뜻이 된다.

즉 북한이 말하는 이른바 「평화통일」(「평화적 방도에 의한 통일」)은 오직 「남조선혁명」,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의 공산화혁명이 먼저 수행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그런데 소위 「남조선혁명」은 『오직 유일하게 폭력적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북한이 몽상하는 소위 「남조선혁명」, 즉 대한민국의 공산화혁명은 현실적으로는 실현가능성이 결여된 하나의 선전구호이자 일방적으로 설정한 투쟁목표에 불과하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관의 이른바 「평화통일」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에게 남겨지는 통일추구의 수단은 오직 하나이다. 그것은 「비평화적 방도」 즉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인 것이다. 이른바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호상관계에 관하여」가 내리고 있는 결론인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검은 속셈은 김일성 자신이 그 스스로의 말로 뒷받침하고 있다. 김일성은 『우리당(북한노동당)은 나라의 통일을 될 수 있는대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하려 한다. 그러나 만약 적들이 우리의 혁명운동(즉 「남조선혁명」)의 전진을 무력으로 방해할 때는 물론 우리는 무력으로 조국통일을 해야 한다.』(1974년 4월18일 평양방송 김일성노작 해설에서 인용)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 추구하는 통일은 이렇게 강탈적인 방법에 의한 통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통일

문제를 대한민국과의 대화, 즉 협상이나 타협 등의 평화적 방법에 의해 해결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북한의 기본입장은 분단한국의 통일은 그 성취의 수단으로서 오직 무력의 사용이나 폭력적 방법만을 고려하는 이른바 「혁명」 또는 「투쟁」의 쟁취물이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한의 기본입장은 김일성 스스로가 역시 그 자신의 어록으로 뒷받침해 주고 있다. 특히 작년 8월 북한이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킨 뒤의 일련의 김일성의 공언들이 그것이다. 즉, 김일성은 1973년 10월 28일 「불가리아」 정부대표단의 북한방문을 환영하는 자리에서와 1974년 3월 4일 「부메디엔」 「알제리아」 국가평의회회장의 북한방문을 환영하는 자리에서 『나라의 「평화통일」은 오직 투쟁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남조선의 「분열주의자」(대한민국정부를 지칭)들과는 어떠한 타협도 할 수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당연히 제기되는 의문은 그렇다면 북한이 1971년 대한민국에 의해 남북대화가 제의되었을 때 어째서 이에 응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해답은 간단하고도 명료하다.

북한이 대화에 호응한 원인은 북한이 결코 북한의 전통적으로 평화부정적이고 폭력지향적인 기본입장을 수정하고 대한민국과 진지하게 대화를 통해 통일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마음을 고쳐먹었기 때문이 아니다.

북한은 그와는 반대로 남북대화가 가급적이면 무력적화통일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을 조성하고, 그렇지 못할 때에는 이른바 「남조선혁명」을 촉진할 수 있는 조건을 조성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한 나머지 대화에 응한 것이다. 예컨대 북한이 남북대화 시작 이후 대화진전의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는 주한 UN군해체와 주한미군 철수주장이나 덮어놓고 군사문제부터 먼저 해결하자는 주장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안보의 바탕을 약화시켜 남북간 군사적 불균형상태를 초래함으로써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시도를 가능케할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며 대한민국의 반공정책에 시비를 걸어 반공법·국가보안법의 폐지나 반공활동의 금지 등 반공정책의 포기를 역시 대화진전의 조건으로 고집하고 있는 것은 그 목적이 대한민국의 대북경각심(반공체제)의 이완을 강요하여 공산당이 대한민국내에서 합법·반합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의 폭력적인 공산혁명을 추진하자는데 있는 것이다.

남북대화가 계속 전진을 못하고 중도에 교착되어 결국 중단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러한 북한의 근본적으로 대화부정적인 기본입장에 대한 고찰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다.

#### 나. 남북한 경제발전 격차의 인식(대화중단의 직접동기)

남북대화는 공식적으로 1973년 8월 28일 북한에 의해 중단이 선언되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1973년 8월 28일은 대화의 중단이 공식적으로 선언된 날에 불과하다. 왜냐 하면 북한은 이미 그 보다 훨씬 앞서 1973년초에 이미 대화의 계속에 흥미를 잃고 대화의 진전을 교착시키면서 일로 중단으로 몰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북한이 남북대화를 중단시킨 근본적인 원인은 일정기간 대화를 진행시켜 본 결과 남북 폭력혁명의 수행이나 무력의 사용에 의한 적화통일을 위한 도구로서 대화의 가치에 환멸을 느낀데 기인한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 북한은 대한민국에서 유신체제의 성립 등 반공체제가 강화되고 안보태세가 정비·보강되는 일련의 사태발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했고 따라서 대화의 계속에 근원적으로 흥미를 잃었던 것이다.

하지만 북한은 보다 더 절박한 이유때문에 남북대화를 중단시켜야만 했다. 그것은 대화가 진행됨에 따라 북한에서는 북한체제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인이 대두되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1972년 7월 4일의 남북공동성명의 발표를 하나의 전기로 해서 본격화된 남북대화의 중요한 특징은 이로 말미암아 남북한간에 분단 4반세기만에 처음으로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인사왕래가 실현되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즉, 회담참가인원들의 서울·평양 왕래를 말한다. 1972년 8월 남북적십자사회담의 개막과 더불어 시작된 이 남북왕래에 참가한 인원은 남북적십자사회담의 경우가 한쪽에서 대표 7명, 자문위원 7명, 수행원 20명, 보도진 20명 등 도합 54명(제4차 회담때부터 보도진 5명의 증가로 59명)이었으며 남북조절위원회의 경우가 한 쪽에서 조절위원 5명, 수행원 10명, 보도진 10명 등 도합 25명이었다. 이들의 왕래로 말미암아 남북한은 6·25동란 이후로는 처음으로 상대측 지역에 가서 비록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기는 하지만 상대측 지역의 발전상은 어떠한가 생활상은 어떠한가를 직접 관찰하고 자기측 지역의 형편과 비교해 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문제는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남북왕래가 남북대화 중단의 직접동기가 된 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왕래의 과정에서 북한은 뼈 아픈 진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북한은 대한민국에 비해 격세의 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낙후되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대한민국은 1960년대초에 시작된 1·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성공적인 수행과 제3차 5개년계획의 호조로 전세계가 경탄한 지속적인 고도성장 속에서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다.

반면 북한은 휴전성립후 공산독재체제에 의해 주민들로부터 노동집약적인 형태의 노력을 강제 동원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전후복구를 했지만 북한체제 특유의 폐쇄성과 국제협력체제의 결여로 인하여 급속도로 발전하는 새로운 산업기술지식을 도입하는데 실패하여 산업구조가 전근대적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만 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북한이 고수해 온 무력적화정책에 의거하여 그나마 산업의 중점을 군수산업 및 군수산업과 관련된 중공업에 일변도로 부여하는 경제정책을 추구해 왔으며 그러한 결과로 주민들의 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일반소비경제는 전무에 가까운 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지역의 주민들은 그들이 살고 있는 북한판 사회주의 체제가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행복한 사회』인줄로 믿고 있다. 왜냐하면 1945년의 해방과 한반도의 분단 이후 북한지역에 사상 유례없는 암흑의 폐쇄체제를 구축해 놓은 북한공산정권은 마치 경마장의 눈을 가린 경주마와 같이 주위로부터 차단된 주민들에게 북한관 사회주의체제의 「절대적 우월성」을 광적으로 신앙하도록 철저한 세뇌교육을 실시해 왔기 때문이다. 북한지역 주민들은 또한 대한민국은 『불과 5백명내외의 지주, 매관자본가, 반동관료들이 지배하는 미제국주의와 일본군국주의의 신판식민지』이며 따라서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기아와 빈곤과 실업에 허덕이고 있다』(1973년 12월 김일성 방송대학강좌에서)고 배우고 있다. 이것이 북한의 유명한 사상교육 내용이며 김일성 우상화<sup>13)</sup> 정책의 논거인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그러한 선전이 전혀 진실이 아니라는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남북간 왕래가 이루어지면서 그러한 북한의 선전내용이 전혀 진실과는 상관이 없는 새빨간 거짓이라는 것은 대화에 참가하여 서울을 방문한 북한측인원들의 눈으로 확인되었다. 대한민국에서 평양을 방문했던 인사들이 목격한 북한의 어둡고 무기력하며 전근대적인 주민들의 생활상과 그들의 이질화된 생활방식과 사고방식, 가치체계, 역사관, 그리고 언어가 풍기는 거의 이민족적인 분위기는 실로 충격적이었다. 반면 서울을 방문한 북한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된 경제발전상, 발달하고도 활기에 찬 시민생활, 그리고 문물의 변화함을 보고 정반대의

---

13) 북한에서 그동안 진행되었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김일성우상화, 즉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의 내용은 자유세계에 사는 사람들을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광적이고 무신적이며 기만적이다. 이를 보다 실감있게 이해하기 위해 「조선로동당 정치이론기관지」 「로동자」 제4호(1974년 4월호)에 실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예와 행복」의 한 대목을 원문 그대로 다음에 소개한다. 이같은 대목은 북한의 보도매체와 모든 간행물에 매일같이 되풀이 되는 것으로 북한주민들은 이것을 암송해야 하고 「신앙」해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 살며 혁명하는 우리 인민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행복한 인민이다.

우리의 전체당원과 근로자들은 이 영광, 이 행복을 더욱 가슴깊이 간직하고 무궁토록 빛내기 위하여 위대한 수령님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높이 높이 모시고 해와 달이 다하도록 수령님께 영원히 충성을 다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 모든 것을 다 받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은 수령님의 혁명전사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더없는 영광이며, 최고의 행복이며 가장 신성한 의무이다.

우리는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견결히 옹호 보위하며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받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친위대·결사대가 되어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들은 이리하여 어버이 수령님의 주위에 더욱 철통같이 결속하여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싸워 나가는 충성의 혁명대열에 튼튼히 서야 된다.』

뜻에서 보다 큰 충격을 받았다.

대한민국에서의 이러한 견문결과<sup>14)</sup>가 북한지역 주민들 사이에 전파되는 경우를 상정할 때 그 결과는 북한의 체제안보에 치명적이었다. 왜냐 하면 그것은 김일성 우상화 정책의 이론적 근거를 송두리 채 파괴해 버릴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대화의 가치를 다시 음미하게 되었다. 1972년 가을에 이루어진 몇 차례의 남북왕래결과를 토대로 대화의 가치를 재음미한 끝에 북한공산정권은 대화의 계속은 북한체제에 대한 심각한 위협신호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남북대화가 계속되어 원칙토의의 단계를 지나 사업실시의 단계로 이행된다면 남북관계는 북한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일단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기정사실화하게 되리라는 것을 북한도 인식하게 되었다. 남북한의 평화공존은 어차피 남북한이 가지고 있는 두 이질체제중 과연 어느 체제가 보다 나은 체제인가를 가리기 위한 평화적 체제경쟁을 유발하리라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그런데 북한은 이 체제경쟁에 대한 자신을 잃었다. 결국 북한은 남북대화를 사업실시 단계로 이행시킬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1973년초부터 대화의 진전을 억제하고 교착시키기 시작했다. 남북대화는 두갈래 모두 형태만 유지되는 양상을 띠어가기 시작했다. 1973년초부터 북한은 1972년 한해동안 자제했던 무장간첩의 남파를 재개했고 한동안 「불륜」을 낮췄던 대남방송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태도는 급격하게 대화공정으로부터 대화부정쪽으로 선회하기 시작한 것이다.

---

14)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에 따라 1972년 가을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시작되고 남북조절위원회가 발족됨으로써 이루어진 회담참가인원의 남북한 왕래에는 하나의 원칙이 있었다. 그것은 서울과 평양의 그 어느 한 곳에서 회담이 열리는 기간중 그곳을 방문한 대표단인원들은 미리 합의된 회의일정을 제외한 기타 일정은 주최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는 것이다. 합의된 이 원칙에 의거해서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회담참가인원들은 상대측지역에 가있는 동안 적어도 주최측이 보여주는 곳만은 볼 수가 있었다.

회담기간중 서울을 방문한 북한측 회담참가인원들은 경부고속도로를 달리고 아산의 현충사, 수원의 선경합섬, 서울의 창경원·비원과 중앙일보사 및 동양방송을 돌아 보았으며 신세계·「코스모스」등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다. 이들은 서울시내와 교외를 차중관광했고 「위커·힐」 「칼」 「도꾸」 세종, 조선, 「타워」 등 서울의 호화 「호텔」과 삼청각 등 고급요식점을 섭렵하며 산해진미를 맛보기도 했다.

북한은 평양을 방문한 대한민국측 회담참가인원들에게 평양의 「혁명기념박물관」 「만경대」 「대성산동물원」 「노동신문」 「평양극장」 「평양여관」 「보통강여관」 「담공장(양계장)」을 보여주고 일부 평양시내를 차중관광시켜 주었으며 외인전용상점인 「대동강상점」에서 「쇼핑」을 허용했다.

그러나 1973년에 들어와서는 북한은 서울을 방문하는 북한측 회담참가인원들의 관광 등 회담이외 행사참가를 금지하여 이들은 서울에 체류하는 동안 숙소인 「타워·호텔」 밖으로 나가는 것을 일체 거절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대화의 중단을 결단하게 만든 결정적인 계기는 1973년 6월에 왔다. 대한민국이 발표한 6. 23선언이 그것이다.

6. 23선언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에게 두 개의 조건을 수락할 것을 요구했다. 그 하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남북관계의 기본전제로서 우선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북한이 동의하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명백한 전망이 설 때까지 하나의 과도적 잠정조치로 남북한간에 서로 간섭하지 않고 침략을 하지 않는 평화공존 관계를 확보하자는 것이다. 또 하나는 북한이 그동안 강탈적인 적화통일정책의 한 수단으로 추진해 온 소위 「남조선혁명」, 즉 대남 폭력혁명 기도를 명실검전하게 포기하라는 것이다.

6. 23선언의 기본정신을 형성하는 이 두가지의 요구는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와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들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수락할 수 없는 요구들이었다. 왜냐하면 북한은 남북한간의 평화공존은 이미 북한쪽에 불리한 두 체제간의 우열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평화공존 속에서 예상되는 평화적 체제경쟁은 북한체제의 존립자체를 위협할 것이라고 해석했으며 소위 「남조선혁명」기도의 포기는 상대적으로 대한민국의 정치적 사회적 안정에 기여할 뿐 아니라 비합법적인 방법에 의한 적화통일의 기회마저 말살하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또한 소위 「남조선혁명」의 포기와 평화공존의 수락은 김일성 우상화 정책의 명분을 없애는 것이기도 했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러한 고민 때문에 6. 23선언을 수락할 수도 없었고 또 국제사회가 이를 공인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다. 현 시점에서 북한의 입장은 한반도의 평화가 안정되어서도 안 되었고 또 대남 폭력혁명의 추구를 포기할 수도 없었다. 북한의 안목에서 볼 때 남북한의 개별동시 UN가입이 이루어지면 이것은 남북한의 평화공존관계가 국제정치사회에서 제도화되는 것을 의미했다.

결국 북한은 6. 23선언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또 6. 23선언에 대한 반대를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북한은 남북관계를 계획적, 의도적으로 악화시키기 시작했다.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고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논리상 남북대화를 희생시키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북한은 6. 23선언의 발표와 더불어 대화의 일방적 중단을 결심하고 1973년 8월 28일을 기해 이를 결행한 것이다.

### 3. 대화의 현상

- 대화이전으로 후퇴하는 남북관계 -

#### 가. 군사적 긴장의 격화

7·4남북공동성명발표 2주년을 맞이한 남북관계의 현실은 2년전의 부풀었던 기대와 희망과는 대조적으로 암울하다. 남북대화의 중단이후 전반적인 남북관계는 실제로 7·4남북공동성명 발표이전의 상태로 환원되고 있으며 또 김일성을 비롯, 김일, 김영주, 박성철 등 북한공산정권의 수뇌들은 작금 입을 모아 그렇게 공언하고 있다.

오늘날의 남북관계에 있어서 세심한 관찰과 경계를 요하는 사실은 북한의 대화부정태도가 나날이 심화되어 최근에는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등 남북간의 기존합의문건을 사실상 백지화시켜 대화의 바탕을 파괴하는 한편 모든 행태면에서 대남 폭력혁명 노선과 무력 적화통일 노선을 병진시키는 대남 침략정책을 나날이 격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우선 한반도의 긴장은 1973년초 재개된 후 격화일로를 걸어온 북한의 대남군사도발<sup>15)</sup>로 날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다.

1973년초부터 무장간첩의 남파를 재개한 북한은 1973년 10월에는 휴전협정에 의거, 과거 20년

---

15) 7·4남북공동성명발표를 전후해서 1972년 한햇동안 대한민국에 대한 군사도발과 무장간첩 남파를 자제했던 북한은 1973년 3월 4일 제주도부근의 한 도서에 무장간첩의 침투를 기도한데 이어 다음과 같이 군사도발을 격화시켰다.

- 1973. 3. 4 제주도 동방우도에 무장간첩 3명출현(도주)
- 1973. 3. 7 중부전선 비무장지대 UN군지역에서 작업중이던 한국군장병 3명 북한군 총격으로 사상
  - 4. 17 연천 서북방에서 무장공비 2명이 군사분계선 월경침투를 기도하다가 사살됨
  - 5. 5 전남 완도동방 금당도에 무장공비 2명 상륙(1명사살, 1명도주)
  - 10. 북한, 서해의 5개연안도서 주변수역에 대한 영해권을 주장하고 동수역내 해군력의 증강에 의해 군사적 긴장조성.
- 1974. 2. 15 서해 백령도서방 30「마일」 공해상에서 북한포함이 한국어선을 공격하여 1척을 격침하고 1척을 납치.
  - 2. 16 경남 통영해안에 무장공비 상륙침투
  - 3. 24 경북 영덕해안에 무장공비 상륙침투
  - 5. 20 제주도 북서방 30「마일」 추자도에 무장공비 3명출현(1명사살, 2명도주)
  - 6. 28 동해 군사분계선 연장선부근 공해상에서 어로경비중이던 경찰경비정 863호가 북한포함 3척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침몰.
  - 6. 29 부산 앞바다에 출현한 북한간첩선을 해군이 격침

동안 대한민국이 영유해 온 서해의 5개도서의 주변수역에 대한 영유권 분쟁을 일으켜 그 지역에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켰으며 1974년에 들어 와서는 2월 15일 서해의 공해상에서 어로중인 대한민국의 어선을 공격, 1척은 격침, 1척은 납치하고 다시 6월 28일에는 관문점에서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회의가 열리고 있는 시각에 동해의 공해상에서 어로경비중의 대한민국 경찰 경비정 1척을 공격, 격침시켰다. 북한은 이들 어선과 경찰경비정이 북한에 대해 「군사적인 도발」을 감행했다고 강변하면서 적반하장으로 피해자인 대한민국이 『전쟁을 도발하고 있다』고 대대적인 선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북한에 의한 한반도 긴장의 격화는 또한 특히 1973년부터 노골화되고 있는 공격무기의 대대적 증강과 휴전선 일대의 공격전력 증강, 그리고 기습공격 능력의 강화와 특수전 훈련의 강화<sup>16)</sup>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각한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1973년초부터는 대한민국에 대한 대남방송능력을 크게 강화하고 또 이른바 「통일혁명당의 목소리」라는 유명방송을 운영하면서 대한민국내에서의 소위 「남조선혁명」을 위한 군중봉기를 공공연히 선동하고 있다.

---

16) 서종철 국방부장관은 1974년 6월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특히 1973년초부터 『잠수함, 구축함, 어뢰정, 「미사일」 함정 등을 계속 도입하고, 수개의 보병여단을 사단으로 승격시키고 수개의 특수경보병여단을 신설하며, 서해 함대사령부를 신설하는 등』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증강시키고 있다고 밝혔다.

서장관은 1973년 하반기에 북한은 『노농적위대와 도하부대를 포함한 지상군의 대규모훈련을 실시하고, 「프로그」 5 지대지 유도탄을 관문점 근방으로 전진 배치했으며 간이비행장이었던 곡산과 해주 등의 비행장을 전투용비행장으로 확장시설함으로써 작전용 공군기지를 전방으로 전진 전개시켰다』고 말했다.

그밖에 서장관이 밝힌 최근 북한의 군사능력 증강현황은 다음과 같다.

- 육군은 24개보병사단과 4개여단 및 지원부대 등 48만명의 병력과 「프로그」 지대지 유도탄을 비롯한 야포·대공포 15,000문(1974년 2월 9일 문화공보부의 발표는 북한이 50개소의 SAM-2지대공 유도탄기지, 6개소의 「샘레트」 지대함 유도탄기지를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과 1,100여대의 「탱크」를 보유하고 있다.
- 공군은 「미그」 21과 공중침투용 AN21 백대 등 약 850대의 작전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대피시설을 갖춘 비행장을 건설하여 선제공격을 위한 행동반경을 넓히고 있다.
- 해군은 동서해에 400여척의 함정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6척의 잠수함을 비롯 18척의 OSA 및 KOMAR급 유도탄적재 고속정을 보유하고 있다.
- 이 밖에 정규군에 준하는 26만명의 교도대와 126만명의 노농적위대, 70만명의 「붉은청년근위대」를 갖고 있다.
- ※ 서장관은 북한이 가지고 있는 이들 군사장비중 90대의 「미그」 전투기와 공중침투용 항공기 AN21백대 및 70여대에 이르는 수륙양용 도하주정 등이 1973년이래 북한에 반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 나. 대화기조의 파괴

북한은 1973년 8월 28일의 대화 중단선언으로 남북간 2대 합의문건의 하나인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백지화시켰다. 남북조절위원회 평양측위원장 김영주의 이름으로 발표된 문제의 「8.28성명」은 동합의서의 모든 조항들을 깡그리 위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동합의서를 실질적으로 사문화시켰다.(주8참조)

북한은 또한 7·4남북공동성명도 그 1항의 「통일3원칙」만을 독단적으로 왜곡·변질시켜 일방적인 선전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2항에서 6항까지의 합의사항들은 전면적으로 무시·묵살함으로써 역사적인 동 공동성명의 효력도 사실상 전면적으로 마비시켜 놓고 있다. 북한은 작금도 그들의 선전적 위장평화 공세의 선전자료로 7·4남북공동성명을 항상 거론하고 있지만 언제나 제1항의 「통일3원칙」만 가지고 요란스럽게 떠들 뿐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다.

## 다. UN 「합의성명」의 무시—UN에 대한 새로운 도전

1973년 가을 제28차 UN총회는 정치위원회가 성안한 한국문제에 관한 「합의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제28차 UN총회에는 북한측의 입장을 지지하는 「알제리아」를 비롯한 공산권과 일부 중립국가들에 의해 제안된 결의안과 미국·영국·「오스트레일리아」를 포함하여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국가들에 의하여 제안된 결의안 등 두 개의 한국 문제에 관한 결의안이 나와 있었다.

그러나 UN의 절대다수 회원국들은 한반도문제의 당사자간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가 이미 시작되어 있는 만큼 한반도문제를 가지고 UN에서 「표의 대결」이 빚어지는 사태를 회피할 것을 바라는 대한민국의 희망을 받아 들여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된 북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합의성명을 합의·채택한 것이다.

UN총회 합의성명은 7·4남북공동성명의 발표에 만족을 표명하고 남북한 양 당사자에 대해 대화를 계속하고 7·4남북공동성명의 원칙에 입각한 자주·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해 다방면적인 교류와 협력의 실시를 촉구하며 UNCURK의 해체를 결의한 내용이었다.

그러나 기괴하게도 제28차 UN총회 이후 북한은 UN총회의 합의성명내용을 멋대로 변질시킴으로써 다시 한번 UN의 권위와 권능을 무시하고 있다.

북한의 김일성은 1974년 1월 1일의 신년사, 3월 5일 북한을 방문한 「부메디엔」, 「알제리아」 국가평의회회장에 대한 환영연설, 3월 13일 「유고슬라비아」 기자와의 회견, 4월 5일 「이탈리아」 공산당기관지와의 회견등에서 UN총회 합의성명에 언급하고 있으며 북한노동당기관지 노동신문도 몇 차례 사설에서 동합의성명에 언급하고 있다.

그러나 주목되는 사실은 단 한번의 예외도 없이 북한은 동 합의성명중 · 항만을 북한의 「위대한 승리」로 각색해서 전하고 항의 「대화계속」과 「다방면적 교류와 협력의 실시」를 촉구한 대목은 완전히 묵살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결국 북한 공산정권이 대화의 계속에는 아무런 관심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또 하나의 증거인 것이다.

#### 4. 제29차 UN총회와 한국문제

작금 북한의 내외동향을 보면 북한은 금년 제29차 UN총회에서도 한국문제의 상정·토의를 주장할 것이 거의 확실한 전망인 듯 하다. 북한이 이번 UN총회에서 제기하려는 문제는 주한 UN군의 해체문제이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UN총회에 기대하는 것은 한반도정세의 정확한 현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건전한 판단이다. 그것은 한반도 문제에 관하여 UN총회가 어떠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면 그 조치는 반드시 한반도에 지금 존재하는 대단히 불안정한 평화를 그나마 깨뜨리는 것이 아니라 안정된 평화를 증진하는데 기여가 되는 것이라야 한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재통일에 기여하려는 어떠한 노력도 그것은 한반도의 남북간에 안정된 평화를 정착시키려는 노력에 의해 선도되어야만 한다. 평화가 부정되고 폭력이 조장되는 가운데 「평화통일」이 운위된다면 그것은 하나의 억지이며 궤변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가 정착하려면 우선 남북한 쌍방에 의해 전쟁(모든 비정규전을 포함하여)이 부정되고 두 이질적인 체제간에 평화공존관계가 확보되며 평화 속에서 끈질긴 화해와 동화의 과정이 참을성 있게 반복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필수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것, 그것은 남북한의 두 당사자가 이미 시작한 대화를 끊지 말고 참을성 있게 계속해 나가는 것이다. 그 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

따라서 우리가 UN총회에 바라는 것은 남북한의 두 당사자에게 이 대화의 계속을 계속해서 촉구해 주는 것이다. 또 대화를 기피하는 어느 일방이 있다면 그 일방이 생각을 바꾸어 대화에 다시 응하도록 충고를 해 주는 일이다.

한국문제와 관련해서 하나의 「아이로니」는 북한에 의해서 한반도에서의 UN의 노력, 즉 주한 UN군의 존재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군』으로 소개되고 또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항시적 요인』이라고 그릇되게 묘사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사실은 그와는 정반대로 주한 UN군은 침략을 격퇴하기 위해 조직된 UN의 군대이며 지금은 아직도 완전한 평화가 아니라 불안한 휴전체제하에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견지하고 있는 무력 적화통일 기도에 대치하여 한반도평화의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전쟁억지력 이외의 아무 것도 아닌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한 UN군 문제는 한반도 평화에 직결돼 있는 것이며 따라서 주한 UN군 문제에 대한 어떠한 재검토도 그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보장조치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민국이 희망하는 대로 남북한이 다같이 UN에 가입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그것은 결코 북한이 궤변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분열」을 영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 오는 것이 아니다. 그와는 반대로 남북한의 동시 UN가입은 UN헌장의 테두리안에서, 또 UN이라는 범세계적 국제사회의 공인에 의해서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관계가 제도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며 그렇게 되면 남북한간에는 무력과 폭력이 부정되는 참된 평화속에서 적대감을 씻고 화해와 동화의 과정에 오르기 위한 출발점이 거기서 마련되게 될 것이다.

### 제3부 부 록

#### 1. 6·23 선언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

친애하는 5천만 동포여러분!

나는 오늘 우리가 그동안 추진해 온 남북대화의 경험과 국제정세의 추이에 비추어 민족의 숙원인 조국통일의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우리는 해방이 되었으나 우리의 의사에 반하여 국토는 양단되고 민족은 분열되었습니다.

당초 일본군의 항복을 받기 위한 군사적 경계선이라고 하던 38선이 그 후 철의 장막으로 변하고, 남과 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걸쳐서 완전히 차단되어 버렸습니다.

그동안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어 38선의 해소와 통일민주정부 수립을 위한 교섭이 있었으나, 미소간의 근본적 대립으로 실패에 돌아가고 결국 한국문제는 국제연합에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1947년 제2차 국제연합총회는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고, 이를 위해 임시한국위원단을 파견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거부로 남한에서만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고 국제연합에 의하여 유일한 합법정부로 승인받게 된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공산군의 불의의 침략으로 인한 한국동란으로 무수한 동포가 생명을 잃고 전 국토는 초토화 되었으며, 3년간의 전란 끝에 휴전은 성립되었으나 분단은 계속되고 통일은 요원해졌습니다.

나는 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동족의 고통을 덜고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1970년 「8·15선언」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를 촉구하였습니다. 그 다음 해 8월 12일 우리측은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으며, 작년 7월 4일에는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리하여 남북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근 2년이 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성과는 우리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용이하고 실천 가능한 문제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하고, 구체적인 실적을 통해서 상호간의 불신을 신뢰로 대체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불신요소를 남겨 둔 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군사 및 정치문제의 일괄 선결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측은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진행중 밖으로는 사실상 조국의 분단을 고정화 시키는 행동을 계속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상으로 보아 우리가 기대하는 바 남북대화의 결실을 얻기까지에는 앞으로 많은 난관이 예견되며, 상당히 긴 시일이 소요되리라고 판단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상태가 그대로 방치된다면 결과적으로 불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도 우려되는 바입니다.

한편 최근의 국제정세는 제2차 세계대전 후의 냉전시대가 끝나고 현상유지를 기조로 하는 열강들의 세력균형으로 평화공존을 유지하려는 것이 그 주된 조류라 하겠습니다.

또한 그간 이 지역에 있어서의 일련의 주변정세의 발전으로 미루어 보아서도 국토통일이 단시일내에 성취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국제정세는 우리 민족사에 있어서 하나의 커다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즉 조국통일이라는 민족지상의 염원과 목표를 국제정세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추구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친애하는 5천만 동포 여러분!

우리는 객관적 현실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조국통일을 국내외의 현실 속에서 실현하는 현명하고도 확고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를 강인하게 추구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곧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킴으로써 그 바탕위에서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통일을 기필코 이룩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말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



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련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나는 이상에서 밝힌 정책 중 대북한 관계사항은 통일이 성취될 때까지 과도적 기간중의 잠정조치로서 이는 결코 우리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여 둔다.

친애하는 남북동포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오늘의 내외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이 길만이 긴장완화의 국제조류 속에서 민족의 위신과 긍지를 유지하면서 조국의 평화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는 지름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슬기롭고 용감한 민족 앞에는 결코 실망이나 좌절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희망찬 용기와 슬기로 한반도의 평화, 겨레의 번영, 그리고 조국통일을 위해 힘차게 매진합시다.

1973년 6월 23일

대통령 박정희

## 2. 6·23선언 1주년에 즈음한 대통령 담화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나는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 1주년에 즈음하여 지난 1년 동안의 한반도 정세추이를 살피고, 아울러 평화의 기반위에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정책을 다시 한 번 천명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곧 국내외의 현실을 직시하고 평화를 이 땅 위에 정착시킴으로써 우리의 자주역량으로 조국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그 여건을 사실적으로 개선하자는 것입니다.

나는 이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에서 한반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되고, 또한 성실과 인내로써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한 노력을 계속함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경주하자는 것을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제하에서라면 북한이 국제기구와 국제연합에 우리와 같이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며, 호혜 평등의 원칙하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나라를 포함한 모든 국가에 대하여 문호를 개방할 것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나는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 선린에 그 기본을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 나갈 것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돌이켜보건대 1947년 제2차 국제연합 총회가 남북한을 통한 자유로운 총선거의 실시를 결의하였을 때 우리 한민족에게는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조국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나, 이 기회는 북한의 거부로 일실되고 말았습니다.

더우기 1950년 북한공산주의자들의 6·25남침으로 남북한간의 불신은 더욱 깊어졌고 분단의 장벽은 보다 높아졌던 것입니다.

1953년 휴전 후로도 그들은 한반도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1·21 청와대 습격기도사건, 미합정 「푸에블로」호 납치사건, 울진·삼척 무장공비 대량침투사건, 대한항공 여객기 납북사건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각종 대남 무력도발행위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남북간의 긴장은 격화되고 전쟁재발의 위험은 더욱 높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 위에 또다시 동족상잔의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하여 1970년 광복절에 8·15선언을 발표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이산가족들의 재회를 비롯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하여 남북적십자회담 개최를 제의하였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나는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고 전쟁을 방지하며, 또한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일념에서 비밀리에 평양에 사람까지 보냈으며, 그 결과 1972년 7월 4일에는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고 이로써 남북대화의 길이 트이게 된 것입니다.

이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우리는 용이하고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함으로써 상호신뢰를 쌓아 올리고, 각 방면에 걸친 교류를 통하여 남북간의 장벽을 점차 제거해 나가는 것이 대화를 생산적으로 운영하는 길이며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지름길이라는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북한은 이와 같은 우리의 합리적이고도 현실적인 주장을 반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불신요소를 그대로 남겨둔 채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을 위태롭게 할 터무니없는 주장만을 되풀이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북한측의 억지 주장으로 대화에는 진전이 없었고 오히려 남북관계는 다시 불신의 심화와 긴장의 고조마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감안하고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지향하는 국제조류 속에서 우리의 평화통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반 여건의 실질적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겠다고 판단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작년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선언에서 그 방안을 제시하였던 것입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우리의 이 정의있는 평화선언에 대한 북한측의 반응은 과연 어떠하였습니까?

그들은 바로 같은 날 저녁 소위 「대민족회의」나 「연방제」나 하는 등 상투적이며 비현실적인 정치선전적 주장을 내세우면서 이에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섰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그들은 7·4 공동성명과 이에 따른 남북간의 합의사항을 위배하고 우리에게 대한 중상과 비방을 국내외적으로 재개하여 왔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대외적으로 우리의 정당하고도 현실적인 평화선언을 왜곡선전하는 한편, 이미 대한민국과 국교를 맺고 있는 일부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또한 이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국제기구에 같이 가입하는 데는 급급하면서도 유독 국제연합에 우리와 같이 가입하는 것만은 조국의 분단을 영속화하는 것이라는 모순되고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급기야 북한은 작년 8월 28일 일방적 성명으로써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고 말았으며, 이어 그들은 대남비방을 더욱 극렬화시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인내와 성의를 다하여 작년 11월 중순에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 본회의를 재개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한편 작년도 「유우엔」 총회는 11월 28일에 남북대화를 계속하고 각 분야에 걸친 교류와 협조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한국의 자주적이며 평화적인 통일을 기할 것을 촉구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평화통일정책과 완전히 부합되는 것이며 또한 우리의 6·23 선언이 전세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뚜렷한 증거라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대화가 남북적십자회담 연락대표와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들의 접촉이라는 형식으로나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인내와 성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남북대화의 정상화에는 아무런 성의와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우리의 영토인 서해 5개도서에 대한 새로운 도발행위를 자행하는 한편 기습공격용 신무기를 대량도입하고, 특히 휴전선 인근지역에 해공군 기지를 신설하는 등 전쟁준비에 광분함으로써 한반도의 긴장을 극도로 고조시켰습니다.

이에 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동북아세아의 안전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년 1월 18일 북한측에 대하여 상호 불가침 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측은 또다시 우리의 이 진지한 제의를 외면한 채 우리에게 대한 비방증상의 계속은 물론 무장간첩의 남파침투를 격화시켰습니다.

특히 지난 2월 15일에는 북한포함이 서해공해상에서 평화롭게 어로작업에 종사하고 있던 우리의 어선을 격침 나포하고 무고한 어부들을 살상 납치하는 등 비인도적인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은 공공연히 우리 사회 내부혼란을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전복을 획책함으로써 적화통일의 야욕을 노골화하면서도 대외적으로는 제3자에 대한 평화협정 운운으로 위장평화선전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한 마디로 그들이 대화와 평화적인 방법으로 남북간의 현안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아직도 없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나는 오늘날 우리 조국이 처해 있는 국내외정세를 냉엄히 평가할 때,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이야말로 조국의 통일을 평화적이고 자주적으로 성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길임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무력적화통일전략에서 연유된 모든 부정적이고 도발적인 태도를 버

리지 않고 있는 한 우리의 평화통일 노력이 단시일내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리라고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대전제임을 믿기 때문에 이를 위한 우리의 노력은 잠시도 중단하거나 지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6·23 선언 한돌을 맞이하여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그리고 남북대화의 진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 인내와 성실로써 최대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하면서 북한측이 우리의 평화통일정책을 받아들일 것을 거듭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이 하루 속히 무력과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노선을 버리고 7·4 공동성명정신으로 돌아와 남북적십자회담과 남북조절위원회를 정상화하고 상호교류와 협력을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즉각 응해 올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둘째로, 나는 북한측이 군사적 도발을 비롯한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내정간섭과 적대적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지체없이 남북간의 불가침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 응해 올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로, 나는 3천3백만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이 마땅히 「유우엔」에 가입하여 국제평화의 유지 강화와 국제협력의 증진에 적극 기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와 동시에 1천4백만 인구의 북한도 우리와 같이 「유우엔」에 가입하는 것을 원한다면 우리는 이에 반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는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문호개방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모든 평화애호국가들이 이에 적극 호응함으로써 우리와 더불어 이 지역의 안전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우리의 정책이 반드시 결실할 것을 굳게 믿고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슬기와 용기로써 힘차게 전진합시다.

1974년 6월 23일

대통령 박정희

# 남북대화 제6호

(1974. 7. ~ 1974. 10)

# < 목 차 >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7개항목 .....	3
제1부 북한의 새 만행 .....	4
1. 8·15 저격사건 - 그 전모 .....	4
2. 거듭되는 폭력도발-요인암살음모 .....	6
<자료> : 장기영 부위원장의 회의발언 .....	9
제2부 박대통령의 광복절 제29주년 경축사 .....	17
제3부 남북조절위원회 제8차 부위원장 회의 .....	24
서울측, 위원회 운영의 즉각 정상화 요구 .....	24
<자료> : 장기영 부위원장의 회의발언 .....	25
제4부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	32
한적, 본회담 속개일자를 거듭 제의 .....	32

###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 7개항목

1.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2.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하지 말아야 한다.
3.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4.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5.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 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제총회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6.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7.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선린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 제1부 북한의 새 만행

### - 대통령 암살음모 -

#### 1. 8·15 저격사건 - 그 전모

1974년 8월 15일, 이날은 한민족이 36년간의 일제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감격의 날로부터 29주년이 되는 날이며 38도선 이북의 지역을 강점한 공산주의자들의 국토분단책동으로 말미암아 미처 통일을 이룩하지 못한채 대한민국이 창건되어 독립을 선포한 날로부터 26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이 날 오전 10시, 정부는 서울 시내 장충동의 국립극장에서 광복절 제29주년 경축식을 거행했다. 이 날 경축식장에는 박정희대통령이 영부인 육영수여사와 함께 참석하여 「라디오」 「텔레비전」으로 전국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경축사를 하고 있었다.

오전 10시 23분, 국립극장 1층 후미좌석으로부터 정체불명의 괴한이 뛰어 나와 무대쪽으로 달려 나가면서 연설도중의 박대통령을 향해 권총을 난사했다. 장내는 순식간에 수라장이 되었다. 권총을 연속 발사하며 앞으로 내어 단던 저격범은 좌석 맨 앞줄 가까이까지 나왔을 때 근처의 식에 참가했던 인사들과 달려 든 경비경찰에 의해 산채로 체포되었다. 불과 22초동안 계속된 실로 악몽과 같았던 순간이었다.

저격범이 발사한 4개의 탄환은 다행히도 모두 박대통령을 빗겨나갔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가운데 1발은 청초한 모습으로 단상을 화려하게 해주고 있던 박대통령 영부인에게 적중, 치명적인 두부관통상을 입히고 말았다.

악몽의 순간이 경과한 뒤 박대통령은 오히려 장내를 진정시키며 도중에 잠시 중단되었던 경축사를 계속했다.

그러나 사건현장으로부터 급거 서울대학부속병원으로 옮겨진 대통령영부인은 4시간여에 걸친 대수술에도 불구하고 오후 7시 끝내 유명한 길을 달리 하여 온 국민의 애도 속에 고인이 되고 말았다.

국토분단이 결과한 겨레의 비극은 다른 날도 아닌 민족해방의 날을 골라 또 다시 고귀한 피의 희생을 요구하고 만 것이다.

범행현장에서 산채로 체포된 저격범은 일본외무성이 「길정행웅(吉井行雄)」라는 이름의 일본인 앞으로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었다. 여권의 사진란에는 범인 자신의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다. 범인은 일본인의 신분으로 이 날 광복절 경축식장에 입장한 것이다.

그러나 이 날 오후부터 범인심문에 착수한 검찰의 저격사건특별조사본부는 실로 어마어마한 사건의 전모를 캐어내기 시작했다.

우선 범인의 정체가 밝혀 졌다. 범인은 일본인이 아니라 본명이 문세광인 재일교포 2세(23세. 일본명 남조세광(南條世光))였다. 범인은 일본 대판(大阪)에서 태어나 그곳에서 자랐으며 고등학교 2학년때 스스로 학교를 뛰쳐 나와 노무자·「카바레보이」·금속연마공· 빌딩의 유리닦기등 막노동으로 하루생활을 영위하던 자였다. 그는 태어나서 성장하는 동안에 한번도 모국땅을 밟아 보지 못했으며 금년 8월 6일 그로부터 아흐레 뒤에 모국의 대통령을 저격·암살하려는 은밀한 임무를 가지고 김포공항을 통해 처음으로 모국땅에 발을 디딘 것이다.

일본인 이름으로 일본외무성에 의해 발급된 범인 문의 여권은 범인 문과 특수한 관계를 지니고 있는 대판(大阪)거주 극좌파 일본인 「길정행웅(吉井行雄)」(24세)와 「길정미희자(吉井美喜子)」(23세)부부와의 공모아래 그들의 협력을 얻어 위조한 것이었음이 밝혀 졌다.

저격범이 범행에 사용한 무기의 출처 또한 밝혀 졌다. 동권총은 금년 7월 18일 새벽 「일본대판부경 남서 고진과출소」에서 도난 당한 2정의 권총 가운데 1정 (미제 스미스·앤드·웨슨 38구경)임이 밝혀진 것이다.

8·15대통령저격사건의 전모는 북한당국이 대한민국내에서 소위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의 폭력혁명을 촉발하기 위한 이른바 기폭제로서 장기간에 걸쳐 계획하고 준비하여 거사에 옮긴 사건임이 드러났다.

범인 문의 진술과 조사당국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북한당국은 조총련을 통하여 이미 1972년 9월에 문을 범행하수인으로 선정·포섭하여 박대통령저격모의에 착수했다.

북한당국은 1973년 11월초 범인 문에게 1974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에서 박대통령저격을 결행하라고 지령하고 범행용 무기구입자금으로 일화 50만 「엔」을 주었으나 범인이 무기구득에 실패함에 따라 거사는 불발이 되고 말았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금년 5월 4일밤 문을 대판(大阪)항에 정박한 북한의 대일 「무역선」 만경봉호로 불러 금년 8·15광복절기념식에서 박대통령저격을 감행하라는 지령을 재차 하달했다. 또한 북한당국은 한일관계의 이간이라는 부수효과를 노려 문에게 범행용 무기는 일본경찰의 무기를 절취하여 사용하고 한국입국을 위한 여권은 일본인명의의 여권을 위조하여 사용할 것을 지령했다. 북한당국은 조총련을 통하여 범인에게 범행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일화 80만 「엔」을 추가공급했다.

조총련 대판(大阪) 생야지부(生野支部) 정치부장 김호룡을 연락책으로 하여 이루어진 이러한 지령에 따라 범인 문은 7월 18일 일경 「대판부 남서고진과출소」에 잠입 2정의 권총을 절취했으며 조총련의 조종하에 있는 「길정(吉井)」부부의 협조를 얻어 「길정행웅(吉井行雄)」명의의 여권을 일본외무성으로부터 발급받아 8월 6일 KAL기편으로 서울에 잠입하는데 성공, 8월 15일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드디어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고야 말았다. 범인 문의 위조여권 발급에 자신의 명의를 빌어 주고 협조해 준 「길정행웅(吉井行雄)」는 조총련이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조직한 비밀 「씨클」인 소위 「주체사상연구회」의 한 「멤버」로 조총련의 조종을 받고 있는 자였다.

## 2. 거듭되는 폭력도발-요인암살음모

1945년의 해방과 더불어 국토가 분단된 한반도의 재통일문제에 관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정책 노선은 초지일관 남한지역을 먼저 적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전한반도의 공산화통일을 완성한다는 방식을 오로지 추구해 왔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남한지역 적화정책은 항상 동시에 병행, 추진된 두 가지 형태의 전술적 방법에 의하여 추구되어 왔다. 그것은 무력에 의하여 대한민국을 정복함으로써 남한지역을 적화시키는 군사적 방법과 남한에서 비합법적인 폭력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의 현재 헌정질서를 전복하고 남한지역의 적화를 달성한다는 정치적 방법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1950년 전면전에 의한 대한민국의 군사적 정복을 기도, 6·25전쟁을 일으켰으나 UN군의 참전으로 이 기도는 좌절되었다.

1953년의 정전협정체결이후에도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이른바 4대군사노선(전인민무장화, 전국도요새화, 전군간부화, 군장비현대화)에 입각하여 북한군의 군사력을 끊임없이 증강해 왔으며 휴전선일대와 동서해의 두 바다 그리고 공중에서 끊임없는 군사도발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왔다.

특히 1960년대 이후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월남전 형태의 유격전의 한반도이식을 기도, 대한민국의 후방지역에 유격전거점을 구축하기 위한 특공대의 후방침투시도가 거듭 반복되었다. 1968년 10월 120명의 북한무장특공대가 동해안 삼척, 울진지역의 산악지대에 상륙, 침투를 기도했다가 군경의 토벌작전으로 섬멸된 사건은 그 대표적인 예의 하나이다. 뿐만 아니라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바로 그러한 대한민국 후방지역에서의 유격전 수행을 위한 특수부대로 북한군내에 이른바 「특수 8군단」을 창설하여 훈련시키고 있다. 1968년 1월 21일 휴전선을 잠행, 월경하여 청와대 습격을 기도했던 31명의 북한무장특공대는 바로 이 「특수 8군단」예하의 「124군부대」소속 인원들이었던 것이다.

이와 병행하여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교란하여 사회불안과 위기의식을 조장하고 이것을 폭력적인 대중봉기로 유도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정치질서를 폭력으로 뒤엎으려는 공작을 끊임없이 전개해 왔다.

이른바 「남조선혁명」이라고 일컫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대남폭력혁명노선은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밀파, 밀식한 지하간첩망을 모체로 지하거점을 마련하고 철저한 위장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민들 가운데 사회적인 불평, 불만세력을 동조세력으로 규합하여 이를 폭력혁명으로 조직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대한민국내에서의 이러한 폭력혁명의 기반조성을 촉진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갖가지의 대남폭력도발을 계속해왔다. 그것은 무장간첩과 특공대남파에 의한 각종 시설물 파괴와 양민살상 그리고 요인암살기도 등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폭력도발의 목적은 1차적으로 대한민국사회의 평화와 안정기조를 끊임없이 위협, 파괴하여 사회불안과 위기의식을 조성, 조장하며

나아가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말하는바 소위 「혁명의 기폭제」로서의 효과를 노리는 것이다.

이러한 폭력도발의 일환으로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해 온 대한민국의 요인암살기도는 언제나 거의 예외없이 대통령을 대상으로 삼아 왔다.

1965년부터 남북대화가 시작된 1971년까지의 사이에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시도했던 대통령암살기도는 미연에 조사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만도 다음의 7건에 이르고 있다.

1965년 7월 3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민족보위성(현인민무력부=국방부)특수정찰국(대남공작침투전담부서)소속 북한군대위인 노성준, 이재형, 우명훈 등 3명에게 대통령 승용차 폭파 임무를 부여하여 남파했다. 이들 3명의 암살범은 서울 북방의 송추에서 불심검문을 받자 검문하는 경찰관과 교전 끝에 노는 생포되고 이재형과 우명훈은 북한으로 도주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1967년 4월 대한민국에 대한 특공대공격을 위한 특수부대로 124군부대를 창설하면서 이재형을 대좌(대령)로 진급시켜 부대장에 임명하고, 우명훈은 상좌(중령)로 승진되어 부부대장에 임명되었다. 이 124군부대는 다음해 1월 21일 특공대를 서울로 잠입시켜 청와대습격을 기도하게 된다.

1967년 3월 10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무장간첩 강일수에게 『청와대에 침투하여 권총과 수류탄으로 대통령을 저격, 암살하라』는 임무를 주어 남파했으나 강은 남파후 임무수행을 포기하고 당국에 자수했다.

1968년 1월 21일 북한군 124군부대소속 무장특공대 31명은 청와대폭파와 대통령암살임무를 지니고 휴전선을 뚫고 대한민국지역으로 침투한 뒤 중무장한 채 서울에 잠입하는데 성공, 청와대정문 수백 「야드」까지 접근했으나 경찰과 조우하여 군경토벌대와 교전 끝에 1명의 생존자를 제외하고 전원 사살되었다.

1970년 5월 15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간첩 김병섭에게 『공군조종사를 매수하여 청와대와 주한미대사관을 폭격하라』는 임무를 주어 남파했다.

1970년 6월 22일 박은섭의 2명의 북한무장간첩들은 사흘뒤인 6월 25일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박대통령 및 정부요인들을 폭살할 목적으로 국립묘지 현충문에 원거리조종 발파폭약장치를 가설하다가 가설도중 폭약의 폭발로 박은 현장에서 폭사하고 다른 2명은 도주했다.

1970년 11월 14일 『공군조종사를 매수하여 청와대를 폭격하든가 청와대요리사를 매수하여 대통령을 독살하라』는 임무를 가지고 남파되어 기회를 엿보고 있던 북한간첩 정시일이 체포되었다.

1971년 7월 29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북한노동당연락부소속 정정학에게 『서울운동장 등 행사장소나 「골프」장에서 박대통령을 저격, 암살하라』는 지령을 주어 남파했다.

1971년 가을 남북대화가 시작되면서부터 북한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대남폭력도발은 한동안 잠잠해 지는 기미를 보였다. 1972년 7월 4일 남북한은 서울과 평양에서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으며 이를 통해 남북관계에 있어서 일찌기 무력과 폭력의 행사를 지양하기로 상호약속했다.

그러나 이 약속은 오래가지 않았다. 7·4남북공동성명 발표로부터 채 반년도 못되어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대남무력 및 폭력도발을 재개했으며 해주에 방송국을 둔 이른바 「통일혁명당의 목소리」라는 이름의 대남 지하해적방송을 통해 폭력혁명을 일으켜 대한민국정부를 전복시키라는 폭력선동을 나날이 격화시켜 왔다.

이번의 8·15저격사건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7·4남북공동성명발표 2개월뒤부터 계획과 모의에 착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가를 입증해 주는 것으로 결국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대화와 병행해서 변함없이 대남폭력혁명을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웅변해 주는 하나의 구체적인 사례인 것이다.

<자 료> : 장기영 부위원장의 회의발언

“평양측은 진사하고 관련자 처벌하라. 거듭되는 적색폭력은 민족불행의 화근”

(다음은 1974년 9월 21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제8차 부위원장회의에서 8·15대통령저격사건의 배후 지령자인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폭력주의 노선을 규탄한 발언내용이다.)

우리는 오늘 여덟번째의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를 갖기 위해 이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서 본인의 불쾌한 심경은 실로 말로는 형언하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불과 5주일전에 우리가 당신네 북한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지난 3년동안 계속해 온 대화의 근본의의가 과연 무엇인가를 스스로 물어 보지않을 수 없게 만든 엄청난 불상사를 겪었습니다. 그날의 비통과 분노 그리고 충격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국민과 더불어 본인의 가슴을 매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지역의 당신네 공산주의자들을 상대로 대화를 시작하고 또 그동안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인내와 성실로 대화의 계속을 위해 노력해 온 제1의 목적은 우리의 조국강토로부터 전쟁과 폭력을 추방하는데 있었습니다.

우리가 진정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지향해 나가고자 한다면 그에 앞서 평화의 정착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또 평화의 정착을 위해서는 이 땅에서 전쟁과 폭력의 불씨를 제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긴급합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평화적 남북관계의 정착을 위해 당신네들에게 이른바 「남조선 혁명」이라는 이름의 대남폭력혁명노선을 버릴것을 거듭 거듭 촉구해 왔습니다.

우리는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정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이른바 『주의는 모든 행동을 정당화시킨다』는 폭력노선에 철두철미하게 입각하여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폭력주의자들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폭력을 최고의 행동강령으로 삼아 폭력의 힘으로 북한지역을 강점하고 오로지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의 달성만을 추구해 온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피비린내나는 동족상잔의 참극이었던 6·25전쟁을 일으킨 것을 비롯해서 지난 29년동안 잠시의 틈도 없이 폭력의 마수를 휘둘러 그동안의 우리 민족사를 「페이지」마다 동포의 피로 얼룩지게 만든 장본인들이 것입니다.

무절제한 폭력이 추구되는 상황속에서 평화가 정착될리 만무하며 평화가 정착되지 않는 풍토위에서 평화통일을 운위한다는 것은 한낱 망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평화통일의 대전제로서 귀측에 대해 폭력과 무력의 포기를 거듭 거듭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겨레가 일제의 식민통치로부터 해방된 경사스러운 조국광복의 날인 지난 8월 15일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폭력의 마수는 다른 장소도 아닌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국가와 민

죽의 영도자인 대통령과 영부인을 저격하여 영부인을 시해하는 전세계 인류가 분노를 금치 못할 만행을 끝내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염려하고, 경계하고, 경고해 마지 않았던 이러한 엄청난 불상사가 끝내 발생하고야만 지금, 이곳에 마주 앉은 본인의 심경은 과연 어떠한 것이겠습니까.

우리의 국민감정은 지금 격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남녀와 노소, 직업과 신분의 구별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은 단 하나의 조치입니다. 그것은 이 엄청난 범죄를 계획하고, 모의하고, 지령한 자들을 민족과 역사의 심판대 앞으로 끌어내어 민족과 역사의 이름으로 처단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땅에서 적색폭력을 뿌리뽑아 민족 불행의 화근을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대통령 저격이라는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기에 이른 적색폭력에 대한 단호한 응징을 요구하고 있는 지금의 격앙된 국민감정은 응분의 응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본인이 이렇게 여기에 마주 앉아 있는 것 자체를 용납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가와 민족의 영도자를 저격하여 시해하려는 음모를 계획하고, 모의하고, 지령한 자는 과연 누구입니까.

범행현장에서 체포된 범행하수자는 이 엄청난 음모의 배후지령자가 북한공산당국의 최고당국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금년 5월 4일밤 일본 대판에 정박한 「만경봉호」로 범행하수자를 불러 들여 8·15 대통령저격을 거둬 지령한 중간지령자는 범인에게 이번의 범행은 『김일성 주석이 직접 지시한 혁명과업이니 신념을 가지고, 생명을 걸고, 성공시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번 범행의 하수자로 고용된 범인 문세광은 5월 4일 밤 그가 대판항 부두에 정박중인 「만경봉호」에 승선했던 경위와 「만경봉호」의 선내식당에서 범행지령을 받은 경위를 소상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기억, 진술하고 있습니다. 범인 문은 당시 「만경봉호」 선내식당의 구조와 상황 그리고 그에게 지령을 준자의 인상착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며 오고 간 대화의 내용을 명확하게 공술하고 있습니다.

범인의 진술과 아울러 그 동안의 사건조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번의 범행은 북한당국의 치밀한 계획에 의하여 무려 2년여의 시간을 두고 모의되고, 조직되고, 훈련되고, 감행된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북한의 공산당국은 가공스럽게도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 발표로부터 불과 두달뒤인 9월 초부터 이미 이번 범행의 준비에 착수, 재일조총련조직을 통해 범인 문을 범행의 하수자로 선택하고 그에 대한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돌이켜 보면 7·4남북공동성명발표 하루 전인 7월 3일 북한공산당국은 이른바 『남조선 혁명과 조국통일의 호상관계에 관하여』라는 소위 정책해설을 통해 『조국통일의 전제조건은 남조선 혁명의 수행』이라고 단정하고 『남조선혁명을 수행하는데 평화적 방도란 있을 수 없으며 오직 유일하게 폭력적 방법밖에는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한바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음날 발표되는 남북공동성명의 평화통일 원칙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폭력에 의한 적화통일노선을 추구하겠다는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겉다르고 속다른 검은 속셈을 분명히 해준 산 증거였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북한공산당국은 7·4남북공동성명 발표후 두달도 못되어 대화상대방의 국가원수에 대한 암살음모라는 끔찍한 폭력의 칼날을 갈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그로부터 무려 2년에 달하는 장기간에 걸친 훈련을 통해 범인 문을 민족양심이나 조국과 겨레에 대한 사랑은 아랑곳 없이 오로지 적색 「테러리즘」만을 맹신하는 흉악한 살인마로 키워냈습니다.

당신네들 공산주의자들은 그동안 범인 문에게 범행준비용 승용차의 구입, 범행홍기입수를 위한 「홍콩」 여행, 사상훈련과 범행준비를 위한 위장병원 입원, 그리고 범행을 위한 불법적인 한국입국등에 소요된 일체의 자금을 제공했습니다.

당신네들 공산주의자들은 한일양국의 국민감정을 이간시키고 선린우호관계를 파괴하려는 흉계 아래 일본경찰의 무기를 계획적으로 절취하고 일본인 명의의 여권을 조작하여 범인 문으로 하여금 범행에 사용하게 하는 간특한 국제적 음모를 꾸몄습니다.

당신네들 공산주의자들은 당신네들이 오로지 제일동포사회를 이간, 분열시켜 해외동포들마저 민족분열의 참혹한 고통을 겪게 할 목적으로 일본땅에 심어놓은 이른바 조총련으로 하여금 국가원수 시해음모라는 끔찍한 범행을 주도하도록 지령함으로써 반민족적 범죄단체인 조총련의 정체를 다시 한번 만천하에 분명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범인 문의 진술에 의하면 조총련의 괴수인 한덕수는 1973년과 1974년 이태에 걸쳐 정초에는 연하장과 함께 갖가지 세찬까지 보내 주면서 범행을 교사·선동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의 경위에서 명백해진 바와 같이 지난 8월 15일 서울에서 거행된 광복절 제29주년 경축식장을 울린 비극의 총성은 그 방아쇠가, 오로지 폭력의 힘으로 적화통일을 성취하려는 야욕에 눈이 어두어진 당신네들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당겨진 것임이 백일천하에 입증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만행을 감히 저지른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범행을 저지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네들은 이 엄청난 참변을 당하여 비통에 잠긴 전국민들과 더불어 비명에 가신 고인을 애도하고 고인의 명복을 비는 시간이나마 갖기 위해 우리측이 이번 부위원장회의의 일시 연기를 제의하자 여기에 동의는 해놓고 뒤로 돌아서서는 온갖 선전수단을 다 동원하여 엉뚱하게도 우리가 대화를 중단시키려 한다는 터무니 없는 중상·비방을 우리에게 가했습니다.

심지어 당신네들은 지난 4일 우리가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새로운 회의일자를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겠다고 통고하자 고의적으로 이의 접수를 기피하고, 오히려 유부위원장 귀하의 이름으로 우리측이 『회의일자를 제의하지 않는다』 느니 『대화를 파탄시키려 한다』 느니 하는 엉뚱한 비난성명을 발표하는 야비한 장난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고도 당신네들은 우리가 회의일자로



9월 11일을 제의하자 오히려 회의일자를 10일간이나 연기하여 오늘에 와서야 이 회의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네들은 이번 사건의 엄연한 진상을 가리켜 우리가 조작한 것이라고 강변하면서 사건의 배후가 국제적으로 폭로입증되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범행의 배후조직이었던 조총련을 오히려 동원하여 범행이 준비된 현장인 일본에서의 현지수사를 방해하는 2중, 3중의 죄과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번 8·15대통령 저격사건을 주모하고 저지른 당신네들 북한 공산폭력주의자들의 죄상은 이렇듯 실로 엄중하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의 이러한 엄중한 범죄행위를 묵과할 수 없습니다. 또 용서할 수도 없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그 잔인무도함이 다시 한번 만천하에 드러난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폭력주의노선은 이번 사건이 준엄하게 심판되고 단죄됨으로써 응징되고 청산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번 사건배후의 지령자와 계획자, 훈련자, 그리고 자금제공자들이 민족과 역사앞에 엄숙하게 고발되어야 하며 그들이 지은 죄과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내려져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우리는 모든 민족불행의 화근인 적색폭력을 영원히 추방하고 진정한 평화적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새로운 전진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귀측에게 더 이상 늦기전에 이번에 귀측이 저지른 엄중한 죄과를 5천만 겨레앞에 스스로 복죄하고 겨레의 심판을 구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귀체계의 최고당국자가 이번의 엄중한 죄과에 대해 우리와 5천만 겨레앞에서 정중하게 진사하는 한편 사건의 계획, 모의, 지령, 자금조달, 범인훈련에 관여했던 책임자들을 민족의 이름으로 처단할 것을 단호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지금 뻔뻔스럽게도 사건과 무관하다고 발뺌을 하고 있습니다.

범인 문은 일본에서 출생하여 성장하는 과정에서 적색폭력사상에 물들었고 사회에 나와서는 조총련이라는 폭력범죄조직의 하수인으로 고용된 자이며 범행을 목적으로 이번에 불법입국하기까지는 모국땅을 밟아 본 일이 없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은 이번 사건이 『어떠한 외부의 사주나 지령도 없이』 우리측 『자체내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멋대로 강변하면서 우리가 당신네들을 『걸고 들고 있다』는 등의 생트집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공산주의는 정치 「테러」와는 인연이 없다』 느니 『혁명은 수출할 수도 없고 수입할 수도 없다』 느니 하는 후안무치한 거짓말을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 공산폭력주의자들의 철면피한 생트집과 거짓말들은 결코 새롭거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신네들은 과거에도 우리에게 대해 쉴사이 없는 폭력도발을 자행하고도 언제나 바로 그러한 생트집과 거짓말로 발뺌을 해 왔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폭력도발의 사례는 일일이 매거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역사의 기록을 위해 지난 1965년이래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지령에 의해 남파된 암살범들이 우리 대통령의 생명을 노린 사건이 우리 관계당국에 의해 적발된 것만해도

이번의 8·15저격을 포함해서 도합 여덟차례에 이른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혀두고자 합니다.

1965년 7월 3일 당신네들은 북한군대위 노성집을 조장으로 하는 3인조 무장간첩단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승용차를 반 「탱크」 및 보병용 수류탄으로 폭파하여 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여 남파했습니다.

1967년 3월 10일 당신네들은 무장간첩 강일수에게 『청와대에 침투하여 권총과 수류탄으로 박대통령을 암살하라』는 임무를 주어 남파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당신네들은 북한공산군 제124군 부대소속 31명의 무장공비들에게 대통령궁저 폭파와 대통령을 비롯한 요인암살의 임무를 부여하여 대통령궁저 부근까지 침투시켰습니다. 『청와대를 까부수고 박대통령을 처없애라는 명령을 받고 왔지요』라던 한 공비의 말은 지금도 우리의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1970년 5월 15일 당신네들은 간첩 김병섭에게 『공군조종사를 매수하여 청와대를 폭격하라』는 임무를 부여하여 남파했습니다.

1970년 6월 22일 당신네들이 남파한 무장간첩들은 6월 25일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박대통령과 정부요인들을 암살할 목적으로 국립묘지 입구에 폭탄을 장치하다가 폭탄의 사전폭발로 말미암아 미수에 그쳤습니다.

1970년 11월 14일 우리의 조사당국은 당신네들로부터 『공군조종사를 매수하여 청와대를 폭격하든가 아니면 청와대 요리사를 매수하여 음식에 독약을 넣어 대통령을 독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남파되어 기회를 노리고 있던 간첩 정시일을 검거했습니다.

1971년 7월 29일 당신네들은 북한 노동당 연락부소속인 무장 간첩 정정학에게 「골프」장이나 서울운동장 또는 기타 행사장소에서 박대통령을 저격암살하라는 지령을 주어 남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금년 8월 15일 범인 문세광을 시켜 광복절 경축식장에서 박대통령과 영부인을 저격하는 만행을 끝내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물론 당신네들은 이러한 폭력음모가 적발, 발표될 때마다 항상 당신네들의 관련을 부인했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그러한 사건들이 우리측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강변했습니다.

당신네들의 우리에게 대한 폭력만행은 1968년 1·2사태와 그해 10월 120명에 달하는 무장공비의 동해안 상륙으로 한때 절정에 달했었습니다.

사건당시 북한공산당국은 이 두 사건이 모두 우리 안에서 일어난 소위 「애국인민들의 무장의 거」라고 주장하고 선전해 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4년뒤인 1972년 5월 3일 당신네들의 최고책임자는 평양에서 이후락 전공동위

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1968년의 두 무장공비사건이 북한공산당국에 의해 감행된 사건이었음을 솔직히 시인했습니다. 이때 그 최고책임자는 두 사건이 『자기도 모르게 당내좌경맹동분자들에 의해 저질러 진것』이라고 말하면서 『박대통령께 대단히 미안하다』고 진사했고 또 『그때의 책임자들은 모두 철직시켰다』고 해명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금년에 와서 지난 3월 6일 당신네들의 주 「유엔」 대표부는 성명을 통해 1968년의 1·21청와대 습격기도사건은 『북한의 애국적 무장인민집단이 일으킨 무장의거』라고 강변하여 당신네들 최고책임자 자신이 시인, 사과한 사실마저 언제 그랬더냐는 식으로 부인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뻔뻔스럽게도 『혁명은 수출할 수도 없고 수입할 수도 없다』는 궤변을 서슴치 않고 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이미 「멕시코」 「스리랑카」 「칠레」 등 세계 여러나라에 폭력혁명의 수출을 기도한 전과와 그로 말미암아 해당국으로부터 추방을 당한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세계 도처로부터 폭력배들을 불러 들여 이들에게 살인과 파괴, 전복등 「테러리스트」 훈련을 시켜 내보냄으로써 세계평화를 부단하게 위협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테러리스트」의 소굴로서 북한 공산체제가 세계적인 악명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은 일본에서 「요도」 호를 공중납치한 소위 적군과과격분자들이 굳이 북한지역을 행선지로 골랐고 지금도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있다는 사실, 「싱가폴」에서 선박을 해상납치한 납치범이 그를 북한 지역으로 송환해 줄 것을 끝내 고집하였던 사실, 그리고 지금까지 세계 여러 나라의 폭력배들이 북한지역에 모여 「테러리스트」와 「게릴라」 훈련을 받아 왔다는 사실 등으로 명백하게 입증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말해주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오로지 폭력에 살고 폭력에 죽는 폭력주의자 이상의 그 아무것도 아닌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적나라한 정체입니다.

이러한 전과, 이러한 전력, 이러한 행실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이 폭력이나 「테러」와는 상관이 없느니, 우리가 당신네들을 걷고 들고 있다느니 하는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당신네들은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얼마나 비열한 폭력주의자들인가를 스스로 웅변해 주고 있습니다.

민족의 양심은 헌신처럼 차 내던지고 폭력의 노예로 전락하여 폭력을 평화로 위장하고 기만과 사기로 대중을 조직, 지배하는 당신네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그 폭력의 마수로 대통령저격의 만행을 끝내 저지르고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위장과 기만과 사기로 가득찬 추악한 정체가 드러나는 것만이 두려워 온갖 비열하고 파렴치한 수단과 책동으로 발뺌을 하는데만 급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오늘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천인공노할 폭력주의 노선은 더 이상 방치, 묵과 될 수

없다는 우리의 단호한 결의를 분명히 밝혀 두려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폭력사태를 더 이상 방치하는 것이 분단으로 말미암은 겨레의 고통이 더욱 가중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진정한 평화통일의 전도가 더욱 암담해지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평화 속에서 자유를 신장하고 번영을 극대화시키고자 하는 겨레의 간절한 소망이 무참히 꺾이는 것을 방치하는 것이며, 또한 한반도를 중심한 국제평화가 무단하게 위협을 받는 것을 방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겨레의 가슴에 또 한차례 통한의 못질을 한 이번의 8·15저격사건을 겪은 우리는 거듭되는 이러한 폭력만행에 대해서는 이를 준엄하게 다스려 다시는 이러한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단호한 결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우리가 이번의 사태에 대해 귀측이 과연 어떠한 태도를 보여줄 것인가를 예의 주시할 것이며, 그 내용 여하에 따라서는 그로 말미암아 남북관계에서 빚어지는 일체의 사태에 대해 그 전적인 책임을 오로지 귀측이 져야 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이름으로 엄숙히 경고해두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상에서 8·15저격사건과 관련하여 우리의 비상한 결의와 각오를 분명히 그리고 충분하게 귀측에 전달했습니다.

우리가 귀측에게 요구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폭력을 포기하고 평화를 수락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귀측이 더 이상 비열하게 발뺌을 하는 모든 책동을 중지하고 이번의 대통령 저격사건을 저지른 죄과를 솔직히 시인, 사과하며 이에 대해 응분의 책임을 지는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또 귀측이 철두철미폭력에 의한 적화통일노선인 이른바 「남조선혁명정책」을 공식으로, 그리고 실제로 포기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귀측이 한반도에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정착된 평화의 바탕위에서 진정한 평화통일을 도모해 나가자는 우리의 평화통일 방안을 수락할 것을 요구합니다.

8월 15일 광복 제29주년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는 도중 적색 「테러」분자의 흉탄이 자신의 몸을 간일발의 차이를 두고 빗겨나가고 다른 1발의 흉탄이 사랑하는 영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참변을 당한 박정희 대통령께서는 그 엄청난 비극이 발생한 직후, 바로 그 비극의 현장에서 계속한 경축사를 통해 분단조국의 평화통일기본원칙 3개항목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하였습니다.

그것은 첫째, 남북은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자. 둘째,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하고 남북간에 상호문호를 개방하여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 등으로 상호신뢰를 회복하자. 셋째, 이 바탕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하자는 3개원칙이었습니다.

비극의 총탄이 그분 개인과 가족에게 엄청난 희생을 강요하고 또 온 국민에게 가슴을 찢는 비통과 분노를 안겨준 바로 그 비극의 현장에서 이러한 평화통일3대원칙을 내외에 천명한 박정희 대통령의 의연한 모습이야 말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서는 어떠한 개인적 희생과 고난도 가

벼이 여기려 하는 국가와 민족의 영도자로서 그분의 숭고한 사명감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인식하고 옷깃을 여미게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비명에 가신 대통령영부인 고육영수여사가 흘리신 고귀한 피의 희생을 값진 것으로 만들고 또 그러한 엄청난 불행을 겪으면서도 평화통일에 대한 불변의 신념을 의연하게 천명한 박대통령의 숭고한 사명감을 올바르게 받들기 위해 우리는 다시금 당신네들에게 폭력과 결별하고 평화를 받아 들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제 오늘 본인이 우리 국민과 정부의 의사를 받들어 귀측에 전달한 우리의 요구에 대한 귀측의 대답을 요구합니다.

본인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남북관계의 비상한 국면에 비추어 이상에서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 귀하가 즉석에서, 경솔하게, 즉흥적으로 대답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랍니다.

본인은 귀하가 오늘 본인의 발언내용에 대하여 평양의 귀당국자들과 충분한 협의를 가진 뒤 귀당국의 책임있는 대답을 들리 줄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 제2부 박대통령의 광복절 제29주년 경축사

한국,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제시(박대통령의 경축사 전문)

1.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은 상호불가침조약을 체결해야 한다.
2.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이 바탕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다음은 1974년 8월 15일 서울시내 국립극장에서 거행된 광복절 제29주년 경축식에서 있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경축사 전문이다)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오늘 감격과 희망의 광복절 제29주년을 맞이하여, 나는 먼저 남북의 5천만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뜻깊은 이 날을 진심으로 경축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오늘 다 같이 경축하는 이 광복의 역사 속에는 겨레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은 민족해방의 환희와 함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 손으로 조국 재건의 새 설계도를 실천에 옮겨가야 할 희망과 의욕이 들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우리의 광복에는 민족의 자아회복과 현대국가의 창조라는 민족사상 커다란 새 기원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광복의 의의요, 가치요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한가지 조국의 평화통일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복 후 근 일대가 지나가려는 오늘에 이르러도 분단의 비극과 긴장의 먹구름 속에서 아직도 광복의 참된 그 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을 단순한 의식으로서가 아니라 해방의 기쁨을 통일의 기쁨으로 승화시키려는 결의와 민족중흥의 역사를 이룩하고자 말겠다는 맹서의 제전으로 맞이해야 한다는 것을 다짐해야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여기서 잠시 지난 날의 역사를 회상해 볼 때에 우리가 해방과 함께 통일의 깃발을 높이 들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었더냐 하면 결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1945년 12월에 만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자주독립을 열망하는 우리와 뜻을 같이 하여 「모스크바」 3상회의의 신탁통치안을 거족적으로 반대하였던들, 우리는 그 때 이미 통일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랬건마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이 하룻밤 사이에 태도를 표변하여 반민족적인 신탁통치안을 찬성 지지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이 땅에는 민족분열의 씨가 뿌려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뒤이어 1947년 11월 「유우엔」 총회는 신탁통치를 반대하는 우리 민족의 의사를 존중하여 「유우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 실시를 건의하고 선거의 감시임무를 맡을 임시위원단까지 파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때에도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또다시 이를 거부함으로써 총선거에 의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 수 있었던 최초의 기회를 무참히도 봉쇄하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유우엔 한국임시위원단」의 입북을 거부하는 한편, 북한지역을 강압적으로 지배하면서 소위 인민군을 창설하는데 광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1948년 5월에는 남한에 대한 송전을 중단했고, 같은 해 6월에는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예성강의 물줄기를 끊어 막았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토와 민족을 양단하는 반민족적 만행을 서슴지 않고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 같은 정세 하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득이 거래의 여망에 따라 「유우엔」의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하여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정부를 수립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해 12월 「유우엔」은 우리 정부를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 합법정부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2년도 지나기 전에 그들은 악랄하게도 당초에 기도했던 바 그대로 한반도를 적화할 목적으로 기습적인 무력남침을 감행해 왔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950년 6·25동란입니다.

그들의 반민족적 만행으로 동족의 귀중한 인명희생은 막대하였고, 전 국토는 거의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무력침략은 국제여론의 규탄을 받았고, 드디어 「유우엔」은 그들을 「침략자」로 규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때 우리는 오직 반공구국의 일념으로 일치단결하여 공산침략을 물리쳤고, 세계의 많은 자유 애호가국가들은 우리의 이 투쟁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휴전성립 후 1954년에 있었던 「제네바」 정치회담에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우리가 제의한 민주적 절차에 의한 평화적 통일방안을 거부함으로써 조국통일의 기회를 또다시 짓밟고 말았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적화야욕을 버리지 않고 이른바 4대 군사노선을 강행하여 군비를 계속 증강하는 한편, 우리에게 대하여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한반도에는 긴장이 날로 격화되고 전쟁재발의 위험마저 감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긴장과 도발의 양상이 이 이상 더 격화된다면, 그것은 남북을 가릴 것 없이 그야말로 우리 민족전체가 존망의 위기에 직면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같은 위기 속에서도 이 땅에서 전쟁재발을 막고 긴장을 완화하여 5천년 동안 연면히 유지되어 온 우리의 민족사를 단절이 아니라 이를 더욱 빛나게 계승 발전시켜야 할 엄숙한 각오를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수행하는 첫 길이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에 있다는 판단 하에 1970년 광복절에 북한에 대해 무력적화통일노선을 포기하고 서로 발전과 번영을 위한 평화적 노력을 다하자고 촉구하는 8·15선언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듬해에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고, 또한 1972년에는 온 거래의 여망을 받들어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다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4반세기 동안 단절되었던 남북간에 비로소 대화의 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대화의 과정에서 용이하고 실천가능한 문제부터 해결하여 상호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남북간에 가로놓인 장벽을 점차적으로 제거해 나간다는 지극히 현실적인 입장에서 모든 성의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방 직후부터 통일의 기회를 저해하기만 해 온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도리어 우리의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할 억지 주장만을 되풀이하면서 대화의 진전을 방해하였으며, 마침내는 남북대화를 교착상태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는 작년 6월 23일 평화통일의 대전제인 항구적인 평화를 이 땅에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의 실질적인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평화통일외교정책을 내외에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의 꾸준한 평화노력에 대하여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오히려 남북대화를 갑자기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우리에게 대한 터무니없는 비방증상을 더욱 노골화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은 우리의 서해 5도 수역과 휴전선 근처에서 각종 군사적 도발행위를 격화시켰습니다.

이러한 긴장고조의 위기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간의 전쟁재발을 막기 위해 금년 초에는 북한측에 대하여 남북상호불가침협정의 체결을 제의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그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민족의 절실한 염원이요, 지상명제인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성실하고도 일관성 있는 노력을 꾸준히 다각적으로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국가발전을 질시하지 않을 수 없게 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우리의 불가침협정 제의마저 외면하고, 최근에는 서해와 동해 공해상에서 우리 어선을 격침·나포하고 경찰경비정을 격침하는 등 비인도적이고도 불법적인 만행을 계속 자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로는 평화통일과 민족의 단합을 운위하고 있으나, 그 실에 있어서는 동족의 분열과 무력남침만을 획책해 오고 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의 집요한 침략적 도발 속에서도 줄기찬 평화노력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국민이 총화단결하여 그들의 위협에 굴하지 않고 굳세게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국력의 고도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국토의 모습과 국민의 마음은 새마을 운동으로 더욱 새롭고 희망차게 변모해 가고 있으며 수출입국의 파도는 이제 5대양으로 힘차게 굽이쳐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중화학공업 건설의 우렁찬 발걸음은 약진하는 대한민국의 맥박이 되어 세계에 메아리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우리는 유류파동과 자원난으로 야기된 작금의 세계적 경제 불황에 슬기롭게 대처하면서 경제성장에 계속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로써 준공과 더불어 개통을 자랑하게 된 서울 지하철의 건설 등 대중복지생활의 기반을 착실히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력이야말로 이 땅에서의 전쟁재발을 막고 평화를 정착시키며 또한 그 바탕 위에서 평화통일의 실질적 기반을 조성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포 여러분!

역사의 본질은 근본적으로 창조력이요 그 주체인 민족의 본질은 어디까지나 생명력 그것입니다.

창조력에 의하여 역사는 발전하고 생명력에 의하여 민족은 계승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우리 민족의 지상염원인 평화통일은 무궁한 창조력을 가진 민족사의 당연한 귀결로 이루어지고야 말 것을 동포 여러분과 더불어 굳게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찬연한 증흥과 번영도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우리 민족의 노력에 의하여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을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오늘 이 뜻깊은 자리를 빌어 조국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성실하게 추구해 온 평화통일의 기본원칙을 명백히 천명하고자 합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본원칙은,

첫째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 남북간에 상호 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 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나는 이와 같은 우리의 평화통일 기본원칙이야말로 오늘의 국제환경 속에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현성 있는 길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평화를 정착시키고 그 평화의 바탕 위에서 통일을 이룩하려는 선포화 후통일의 정책기조를 지금까지 확고하게 유지해 왔고 또 앞으로도 이를 변함없이 일관성 있게 계속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한시 바빠 민족의 양심으로 되돌아와 7·4남북공동성명과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의 기본정신에 입각하여 조국과 민족의 앞날을 위해 남북대화를 조속히 정상화하고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성실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만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우리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과 불가침협정 체결제의를 끝내 거부한다면, 그것은 그들이 외치는 통일이 평화통일이 아니라 무력통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화의 정착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 평화통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는 또 우리 우방에 대해서도 대북한관계에 있어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하여 한반도에서 세력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하는 바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곧 우리의 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지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에 기여하는 길이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민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영원한 민족의 생명은 오직 국가를 통해서만 성장 발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겨레의 생명을 영원토록 가꾸어 나갈 우리 대한민국의 지상목표는 다름 아닌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유구한 민족사의 전개 속에서 이 지상목표를 이룩해 나가기 위해 다같이 민족중흥의 이상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말하는 이 민족중흥의 이상주의자란 결코 환상에 사로잡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을 직시하고 그 속에서 긍정적 요소를 적극 개발하여 그것을 민족사 창조의 원동력으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 민족중흥과 조국통일의 기초가 오직 평화에 있으며 그 평화유지의 원동력은 다름 아닌 국력이라는 것을 신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중흥의 드높은 이상을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묵묵히 땀흘려 국력배양을 극대화하는데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민족중흥의 이상주의자란 다른 일방 착실한 현실주의자이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우리 모두가 민족중흥의 이상주의자인 동시에 또한 착실한 국력배양의 현실주의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해 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정치인과 특히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분단조국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는 동시에 국력을 착실히 다져나가는 것이 곧 조국통일과 민족중흥을 성취하는 가장 가깝고도 빠른 정도임을 깨달아 일체의 낭비와 비능률적인 모든 것을 깨끗이 제거하는데 앞장서야 합니다.

모든 경제인과 근로인들은 서로가 다 같이 경제발전의 향도요 역군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

의 공익성 제고와 국력배양의 가속화에 적극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지식인들은 주체적 민족사관을 확립하여 보다 창조적이고 협동적인 차원에서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정신의 순화와 건실한 사회기풍의 진작에 선봉이 됩시다.

그리하여 우리 국민 모두가 다 같이 자기의 사회적 직분에서 유신과업수행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의 이상, 민족중흥은 틀림없이 역사의 구체적 현실로 결실되고야 말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 모두 29년 전 그 날의 그 감격과 그 정열을 한결같이 유신과업수행에 총집결하여 민족의 위대한 전진을 힘차게 계속해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해방의 기쁨이 통일의 기쁨으로 승화되는 진정한 광복 조국통일의 그 날을 자랑스럽게 맞이합시다.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박정희

### 제3부 남북조절위원회 제8차 부위원장 회의

#### 서울측, 위원회 운영의 즉각 정상화 요구

남북조절위원회의 서울측 장기영 부위원장은 1974년 9월 21일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열린 남북조절위원회 제8차 부위원장회의에서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마비가 장기화되고 있는 원인은 평양측이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의 관계 명문조항들을 계획적으로 무시, 외면하는데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 관계 명문조항들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서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즉각 정상화시키자고 제의했다.

장기영 부위원장은 작년 8월 28일 평양측이 일방적으로 중단을 선언한 이래 13개월 동안 중단 상태에 머물러 있는 남북대화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평양측은 ①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즉각 정상화하는데 동의하고 ② 6·23 평화통일 외교선언과 남북상호불가침협정 체결체의를 즉각 수락하며 ③ 이른바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의 대남폭력 혁명노선을 즉각 포기하라고 요구했다.

장부위원장은 남북조절위원회가 속개되는 대로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체결을 위한 구체적 협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제의하고 이를 위해 평양측의 거부로 말미암아 이미 13개월간이나 지연되고 있는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평양회의의 조속한 개최를 평양측에 요구했다.

이날 회의에서 평양측은 8·15대통령 저격사건을 우리측에 의한 조작이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우리의 반공정책, 6·23평화통일 외교선언, 그리고 이른바 「자유」와 「민주주의」를 가지고 터무니 없는 중상·비방을 되풀이하고, 또 대한민국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의 생트집으로 시종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의 정상화는 끝내 거부했다.

이러한 평양측의 태도에 대해 서울측의 장부위원장은 부위원장회의에서는 처음으로 체제문제를 거론, 광적인 김일성 우상화에 의한 북한공산독재의 허구성과 해방이래 북한지역에서 진행되어 온 모든 민족전통, 역사, 가치말살행위를 신랄하게 규탄하고 『진정한 평화통일의 바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순수한 민족양심으로 돌아와서 북한사회의 자유화, 민주화 그리고 개방사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선언했다.

<자료> : 장기영 부위원장의 회의발언

“진정한 평화통일 위해선 북한사회의 자유화·민주화가 먼저 이루어져야”

(다음은 남북조절위원회 제8차 부위원장회의에서 평양측이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비방을 거듭 되풀이 하는데 대한 서울측 장기영 부위원장의 발언내용이다.)

귀하는 마치 고장난 유성기처럼 그동안 골백번도 더 반복한 우리에게 대한 부당한 중상, 비방을 또다시 되풀이 하고 있고 또 부위원장회의의 임무의 한계를 명백히 벗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대화의 재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귀측의 불성실한 태도와 자세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본의는 아니나마 이제 잠시의 시간을 내어 귀측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들에 관하여 본인의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비정상적인 남북관계를 개선, 해결하여 부자연스런 분단상태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남북관계의 엄연한 현실을 현실로 직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현실에 바탕을 두지 않고 현실과 유리된 논의는 공리공론이거나 알맹이 없는 무책임한 선전 선동에 불과합니다. 따라 남북관계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노력은 정확한 현실 파악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단조국이 처해 있는 현실상황에 있어서 으뜸가는 문제상황은 1945년의 해방이후 우리의 조국강역 안에는 대한민국정부가 조상전래의 민족전통의 정통성을 바탕으로 정당하고 민주적이며 합법적인 국민적 의사결정절차에 의해 수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38도선 이북의 지역에 조상전래의 민족전통과는 아무런 인연이 없는 외래의 「이데올로기」에 입각하여 어떠한 역사적, 법적, 도덕적 근거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비합법적이고 강탈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또 하나의 정치실체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데 기인하고 있습니다.

북한지역을 강점한 공산주의자들은 1950년 6.25전쟁을 일으킴으로써 국토와 민족의 분단상태를 더욱 심화시켜 놓았습니다. 이러한 분단상태의 장기화가 결과한 우리 조국의 문제상황의 하나는 시일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심화되어온 남북의 같은 민족들 사이의 이질화현상입니다. 북한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은 유구한 민족역사와 민족전통을 송두리채 부정하는 외래의 「이데올로기」인 이른바 유물론적 계급사관에 의한 공산주의 독재체제를 그 지역의 동포들에게 강요했습니다.

북한지역에서 그 동안 당신네들 공산주의자들이 해 놓은 일은 우리의 전통사회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른바 계급의식을 조작하여 같은 핏줄을 이어받고 있는 동포들을 이간, 분열시켜 서로 적대, 증오하게 만들고 소위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라는 「나치스」식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에 의하여 전주민을 노동노예로 전락시키며 민족고유의 전통과 가치, 사고방

식과 생활양식, 그리고 미풍양속은 깡그리 「반혁명」 또는 「반동」 사상으로 몰아 숙청, 박멸하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민족 역사를 임의로 변질, 왜곡, 날조하여 오늘날 북한지역에서 자라는 어린 세대들은 그들의 조상의 행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조작된 허구적 사실들을 민족 역사로 알고 배우는 기막히는 현실이 우리의 눈 앞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소수 외래세력인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북한지역의 공산독재체제하에서 진행되어온 이러한 민족말살정책의 과급효과는 오늘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어 등 민족생활의 모든 영역에 과급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이 말하는 우리 나라에서의 이른바 「계급」이라는 것은 오로지 우리 민족 안에서 공산주의를 받아들여 하지 않은 동포들을 탄압숙청하고 같은 민족사이를 이간, 분열시키며, 같은 민족을 상호 적대하는 세력으로 양분하여 동족상잔의 비극을 강요함으로써 폭력으로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창작해 낸 한낱 허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북한지역에 이식해 놓은 공산주의체제의 정체는 20세기에 들어와서 새로운 국제적 팽창주의 침략세력으로 대두된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한 하수자로서 북한 지역에 조작된 외래침략세력의 위성체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그 동안 민족고유의 전통과 가치는 일체 말살하고 오로지 이른바 「푸로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철두철미 봉사하는데 모든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귀측의 소위 「사회과학원」이 발간한 1970년도판 이른바 「정치용어사전」을 보면 귀측은 민족주의를 가리켜 「자기민족내」의 「부르조아지」의 지배와 착취를 옹호하는 「부르조아」 사상이라고 단정하면서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극언함으로써 북한 공산주의체제의 반민족성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만과 허위로 가득 찬 폭력독재체제를 가지고 있는 귀측이 이제 우리와 대화를 하는 자리에서 후안무치하게도 우리를 상대로 「자유」를 운위하고 「민주주의」를 시비하면서 이것을 구실로 하여 대화의 진행마저 거부하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이제 묻거니와 당신네들은 도대체 무엇을 「자유」라 하고 무엇을 「민주주의」라 하며 또 당신네 지역의 동포들에게 어떠한 「자유」, 어떠한 「민주주의」를 허용하고 있기에 감히 적반하장으로 우리의 「자유」, 우리의 「민주주의」를 가지고 시비를 합니까.

귀측 지역에 과연 사상의 자유가 있습니까. 출판의 자유가 있습니까. 언론의 자유가 있습니까. 보도의 자유가 있습니까. 집회의 자유가 있습니까. 결사의 자유가 있습니까.

사상의 자유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귀측 지역에서는 공산주의사상, 그보다도 이른바 김일성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북한판 공산주의사상 이외에 그 어느 사상을 가질 자유가 있습니까.

이른바 「정치용어사전」에 의하면 귀측 지역에서는 소위 「사상혁명」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수적 요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상혁명」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노동자

들 속에 남아 있는 낡은 봉건적 「부르조아」 적, 소 「부르조아」 적 사상을 뿌리 빼고 밖으로부터 침습해 들어오는 「부르조아」 적 사상독소를 철저히 막아내며 근로자들을 모두 공산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른바 북한노동당 정치이론 기관지라는 「근로자」 금년 4월호에 의하면 『모든 당원과 인민들은 소위 아버지 수령의 주위에 더욱 철통같이 결속하여 소위 수령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가져야 된다』고 까지 극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고도 사상의 자유가 있으며 사상의 자유를 운위할 염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귀측 지역에서 허용되는, 아니 강제되고 있는 사상은 오로지 유일하게 이른바 「김일성주의사상」 뿐이며 그 밖의 일체의 다른 사상은 무자비한 숙청과 박멸의 대상인 것입니다. 또 민주주의의 큰 기둥의 하나인 결사의 자유에 대해서 말해 봅시다.

귀측 지역에 사는 동포들은 그들이 자율적, 자발적으로 원하는 단체들을 조직할 자유를 과연 가지고 있습니까. 귀측의 소위 「정치용어사전」은 귀측 지역의 이른바 「사회단체」들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단체」들이란 그 「기본임무」가 『노동당의 외곽단체로서 당의 영도 밑에 소위 김일성 「혁명사상」으로 전체근로자들을 무장시켜 노동당의 유일 사상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귀 최고당국자를 목숨으로 보위하며 그의 교시관철로 그들을 조직 동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환언하면 귀측의 이른바 「사회단체」들이라는 것은 그 자체의 독자성이나 자율성이 전혀 확정되지 않는 소위 노동당의 돌리리 괴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고도 결사의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귀측에는 도대체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거주 이전이나 여행의 자유가 있습니까. 조직선택의 자유가 있습니까. 또는 취미나 오락의 자유가 있습니까. 도대체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말해 봅시다. 귀측은 가소롭게도 귀측 지역에 신앙의 자유가 있다고 감히 주장합니다.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존재하지도 않는 기독교단체와 불교단체의 이름을 참칭하여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과 불교인들에게 폭력혁명을 선동하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어떠합니까.

귀측의 「정치용어사전」에 의하면 기독교는 『「피착취 근로대중」의 해방투쟁을 말살하고 착취제도를 영구화하기 위한 착취계급의 정신적 무기로 제국주의자들의 착취와 억압, 침략과 전쟁을 정당화하고 식민지 약탈의 길 안내자가 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는 『미제의 식민지 예속화 정책을 변호하는데 적극 복무하는 한편 근로대중 속에 종교적 환상과 예속적 굴종의 사상을 퍼뜨리고 「반공」 사상을 불어넣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독교는 이른바 「사상혁명」의 주요 「투쟁」 대상입니다.

또 동사전에 의하면 불교는 『봉건적 지배계급의 사상적 지배도구로 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고 문화와 과학발전에 막대한 해독을 끼쳤으며 북한지역에서는 「이미 없어졌으나」 남한에는 「아직 남아 있어서」 인민들의 혁명의식을 마비시키는데 적지 않은 해독작용을 놓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교를 이렇게 숙청과 탄압의 대상으로 정의해 놓고 있으면서도 귀측은 감히 신앙의 자유를 운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타의 자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귀족의 체제는 이렇게 자유라고는 없는 전세계에 유례가 없는 암흑의 폐쇄사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족의 체제는 자타가 공인하는 이른바 「푸로레타리아」 공산독재 체제입니다. 귀족의 체제는 이른바 노동당 유일체제로 당이 모든 공권력 위에 군림합니다.

귀족의 모든 정치적 의사는 노동당이 오로지 결정하며 주민들은 정치적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가 허용되지 않으며 그들은 오직 노동당이 결정하여 시키는 것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고 이행할 뿐입니다. 당의 결정이라는 것도 하나의 허구에 불과합니다.

세계의 다른 어느 나라에도 이제는 존재하지도 않는 낡은 「스탈린」 식 개인숭배체제인 귀족의 체제는 한낱 개인의 어록에 의해 지배되는 개인독재체제입니다. 오늘날 북한 지역에서 날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개인숭배체제는 『짐은 국가』라고 강변했던 「루이」 14세 당시의 절대군주왕정과 과연 무엇이 다른가, 만약 북한지역의 공산주의자들이 조금이라도 역사에 조예가 있다고 한다면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자성해 봄직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렇고도 당신네들은 감히 민주주의를 운위하고 우리를 상대로 민주주의를 시비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네들은 우리에게 반공정책을 포기할 것을 일방적으로 요구하고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을 철회하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이른바 「대 민족회의」 「정치협상회의」라는 양의 탈을 쓴 이리와 같은 위장체제로 세인의 이목을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들에 대해서도 본인은 차제에 우리의 견해를 분명히 밝혀 두려 합니다.

첫째로 적어도 현시점에서 우리는 우리 나라에서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공산주의를 하는 것을 우리는 시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만든 반공정책은 앞으로도 견지되어 나갈 것입니다.

본인은 앞에서 공산주의라는 외래의 「이데올로기」가 우리 민족에 끼치고 있는 해독과 아울러 북한지역을 강점하고 있는 공산독재체제의 기만적 허구성능을 몇 가지의 사례를 들어 고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나라에 공산주의를 용납할 수 없는 이유는 이미 충분히 설명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본인은 우리의 반공정책은 우리 국가안보와 한반도의 평화에 대한 귀족의 부당한 도발에 대한 자위조치로 마련된 것이라는 것을 명확히 지적해 두어야 하겠습니까. 따라서 우리의 반공정책을 푸는 열쇠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아니라 귀족이 가지고 있습니다.

귀족이 폭력과 무력의 힘으로 적화통일을 달성하려는 불순한 야욕을 버리지 않고 군사도발이나 대남폭력혁명기도 등 우리 국가안보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도발을 계속하는 한 우리의 반공정책은 견지되고 강화될 것입니다.

귀족이 이른바 「남조선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는 폭력과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기도를 버리고 한반도에 안정된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동의하며 북한 지역내에서 공산주의 이외의 다른 사상의 자유를 허용하여 장래 할 통일의 내용으로 주민들의 자유의사에 의한 사상선택이 가능해 지는 변화가 생길 때 그때라야 우리의 반공정책은 재검토 될 것입니다.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을 철회하라는 귀족의 주장은 그 자체가 귀족이야 말로 분단조국의 평화

통일에는 관심이 없으며 그에 앞서 우리 조국강토 위에 평화를 뿌리 내리게 하는데 반대하고 있음을 입증해 주는 산 증거입니다.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은 당신네들이 그렇게 독단적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분열주의」 정책이 아니며 진정한 의미에서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합목적적인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숭고한 통일철학이 담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오늘날과 같이 남북간의 적대, 증오, 불신관계가 심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가 먼저 해소 청산되지 않고도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역설을 과연 어느 누가 납득할 수 있습니까.

6·23평화통일외교선언의 취지는 남북한의 평화통일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과정으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관계를 평화적 방법으로 자주적 노력에 의해 해소, 청산하기 위하여 우선 남북간에 상호 불가침, 상호 내정불간섭 원칙에 입각한 평화공존 관계를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공존관계 속에서 대화를 계속하면서 꾸준히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귀측이 6·23평화통일외교선언에 반대하는 이유는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남북간의 평화공존관계 속에서 불가피하게 벌어질 두 체제간의 평화적 경쟁에서 북의 공산체제가 남의 민주체제에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둘째로, 귀체제의 극단적인 개인숭배체제의 명분이 되어 있는 대남적화 통일노선을 포기하지 못할 대내적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귀측의 태도는 결국 그것이 평화부정, 통일부정의 태도인 것이며 그러한 태도를 버리지 않고 계속 고수해 나갈 경우 멀지 않은 장래에 귀측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 「민족분열주의자」로서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고야 말 것입니다.

귀측은 지금 우리가 6·23평화통일외교선언에서 제의한 대로 남북한이 개별적으로 「유엔」에 가입하면 민족이 영구분열된다고 요란스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남북한의 개별적인 「유엔」 가입은 통일까지의 과도적 잠정조치로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유엔」에서의 2중 대표권이 반드시 민족분열을 영구화시키고 2개의 한국을 고정화한다는 당신네들의 주장은 순전히 가공적인 억지이며 논리의 독단적인 비약이라는 것은 「덴지니아」의 경우, 「말레이시아」의 경우, 통일 「아랍」 공화국의 경우라든가 「쑤비에트·러시아」와 「우크라이나」·「바이엘로·러시아」의 경우가 충분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유엔」 회원국들의 자발적 의사에 의한 대표권의 통합을 금지하는 조항은 「유엔」 헌장의 어느 구석에도 없습니다. 즉 UN대표권과 통합, 분리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며 우리들이 우선 개별적으로 UN에 가입한 후에도 우리들의 통일을 위한 대화는 얼마든지 계속할 수 있으며 오히려 남북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시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급한 시정을 요하는 우리의 현실은 세계에서 13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나라의 5천만 겨레가 귀측의 비현실적인 억지로 말미암아 「유엔」이라는 세계기구 안에서 당연히 행사해야 할 발언권을 행사하지 못해 왔고 지금도 그러한 불합리한 사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부당한 사

실입니다.

1천 4백만의 인구를 가진 귀족이 귀족 나름의 고집으로 「유엔」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면 그것은 우리로서도 시비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나 3천 3백만의 인구를 가진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누구도 시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도적인 조치로서 남북한의 개별적인 「유엔」가입은 우선 우리의 5천만 한국인이 부당하게 「유엔」밖에 머물러 있으므로 우리 한민족의 정당한 발언권이 봉쇄당하고 있다는 불합리한 사태를 시정하고 또한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이러한 평화의 바탕 위에서 남북 쌍방간의 대화 계속에 의해 진정한 평화통일을 촉진시켜 나가는 방안이 될 것입니다.

작금의 외교무대에서의 동향을 볼 때 국제무대에서 말과는 달리 행동으로 「2개의 한국」을 공공연히 추구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당신네들 북한이라는 엄연한 사실을 적시하여 그 기만적인 허구성을 지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족은 최근 이미 오래 전부터 대한민국이 가입해 있는 세계보건기구, 「유엔」 무역개발회의기구, 만국우편동맹 등 「유엔」 전문기구들에 가입함으로써 이들 기구에 「2개의 한국」을 심어 놓았습니다. 이들 기구는 모두 가입단위가 국가단위이며 따라서 「이들 기구는 비 정치기구이기 때문에 「유엔」과는 다르다」는 귀족의 억지는 삼척동자라도 웃을 수밖에 없는 비겁하고도 균색한 꾀변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족은 우리와 수교중인 나라들을 상대로 이른바 등거리 외교라는 괴기한 이론을 내세워 동시수교공작을 벌여 그 결과로 오늘날 세계의 43개 국가에 「2개의 한국」을 심어 놓고 있습니다. 이것이 「2개의 한국」 추진정책이 아니라면 과연 정상적인 두뇌를 가진 어느 누가 그 말을 듣고 실소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귀족이 선전하고 있는 이른바 「대민족회의」나 「정치협상회의」 등의 주장은 현시점에서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단정합니다.

우리 쌍방은 지금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기구를 가지고 있는 이상 현시점에서 이 기구로 하여금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이외의 어떠한 책동도 그것은 기존 대화선을 파괴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통일을 저해하려는 노력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귀족이 말하는 이른바 「대민족회의」 운운의 주장은 그 발상부터 어불성설이며 더 나아가 그 이면에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파괴적인 불순한 음모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이른바 「대민족회의」 운운의 주장은 쌍방의 책임 있는 당국간의 대화를 거부하고 대화 상대방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며 통일문제해결에의 평화적 접근이 아니라 상대방 체제에 대한 폭력혁명 추진의 도구로 이를 이용하려는 불순하고도 음흉하기 짝이 없는 계략을 감춘 위장제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겉다르고 속다른 위장제의는 결코 진지한 고려의 대상이 될만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본인은 북한지역의 당신네 공산주의체제라는 것이 얼마나 기만과 허위로 가득찬 사ibi 체제인가를 충분히 논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당신네들이 하고 있는 일은 분단조국의 평화통

일은 방해, 거부하고 오로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는 민족의 정통성을 조직적으로 파괴, 말살하는 일뿐이라는 것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과거 4반세기동안 북한지역에서 심화되어 온 이러한 가공스러운 이질화 현상을 놓고 볼 때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 북한사회에서 순수한 민족의 동질성이 복원되는 방향으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급선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귀측이 지금이라도 순수한 민족양심의 입장으로 돌아와서 북한사회의 민주화와 자유화, 그리고 개방사회를 위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진정한 평화통일을 위한 바탕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본인은 귀측이 더 이상 시간이 늦기 전에 지금까지의 평화부정적, 대화부정적, 통일부정적인 폭력노선을 포기하여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기본적 전제로서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구조를 정착시키는데 동의할 것을 아울러 요구하는 바입니다.

#### 제4부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한적, 본회담 속개일자를 거듭 제의  
북적 「노부모생사확인」 제의도 거부

1974년 5월 29일 남북적십자회담대표관문점접촉에서 이루어진 합의에 따라 남북적십자회담의 쌍방 대표들은 1974년 7월 10일부터 관문점에서 쌍방의 교체수석대표와 각기 2명씩의 대표들이 참가하는 실무회의를 시작했다. 실무회의는 그동안 7월 10일의 첫 회의에 이어 7월 24일, 8월 28일, 그리고 9월 25일 등 도합 네 차례의 회의를 열었다. 쌍방간에 합의된 실무회의의 임무는 『본회담의제의 예비적 토의』와 『본회담재개문제의 토의』이다.

7월 10일 제1차 실무회의에서 대한적십자대표단은 북한적십자대표단에게 ① 지연되고 있는 제8차 남북적십자회담을 8월 30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동의할 것과 ② 본회담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친척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우선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을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한적대표단은 남북적십자 쌍방이 이산가족·친척들 가운데 노부모를 대상으로 심인의뢰서와 심인회보서의 교환에 의해 그들이 주소와 생사를 확인하여 서로 통보해 주고 나아가서 당사자들이 관문점에서 면회도 하고 또 서로 자유로운 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북적측은 7월 24일의 제2차 실무회의에서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확인·통보하는 사업을 우선 실시하자』는 한적제안은 『본질문제를 외면한 현실성이 없는 안』이라는 엉뚱한 이유를 내세워 이를 거부했다.

북적측은 본회담재개문제에 관해서는 대한민국의 ① 반공법·국가보안법 등 모든 반공법규를 철폐하고 ② 모든 반공기관·단체들을 해체하며 ③ 일체의 반공운동을 금지하고 ④ 북적측이 말하는 이른바 「인도주의」 사업에 참가하는 「당사자」, 「협조자」, 「관계자」들에게 인신과 휴대품의 불가침권을 인정하고 언론·출판·집회·통행 등 활동상의 자유와 편의를 보장하는 것이 본회담재개의 전제조건이라는 터무니 없이 일방적이고도 강탈적인 정치적 요구를 내세움으로써 실질적으로 본회담재개를 거부했다.

뿐만 아니라 북적대표단은 남북적십자회담의 교착상태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적십자국제위원회가 「제네바」의 「유엔」 기구 북한대표부와 접촉을 가진 끝에 금년 3월 13일과 4월 26일 두 차례에 걸쳐 남북쌍방의 적십자단체에 각기 공한을 내어 남북적십자 쌍방수석대표들이 「제네바」에서 적십자국제위원회 주재하에 만나 본회담재개문제를 논의하도록 초청한 사실을 거론하여 이러한 적십자국제위원회의 중재개입 제의를 『외세의 부당한 개입』이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한적측이 『외세의 개입을 구걸했다』고 터무니없는 비방을 퍼부었다.

9월 25일의 제4차 실무회의에서 한적측은 거듭되는 한적측의 본회담재개제의를 북적측이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제8차 본회담을 11월 6일 서울에서 열자고 또 다시 제의했다.

그러나 북적측은 본회담재개의 조건이 대한민국에 의한 반공정책의 중지라는 종래의 정치적 주장을 되풀이 했으며 제5차 실무회의일자를 11월 26일로 제의함으로써 한적측의 11월 6일 제8차 본회담개최제의를 사실상 거부했다.

# 남북대화 제7호

(1974. 10 ~ 1974. 12)

# < 목 차 >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	3
제1부 노출된 무력남침기도 .....	4
1. 북한, 휴전선에 「남침땅굴」 구축 .....	4
2. 북한, 땅굴공동조사를 거부 .....	7
※ 땅굴관계자료 .....	8
제2부 남북조절위 제9차 부위원장회의의 연기 .....	11
1. 평양측, 회의연기를 또 다시 제의 .....	11
2. 서울측, 회의연기에 반대 .....	12
3. 제9차 부위원장회의 1월 8일로 개최 합의 .....	14
※ 제9차 부위원장회의 연기에 즈음한 서울측 대변인 성명 .....	16
제3부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	19
한적, 「노부모사업」 구체안 제시 .....	19
※ 제6차 남북적 실무회의에서의 김연주 한적 교체수석대표 발언 .....	20
제4부 1974년도 남북대화 일지 .....	25



##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

첫째 :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 불가침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 남북간에 상호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 이 바탕 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박정희대통령의 광복절 제29주년 경축사에서〉

## 제1부 노출된 무력남침기도

### 1. 북한, 휴전선에 「남침땅굴」 구축

#### 가. 땅굴의 발견-유엔군사의 심야발표

1974년 11월 15일 밤 11시 주한유엔군사령부대변인 「우드사이드」 대령은 이례적인 심야기자회견을 요청하고 요지 다음과 같은 중대사항을 긴급히 발표했다.

- ① 15일 오전 7시 35분 휴전선 군사분계선 남쪽을 정례적으로 순찰하던 민경대원 9명 중 1명이 지표의 공기구멍에서 증기가 새어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 ② 구멍밑 지표아래로 약 46cm되는 곳에서 땅굴을 발견하고 오전 8시 5분까지 봤을 때 북한군 진지로부터 약 3백발의 자동화기사격을 받았다.
- ③ 유엔군민경대는 안전을 위해 적절한 방어수단을 취했으며 희생자는 없었다.
- ④ 정찰대는 15일 밤에도 계속, 발견된 땅굴 현장에 머물러 땅굴 속을 수색하는 한편 유엔군사 조사대표단이 현지에 파견되어 땅굴을 확인했다.
- ⑤ 조사결과 땅굴은 폭이 약 91cm, 높이가 약 1m 22cm의 콘크리트 슬라브 동굴로 그 안에는 220볼트, 60와트짜리 전등과 전선이 가설되어 있었다.
- ⑥ 땅굴안에는 파넬 흡을 수송하기 위한 협궤도와 궤도차량이 설치되어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땅을 파는 여러가지 설비 및 공구와 함께 식량과 「클레이모어」 지뢰, 시계등 다량의 공사용류품이 아울러 노획되었다.

「우드사이드」 대령은 이날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땅굴은 북한군에 의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행위라고 말하고 유엔군사령부는 이 문제를 군사정전위원회에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 나. 땅굴의 정체

11월 15일의 최초발견에 이어 실시된 정밀조사결과 문제의 땅굴은 그 정체가 더욱 소상하게 알려 지게 되었다.

땅굴이 발견된 장소의 위치는 경기도 고랑포 동북방 약 8km지점인 휴전선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남북 약1.2km지점(맞은편 페이지 지도 참조)이었다.

1953년 한국전쟁의 휴전협정이 체결된 뒤 교전쌍방은 당시의 전선에서 각기 2km씩 후퇴하여 폭 4km, 길이 155마일의 비무장지대를 만들었다.

휴전협정에 의거하여 중앙의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그 남쪽의 폭 2km의 비무장지대는 유엔군의 관할아래 놓이게 되었으며 그 북쪽 절반은 북한군의 관할아래 놓여지게 되었다.

북한군은 폭 4km의 비무장지대 북방한계선 북쪽으로부터 은밀하게 땅굴을 파기 시작하여 비무장지대의 북한측 지역(폭 2km)을 땅속으로 통과한 뒤 군사분계선을 지나 1.2km를 더 땅속으로 파나온 끝에 유엔군정찰대에 의해 발견되기에 이른 것이다. 발견된 지점에서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까지는 불과 800m를 남겨놓고 있었다.

발견된 고랑포 북방의 땅굴은 그 안에 레일이 깔리고 궤도차가 놓여 있었으며 배수호가 마련되고 일정한 간격을 두고 궤도차를 회전시키기 위한 회차로가 설치되어 있었다. 땅굴의 벽은 조립식 콘크리트벽체, 천정은 콘크리트 슬라브로 사실상 영구적 군사시설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었다.

문제의 땅굴은 휴전선 남방한계선까지 남아 있는 800m를 파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도중 발견된 것으로 땅굴속에서는 쏘련제 「다이나마이트」 6상자, 다량의 「클레이모어」 지뢰와 함께 시계, 나침반, 수통, 반합, 전화기, 지렛대, 야전삽, 곡괭이, 광차, 전구, 담배 등 북한제 노획품들이 나왔으며 그 가운데 반합에는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담겨 있어 북한군이 작업도중 황급히 도망쳤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해 주었다.

땅굴의 규모로 볼 때 이 땅굴은 그것이 완성되었을 경우 1시간에 1개연대 이상의 무장병력을 휴전선 남방한계선 이남의 출구를 통해 침투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뿐만 아니라 땅굴속에 설치된 궤도차를 이용할 경우 이 땅굴은 포신을 비롯한 각종 중화기의 운반에도 충분히 이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 다. 땅굴의 용도-북한의 전쟁준비

서종철 국방부장관은 11월 16일 북한군이 휴전선비무장지대의 땅속에서 군사분계선 이남으로 파고 있는 땅굴은 하루전에 고랑포북방에서 발견된 것만이 아니라 그 밖에도 수개처가 더 있다는 확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멀지않아 그 전모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하여 이러한 땅굴들을 파고 있는 것인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휴전선비무장지대의 땅 밑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남으로 내려 오는 땅굴을 파고 있다는 소식은 국내외적으로 많은 충격을 불러 일으켰다.

그러나 이번의 땅굴사건은 단순히 충격을 받는 것으로 끝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번의 땅굴사건과 관련하여 적어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관심을 갖는 국내외의 모든 사람들은 이러한 땅굴을 팸으로써 북한공산주의자들이 기도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올바르게 평가·인식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는데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다는 것이 강조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이번의 땅굴사건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모든 위장평화선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또 하나의 6·25전쟁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음을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여 주었으며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대한 북한공산주의자들에 의한 위협이 실재할 뿐 아니라 심각하다는 것을 의문의 여지가 없이 분명히 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회는 11월 20일 긴급소집된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유엔 메시지와 결의문에서 북한공산주의자들에 의한 비무장지대 땅굴구축사건은 ① 휴전협정의 단순한 위반을 넘어선 사실상의 무력남침행위이며 ② 평화통일을 회구하는 한민족의 열렬한 염원에 대한 도전이고 7·4 남북공동성명의 합의사항에 대한 공공연한 유린이며 ③ 국제평화와 특히 세계의 이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유지 및 긴장완화 추세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탄했다.

휴전선의 비무장지대에 파 놓은 땅굴이 평화용이 아님은 자명하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결코 방어용도 아니며 누가 보아도 대한민국에 대한 기습공격을 목적으로 한 것임은 분명하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파놓은 비무장지대 땅굴은 최근 북한이 ① 해군 및 공군작전기지를 휴전선 가까이로 남진시켜 왔고 ② 휴전선일대의 지상 화력을 현저히 증강시켜 왔으며 ③ 각종 작전용 장비와 물자를 증강·비축하고 있는 사실들과 관련시켜 그 의미를 음미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서국방장관은 이에 대해 이번에 발견된 땅굴은 『종래와 같이 수십명 규모의 무장간첩을 남파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수백 내지 수천명의 파괴분자들을 남파시켜 대규모 기습공격을 감행하려는 것』이라고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의도를 풀이 했다.

또한 이병형 대간첩대책본부장은 11월 20일 국회본회의에서 행한 보고에서 북한측이 비무장지대에 땅굴을 판 이유는 『대규모의 정규 또는 비정규군을 남파하거나 남한내의 지하공산세력에 무기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으며 또 땅굴의 규모로 볼 때 전면남침을 위한 정규군의 대규모침투를 위한 것으로 볼수도 있다』고 말했다.

## 2. 북한, 땅굴공동조사를 거부

11월 15일 밤 고랑포 북방의 비무장지대 유엔군측 지역 지하에서 북한군이 파고 있는 땅굴을 발견한 사실을 긴급 발표한 주한유엔군사령부는 다음날인 16일 북한측에 대해 군사정전위원회를 19일에 여는 한편 이에 앞서 17일 유엔군과 북한군의 비무장지대 공동감시소조가 땅굴 현장에 회동하여 공동 현장조사로 실시할 것을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군측은 17일 평양방송을 통해 문제의 땅굴은 유엔군측에 의한 『조작된 정치모략』이며 자기네들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강변하면서 공동조사를 거부했다.

북한측이 공동조사를 거부함에 따라 유엔군은 유엔군측 공동감시소조요원들로 독자적인 땅굴 내부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북한군은 땅굴이 발견된 군사분계선 남방 1.2km 지점으로부터 북쪽으로 뻗어 있는 땅굴 내의 곳곳에 지뢰와 폭발물을 장치해 놓았다. 11월 20일 낮 1시20분경 땅굴내부를 북쪽으로 조심스럽게 더듬어 나가던 유엔군측 공동감시소조요원들은 북한군이 장치해 놓은 폭발물의 폭발로 말미암아 불의의 인명피해를 입어야만 했다. 이 폭발로 말미암아 한국군의 김학철 해병중령과 미해군의 「벨린저」 중령이 목숨을 잃었으며 그밖에 1명의 한국군과 5명의 미군이 부상을 입었다.

한편 유엔군이 소집을 요구한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는 북한군측의 기피로 인하여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결국 땅굴 발견후 최초의 군사정전위원회 본회의인 제356차 본회의는 11월 26일에야 열리게 되었다.

유엔군측 수석대표 「헨리·모건」 미해군소장은 이날 회의에서 11월 15일 고랑포북방에서 발견된 땅굴의 현장 정·동사진과 땅굴안에서 노획된 각종 증거물을 제시하여 문제의 땅굴이 북한군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구축된 것임을 입증하는 동시에 『유엔군은 북한군이 이밖에도 비무장지대의 또 다른 수개처에 남침용 땅굴을 파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히고 『북한군은 이들 땅굴을 즉시 폭파하라』고 요구했다.

※ 땅굴관계자료

〈정부대변인(문화공보부장관) 담화〉

〈1974. 11. 16〉

1. 정부는 북한공산집단이 비무장지대에 지하터널을 구축해 놓은 사실을 중대시하고 이와같은 명백한 침략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다.
2. 이번에 발견된 지하터널은 무장간첩을 본격적으로 남파하고 우리사회가 극도로 혼란해 지면 대대적인 무력기습남침을 자행하기 위해 구축해 놓은 것이 분명하며, 그들이 표면상으로는 평화공세를 취하면서 기실은 무력적화통일의 기본정책을 조금도 포기하지 않은채 대한민국의 전복을 위해 얼마나 면밀하게 계획하고 있으며, 또 혈안이 되어 있는가를 실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3. 북한의 이와같은 침략행위는 휴전협정에 대한 명백하고도 중대한 위반일 뿐 아니라, 상호무력도발을 하지 않기로 약속한 7·4남북공동성명을 백지화하는 것으로서 정부는 북한이 이와같은 침략적인 공격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우리가 제시한 불가침협정을 수락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이다.

〈국방부장관담화〉

〈1974. 11. 16〉

1. 지난 수년동안 북한은 지상 해상을 통해서 많은 간첩을 직접 남파 또는 일본을 공작기지로 하여 조총련을 통한 간첩 및 파괴분자의 우회침투와 이들에 대한 지하공작획책 등이 빈번히 우리 국군의 철통같은 방위태세와 국민총력안보태세로 말미암아 실패에 돌아가고 또한 최근의 민청학련 및 인혁당사건 그리고 천인공노할 8·15사건 등으로 대한민국내에서의 국론의 분열과 정치적 사회적 혼란상태를 야기시키려던 기도마저 수포로 돌아가자 급기야는 비무장지대밑으로 땅굴을 파고 남하하는 "두더지 작전"을 감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이와같은 북한의 행위는 북한군이 더욱 공격적인 성향을 갖추게 되는 동시에 우리에게 대한 기습남침 무력적화통일을 감행하려는 그들의 기본정책을 예정대로 착착 그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는 것을 백일하에 폭로한 것이며 또한 휴전협정의 명문규정에 대해 정면으로 도전해 오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이 비무장지대내에서 남침터널을 파고 있는 것이 비단 이번에 발견된 지역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외에도 몇군데 더 있다는 정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앞으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취하여 질 것임을 이 기회에 분명히 해 두고자 합니다.

또한 북한의 이와같은 도발에 대해서 결코 우리는 이것을 좌시할 수 없을 뿐더러 단호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며 여기에서 야기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특히 군사적인 면에서 가장 주목되는 사항은 북한의 이러한 기도가 비단 수명 혹은 수십명의 간첩이나 파괴분자들을 은밀리에 남파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일개소에서 단시간에 수천명의 병력을 은밀리에 일거에 남침시켜 대규모 기습공격을 감행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3. 이번 사건으로서 7·4남북공동성명 이후에 북한이 전개하여 온 일련의 평화공세가 그 얼마나 기만적이며 허위에 찬 것인가를 여실히 입증하는 것이며 우리에게 대한 이와같은 중대한 도발행위는 우리 온 국민의 분노는 물론 온 세계의 지탄과 비난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4. 또한 북한의 이같은 행위는 김일성의 한반도 적화통일의 야욕에 추호의 변화도 없으며 앞으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북한의 수법은 더욱 교묘하고 악랄해 질 것이라는 것이 예상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와같은 엄연한 현실 앞에서 온 국민이 일층 각성하여 강력한 총화안보체제로서 이 국난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군은 계속 철통같은 방어태세로서 북한의 여하한 기도도 분쇄할 각오로 임하고 있습니다.

〈국회결의문〉

〈1974. 11. 20〉

1. 국회는 우리의 성실하고 끈기있는 한반도의 평화정착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세계적인 긴장완화 추세를 역이용하여 적화통일의 야욕을 실현하려는 온갖 도발을 날로 강화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고 모든 국민들은 총화단결로써 우리의 안보총력태세를 굳건히 하고 북한의 어떠한 도발과 침략에도 단호하게 대처하여야 한다는 굳은 결의를 표명한다.
2. 정부는 북한이 1973년 8월 28일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한 이래 대외적으로 위장 평화외교정세를 강화하면서 갖가지 형태의 도발을 날로 증대시켜 온 사실에 유의하여 북한의 어떤 무력도발이나 간첩침략도 단호히 분쇄하고 응징할 수 있는 제반대책을 즉각적이고 효과적으로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3. 북한은 적화통일 야욕과 전쟁도발기도를 포기하고 남침지하터널을 비롯한 비무장지대내의 일절의 불법적인 병력과 군사시설을 즉각 철거할 것과 휴전협정과 7·4 남북공동성명정신으로 되돌아가 조국의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불가침협정 제의를 수락할 것을 촉구한다.

〈국회의 대유엔 메시지〉

1. 북한의 이번 행위는 휴전협정의 단순한 위반을 넘어선 사실상의 무력남침행위라고 단정한다.

2. 이는 평화통일을 희구하는 한국민족의 열렬한 염원에 대한 도전이며 남북대화를 위한 1972년 7월 4일 공동성명의 합의사항에 대한 공공연한 유린으로서 규탄받아야 할 행위라고 규정한다.
3. 이 행위는 또 국제평화 특히 세계의 이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유지와 긴장완화 추세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본다.
4. 유엔은 북한의 이와같은 군사도발과 침략행위로 말미암아 조성된 한반도의 심각한 정세를 주시하여 북한의 야만적 행위에 대해 강력한 응징책을 강구하여 이러한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즉각 취하도록 요청한다.
5. 대한민국은 북한의 그와같은 무력도발 침략에도 불구하고 인내와 성실로서 한반도에 있어서 긴장완화와 평화증진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 제2부 남북조절위 제9차 부위원장회의의 연기

### 1. 평양측, 회의연기를 또 다시 제의

남북조절위원회의 남북쌍방은 1974년 12월 4일 판문점의 평양측 지역인 「판문각」에서 제9차 부위원장회의를 열 예정이었다.

당초 남북쌍방은 1974년 9월 21일 판문점 서울측지역인 「자유의 집」에서 열린 제8차 부위원장 회의에서 다음 회의를 11월 15일에 열기로 합의하고 이를 발표했었다. 그러나 평양측은 합의된 회의날자인 15일을 사흘 앞둔 11월 12일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서울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아무런 구체적인 이유의 설명도 없이 다만 『사정』을 이유로 회의를 12월 4일로 연기할 것을 제의해 왔다.

서울측은 평양측의 『사정』을 받아들여 회의연기에 동의했고 이런 경위로 회의날자는 12월 4일로 미루어졌던 것이다.

그러나 12월 4일의 회의를 앞두고 평양측은 쌍방 대변인회합을 11월 30일 판문각에서 갖자고 제의해 왔다.

11월 30일의 대변인회합에서 평양측은 또 다시 회의의 연기를 제의해 왔다. 이번에도 회의연기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도 없었다. 회의를 언제로 연기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아무런 말이 없었다. 평양측은 『부위원장회의는 일단 연기하고 그에 앞서 대변인급의 실무접촉을 갖고 분위기를 성숙시켜 분위기가 성숙되면 그때 가서 부위원장회의를 열자』고 말했다. 이것은 사실상 부위원장 회의를 무기한 연기하자는 얘기가 아닐 수 없었다.

## 2. 서울측, 회의연기에 반대

서울측은 평양측의 거듭된 회의연기제의, 그것도 사실상의 무기한 연기제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었다.

이미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는 서울측 제의에 의해 1973년 12월, 그보다 앞서 1973년 8월 평양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중단된 남북조절위원회를 재개하는 문제를 협의, 해결할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나는동안 남북간에는 여덟차례의 부위원장회의가 열렸지만 평양측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조속한 재개와 이에 의한 남북대화의 정상화를 완강하게 거부하여 부위원장회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채 회의만 거듭해왔다.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된 오직 하나의 원인은 남북조절위원회를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하여 운영하는 것을 거부하는 평양측의 일방적이고도 독선적인 태도에 있었다. 공동성명과 합의서는 통일문제를 포함하여 남북간에 견해를 달리하는 모든 문제를 남북조절위원회에서 거론하여 해결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양측은 이러한 합의사항들은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서울측의 내정에 관한 전혀 일방적이고도 무리한 조건을 내놓고 이것을 서울측이 들어 주어야만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기능을 회복하는데 동의하겠다고 버티고 있는 것이다.

평양측은 우선 대한민국의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며 또 반공정책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평양측은 또한 남북조절위원회와는 별도로 정체불명의 이른바 「남북정치협상회의」 또는 「대민족회의」를 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평양측의 방자한 태도에 대해 서울측은 제8차 부위원장회의에서 부위원장회의의 종결과 남북조절위원회 기능의 즉각 정상화를 제의하고 이에 대한 평양측의 가부간 대답을 촉구했다. 또한 이와 아울러 서울측은 동 제8차 부위원장회의에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지령하에 저질러진 8·15저격사건을 강경하게 규탄하고 이 사건에 대한 북한 최고당국자의 사과와 관계자의 처벌을 촉구, 이에 대한 평양측의 회답을 제9차 부위원장회의에서 줄 것을 요구해 놓고 있었다.

더구나 11월 15일에는 휴전협정의 단순한 위반을 넘어 너무나도 명백하고 중대한 무력남침행위인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땅굴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남북관계의 현실을 놓고 볼 때 제9차 부위원장회의를 또 다시 연기한다는 것은 서울측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었다.

서울측의 장기영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은 12월 2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평양측의 유장식 부위원장에게 발송했다.

『나는 귀측의 요청에 의하여 11월 30일 판문점에서 있었던 쌍방 대변인 접촉에서 귀측이 12월 4일로 합의된 남북조절위원회 제9차 부위원장회의를 다시 연기할 것을 제의했다는 보고를 받았다.

나는 이에 대하여 당초 11월 15일로 합의되었던 제9차 부위원장회의가 귀측의 사정에 의하여 12월 4일로 연기된바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또 다시 납득할 만한 이유의 제시도 없이 더구나 제9차 부위원장회의를 무기한 연기하자는 이번의 귀측제의를 최근 남북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하거나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하루 빨리 정상화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국내외의 요청을 감안할 때 부당한 제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나는 제9차 부위원장회의를 이미 귀측의 요청에 의하여 연기된 날자인 12월 4일에 예정대로 열어서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를 조속히 매듭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이상과 같은 장기영 부위원장의 전화통지문에 대해 평양측은 같은 날 오후 다시 전화통지문을 통해 12월 3일 오후 4시 판문점 판문각에서 쌍방 대변인회합을 가질 것을 제의해 왔다.

12월 4일의 예정된 부위원장회의를 하루 앞둔 12월 3일, 그것도 오후 4시에 쌍방 대변인회합을 다시 갖자는 평양측의 제의의 저의는 너무나도 명백했다. 그것은 예정된 부위원장회의 날자 직전까지 회의연기문제를 미결상태로 둬으로써 결국 12월 4일의 제9차 부위원장회의개최를 실질적으로 불가능케 하자는 것임이 분명했다.

서울측의 장기영 부위원장은 즉각 다음과 같은 두번째의 전화통지문을 평양측의 유장식 부위원장에게 보냈다.

『본인은 지난 11월 30일 쌍방대변인 접촉에서 귀측이 제9차 부위원장회의의 연기를 제의한데 대하여 제9차 부위원장회의는 이미 합의된대로 12월 4일에 열려야 된다는 것을 12월 2일자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귀측에 통고한 바 있다.

따라서 12월 4일로 합의된 회의개최문제에 관하여 쌍방간에 더 이상의 실무접촉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쌍방간에 제기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12월 4일의 부위원장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평양측은 이날 서울측의 장기영 부위원장에게 보내온 유장식 부위원장의 전화통지문에서

① 제9차 부위원장회의는 1975년 1월 8일로 연기하고

② 12월 4일에는 판문점에서 제9차 부위원장회의 대신 쌍방 대변인 회합을 갖자

는 또 하나의 새로운 제의를 해 왔다.

### 3. 제9차 부위원장회의 1월 8일로 개최 합의 서울측 간사회의 소집을 요구

평양측의 두번째 전화통지문으로 평양측의 의도는 명백해 졌다. 평양측은 12월 4일의 제9차 부위원장회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유산시킬 작정이었다. 만약 서울측이 회의연기에 끝내 동의하지 않을 경우 평양측은 일방적으로 이 회의에 불참함으로써라도 이를 유산시킬 속셈이 너무나도 분명해진 것이다.

평양측이 굳이 12월 4일의 부위원장회의만은 유산시키려 드는 이유도 이제 의문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해졌다.

평양측은 분명히 12월 4일의 부위원장회의를 앞두고 휴전선 비무장지대 지하에서 대규모 남침용으로 북한군이 파고 있는 땅굴이 발각된데 대해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당황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 때 [뉴욕]에서 열리고 있는 제29차 유엔총회의 정치위원회에서는 한국문제토의가 막바지에 이르고 있었다. 이번 유엔총회에서 북한은 입으로는 기만적인 평화공세를 선전하면서 주한유엔군사령부 해체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대의 안간힘을 쓰고 있었다.

결국은 며칠 늦추어지기는 했지만 당초의 예상은 서방측 결의안과 공산측 결의안이 정면으로 대결하고 있는 한국문제에 관한 정치위원회의 표결은 12월 6일에 실시된다는 것이었다. 이 표결을 바로 눈앞에 두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휴전선 땅굴이 발각됨으로써 그들의 이른바 평화공세의 기만적인 정체가 백일하에 드러났다는데 당황하고 있었을 뿐아니라 이 문제가 12월 4일의 부위원장회의에서 거론되고 규탄의 대상이 될 경우 그 결과가 유엔총회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 더 한층의 두려움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전후의 사정으로 미루어 볼 때 12월 4일의 부위원장회의를 유산시키려는 평양측의 결의는 자못 필사적인 것이었다. 서울측은 여러가지로 심사숙고 끝에 제9차 부위원장회의를 1975년 1월 8일로 연기하자는 평양측의 제의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러나 서울측은 평양측이 제의한 쌍방 대변인회합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남북조절위원회의 실무협의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의거하여 1973년 3월에 정식으로 구성발족되었으면 서도 같은 해 6월 이후에는 역시 열리지 않고 있는 남북조절위원회 간사회의의 소집에 동의할 것을 평양측에 요구키로 했다.

12월 3일 밤늦게 서울측의 장기영 부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세번째 전화통지문을 평양측의 유장식 부위원장에게 보냈다.

『본인은 귀측의 사정에 의하여 제9차 부위원장회의가 1974년 11월 15일에서 12월 4일로 연기되었음을 상기시키면서 최근 남북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고려하거나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하루빨리 정상화시킬 것을 바라고 있는 국내외의 요청을 감안할 때 이번 회의를 연기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따라서 반드시 합의된 날자에 열어야 된다는 것을 수차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귀측은 합의된 일자에 성실하게 부위원장 회의를 개최하려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납득할 만한 이유의 제시도 없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연기하려고 고집함으로써 제9차 부위원장회의가 재 연기될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본인은 제9차 부위원장회의가 귀측의 사정으로 합의된 일자에 개최되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된 것은 유감스러우나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이 하루 속히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일념에서 제9차 부위원장회의를 1975년 1월 8일에 개최하자는 귀하의 제의에 동의하는 바이다.

그리고 본인은 남북조절위원회에 제기되는 문제의 실무적 해결이 필요하다면 귀하가 제의한 대변인접촉을 통하여 이러한 문제들을 협의할 것이 아니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3의 나항"의 명문 규정에 따라 마땅히 간사회의에서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본인은 귀하의 1974년 12월 4일 대변인 접촉 제의를 수락할 수 없다는 본인의 뜻을 밝히는 동시에 남북조절위원회에 제기되는 문제의 실무적 협의를 위하여 1974년 12월 18일 오전 10시 판문점 "자유의 집"에서 남북조절위원회 간사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 제9차 부위원장회의 연기에 즈음한 서울측 대변인 성명

### 남북공동으로 땅굴을 조사하자

“우리가 태양아래서 평화대로 닦을때 평양측은 땅속에 들어가 남침길 닦아”

1. 오늘 오전 10시 판문점 판문각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남북조절위원회 제9차 부위원장회의는 결국 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난 11월 30일부터 일방적으로 이번 제9차 부위원장회의의 연기를 고집해 온 평양측은 예정된 회의날자를 하루 앞둔 12월 3일 만약 우리측이 회의연기를 수락하지 않으면 12월 4일의 제9차 부위원장회의는 평양측이 일방적으로 불참함으로써 유산시키는 것도 불사할 생각임을 사실상 분명히 알려오기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리는 심사숙고 끝에 회의의 재 연기를 받아 들이기로 했습니다.

평양측은 12월 3일 장기영 부위원장에게 유장식 부위원장 명의의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1) 제9차 부위원장회의는 명년 1월 8일로 연기하고 (2) 12월 4일에는 판문점에서 쌍방 대변인 접촉을 갖게 하자고 제의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는 제9차 부위원장회의의 연기에는 동의하되 12월 4일 쌍방 대변인 접촉을 가질 것이 아니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3)의 “나”항에 의거하여 이미 구성되어 있는 남북조절위원회의 실무협의기구인 간사회의를 오는 12월 8일 판문점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12월 3일 오후 평양측에 보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아무런 납득할 만한 이유의 제시도 없이 순전히 일방적인 고집으로 쌍방간에 합의된, 그것도 바로 평양측에 의하여 한 차례 이미 연기 합의된 바 있는 회의날자를 다시 연기하게 만드는 평양측의 독선적인 태도와 처사에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다시는 이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엄중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평양측이 왜 이렇게 12월 4일의 부위원장회의를 굳이 유산시키려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로서도 짐작이 가고도 남는 바가 있습니다.

평양측은 지난번의 8.15저격사건에 이어 이번에는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지하에 북한측이 파놓은 대규모 병력 및 장비수송용 땅굴이 적발되어 그들이 은밀하게 추진해 온 무력남침 기도가 백일하에 탄로되고 그 명백한 물증 앞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됨에 따라 특히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가 진행되고 있는 때에 이 문제가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에서 거론되고 규탄의 대상이 되는 것을 크게 두려워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그동안 남북대화의 전 과정을 돌이켜 볼 때 우리는 언제나 뚜렷한 목적과 미래상을 가지고 남북대화를 시작했고 추진해 왔으며 또 지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지향하는 착실한 전진을 꾸준히 계속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결과제는 남북간에 상호 내정불간섭, 무력불가침 원칙에 입각한 평화공존관계를 정착시키는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꾸준히 그리고 활발하게 대화를 계속해 나가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남북대화를 통하여 남북쌍방간에 교류와 협력의 길을 트고 이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쌍방의 사회를 점차 서로 개방하여 상호신뢰와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유일한 최선의 방도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4.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항상 남북대화를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남조선 혁명" 즉 대남적화혁명의 추진을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려고만 하여 왔습니다.

대화를 통하여 그들이 기도해 온 것은 우리의 반공체제의 약화이며 안보체제의 동요이며 국론 분열의 조성입니다.

대화를 진행함으로써 이러한 불순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깨달았을 때 북한측은 작년의 이른바 8.28성명으로 일방적으로 대화를 중단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대화의 이면에서 그들이 비평화적 방법이라고 말하는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기도도 계속해서 추구해 왔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사대기본군사노선"의 완성과 아울러 최근 그 흉칙한 모습을 백일하에 들어낸 휴전선 비무장지대의 땅굴이 그 산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밝은 태양아래 떳떳하게 남북으로 오갈 수 있는 평화와 통일의 대로를 닦기 위한 대화의 성실한 계속을 추구하고 있을 때 그들은 땅 속에 들어가 오로지 은밀한 기습남침을 목적으로 하는 비밀의 통로를 뚫기 위한 두더지공사를 해 왔습니다.

5. 우리는 남북대화의 전 과정을 통하여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평양측의 불성실한 태도는 이제야 말로 재검토되고 시정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남북조절위원회의 평양측이 계속해서 남북대화를 대한민국에 대한 폭력적 화혁명을 추구하는 하나의 도구로만 이용할 것이 아니라 남북대화를 통하여 안정된 평화를 이땅에 정착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발전시켜 분단조국의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에 호응해 나설 것을 추구하고는 바입니다.

6. 아울러 우리는 이번에 휴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발견된 땅굴이 뜻하는 바 사태의 심각성을 고

려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남북 쌍방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의 철저한 파괴와 제거를 단행할 것을 제의하는 바입니다.



### 제3부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 75년 신경에 판문점서 만나게 ”  
한적, 「노부모사업」 구체안 제시

남북적십자 쌍방 대표들은 1974년 11월 5일과 11월 29일 판문점에서 남북적십자 제5차 및 제6차 실무회의를 가졌다.

이들 회의에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북한적십자회측에 대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제8차 남북적십자 서울 본회담의 개최에 조속히 동의할 것을 거듭 촉구하는 한편 1975년 1월 1일을 기해 남북의 이산가족·친척중 60세 이상의 노부모들로 하여금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휴전선 반대쪽의 지역에 살고 있는 그들의 자녀 및 친척들과 판문점에서 면회하는 것을 주선하자고 제의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11월 29일의 제6차 실무회의에서 한적이 이산가족·친척찾기 사업의 하나의 시범사업으로 제의하고 있는 노부모찾기 사업의 구체적 방안을 북적측에 제시하고 우선 휴전선건너편에 헤어져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노부모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주소와 생사를 먼저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해 정초부터 그들을 찾는 자녀 및 친척들과 판문점에서 면회를 하고, 이어서 희망에 따라 상호 방문을 하며 서신교환을 하도록 주선하자고 제의했다.

한적측은 이를 위해 판문점에 {판문점공동사업소}를 조속히 발족시키고 그안에 {면회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상기한 서신교환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편물교환소}를 설치·운영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적측은 한적의 『노부모찾기 사업』 우선실시 제의는 『인도주의 사업에 큰 혼란과 난관을 조성하고 문제해결을 지연시키며 이론과 실무양면에서 타당성이 없고 본회담 의제와 관련이 없는 엉뚱한 문제』라는 실로 엉뚱한 주장을 하면서 이 문제의 토의를 계속 거부했다.

남북적 쌍방의 실무회의 대표들은 제7차 실무회의를 1975년 1월 24일 열기로 합의했다.

※ 제6차 남북적 실무회의에서의 김연주 한적 교체수석대표 발언

오늘 우리들은 여섯번째의 실무회의를 갖게 됩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이 실무회의는 중단상태에 놓여 있는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하루빨리 개최하는 동시에 본회의 의제토의를 촉진하므로써 회담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중요한 사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실무회의에 부과된 이와같은 사명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1차 실무회의 이래 모든 성의와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

기억하고 있겠지만 지난 7월 10일에 개최된 제1차 실무회의에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중단된 본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하여 1974년 8월 30일, 서울에서 제8차 본회담을 개최할 것을 정식 제의하였으며 본회담 의제 문제에 있어서는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으로 우선 1천만 이산가족들 가운데서도 그 해결이 가장 시급한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부터 실시할 것을 제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또한 지난 9월 25일의 제4차 실무회의에서도 다시금 1974년 11월 6일 서울에서 제8차 본회담을 개최할 것을 제의하고 귀측의 성의를 촉구하였으며 제5차 실무회의에서는 1975년 신정을 기하여 노부모들의 판문점상봉을 실현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이와같은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실무회의에 부과된 과제들은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대화는 여전히 교착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제1차 실무회의가 시작된 이래 오늘까지 4개월반 동안이나 성과없는 시간만을 보냈으며 그 사이에 벌써 1974년의 한 해마저 다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인위적인 국토분단으로 본의 아니게 근 30년동안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들을 찾아주며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려는 숭고한 인도주의 사업이 오늘날 이처럼 지지부진 하며 난관에 봉착해 있다는 것은 실로 가슴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를 저버리는 일일뿐 아니라 조국통일과 민족단결의 원칙을 천명한 남북공동성명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나는 이제, 더이상 그 어떠한 구실로서도 회의정상화를 늦출 수는 없으며 1천만 이산가족들을 찾아주는 사업도 더 이상 지체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에서 나는 우선 본회의 재개문제와 관련하여 작년 7월이후 본회담이 중단된 이래 오늘까지,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취해온 기본태도와 기본입장을 다시 한번 밝히고 회담정상화를 위한 귀측의 성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측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1971년 10월 6일 제3차 예비회담에서 남북적십자사 쌍방은 {본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가며 개최한다}고 합의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사항에 따르면 제7

차 본회담이 평양에서 열렸던만큼 제8차 본회담은 당연히 서울에서 개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작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7차 본회담에서 쌍방 수석대표들은 서울에서 제8차 본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있으며 다만 회담일자만은 직통전화 또는 판문점 연락책임자들 사이의 연락을 통하여 협의,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은 합의사항들로 미루어볼때 본회담 재개문제에 있어서 남북적십자 쌍방이 해결할 문제는 오직 회담개최 일자를 협의, 결정하는 것만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이와같은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존중하고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본회담 중단이후 오늘까지 이미 네차례에 걸쳐 회담일자를 제시하고 제8차 본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제의한 회담개최 일자들을 모두 다 거절하였으며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괴하면서 끝내 서울 회담개최에 호응해 오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명문화 되어 있는 합의사항을 스스로 위배하면서도 적반하장격으로 오히려 회담지연의 책임을 우리측에게 전가하는가 하면 이른바 전제조건이란 것을 내걸어 회담상대방의 내부문제를 간섭하고 중상 비방하는 발언까지 서슴치 않았습니다.

귀측의 의도가 만약, 회담을 정상화하지 않고 제8차 본회담의 조기 개최에 호응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귀측이 회담을 정상화하고 하루빨리 제8차 본회담을 개최하겠다는 입장이라면 이처럼 합의사항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면서 본회담 재개에 불응할 수는 없으며 더욱이 회담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고 비방, 중상하는 발언을 일삼으면서 회담분위기를 악화시키는 행동을 취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회담에는 서로 상대방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회담에서는 마땅히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이 옳은 태도인 것이며 동시에 합의사항을 준수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회담은 서로 엄숙히 약속한 합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할 때에 비로소 정상화되는 것이며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약속을 어길때에는 곧 파탄상태에 빠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늦어도 1974년을 넘기기 전에 {본회담을 정상화하고 재개할 의사가 있는가, 없는가}하는 귀측의 명백한 의사를 물어 보고자 하는 바이며 이에 대한 귀측의 분명한 답변이 있기를 요구합니다. 만약 귀측이 진정으로 본회담을 재개할 의사가 있다면 합의사항에 따라 마땅히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되어 있는 제8차 본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호응해 와야만 할 것입니다.

나는 지난번 제5차 실무회의에서 귀측에게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이미 여러차례에 걸쳐 회담일자를 제의한바 있으므로 이번에는 귀측이 귀측사정을 고려하여 될수 있는대로 빠른 시일안에 서울에서 개최할 제8차 본회담개최 일자를 제의해 올 것}을 종용한 바 있습니다. 나는 귀측이 합의사항을 준수, 이행하므로써 하루빨리 회담을 정상화하는데 협력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아울러 실무회의의 조속한 타결을 바라고 있는 1천만 이산가족들과 5천만 겨레들의 소망에 부응하도록 노력할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나는 본회담 의제문제에 대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견해를 말하고자 합니다.

귀측도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본회담 의제문제는 본회담의제로 설정되어 있는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에 관하여 『그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 『그들의 자유로운 상봉과 자유로운 방문을 실현하는 문제』 그리고 『그들 사이의 서신거래를 실시하는 문제』 등을 토의, 해결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이 실무회의가 수행해야 할 합의사항이며 의무입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이 합의사항에 따라 의제 제1항을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 가운데서도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노부모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먼저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제의했습니다.

{노부모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을 실시하자는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제안은 본회담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보다 쉽고 또 시급한 문제부터 해결해 들어가자는 시범적 사업으로서 합의사항에 따라 마땅히 이 실무회의에서 다루어야 할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안인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이와같은 정당한 제안에 대해서 {노부모문제는 본회담의제 제1항과는 관계도 없는 엉뚱한 문제로서 합의사항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심지어 {인도주의 문제의 토의를 방해하고 회담상대방을 비방하며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정치적 선전}이라고 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

{노부모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시범적으로 해결하자는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제안이 어찌하여 본회담 의제 제1항과는 관계없는 엉뚱한 문제이며 더욱이 합의사항에 위반된다는 것입니까?

작년 7월이래 오늘까지 귀측의 회담개최 불응으로 근 1년반동안이나 남북적십자회담이 교착상태에 놓여 있는 현 상황에서 {노부모 문제}를 시범적으로 해결하므로써 1천만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풀어 나가는 실마리를 찾으며 아울러 회담을 정상화하는 돌파구를 찾아 보자는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이 제안을 두고 무슨 근거로 『인도주의 문제의 토의를 방해하고 회담상대방을 비방하며 내외여론을 기만하는 정치적 선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실시하자는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제안은 의제토의에 혼란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의제토의를 바로 정상화하는 것이며, 인도주의 문제의 토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나는 귀측이 노부모의 소식을 하루 속히 알아 보고자 하는 자식들의 애타는 심정을 동정하고 호소하는 발언을 여러번 강조한 사실을 잘 기억하고 있으며 또 이 사실을 귀측에게 상기시킨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서도 귀족은 노부모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구체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선뜻 동의해 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말과 행동이 다르며 주장의 앞뒤마저 서로 모순되는 귀족의 불성실한 회담자세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에 비추어 보아 노부모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주장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정당한가를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으며, 아울러 쌍방이 합의한대로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문제}를 하루 속히 실질적으로 해결하는데 성의를 보일 것을 귀족에게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뜻에서 나는 오늘 노부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이 제안에 대하여 귀족의 성의있는 연구와 답변이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노부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제안”

첫째, 남북적십자 쌍방은 본회담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범적 사업으로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을 우선 실시한다.

둘째, 노부모라 함은 그들의 자녀 또는 친척들과 서로 남북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60세 이상의 남녀노인들을 말한다.

셋째, 『알아내며 알리는 방법』은 1972년 10월 24일 제3차 본회담에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제안한 『십인의뢰서교환』 방식으로 해결한다.

넷째, 『노부모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사업』의 진행과 더불어 당사자(노부모와 그 자녀 및 친척)들의 희망에 따라 상봉, 방문, 서신교환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1) 상 봉

남북적십자 쌍방은 생사, 소재지가 확인된 노부모와 그 자녀 및 친척들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수시로 판문점에서 자유로운 상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적십자 쌍방은 판문점에서 『면회소』를 설치하고 상봉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2) 방 문

남북적십자 쌍방은 생사, 소재가 확인된 노부모와 그 자녀 및 친척들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서로 상대방 지역에 자유로운 방문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방문시기와 기간은 신정 및 추석명절을 전후하여 15일간이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당사자들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시 방문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남북적십자 쌍방은 방문에 필요한 모든 편의를 제공한다.

### (3) 서신교환

남북적십자 쌍방은 노부모와 그 자녀 및 친척들 사이에 서신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선하며 이를 위하여 관문점에 {남북우편물교환소}를 설치 운영한다.

다섯째, 남북적십자 쌍방은 제4차 본회담에서 합의한 『관문점 공동사업소』를 조속히 발족시키며 그 안에 상기 {면회소}와 『우편물교환소』를 설치 운영토록 한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이상과 같은 제안은 실무회의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합의사항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본회담의제 제1항의 해결을 촉진하는 현실적이고도 합리적인 제안인 것입니다.

나는 남북공동성명 정신, 적십자인도주의 정신, 그리고 동포애의 입장에서 볼때 귀측이 {노부모사업}의 실시를 수락하지 못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고 믿는 바이며 이상과 같은 대한적십자대표단의 제안에 대하여 정의있는 연구와 회답이 있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제4부 1974년도 남북대화 일지

[일 지]

- 1974. 1. 18 박대통령, 연두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대해 남북한이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
  - 상호간의 무력침략 배제
  - 상호간의 내정불간섭
  - 현행 휴전협정 준수
  
- 1974. 1. 26 북한측, 노동신문사설을 통하여 박대통령의 “남북한 상호불가침협정체결 제의”를 거부
  
- 1974. 1. 30 남북조절위 부위원장 회의 (제3차, 판문점)  
(남북조절위원회 확대개편문제 토의)
  - 서울측 : 각기 당국·정당·사회단체에서 10명 내외로 구성
  - 평양측 : 각기 당국자 5명 이상, 60~70개 정당·사회단체에서 각기 5~20명씩으로 구성
  
- 1974. 2. 15 북한측 포함 서해 공해상에서 어로중이던 우리측 어선 수원 32호를 격침, 수원 33호를 납치
  
- 1974. 2. 25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제2차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한적 : ① 2·15 서해 어선 격침 및 납치사건에 대한 인도적 조치 촉구(피납 어부명단 요구)  
② 제8차 본회담을 1974. 4. 9~10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 북적 : 한적측 제의 외면
  
- 1974. 2. 27 남북조절위 부위원장회의(제4차 자유의 집)
  - 서울측 : 서해 어선격침 및 납치사건에 관한 다음 5개항의 사태수습 조치 요구
    - ① 이번 사건에 대해 과오를 시인할 것.
    - ② 납치된 어부들과 어선 및 희생된 어부의 유해를 즉각 송환할 것.
    - ③ 이번 사건의 책임자를 엄중히 처단할 것.
    - ④ 인명의 피해와 재산상의 손실에 대해 보상할 것.
    - ⑤ 이러한 불법행위의 재발방지를 보장할 것.
  - 평양측 : ① 서해 어선사건은 간첩선사건이라고 생떼.  
② 조절위 확대개편문제에 대하여 제3차 부위원장회의시 제의했던 자기측 제안을 철회하고, 남북조절위원회는 현 규모대로 하되, 남북 정치협상회의의 병행을 제의.
  
- 1974. 3. 11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제3차 판문점 중감위회의실)
  - 북한측 : 한적측의 1974. 4. 9~10 제8차 본회담 서울개최 제의를 거부하



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판문점 본회담 예비회의 개최를 제의.

- ① 쌍방대표단 부단장을 책임자로 구성
- ② 본회담의정에 대한 예비적 토의 진행

- 1974. 3. 17 남북조절위 부위원장회의(제5차 판문점)  
(서해 어선사건문제와 조절위 확대개편문제 논의 반복)
- 1974. 4. 3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제4차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한적측 : ① 남북적십자 쌍방과 적십자 국제위원회의 3자로 구성되는 억류 어부 공동조사단을 북한에 있는 억류 현장에 파견할 것을 제의
  - ② 다음과 같은 판문점 본회담 임시회의 개최를 제의  
(가) 제8차 본회담 개최문제를 협의, 본회담의제를 토의  
(나) 쌍방 대표단의 수석대표가 참가
  - 북적측 : 한적측 제의 거부
- 1974. 4. 24 남북조절위 부위원장회의 (제6차 자유의 집)  
(남북조절위원회 정상화문제와 어선사건문제 논의 반복)
- 1974. 4. 29 남북적십자 실무대표접촉(제5차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한적측 : ① 아측의 임시회의안과 북측의 예비회의안의 공통점 모색 제의
  - ② 억류어부와 가족간의 서신교환 알선 제의
  - 북적측 : 한적측 제의 거부
- 1974. 5. 22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제6차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쌍방 제안의 공통점에 입각한 절충안에 합의)
  - 합의명칭 : 실무회의
  - 대표구성 : 교체수석대표 및 대표 2명씩
  - 장 소 : 판문점
  - 의 제 : ① 본회담의제에 대한 예비적 토의
  - ② 본회담 개최문제토의
  - 기 간 : 본회담 개최시까지
- 1974. 5. 29 남북적십자 실무대표 접촉(제7차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제6차 실무대표 접촉시 합의한 실무회의에 관한 구체적 사항 합의)  
합의내용 : ① 첫회의일시 : 1974. 7. 10 10:00
- ② 장 소 : 판문점 중감위원회의실
- ③ 구 성 : 쌍방 교체수석대표 및 대표 2명씩과 쌍방 수행원 각기 4명씩
- ④ 회 의 형 식 : 쌍방 연락단장간에 협의 결정

- 1974. 6. 28 남북조절위 부위원장회의(제7차 판문점)
  - 서울측 : 동해공해상의 아측 경비정 격침사건에 대한 엄중한 경고
  - 평양측 : 동해 경비정사건을 자위권 발동이라고 주장
  
- 1974. 7. 10 남북적십자실무회의(제1차)
  - 한적측 : ① 제8차 본회담을 1974. 8. 30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제의  
 ② "노부모의 생사확인사업"을 시범적으로 우선 실시할것을 제의
  - 북적측 : 한적측 제의 거부
  
- 1974. 7. 24 남북적십자실무회의(제2차)
  - 한적측 : ① 1974. 8. 30 제8차 본회담 서울개최 촉구  
 ② 노부모의 주소, 생사확인, 판문점면회, 방문알선 사업의 우선 실시, 촉구
  - 북적측 : ① 한적측 제의 거부  
 ②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동성명채택 주장  
 (가) 반공법·국가보안법등 철폐  
 (나) 반공단체 및 반공기관 해체  
 (다) 반공정책 중지  
 (라) 정당·사회 단체대표들의 적십자사업참가 및 활동보장
  
- 1974. 8. 15 8·15 저격사건 발생
  
- 1974. 8. 15 박대통령 광복절 제29주년 경축사에서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제시
  - ① 남북 상호불가침조약 체결
  - ② 남북대화 성실 진행
  - ③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 실시
  
- 1974. 8. 28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제3차)
  - 한적측 : 8·15 저격사건과 관련 다음 3개항 실행 요구  
 ① 폭력과 살인을 지령하는 북한의 범죄적 책임자를 처단하도록 할 것.  
 ② 북한의 폭력혁명노선을 배격할 것.  
 ③ 북적은 북한당국의 폭력노선에 맹종하는 태도를 탈피하고 회담의 정상화에 성의를 다하고 행동으로 표시할 것.
  - 북적측 : 8·15 사건이 인도주의 회담과 무관하다고 주장
  
- 1974. 9. 21 남북조절위 부위원장회의(제8차 자유의 집)
  - 서울측 : ① 8·15저격사건과 관련 다음 3개항 요구  
 (가) 관련 책임자 처단  
 (나) 대남폭력혁명정책 포기  
 (다) 박대통령의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 수락

- ② 남북조절위원회 재개를 위하여 다음 3개항의 수락을 요구
      - (가) 부위원장회의 종결 및 남북조절위의 정상적 운영에 동의
      - (나)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의 수락과 재개될 조절위에서 상호불가침협정체결문제를 토의
      - (다) 대남적화통일노선의 포기 및 일철의 폭력과 무력도발을 중지
  - 평양측 : ① 8·15 저격사건 관련을 부인
    - ② 다음과 같은 조절위 재개조건을 제시
      - (가) 6·23 선언 철회
      - (나) 대미·대일유대관계단절
      - (다) 반공정책 중지
      - (라) 조절위와 정치협상회의의 병행수락
- 1974. 9. 25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제4차)
    - 한적측 : 노부모의 소재, 생사확인, 상봉, 방문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것을 중용
    - 북적측 : 한적측 제의 거부
  - 1974. 11. 5 남북적십자 실무회의 (제5차)
    - 한적측 : 제8차 본회담 서울개최문제와 노부모문제 우선해결 재촉구
    - 북적측 : 한적측 제의 계속 거부
  - 1974. 11. 15 비무장지대 남방지역 지하에서 북측이 구축한 [땅굴]발견
  - 1974. 11. 29 남북적십자 실무회의(제6차)
    - 한적측 : 노부모의 생사, 주소확인, 상봉, 방문, 서신교환을 실시하기 위한 다음과 같은 구체적 방안 제시
      - ① 60세 이상의 남녀노인을 노부모로 함
      - ② 노부모의 상봉을 위해 판문점면회소 설치
      - ③ 노부모의 서신교환을 위해 판문점우편물교환소 설치
      - ④ 노부모의 방문을 위해 신청 및 추석전후 15일간 방문 기간을 설정(사정에 따라 수시방문도 가능)
    - 북적측 : 한적측 제의 거부
  - 1974. 11. 30 남북조절위 쌍방 대변인 접촉(판문각)
    - (북측 요청에 의하여 이루어짐)
    - 평양측 : 부위원장회의 무기연기 제의
  - 1974. 12. 2 서울측, 예정대로 부위원장회의를 개최할 것을 촉구(전문)
  - 1974. 12. 3 평양측, 제9차 부위원장회의를 1975. 1. 8로 연기 및 1974. 12. 4 쌍방 대변인접촉을 제의(전문)

- 1974. 12. 3 서울측, 제9차 부위원장회의 1975. 1. 8 연기를 수락하고, 1974. 12. 18 간사회의 개최를 제의(전문)
- 1974. 12. 14 남북조절위 쌍방대변인 접촉(관문각)
  - 서울측 :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3)일나항의 명문조항에 의거한 현행 남북조절위 간사회의를 서울측 제의대로 12월 18일 개최할 것을 촉구
  - 평양측 : 간사회의 개편을 새로운 선행조건으로 제기하므로써 12월 18일 간사회의 개최를 사실상 거부

# 남북대화 제8호

(1974. 12 ~ 1975. 3)

# < 목 차 >

제1부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 .....	3
1. 평양측, 부위원장을 교체 .....	3
2. 서울측, 북한의 각종 대남 도발 규탄 .....	5
3. 제2의 비무장지대 지하 터널 발견 .....	13
4. 서울측, 북한의 거듭되는 대남비방 반박 .....	15
제2부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 .....	22
한적, 노부모 가족사진 교환 제의 .....	22
제3부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	24
“북한은 대남폭력혁명노선을 포기하고 남북대화 정상화에 호응하라” .....	24
제4부 자 료 편 .....	32
제29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안(전문) .....	32

## 제1부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

### 1. 평양측, 부위원장을 교체

남북조절위원회의 1975년은 그 동안 판문점에서 그나마 진행 되어온 부위원장회의의 마저 이를 격하시켜 더욱 유명무실하게 만들려는 북한 측의 집요한 기도가 더욱 노골화 되는 것과 함께 밝았다.

이에 앞서 북한은 1974년 12월 4일로 예정되었던 남북조절위원회 제9차 부위원장회의를 연기시키는 과정에서 부위원장회의 대신 쌍방 대변인간의 실무자 접촉을 가질 것을 제의함으로써 부위원장 회의의 실질적인 중단을 기도했으나 대한민국의 단호한 거부로 말미암아 뜻을 이루지 못했다.

대한민국측은 북한이 대변인들간의 실무자 접촉을 제의한데 대해 그보다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공식기구이면서도 그 운영이 중단되고 있는 간사회의를 개최할 것을 반대 제의했다.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더욱 퇴화시키기에 급급하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부분적으로나마 정상화시켜 주게 될 간사회의의 개최 제의를 받아들일 수 없었다. 북한은 부위원장회의를 실무자 접촉으로 대체시키자는 주장을 철회하는 대신 간사회의개최의 조건으로 서울측 간사회의 구성인원의 교체를 요구함으로써 간사회의개최의 길을 봉쇄했으며 연기된 제9차 부위원장회의를 신년초인 1975년 1월 8일에 열기로 마지못해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측은 그들의 기도를 포기한 것이 아니었다.

제9차 부위원장회의의 날자를 불과 이틀 앞둔 1월 6일 북한은 그 동안 대화일선에서 잠적한 채 오직 1973년 8월 28일의 일방적인 대화중단 선언때 명의를 사용한 일 밖에 없는 김영주 공동위원장의 이름으로 전화통지문을 서울측에 보내고 여기서 평양측 부위원장 류장식을 해임하고 그대신 조명일을 후임으로 임명했다는 것을 일방적으로 통고해 왔다.

이러한 북한측의 행동에는 북한측 나름대로 치밀한 계산에 입각한 숨은 의도가 깔려 있었다.

북한이 노린 것은 첫째로 부위원장 회의의 실질적 격하였다. 이미 주지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남북조절위원회는 사실상 남북한의 책임있는 당국간의 기구로 발족된 기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3의 가」항에서 쌍방의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의 급은 「장관 또는 차관」(북한의 경우는 「상 또는 부상」)급이라야 한다고 규정해 놓고 있다.

이 합의서의 규정에 의거하여 서울측의 장기영 부위원장은 「전직 부총리」의 자격으로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평양측 부위원장 류장식은 당시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 겸 대외사업부장」으로 북한의 이른바 「상」 급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는 것으로 인정되어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이었다.

1월 6일의 전화통지문에서 조명일의 직책은 「중앙인민위원회 참사 겸 조국평화통일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소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직책은 그 자체가 무엇이 무엇인지 모를 요령부득한 것일 뿐 아니라 그나마 편의에 의해 급조된 것임에 틀림없었다.

실제로 조명일은 1971년 남북적십자 예비회담이 시작된 이래 「적십자인」이라는 신분을 내세우면서 적십자 회담에 참가해 왔다. 조는 적십자 예비회담 때 북한적십자회측 3석대표였으며 본 회담에서도 3석대표 겸 대변인이었고 1974년 7월부터 관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적십자 실무회의에 역시 북측측 대표로 참가하고 있었다. 조의 경력은 북측의 문화선전부장, 출판보도부장, 북측 중앙위원회참사, 북적중앙위원회 상무위원 또는 서기장 등을 역임한 것으로만 알려져 있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류장식을 후퇴시키고 그의 후임으로 조명일을 부위원장에 임명함으로써 북한이 노린 의도는 너무나 분명했다. 즉, 북한이 노린 것은 오직 하나, 그나마의 부위원장 회의마저 이를 질적으로 격하시켜 더욱 유명무실한 존재로 만들 것을 기도한 것이다.

북한의 이 조치의 또 하나의 특색은 그것이 완전히 일방적인 조치라는 것이다. 전기 합의서 「3의 가」항은 남북조절위원회의 부위원장과 간사위원 및 위원은 「쌍방간의 사전협의를 통하여」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이 조항을 무시하고 자기측 부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하고 단순히 이를 상대방에 통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만약 대한민국측이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삼아 북한측의 부위원장 교체를 수락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명약관화였다. 이틀 뒤로 임박한 제9차 부위원장 회의의 유산은 거의 자동적이며 그것이 빌미가 되어 부위원장회의의 운영자체가 장기간 중단될 위험성 역시 예견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노림수는 여기에도 있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예의 검토한 끝에 북한에 의한 일방적인 부위원장 교체를 받아들이기로 하고 1월 7일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이를 북한측에 알려 주었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 두 차례나 연기가 거듭 되어온 남북조절위원회 제9차 부위원장회의는 1월 8일 끝내 열릴 수 있었다.



## 2. 서울측, 북한의 각종 대남 도발 규탄

<1975년에 들어와서 남북조절위원회는 두 차례의 부위원장회의 (제9차: 1월 8일, 제10차: 3월 14일)를 가졌다. 이들 부위원장회의에서 서울측은 남북조절위원회 기능의 조속한 정상화를 거듭 촉구하고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회의를 하루 빨리 속개할 것을 희망했다. 그러나 평양측은 소위 남북정치협상회의의 소집을 고집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데 계속 반대했다. 이들 부위원장 회의에서는 특히 1975년에 들어와서 더욱 격화일로로 걷고 있는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각종무력 및 폭력도발 행위가 크게 거론되었으며 서울측은 이러한 북한의 대남도발 사례들을 구체적으로 예거, 그 부당성을 날날이 지적하고 평양 측에 대해 이러한 도발행위들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다음은 3월 14일의 제10차 부위원장 회의에서의 장기영 서울측 부위원장의 발언내용이다. 쌍방은 제11차 부위원장 회의를 5월 30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편집자 주-

### 조부위원장

최근, 특히 1975년 새해에 들어와서, 우리의 남북간에는 일련의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들이 번갈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북관계는 지금 매우 어렵고도 중대한 국면에 처해 있다는 것이 나의 솔직한 소감입니다.

나는 지난 1년반 동안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하루 속히 정상화시키자는 주장을 거듭 거듭 되풀이해 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하고도 명료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분단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추진하려 한다면 그러한 우리의 노력은 우리의 남북관계를 착실하게 차근 차근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것은 7·4남북공동성명이 명백히 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쌍방이 이미 합의한 원칙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일을 주관하는 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만약 우리의 남북관계를 착실하게 개선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나아가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하고자 하는데 진정으로 뜻을 함께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남북조절위원회를 이미 쌍방간에 합의된 바 있는 목적과 규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것이라는 데는 아무런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러한 원리와 원칙에 반하여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으며, 그 이래 중단된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시키는데 계속 반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그 동안 남북간에 이루어졌던 일체의 합의사항들을 일방적으로 짓밟고 그러한 합의사항들에서 명백히 금지되어 있는 우리에게 대한 침략행위, 즉 각종의 불법적인 무력 및 폭력도발행위를 재개하고 또 나날이 격화시켜 왔습니다. 특히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대한 귀측의 그러한 도발행위는 더욱 그 빈도가 잦아지고 그 양상이 다양화되어 우리의 남북관계를 매우 심각한 국면으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조국의 평화통일 문제와 함께 우리 남북관계의 장래를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러한 귀측의 행동은 오늘의 이 회의에서 우선적으로 토의되고 또 시정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작년 11월 귀측이 휴전선 비무장 지대 안에 구축하고 있는 지하동굴들 중의 하나를 발견한바 있습니다. 고량포 서북방 비무장지대의 우리측 지역 안으로 1,200m나 파 내려온 끝에 발견된 문제의 지하동굴은 그 규모와 내부시설로 미루어 볼 때 그 목적이 단시간 안에 대규모의 병력과 장비를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남쪽의 우리측 지역안으로 우리 모르게 침투시키는데 있는 것임을 분명히 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귀측이 아직도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이라는 망상에 사로 잡혀있으며,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 대한 또 하나의 기습에 의한 대규모 무력공격을 준비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구체적 증거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뒤의 사태 진전은 우리의 그러한 우려를 더욱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에 대하여 이들 비무장지대 지하동굴들을 지체없이 즉각 파괴하고 철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기는 커녕 귀측은 지금 바로 이 시각에도 두터지처럼 비무장지대의 땅속에서 이들 동굴을 파내려 오는데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이 비무장지대의 몇 곳에서 이들 땅굴을 파내려 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 귀측이 오는 10월의 소위 「노동당」 창건 30주년 기념일을 준공목표로 하여 이 비무장지대 지하동굴의 구축을 서두르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귀측에게 분명히 얘기해 둡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발달된 토목공학 기술은 귀측의 그러한 무모한 땅굴공사가 귀측이 바라는 대로 완공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귀측이 이들 지하동굴을 구축함으로써 이를 통해 성취하려고 기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한낱 이루어 질 수 없는 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보다도 귀측이 그렇게 몽상하고 있는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야망은 그 자체가 환각에 사로잡힌 자들의 부질없는 미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귀측의 비무장지대 지하동굴 구축공사는 양식있는 전세계 여론에 의해 실소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귀측은 알아야 합니다. 작년 겨울 제29차 UN총회에서 영국대표는 『튼튼대 한반도의 비무장지대 안에 북한측이 땅굴을 파고 있다고 하니 차라리 남북한의 대표들이 이 땅굴 속에서 만나서 오손도손 얘기하면 어떻겠느냐』고 말해 만장의 폭소를 불러일으킨 일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귀측의 대표들도 참석해 있었으니 만큼 아마도 그들도 그러한 외국대표의 조롱을 듣고 얼굴 뜨거운 부끄러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오늘 다시 한번 귀측이 그러한 되지 못한 땅굴 공사를 걷어 치우고 이미 파 놓은 부분은 즉각 파괴, 철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나는 이와 관련하여 만약 귀측이 비무장지대 땅속 깊은 곳에 이러한 지하동굴들을 파는데 투입하고 있는 막대한 물력과 인력을 보다 평화적인 목적에 전용했다면 북한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어려운 일상생활이 경제적으로 좀 더 나아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에 귀측의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금년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대한 귀측의 불법적인 각종 도발행위는 이미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날이 갈수록 더욱 격화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23일 귀측은 확성기에 의한 휴전선 대남방송을 일방적으로 전면 재개했다가 이틀만에 슬그머니 이를 다시 중지했습니다. 귀측은 최근 우리측 지역에 대한 선전 「빠라」 살포를 급격하게 증가시키고 있거니와 금년에 들어와서는 이들 「빠라」를 우리측 지역으로 띄워 보내는데 종래 사용하던 고무풍선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형기구 마저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귀측은 이미 오래 전부터 우리측 지역을 시청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시설을 귀측 지역 안에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악랄한 비방방송을 실시해 오고 있거니와 금년 1월부터는 국제전기통신연합의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의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불법적인 전파 방해까지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15일 귀측은 동해의 우리측 북방한계선 남쪽으로 무장간첩선을 침투시키려 기도했으며, 2월 26일에는 서해에서 우리측 경비 함정의 식별과 검문을 위한 정선명령에 불응한 채 도주를 기도하던 귀측의 무장 선박 1척이 우리 함정을 들이받아 침몰하자 귀측은 여러 대의 항공기와 여러 척의 포함들을 사건현장 부근에 집결시키고 우리측 영공과 영해를 침범하는 공공연한 무력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도발행위 가운데 나는 우선 귀측이 우리를 상대로 하여 감행하고 있는 불법적인 전파해적행위에 관하여 잠시 얘기 하고자 합니다.

두말 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의 문명세계에 있어서 전파는 가장 유력한 의사 소통의 매개수단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전파에는 국경이 없으며, 따라서 전파교통의 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그 때문에 오늘날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가입하고 동 연합의 헌장에 규정된 바에 따라 전파를 관리함으로써 이 중요한 전파 교통의 질서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동 연합헌장은 세계 모든 나라의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국들에 대해 동연합 산하의 국제주파수 등록위원회에 등록을 하고 출력과 주파수대를 인가받아 방송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일정지역 안에서 운영되는 방송국 상호간에 전파방해가 결과될 수 있는 주파수대의 사용을 엄금하는 한편 인가된 시청 지역에서의 적정수요를 초과하는 출력에 대해서도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에서는 대한민국만이 유일하게 동 연합에 가입해 있으며, 동 연합헌장에 의거하여 합법적으로 인가된 「라디오」 및 「텔레비죤」 방송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귀측은 1945년 해방 이후부터 귀측 지역안에서 독자적인 「라디오·텔레비죤」 방송시설을 설치하고 방송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에 근거할 때 귀측의 그러한 방송시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한낱 불법적인 사설방송시설이며, 그러한 시설에 의해서 실시되고 있는 방송은 불법적인 해적방송입니다.

나는 그러나 지금의 시점에서 새삼 이 문제를 가지고 시비하려 하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한반도 상공의 전파를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제기되어 있는 심각한 문제는 그러한 불법적 해적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귀측이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적 해적방송임을 기화로 하여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의 모든 관계조항을 무시, 외면하고 합법적인 우리측의 「라디오·텔레비죤」 방송에 대해 기술적으로 가능한 모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한 방송방해를 감행할

뿐만 아니라, 방송의 출력을 멋대로 강화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측 지역에 대한 악랄하기 짝이 없는 비방방송을 실시함으로써 불법적이고도 부도덕한 전파전을 도발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귀측은 귀측이 불법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방송시설을 가지고 우리의 합법적인 「라디오」 방송국들이 방송을 실시하고 있는 주파수대의 인접 주파수대로 방송을 실시함으로써 우리의 「라디오」 방송을 부당하게 방해해 왔습니다.

이것은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제35조가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동 연합의 국제주파수등록 회원수는 한반도의 경우 이 지역의 적정수요판단에 입각하여 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의 출력은 500kw이하에 한하여 인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측 지역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라디오」 방송국들의 출력은 따라서 모두 500kw미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귀측의 중앙방송의 출력을 물경 1,500kw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에 명백히 위배되는 불법행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귀측은 해주에 소위 「통일 혁명당의 목소리」 라는 이름의 불법적인 유령 「라디오」 방송시설을 설치해 놓고 마치 이것이 우리측 지역 안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위장하면서 500kw의 출력으로 우리에게 적대적인 악랄한 비방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높았던 흑색 심리전 방송인 일제의 「도쿄·로즈」와 「나치」 독일의 「디·나치·로렐라이」의 전철을 답습한 것으로 어떠한 국제법에 의해서도, 그리고 인류의 양심과 양식에 의해서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행위인 것입니다.

귀측은 또한 귀측 지역 안에서 이른바 OIRT방식, 즉 동구라파 방식에 의한 「텔레비죤」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측의 「텔레비죤」 방송 방식은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US 방식과는 그 송수신 방식이 크게 다른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귀측 지역에 보급되어 있는 수상기를 가지고는 우리측의 「텔레비죤」 방송을 시청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은 개성에 귀측 지역의 주민들은 시청할 수 없는 US방식에 의한 「텔레비죤」 방송 시설을 설치하고 1971년 4월이래 「채널」 13으로 방송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의 「텔레비죤」 방송은 귀측 지역 내에서의 시청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우리 측 지역에서 시청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사실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귀측은 금년 1월부터 문제의 개성에 설치된 불법적 「텔레비죤」 방송 시설을 이용하여 「채널」 9로 방영되고 있는 우리측 KBS 「텔레비죤」 방송에 대한 전파 방해를 시작하였으며 문제의 전파방해는 바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귀측의 행위 역시 국제전기통신연합헌장 제35조가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불법행위입니다.

오늘날 의사소통의 가장 중요한 매개수단으로 전파가 차지하고 있는 막대한 비중을 고려할 때 나는 작금 귀측이 감행하고 있는 전파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는 실로 매우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는 사실에 귀측의 각별한 주의를 환기하는 바입니다.

이상에서 언급된 귀측에 의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전파 해적행위 가운데 일부는 이미 과거 남북 조절위원회 공동위원장회의나 조절위원회회의, 또는 부위원장회의에서 거론된바 있고 또 1972년 11월 4일의 공동위원장 제2차회의에서는 상호 비방방송을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언제나 이러한 불법행위가 귀측과는 무관한 것이라는 영똥한 억지 주장으로 발뺌을 하는데만 급급해 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의 발달된 전파과학의 시대에 있어서 그러한 거짓말은 결코 끝까지 통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나는 오늘날 귀측의 갖가지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극도로 문란해진 한반도상의 전파교통 질서의 현황을 조사,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시정조치를 강구하기 위해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주관아래 남북쌍방의 기술자들이 참가하는 조사단을 구성하여 이상에서 내가 제기한 귀측의 여러가지 불법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것을 정식으로 제의합니다. 이와 아울러 나는 귀측이 현사태의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러한 조사가 실시되기 전이라도 지체없이 그러한 불법행위를 모두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마찬가지 취지에서 나는 귀측이 풍선 또는 기구에 의하여 우리측 지역에 띄워 보내고 있는 선전 「비라」의 살포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2월 15일 동해에서 발생한 무장간첩선 사건과 2월 26일 서해에서 발생한 무장선박사건 역시 나는 대단히 심각하게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2월 15일 동해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하여 귀측은 문제의 무장간첩선이 「원산 앞바다를 표류중이었다」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원산 앞바다와는 동떨어진 우리측 북방한계선 남방의 거진 앞바다입니다. 사건의 상황이 시작되었을 때 문제의 무장간첩선은 13 「노트」의 시속으로 일로남하중이었습니다. 동 간첩선은 2기의 고속 「엔진」과 2정의 기관포를 장비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레이다」 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배가 과연 귀측이 주장하는 대로 「표류중의 선박」이라는 것입니까.

사건발생 수역을 초계중이던 우리측 경비함정들은 우리측 북방한계선을 넘어 계속 남하하는 문제의 무장간첩선을 거진 앞바다에서 따라 잡아 검문을 위한 정선을 명령했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국제해양법이 우리에게 부여하고 있는 합법적이고도 당연한 권리를 행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의 귀측 간첩선은 이러한 정선명령에 불응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검문을 하려 하는 우리측 경비함정에 기관포 사격을 가하면서 선수를 북으로 돌려 시속 22 「노트」의 고속으로 북상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표류중인 배」라는 것입니까. 우리는 문제의 간첩선에 대해 우리의 자위권을 행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결과 문제의 간첩선은 우리측 북방한계선 남쪽에서 격침되었습니다. 사건당시 문제의 배는 기관고장도 아니었으며 또 사건당시 사건현장의 날씨는 귀측이 영똥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처럼 불순한 것이 아니라 시계10 「마일」 이상의 청명한 날씨였습

니다.

이상에서 명백해진 바와 같이 문제의 귀축 선박은 사건당시 결코 표류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문제의 선박은 스스로의 항적과 행동으로 그 배가 분명히 특수임무를 부여받고 계획적으로 우리측 수역안으로 침투시킨 간첩선임을 입증한 것입니다.

2월26일의 사건에 대해서도 좀 얘기합시다. 이날 오후 5시 30분경 서해의 백령도 서남방 23 「마일」, 대청도 서방23 「마일」 지점의 해상을 초계중이던 우리 경비함정은 정체불명의 선박들을 발견하고 이에 접근하여 식별과 검문을 위한 정선을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정체불명의 동선박들은 정선명령에 불응하고 도주하려고 우왕좌왕 하다가 그중 1척이 우리 함정을 들이받아 현장에서 침몰했습니다. 배마다 무장을 갖추고 있는 이 배들은 이러한 혼란의 와중에서 귀축의 배들로 판명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들 일단의 귀축 무장선박들은 침몰해 가는 문제의 배에 대한 우리 함정의 구조 작업마저 방해했습니다.

문제의 수역은 우리측 북방한계선 남쪽, 그리고 평화선 동쪽의 해상으로 우리의 해군함정들이 어로보호와 지도를 위해 항상 초계하는 수역입니다. 이러한 수역에서 우리 함정으로부터 정선명령을 받은 배들이 과연 귀축의 주장대로 귀축의 어선이었다면 그 배들은 당연히 정선명령에 따랐어야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문제의 배들이 단순한 어선이었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무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만약 문제의 배들이 우리 함정의 정선명령에 응했고 그 결과 어선임이 판명되었다면 그날의 불상사는 당연히 예방되었을 것이고 문제의 침몰된 배는 지금 안전하게 귀축의 어로수역으로 돌아가 고기잡이를 계속하고 있을 것입니다.

귀축은 이날 서해에서 문제의 사건이 발생하자 사건현장 인근해상과 공중에 여러척의 포함과 여러 대의 항공기를 집결시켜 이 지역에 대단히 위험한 군사적 대치상태를 빚어내고 다음 날인 27일 오후까지 이러한 위험한 대치상황을 지속시켰으며 그 동안에 도합 11회에 걸쳐서 귀축의 항공기들이 백령도와 대청도 상공의 우리측 영공을 침범함으로써 휴전협정을 공공연하게 위반하는 불법적인 군사도발을 감행했습니다.

이러한 귀축의 일련의 도발행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직접적이고도 공공연한 위협이고 도전이며 우리의 남북관계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 넣으려는 계획적인 처사로 나는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는 그렇기 때문에 문제의 사건들이 발생했을때 그때마다 전화통지문을 통하여 귀축의 그러한 무책임하고도 무모한 군사도발이 초래하게 될 중대한 결과에 대하여 거듭 경고하고 귀축의 심심한 반성과 자제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귀축이 냉정한 이성으로 되돌아가 앞으로 다시는 그러한 위험하고도 무모한 불장난을 되풀이 하지 않도록 엄숙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이제 오늘의 시점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문제는 거듭되고 있는 이러한 불법도발행위들로 말미암아 최근의 우리 남북관계가 전례없이 악화되고 있으며 남북간의 긴장상태가 과거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쌍방이 1972년에 역사적인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또 이에 근거하여 남북

조절위원회를 발족시킨 주목적은 바로 이상에서 언급된 것과 같은 불법도발행위를 방지하고 남북 관계를 개선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에 접근해 가자는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역으로 말해서 작금의 남북관계에 그러한 불법도발행위들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까닭은 바로 우리의 남북조절위원회가 맡은바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데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또 바로 그러한 견지에서 우리가 시급히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다름 아닌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해서 우리가 오늘의 이 회의에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문제를 매듭짓고 이미 1년반이나 지연되고 있는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회의를 빠른 시일 안에 서로 합의된 차례에 따라 귀측지역인 평양에서 개최하는데 귀측이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이미 과거에 여러차례 지적한 바와 같이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앞에 제기되어 있는 어려운 문제는 현실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 귀측이 남북조절위원회 재개의 조건으로 아직도 위원회의 개편을 희망하고 있다면 이미 우리가 제안한 바 있는 가장 합리적인 확대 개편안을 귀측이 받아들이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원칙론을 말한다면 위원회의 개편문제도 결코 위원회의 재개여부를 좌우하는 조건이 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문제는 일단 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켜 놓고 위원회의 회의를 열어서 거기서 난상토의를 통해 합의되는데 따라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또 정당한 것입니다.

실제로 남북조절위원회 기능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은 나 자신 이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무력이나 아니면 소위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의 대남폭력혁명을 통해 적화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 귀측의 침략주의 노선에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나는 최근 격화일로를 걷고 있는 귀측의 각종 불법도발행위도 실은 바로 귀측의 무력이나 대남폭력혁명에 의한 적화통일 노선으로 말미암아 빚어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다시 한번 분명히 해두거니와 귀측은 귀측의 그러한 불순한 기도가 결단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하루 속히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 귀측의 그러한 기도는 귀측이 몽상하는 적화통일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며 다만 우리의 남북관계만을 더욱 악화시키고 그러한 비생산적인 노선의 추구를 지탱하기 위한 부담의 가중으로 말미암아 귀측 지역에 사는 우리 동포들만 더욱 더 도탄에 빠져 비참한 생활에 허덕이게 만들 것입니다.

남북대화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입장은 보다 거시적 안목에서 민족과 조국의 장래를 걱정하는 일념으로 인내와 성실로써 오로지 평화를 다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한 평화통일에 한걸음 한걸음 다가간다는 것임은 이미 누차 명백히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자제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귀측은 분명히 명심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상에서 나는 진정으로 우리의 남북관계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최근의 남북관계의 여러가지 양상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나의 솔직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나는 귀하가 나의 이상 발언의 진의를 긍정적으로 이해하고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조속히 정상화시켜 남북관계의 착실한 개선

을 지향해 나가는 문제에 대해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이와 아울러 나는 지난번 제9차 부위원장회의에서 우리의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하나의 구체적 사업으로 남북간 우편물 교환을 실시하는데 합의할 것을 제의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귀측으로부터 가부간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오늘 회의에서는 귀측으로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의 제시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나의 발언을 일단 맺고자 합니다.



### 3. 제2의 비무장지대 지하 터널 발견

지하 50m에 높이 2m, 폭2.2m “용도는 전면전때 대량병력의 투입”

주한 유엔 군사사령부는 3월 19일 철원동북방 13km 지점의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방 유엔군측 지역 안에서 북한측이 구축한 또 하나의 지하 터널이 발견되었다고 발표했다. 주한 유엔군사령부 대변인 「윌리엄·W·우드사이드」 대령은 이번에 발견된 지하터널은 지하 50m에 구축된 것으로 정밀시추작업 결과 높이 2m, 폭 2.2m의 규모로 판명되었다고 밝혔다.

「우드사이드」 대령은 『유엔군은 북한이 휴정협정을 위반하고 비무장지대의 군사분계선 남쪽에 여러 개의 지하터널을 파고 있다는 정보를 여러 경로를 통해 입수, 그 동안 이들 지하터널의 소재를 조사하고 터널공사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추 및 차단공사를 벌여왔다』고 말하고 철원북방의 이번 지하터널은 그 결과로 발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폭 4km의 비무장지대를 지하에서 남북으로 관통하기 위하여 북한이 파고 있는 문제의 지하터널은 작년 11월 15일 고량포 북방의 비무장지대 군사분계선 남쪽 1.2km지점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다. 이번에 발견된 철원북방의 제2의 지하터널은 첫 번째 발견된 것으로부터 동북쪽으로 47k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

유엔군측은 제2의 터널 발견지점에서 문제의 터널을 차단하기 위한 역동굴작업을 진행시키켜 3월 24일 터널에 도달, 터널의 존재를 확인하는 한편 그 규모가 천정 넓이 2.1m, 높이 2m, 바닥 넓이 2.2m임을 확인했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에 의한 이러한 비무장지대 지하터널 구축공사가 휴정협정에 대한 중대한 위반행위를 지적, 3월 20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361차 군사정진위원회 본회의에서 이에 대해 엄중한 항의를 제기했으며 발견된 지하터널에 대한 현장공동조사를 요구했다.

북한이 휴전선 전역에 걸쳐서 비무장지대 안에 구축하고 있는 지하터널은 이미 발견된 것 2개 이외에도 10여개가 더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부전선을 방어하고 있는 한미합동 제1군단사령관 「제임스·홀링스워드」 중장은 지난 1월 30일 북한이 구축하고 있는 비무장 지대 지하터널은 『도합 14개 또는 그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으며 최근 북한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귀순한 북한노동당원 김부성과 북한군 소위 류대운은 3월 21일 서울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은 『지난 1971년 9월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휴전선 전역에서 북한군의 전방군단들이 군단별로 몇 개씩 책임을 맡아 이들 지하터널을 굴착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3월 20일의 제361차 군정위본회의에서 유엔군측 수석대표 「헨리·모건」 소장은 『이미 발견된 것 이외로 북한측은 판문점 서남방 4km 지점에 또 하나의 지하 터널을 파고 있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고 이 지하터널 공사를 즉각 중지하라고 요구했다.

3월21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2명의 북한으로 부터의 귀순자들은 북한이 구축하고 있는 이들 비무장지대 지하터널의 용도가 ① 대한민국의 전방진지들에 대한 전면기습공격을 위한 대규모 병력의 투입통로 ② 남한에서 「무장 폭동」이 일어났을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한 특수병력(8군

단)의 투입통로, 그리고 ③ 대남 간첩침투및 지하불순 세력에 대한 지원공급로라고 말했다.

철원북방의 두 번째 지하터널은 그 규모로 보아 1시간에 24,000명의 병력을 비무장 지대 남방 한계선 남쪽의 출구를 통해 배출할 수 있으며 찢차와 야포의 통과가 가능하다. 이들 비무장지대 지하터널들은 비무장지대 남방 한계선 남쪽 500m지점에서 5개의 산개된 출구를 갖도록 설계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출구는 평시에는 지표아래에 은폐되며 유사시에는 일제히 출구를 뚫게 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판문점 서남방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제3의 지하터널은 폭 1.6m 높 이 1.8m 총길이 3.5km의 규모이며 역시 지하 50m에서 굴착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하터널 구축공사에 대해 정부 대변인 이원경 문화공보부 장관은 3월 20일 성명을 통해 『북한공산집단은 한편으로는 남북대화에 응하는 체하고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거짓된 평화공세를 전개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같은 전쟁음모를 은밀하게 꾸미고 있다』고 비난하고 『북한공산 집단은 이같은 침략행위를 즉시 중지하고 그들이 구축해 놓았거나 구축하고 있는 모든 남침용 지하터널과 시설을 스스로 제거함으로써 7·4남북공동성명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행동으로 입증하라』고 요구했다.

서중철 국방부장관은 북한이 이들 비무장지대 지하터널 구축공사의 완공시기를 금년 10월로 잡고 있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북한이 그 동안 『「조국해방」과 「노동당」 창당 30주년이 되며 「남조선해방전쟁」(6.25전쟁) 25주년이 되는 금년 안에 조국통일을 성취해야 한다』는 선전을 강화해온 바 있음을 지적, 북한의 기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 4. 서울측, 북한의 거듭되는 대남비방 반박

“ 평화통일의 첫걸음은 평화정착으로부터”  
서울측, 북한의 거듭되는 내정간섭발언을 맹박

평양측은 제9차 및 제10차 부위원장회의에서도 이른바 「민족내부문제」 이론이라는 독단적인 논리를 앞세워 대한민국의 내정에 대한 터무니없는 중상·비방에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하고 남북 대화를 다시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한민국이 6·23평화통일 외교선언을 철회하고 반공정책을 중지해야 한다는 억지 주장을 되풀이 했다. 북한의 이른바 「민족내부문제」 이론이란 대한민국 내부의 문제도 같은 민족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간섭할 수 있다는 해괴한 이론이다. 이러한 억지 이론에 입각하여 북한 측은 『대한민국이 통일에 반대하고 있다』고 생떼를 쓰는가 하면 6·23평화통일 외교선언을 가리켜 「민족분열선언」이라고 독단하면서 이의 철회가 남북대화 재개의 「선결조건」이라고 억지를 부렸다. 서울 측의 장기영 부위원장은 3월 14일 제10차 부위원장회의에서 다음의 발언을 통해 북한의 거듭되는 대남비방 발언을 통박했다.] -편집자 주

조부위원장,

오늘도 당신은 우리의 기본임무인 조절위원회의 기능을 정상화시키는 문제의 해결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고 대화상대방인 우리의 내부문제를 가지고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비방·중상을 하는데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나는 귀측의 이러한 침략적인 태도가 말로 우리의 남북대화의 기본을 파괴하고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방해하는 근본 요인이라고 인식한 나머지 작년 9월 21일의 제8차 부위원장회의에서 당신의 전임자인 류장식씨에게 그러한 귀측의 대화 거부적, 평화파괴적, 통일부정적 태도를 버리도록 엄중히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그러한 부당한 태도를 반성·시정 하기는 커녕 오늘도 여전히 우리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부당하게 비방하고 중상하고 시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러한 귀측의 태도는 우리로서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귀측의 반성을 촉구하기 위하여 이제 잠시의 시간을 빌어 귀측의 그러한 태도의 부당성에 대한 나의 견해를 다시 한번 피력하려고 합니다.

당신네들은 당신네들이 우리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내부간섭이 아니라」고 궤변하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그 이유로 우리의 남과 북은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상대방 내부의 일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내부간섭이 될 수 없다」고 궤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네들은 그러한 터무니없는 엉터리 궤변이 논리적으로 그럴듯하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당신네들은 그러한 궤변에는 이 세상의 지각 있는 그 어느 누구도 승복하지 않는다는 것을 하루빨리 깨닫지 않으면 안됩니다.

만약 우리의 남과 북이 지금 정치적 통합을 이룩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어려운 대화

를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는지를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또 이문제는 객관적, 역사적 현실, 변조되지 않은 역사적 현실에 입각하여 인지해야 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근원은 1945년 우리의 조국이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뒤 국제공산팽창주의세력의 하수자로 북한지역에 들어온 일단의 외래공산주의자들이 정체불명의 조작된 「독립투쟁」 경력의 가면을 쓰고 외세의 비호아래 북한지역을 강점, 민주적 절차에 의거한 통일정부의 수립을 거부하고 38도선을 경계로 하여 국토와 민족의 분단을 초래한 데 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지금 한반도상에 민족적 정통성에 바탕을 두고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수립된 대한민국정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휴전선이북의 지역에 제멋대로 꾸며낸 별개의 정치 실체를 유지하고 있는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로 말미암아 아직도 남과 북이 하나의 나라로 통일되지 못한채 분단상태를 계속하고 있는 고통스런 현실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모든 난관을 무릅쓰고 당신네들과 대화를 하고 또 그 대화를 성공으로 이끌려고 노력하는 것은 그 궁극적 목적이 어떻게 해서든지 평화적 방법과 민족자결의 원리, 그리고 민주적 방식에 입각해서 이러한 고통스러운 분단상태를 종식시키고 남과 북이 다시 「한나라」로 통합될 수 있는 길을 개척하고자 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귀족은 언필칭 우리와 당신네들과는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당신네들이 우리의 일을 가지고 시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나는 우리와 당신네들은 다같이 「민족」이라는 말을 사용하지만 「민족」의 개념을 근본적으로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족」의 개념을 하나의 혈연공동체로서 파악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민족」은 핏줄을 같이하는 하나의 계로서 의식구조에 있어서 사상적, 문화적으로 조상대대로 전승되어 온 전통사회적 가치관에 바탕을 둔 역사공동체입니다.

반면 이른바 유물사관을 신봉하는 당신네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민족」은 그 자체가 사상적으로 용납되지 않는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은 「민족」을 혈연에 바탕을 둔 역사나 운명공동체로 보지 않고 이른바 유물사관이 분류하는 역사발전의 한 단계인 「부르조아」 사회에서만 특이하게 존재하는 하나의 사회현상으로 보고 있으며 「부르조아」 사회의 종말과 함께 소멸되는 개념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꾸어 말해서 당신네들이 이른바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민족이란 사상적으로 유해한 개념이고 따라서 궁극적으로는 타도와 박멸의 대상이 되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네들의 「정치용어사전」은 「민족주의」를 「부르조아」 사상이라고 단정하고 「그러므로 공산주의자들은 민족주의를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신네들의 사고는 근본적으로 인류생활의 기본유대인 혈연을,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부정하는 사상에서 연유하는 것으로 그 결과 육친의 아버지는 제쳐놓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이상화된 특정자연인을 가리켜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고 또 그렇게 하고 있는 진풍경이 당신네들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이 이러한에도 불구하고 당신네들은 감히 「민족」의 이름을 걸어 우리를 헐뜯고 비방하며

시비하고 심지어는 우리에게 대한 무력침략을 꾀하는 따위의 갖가지 범죄적 책동을 합리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비열한 행동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적화통일이라는 불순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떠한 거짓말과 사실의 날조도 서슴치 않는 당신네들의 정체는 여기서도 그 참모습을 드러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당신네들의 비열한 정체는 당신네들 지역에서는 이미 오래 전에 「박멸」되어 존재하지도 않는 불교와 기독교 등의 종교가 마치 지금도 있는 것처럼 꾸미고 조작된 종교단체의 이름으로 우리 사회의 종교인들을 선동해 보려고 시도해 보는 따위의 기만적인 행적에서도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당신네들의 그러한 비열한 행동 그 자체를 규탄해 마지않는 바이지만 그보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고 통일의 길은 더욱 멀어져가고 있다는 사실을 가슴 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민족」의 입장에 서서 우리의 남북문제를 논한다면 사실은 우리야말로 하고 싶고 또 하지 않으면 안될 얘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우선 나는 우리의 국토와 겨레를 양분하고 있는 조국의 분단상태가 왜 이렇게 장기화되고 있고 또 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길이 왜 이렇게 험난한가를 규명해야 하겠습니다.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그 원인은 다름이 아니라 외세의 비호아래 북한지역을 강점한 뒤 공산주의라는 우리 민족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외래의 폭력주의사상에 입각하여 북한사회에서 모든 민족적 전통과 역사, 가치와 유산을 말살하는데만 골몰해 온 당신네들 북한판 공산주의자들의 민족말살정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귀족 지역에서 민족의 얼이 담겨 있는 민족역사가 그것도 시시각각으로 당신네들 당국자의 필요에 따라 어떻게 왜곡되고 변질되고 날조되고 변천해 왔는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신네들의 소위 「주체」사상이나 「유일」사상, 또는 무슨 「김일성주의」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지고 각색되어 왔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네들의 소위 「혁명기념박물관」안에 가득 전시되어 있는 거짓과 가공, 날조와 변조의 정체를 낱낱이 알고 있으며 만일 당신네들이 동의만 한다면 현장에서 실물을 앞에 놓고 그 온갖 기만의 정체를 낱낱이 입증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당신네들은 우리 나라의 근세민족사와 개인의 이력서를 어느 한 특정인의 가계와 행적을 신격화시키기 위해 송두리채 변조해 놓았으며 그러한 뜻에서 볼 때 당신네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근세한국사는 사실과는 전혀 동떨어진 북한판 「용비어천가」인 것입니다.

당신네들이 북한지역에 오늘날 존재하는 고금동서에 사상유레가 없는 개인독재체제를 이룩하는데 사용해 왔고 또 지금도 사용하고 있는 그 가혹한 공포의 수법, 탄압의 수법, 말살의 수법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최근 소련에서 서방세계로 망명한 노벨문학상 수상작가 「알렉산더·솔제니친」은 그의 노벨상 수상작품 「수용소군도」에서 과거 「스탈린」치하의 소련에서 저질러졌던 공포의 탄압행위들을 인간양심의 입장에서 낱낱이 고발함으로써 읽는 이들의 마음을 울려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북한지역에서 당신네들이 우리의 민족을 말살하고 동포들을 백치로 만들어 개인독재의 충실한 노예로 만드는데 사용한 공포의 탄압수법들은 「솔제

니친」의 「수용소군도」 이상 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북한동포들을 올려준 공포와 전율의 아오지는 지금도 견제하고 있으며 사실은 북한지역이 「수용소군도」인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아마도 북한사회를 세계에서 가장 독립된 폐쇄사회로 밀봉해 놓음으로써 당신네들의 그러한 추악한 행적이 감추어지리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가리워진 것은 불쌍하게도 북한지역 안에서 온갖 고통과 불행을 겪으면서도 불평 한마디 할 수 없고 혼자서 생각하는 자유마저 잃어버린 북한동포들의 눈과 귀와 입일 뿐이며 귀족의 그러한 행적은 우리에게 그리고 바깥 세상에 소상하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많은 국민들은 6·25전쟁초기 북한공산체제의 정체를 생생하게 체험했고 지금도 그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또 대한민국 안에는 지금, 원래 북한에서 공산체제하에서 생활하다가 도저히 견딜 수 없었던 나머지 자유를 찾아 남으로 내려와 살고 있는 수백만의 월남동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당신네들 북한공산체제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산 증인들입니다.

대한민국의 3천5백만 국민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공산주의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이나. 그 이유는 바로 위에 말한 체험에 바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네들은 역사를 변조하다 못해 당신네들의 공산당사마저 시시각각으로 현재의 필요에 맞추어 개작·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족의 이른바 누구의 선집이 판을 바꿀때마다 내용이 어떻게 달라져 왔는지 잘 알고 있고 또한 예컨대 문제의 누구의 선집 제2판에서 제3권은 무슨 이유로 해서 모두 없었는가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공스러운 민족말살, 역사변조행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어 있는 기막힌 현실은 무엇입니까.

지금 북한사회에서는 민족역사는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남북의 두 사회간에는 공통의 민족적 동질성이 바탕으로부터 유실되어 버렸습니다. 국토와 민족의 분단이 장기화되고 조국통일로 향하는 길 앞에 난관과 장애가 날이 갈수록 가중되는 원인은 근원적으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진정한 민족사적 정통성의 바탕으로서 지금이라도 당장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분명하고도 간단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북한지역에서 공산주의자들이 몰려 나가고 공산체제가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는 것만이 북한에 살고 있는 1천5백만 동포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혈연공동체로서, 역사공동체로서 「민족」의 품안으로 돌아 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민족」의 입장에 서서 통일문제를 생각할 때 이 같은 요구는 우리로서 당연한 권리이고 또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해결하고자 하는 현실은 객관적 현실이라는

데서 일정한 한계 속에서 대답을 수립할 수밖에 없다는 고충을 안고 있습니다.

지금 객관적으로 분명한 현실은 귀측이 공산주의라는 외래사상을 버리고 민족의 품안으로 되돌아오는데 결코 동의하려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지금의 시점에서 귀측으로 하여금 그러한 변화를 일으키게 하려면 방법은 단하나, 힘, 즉 무력을 사용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방법은 단호히 배격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이 아무리 지고의 목표일지라도 이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무력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가뜩이나 고통을 겪고 있는 남북의 우리 민족에게 큰 고통과 불행을 가져 올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바로 귀측이 6·25전쟁이라는 처참을 극했던 동족상잔의 전화를 일으켜 우리민족에게 자손만대를 두고도 잊지 못할 고통과 불행을 안겨줌으로써 우리에게 일깨워준 교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시점에서 진정한 의미에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우리의 노력은 우선 남북간에 안정된 평화를 정착시키는 데로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남북간의 관계를 우선 서로 적대하지 않는 관계, 다시 말해서 서로 평화스럽게 공존하는 관계로 일단 만들어야 하겠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북간에 전쟁의 위협이 없어져야 하며 상호간에 신뢰의 기반이 조성되고 점차 확대되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또 쌍방은 다같이 있는 현실은 현실로 인정하고 상대방 내부의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질서에 대해서는 일체의 간섭을 지양하고 상호 합의할 수 있는 영역을 찾아내어 이를 실천에 옮김으로써 하나하나 실적을 쌓아 나가는 과정에서 합의의 영역을 점차 확대해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쌍방간에 민족공동체로서의 공통분모를 되 찾아 내고 이를 확대해 나감으로써 평화적 통일에 접근해 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북쌍방은 사실은 바로 그러한 통일접근방식에 합의한 바 있으며 그러한 합의를 내용으로 담은 7.4남북공동성명을 발표했던 것입니다. 또 바로 그러한 발상으로부터 남북적십자회담을 추진하기 시작했고 남북조절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작금에 와서 귀측은 7.4남북공동성명을 거두절미해 가지고 아전인수격으로 왜곡·해석하여 우리를 비방·증상하는 선전자료로만 이용하려 드는 용납 못할 배신적 행동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귀측의 행동이 배신적이고 기만적이라는 것은 남북공동성명의 문면이 스스로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귀측이 이러한 나의 견해에 동감이 아니라면 나는 우리가 다음에 갖는 회의에 당초 남북공동성명 기안에 관계했던 실무자인 우리측의 정홍진간사위원과 귀측의 김덕현간사위원을 배석시키고 남북공동성명의 문면을 축조해석할 것을 제의합니다. 후백을 가리는데 그 이상의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작금에 와서 귀측이 이른바 「분열주의」 운운의 허황한 중상, 비방을 퍼붓고 있는 우리의 6·23 평화통일외교선언은 이상에 언급한 통일접근방식, 즉 7·4남북공동성명의 정신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 진정한 평화통일정책입니다. 나는 6·23선언에 대한 귀측의 갖가지 비방·증상을 들을 때 과연 귀측은 6·23선언의 내용을 읽어보거나 하고 그러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귀측이 동의한다면 당장 오늘 이 회의에서라도 6·23선언의 내용을 귀하와 함께 축조토론하여 그것이 과연 우리가 설명하는 것처럼 진정한 「평화통일정책」인가 아니면 당신네들이 생떼를 쓰듯이 「민족분열」 선언인가 후백을 가릴 용의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해 둥니다.

작금의 상황, 그리고 부위원장회의에서 반복되고 있는 귀측의 발언으로 미루어 보면 귀측은 쌍방간의 합의사항은 송두리채 백지로 돌리고 무력남침을 위한 준비를 공공연히 진행시키는가 하면 엉뚱하게도 소위 「민족내부문제」 운운의 해피한 이론을 앞세우면서 소위 「남조선혁명」이라는 이름의 대남폭력혁명을 지령·교사·선동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당신네들은 무슨 민주주의, 무슨 인권을 가지고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인권을 시비하며 무슨 염치를 가지고 우리를 걸어서 「파쑈」 독재를 운운합니까.

당신네 체제라는 것은 공산당 1인독재체제이고 특정자연인의 종신독재체제이며 이른바 「김일성주의」라는 절대적 개인숭배체제 아래서 모든 주민들에게는 특정자연인의 교시에 「무조건적 절대복종」만이 강요되는 글자 그대로 신판 「파쑈」 독재체제입니다.

당신네들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당에서 지명한 단독후보에게 100%투표 100%찬성을 안겨 주는 민주주의이며 당의 지시에 무조건 복종하는 자유만이 인정될 뿐 사상선택의 자유도, 신앙의 자유도, 거주지 선택이나 여행의 자유도,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도, 직업선택이나 학문의 자유는 물론 오락의 자유마저 인정되지 않는 자칭 민주주의입니다. 그러한 「민주주의」를 가지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시비하겠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당신네들은 「파쑈」 또는 「파시즘」의 의미가 무엇인지나 알고 이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세계적으로 권위가 인정되고 있는 사전이 정의하는 바에 따르면 「파쑈」 또는 「파시즘」이란 「극단적인 1당독재 아래 일체의 반대파는 가차없이 탄압되고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의 통제하에 장악되며 병적인 민족주의를 추구하고 전쟁을 예찬하는 정치체제」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아니면 당신네 북한공산체제에 해당되는 말입니까. 조용히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자문해 보도록 권고합니다.

또 당신네 사회에서 말하는 인권이란 무엇입니까.

당신네 북한공산주의자들이란 자신의 권리는 물론 생명까지도 무조건 당과 수령에게 바치게 되어 있으니 결국 당신네 사회에는 개개인의 인권이란 존재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당신네 사회에 존재하는 인권이란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을 선동해 보려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사용되는 선전 용어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인권을 가지고 왈가왈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귀측의 태도는 모두에서 내가 지적한 바와 같이 대화거부적이고 평화파괴적이며 통일부정적 태도입니다.

따라서 귀측의 그러한 태도는 당연히 시정되어야 하며 귀측은 7·4남북공동성명의 진정한 기본정신으로 돌아오는 일대 회귀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나는 우리의 남북관계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문제라는 것을 귀측에게 일깨워 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이 끝내 우리의 평화지향정책과 평화통일노력을 외면하고 지금의 대남적화통일노



선을 고집해 나간다면 그러한 귀족의 태도는 우리의 민족역사가 결코 용납하지도, 방치하지도 않을 것임을 나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그리고 단호하게 경고해 둡니다.

귀족이 한반도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여 스스로의 분수를 알므로써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성실한 평화통일노력에 호응해 올 때 우리는 국가와 민족의 유구한 장래라는 보다 큰 대의를 위해 북한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간섭하지 않을 용의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이미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오늘날의 한반도에서 가장 시급하게 필요한 것은 안정된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선택권은 당신네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그러한 평화지향정책과 평화통일세력은 어디까지나 귀족의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귀족의 심사숙고가 있기를 정중히 권고합니다.

## 제2부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

### 한적, 노부모 가족사진 교환 제의

1975년에 들어 와서 남북쌍방간에는 그동안 세차례의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가 열렸다. 제7차(1월24일) 제8차(2월28일) 및 제9차(3월26일) 실무회의가 그것이다.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에 계속 계류되어 있는 토의안건은 북한적십자회측의 거부로 인하여 열리지 않고 있는 제8차 남북적십자본회담의 개최에 관해 합의하는 문제와 이산가족 및 친척 찾기 사업의 시범사업으로 우선 노부모를 대상으로 한 이산가족 및 친척찾기 사업을 실시하자는 대한적십자사의 제안 등 두 가지이다.

그러나 이들 세차례의 실무회의에서도 북한적십자회측의 계속되는 비타협적인 거부태도로 말미암아 이 두가지 문제에 관한 토의는 아무런 진전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본회담재개를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북한적십자회의 태도로 미루어 실무회의는 상당기간 공전상태가 계속 될 것 같다.

제7차, 제8차 및 제9차 실무회의에서 대한적십자사의 김연주교체수석대표는 쌍방의 합의에 따라 서울에서 열릴 차례인 제8차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개최에 불응하고 있는 북한적십자회측의 태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말하고 북한적십자회측이 본회담의 속개에 무조건 동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측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6·23평화통일 외교선언과 반공정책을 이유로 본회담의 속개를 거부했다.

대한적십자사측은 남북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 친척가운데서도 60세 이상의 노부모의 경우는 인도적인 견지에서 그들이 겪고있는 고통이 남 달리 애절한 것임을 지적, 전반적인 이산가족, 친척문제 해결에 앞서서 이들 노부모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할 것을 되풀이해서 주장했다. 대한적십자사측은 우선 이들 노부모와 그들의 흩어져 살고 있는 가족, 친척들 사이에 당사자들의 희망에 따라 먼저 생사여부와 건강, 그리고 현주소를 확인하는 사업을 쌍방 적십자의 주관 아래 실시하고 잇달아서 그들 사이에 상봉과 방문 그리고 서신교환을 실시하도록 하자고 제의했다. 대한적십자사측은 또 제8차 실무회의에서 『만약 북한적십자회측이 자기측 내부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들 노부모와 그들의 흩어져 살고있는 가족, 친척들간의 상봉과 방문을 실시하는데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라면 보다 실사가 용이한 간접적 방법으로 이들 노부모와 그들의 흩어진 가족 친척들간에 서로 그들의 근황을 알려 줄 수 있는 「가족사진의 교환」이라도 실시하자』고 제의했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측은 여전히 대한적십자사측의 이상과 같은 제의가 『지엽적인 문제로 문제의 핵심을 가리려 하는것』이라고 터무니없는 생떼를 쓰면서 대한적십자사의 제의를 받아 들일 것을 완강히 거부했다.

제8차 부위원장 회의에서 북한적십자회측은 엉뚱하게도 2월 15일 동해에서 발생한 북한측 무장간첩선의 해상침투기도 사건과 2월 26일 서해에서 발생한 무장선박의 대한민국측 해군작전해역

내 침입사건을 들고 나와 대한민국에 대한 격렬한 중상, 비방을 퍼붓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소모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측은 이들 두 사건이 사건의 내용으로 보아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불법적인 군사도발행위임이 분명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이들 사건은 적십자회담 실무회의에서 논의될 성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에 북한적십자회측의 주의를 환기 시켰다.

제3부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남북관계 부분발췌)

“북한은 대남폭력혁명노선을 포기하고 남북대화 정상화에 호응하라”

[박정희대통령은 1975년 1월 14일 새해 연두기자회견에서 남북대화가 북한측의 무성의에 의해 장기간 교착되고 있는것을 개탄하고 이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내용중 남북관계부분을 발췌한것이다.] - 편집자주

<문> 북한공산주의들은 남북대화를 외면하고 8·15저격사건을 일으키고 비무장지대에 땅굴을 파는 등 대한민국에 대한 적화공작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아래서 남북대화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남북대화는 솔직이 말씀드려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아무런 진전도 없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그 쪽에서 조절위원회 자체도 자꾸 격을 격하시키려고 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이것이 잘 안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나라 속담에 『염불에는 생각이 없고 잣밥에만 생각이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 사람들은 남북대화에 있어서도 엉뚱한 생각을 가지고 여기에 임하기 때문에 대화가 잘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북대화를 하자는 것과 그 사람들이 지금 대화에 임하는 것과는 근본 목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간에 어떻게 하든지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서 전쟁을 막자, 평화통일이라는 것은 그런 연후에 남북의 교류라든지 협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시간을 가지고 서서히 할 문제다. 우선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하나의 시작으로 서로 성의 있는 대화부터 시작을 하자 하는 것인데 저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의 정치선전수단으로 지금 악용하고 있고 모든 수단을 다 써서 우리 사회내부에다 불안과 혼란을 조성하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반공체제를 어떻게 하든지 흔들어 놓고 이것을 해이시키거나 또는 악화시켜서 우리 내부에 어떤 큰 허점이 생기면 폭력으로 소위 적화통일의 기회를 포착해 보자는 것이 그 사람들의 속셈이니까 회답이 잘 안됩니다.

『7·4공동성명』이 나오고 대화를 시작하자 마자 북쪽에서는 어떤 것을 들고 나왔습니까. 『7·4공동성명』이 처음에 발표되었을 때는 남북한 우리 모든 동포들은 그야말로 쌍수로 이것을 환영했습니다.

대단히 성급한 사람들은 당장이라도 통일이 되는 것처럼 좋아서 날뛰었고 또 그렇지 않더라도 당장에 통일은 안된다 하더라도 이제는 과거처럼 서로 남북이 싸우고 욕하는 일은 없어지고 서로 서신도 왕래할 수 있고 사람도 일부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교류도 점차 시작이 되어서 훨씬 더 부드러워 지지 않겠느냐 하는데 대해서 기대를 했는데 회답을 시작하자마자 북한사람들이 들고 나온 소리가 당장 『반공법』을 없애라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또 남한에서 지금 구속

하고 있는 반국가 사범들— 과거에 간첩행위를 했거나 간첩하고 내통했거나 공산당 지령에 의해서 지하운동을 한 소위 반국가 사범들을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자들을 『애국자』라고 합니다. 『민주적 애국자』라고도 합니다. 또 하는 소리가 남한에 있는 미군이 나가야 된다. 남북대화가 잘 안되는 것도 가장 근본 방해요소가 되는 미군이 여기에 주둔하고 있기 때문이니 이것이 나가야 된다, 이런 소리를 들고 나옵니다.

그 뒤에 우리측에서 『6·23선언』이 발표되자 『6·23선언』을 철회하라, 이것은 남북분단을 영구히 고정화하는 그자들의 말을 빌린다면 소위 『분열주의』·『분단주의』이니까 이것은 당장 철회해야 된다. 이런 것이 남북대화를 하는데 전제조건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또 요즈음에 와서는 『남북대민족회의』를 열자느니, 무슨 『연방제』를 하자느니 유엔에도 남북이 따로 따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고려연방제』를 만들어 가지고 단일대표로서 하나의 대표가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것이 현단계에서 안 된다는 것은 삼척동자라도 다 알고 있는 불가능한 사실인데 실현 불가능한 문제를 들고 나와서 우리보고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그 쪽에서는 적반하장격으로 남북대화가 안되고 중단된 책임은 오로지 남한에 있다, 자기들이 제안한 그러한 가장 『합리적』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대화가 안된다. 이렇게 지금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람들의 대화 목적이 대화를 선전도구로 이용하려고 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 그것을 우리는 미리 예측한 바이지만, 이 사람들은 이러한 선전을 하는 한편 대화도중에 우리 어선과 경비정을 격침한다든지, 납치해간다든지, 또는 작년 『8·15사건』과 같은 만행을 저지른다든지, 비무장지대 안에 땅굴을 뚫고 두더지 모양으로 기어 내려온다든지, 이런 엉뚱한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대화가 시작된 뒤에도 이런 것을 해 왔습니다 작년 8·15대통령 저격사건만 하더라도 문세광을 조사해 본 결과, 8·15대통령저격사건을 언제 지령을 했고 언제부터 여기에 착수했느냐 하면 1972년 9월에 그런 지령이 내려져서 그 때부터 이 계획을 꾸몄다는 것입니다.

1972년 9월이라면, 1972년 7월 4일에 『7·4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그야말로 공동성명에 남북이 서명하고 나서 아직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이러한 엉뚱한 음모를 꾸몄다는 것을 알수가 있으며 비무장지대 안에 뚫고 내려온 땅굴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저 정도 파자면 적어도 1년 내지 1년 반이상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7·4공동성명』이 발표된 이후에 땅굴을 뚫고 내려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땅굴은 이것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근간 몇 개 더 발표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할 문제는 땅굴공사를 언제까지 완료하려고 했느냐는 것인데 땅굴 공사의 완공목표는 금년 10월이었다는 것입니다.

금년 10월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위 그들의 「정권」 수립 30주년 『노동당』 창건30주년이라 해서 금년에는 대축제 기분으로 떠들고 있는데, 그러면 땅굴완공의 목표를 10월에 맞추어서 무엇을 하려고,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만 합니다.

작년 29차 유엔총회에서 영국 대표가 재미나는 얘기를 했습니다. 『남북대화가 요즈음 잘 안되어서 최근에 상당히 실망을 했는데 얘기를 들어 보니까 북한에서 DMZ(비무장지대)안으로 땅굴을 파고 지금 내려온다니까, 그 땅굴 안에서 남북대표가 모여서 오손도손 얘기하면 대화가 잘 될 것이 아니냐』고 조크를 해서 장내에 폭소가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 공산당들이 남북대화에 대한 생각과 태도가 이래 가지고는 솔직히 말해서 남북대화에 대해 우리가 기대할 것이라고는 사실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대화를 여하한일이 있든지 중단시키지 않고 이것을 정상화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족끼리 또다시 피를 흘리지 않기 위해서 6·25와 같은 그런 동족상잔의 비극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이 대화는 여하한 일이 있든지 중단시키지 않고 정상화하는데 온갖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통일이 우리 세대에 되려는지 안되려는지는 아무도 예언할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세대에 통일이 못된다 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세대가 해야할 일이 뭐냐? 동족간의 전쟁만은 막아야 하겠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사명이요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자면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할 가장 급선무가 무엇이겠느냐 하면 역시 평화정착입니다. 즉 긴장완화이고 평화정착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평화적인 통일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 평화정착이라는 것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겠고 또 절대적인 대전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평화정착없이 남북평화통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서로 전쟁을 해서 이기는 쪽이 통일을 한다는 식이라면 모르되 적어도 전쟁을 피하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하자고 하면 첫 단계가 평화정착입니다.

그러면 평화정착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뭐냐, 그것은 그 동안 우리 정부가 제시한 일련의 평화정책, 이것이 가장 합리적인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한측에서도 우리의 일련의 평화정책 즉 「6·23평화통일 외교선언」 「남북 상호 불가침 협정」 또 작년 광복절에 내가 천명한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허심탄회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 현 단계에서 남북이 평화정착을 하는데 있어서 이 방안 외에 또 무슨 묘안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이것은 가장 합리적이고 또 논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도 공산진영을 제외하고는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방안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에 있는 공산당들도 이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무력으로써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그들의 환상과 망령이 아직도 그들의 머리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북한 공산집단 안에 있는 극렬분자, 극단주의자, 좌경 모험주의자, 호전주의자 이러한 자들이 이런 망상과 환상을 머리에서 완전히 씻어 버리기 전에는 우리의 제안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알면서도 못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방법은 무엇이나,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빨리 국력을 키우고 우리의 힘을 키우는 길밖에는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무력이나 폭력을 가지고는 대한민국을 뒤집어엎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확실히 인식하고 체념하도록 만들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국력이 상대적으로 절대적인 우월성을 확보하는 것만이 그들로 하여금 이러한 환상과 망상을 버리고 그들의 소위 폭력혁명노선은 변경시킬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며 남북대화에 대해서도 좀더 성의를 가지고 응해올 것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산주의자들은 세계 어느 공산주의자이든 공산폭력혁명에 있어서는 한가지 전술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편이 약하다고 생각하면 무력이나 폭력을 가지고 집어삼키려고 달려들고 우리가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협상전술로 나옵니다. 이것은 세계 어디에서나 그들의 공통된 전술입니다. 중국 공산당도 그러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부족할 때에는 「국공합작」이니 뭐니 해 가지고 협상에 응해 나왔고 힘이 어느 정도 커지고 자신이 생긴 다음에는 국민정부군에 대해서 도전을 했습니다.

최근에 다시 전쟁이 재연되고 있습니다마는 월남에 있는 월남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의 공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1953년에 공산측에서 휴전을 제의해 온 것은 유엔군의 힘이 막강하고 도저히 자기들 힘을 가지고는 유엔군을 막아낼 수가 없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휴전을 제의해 왔던 것입니다.

그때 만약 우리 편이 약하고 자기들이 그대로 밀어제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면 공산측이 절대로 휴전을 제의해 올 리도 없고 우리측에서 제의를 했다라도 듣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흔히 동·서독관계는 다르지 않느냐, 이러한 소리를 합니다. 동·서독관계도 나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고 봅니다. 동독이 왜 무력을 가지고 서독에 덤비지 않느냐 서독이 동독보다 월등히 힘이 강하기 때문에 동독이 힘을 가지고 서독을 넘어뜨릴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협상에 응했고 유엔에도 같이 가입해서 지금 그야말로 평화공존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서독이 동독

보다도 모든 면에 있어서 힘이 약했다라면 지금 동독공산당이 아주 압전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라서 북한공산당이나 월남공산당모양으로 안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다만 서독이 상대적으로 국력이 월등히 강하니까 그런 짓을 못하고 협상을 했으며 북한공산당도 마찬가지로 나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강하면 협상하자고 옵니다. 약하게 보였을 때에는 언제든지 그 자들은 폭력으로 도전해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총화와 총력안보로 우리의 국력을 하루빨리 배양해야 하겠고 가속화해야 하겠습니다. 「10월유신」의 근본목적도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월유신」만이 우리의 민족적 과업을 완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나는 확신합니다.

여기에 일부 인사들 중에는 「유신체제」를 철폐해야 국민총화가 잘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남침을 막을 수 있다고 운운하는 것은 하나의 잡꼬대 같은 소리라고 나는 봅니다.

<문> 북괴는 우리가 제의한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을 거부하면서 유엔군의 해체를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을 말씀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작년 연초 기자회견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제의한 것이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 체결」이었습니다.

북한측에서 진심으로 평화를 원한다면 이것을 받아들여야 할 것 아니냐 하고 제의를 했는데, 그 뒤에 북한측에서는 계속 거절해 왔습니다.

이북에서는 또 우리가 「남북 상호 불가침협정」 제의를 하기 전에 그들이 말하는 소위 남북평화협정안이라는 것을 들고 나와서 여러 번 정치선전용으로 써먹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반대했습니다. 왜 반대를 했느냐, 그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협정이라는 것은 이름이 평화지 평화가 아닌 것입니다. 위장된 하나의 기만술책이고 평화를 위한 협정이 아니라 전쟁을 위한, 침략을 위한 협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그 자들이 들고 나온 평화협정의 골자를 보면 첫째가 남한에 있는 미군이 나가야 되고 유엔군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남북이 서로 병력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충돌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러니까 군축을 하자. 남북이 병력을 각각 10만 이하로 감축을 하자. 그리고 휴전협정을 철폐해버리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의한 불가침협정 내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북이 서로 무력침범을, 여하한 형태든 무력침략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약속하자. 그리고 서로 내정간섭을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공산주의를 싫어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굳이 그것을 비방하거나 간섭하지는 않겠다. 너희도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나 자본주의를 싫어하겠지만 간섭하거나 이에 대해서 비방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한가지는 현행 휴전협정체제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제의한 상호 불가침 협정의 골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한측에서는 거부했습니다. 그들이 왜 거부했겠느냐, 그 이유는 뻔한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력으로 적화통일을 하겠다는 그 사람들의 야욕과 환상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한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그들의 야욕을 기어이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 무력도발도 해야 하겠고, 간첩도 앞으로 계속 보내야 하겠고, 테러단도 보내야 하겠고 간첩을 보내서 지하당도 조직해서 그것을 자꾸 확대해 가지고 남한사회를 불안하게 만들고 혼란시켜야 하겠는데 만약에 불가침협정을 맺어버리면 그들이 이런 장난을 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많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북한측에서는 덮어놓고 유엔군은 철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28차 유엔총회에도 그런 안을 냈고 작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도 이런 안을 들고 나왔었습니다.

유엔군이 이 땅에 와 있는 것은 우리가 불러들였다는 것보다는 이북에 있는 공산당들이 불러들였다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1949년말 6·25가 나던 그 전해에 38선 이남에 와있던 주한미군은 전부 다 철수했습니다. 군사고문단 약간명만 남고 전원 철수했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해 6월 25일에 일제히 전면 남침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유엔군은 침략군을 저지하고 한국의 방위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온것입니다.

유엔군이 아직도 여기에 남아있는 이유는 북한 공산당들의 무력남침의 위협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마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군사력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 또는 유엔군이 여기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나부터라도 유엔군 사령부가 무작정 언제까지나 한국에 주둔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단계에서 만약 유엔결의라든지 유엔 안보이사회의 어떤 결의에 의해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된다면 반드시 휴전협정만은 그대로 남겨놓고 이것을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주장이고 또 우리 우방국가들의 견해입니다.

따라서 현행 휴전협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유지, 준수될 수 있는 어떤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만 된다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는 것도 우리는 굳이 반대는 하지 않겠다는 것을 표명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정부가 작년 제29차 유엔총회에서 총회가 채택한 한국문제에 관한 서방측 결의안을 전폭

적으로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한가지 확실히 해 뒤야 할 것은 만약에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된다 하더라도 주한 미군 철수문제와 유엔군사령부 해체문제는 전연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주한 미군이 여기에 와 있는 것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의거해서 지금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 공산당들이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그 저의는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유엔군사령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유엔군사령부가 만약에 해체될 때에는 유엔 깃발아래 있는 모든 주한 미군도 같이 철수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유엔군 해체를 들고 나오는 것도 근본 저의는 「주한 미군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쪽 훑어 볼 때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노리고 있는 정치적, 외교적 목표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뭐냐하면 그들이 들고 나오는 평화협정 운운하는 것도 궁극적인 목적은 한국에 와 있는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에 나오는 것이 외군철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불가침협정을 우리가 제의한데 대해서 거부하는 이유도 그것을 받아 들였다가는 미군 철수가 안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정간섭 하지 말자. 휴전협정도 그대로 두어야 된다. 그런 것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받아들였다가 되는 것이다. 결국 말을 뒤바꾸면 주한 미군을 철수시키자는 데 저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수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즈음 그 사람들이 들고 나오는 「대 민족회의」 운운하는 것을 나는 무엇인가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았는데 이것도 주한 미군을 내보내자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소위 그 사람들이 말하는 남북의 정당, 사회단체대표들이 전부 모여서 회의를 하자는 것인데, 한쪽에서 수백 명씩 해서 남북합치면 아마 500명에서 1천명까지도 될 것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자는 것이냐, 그들이 노리는 저의는 무엇이나? 남북의 숫자는 같을 것입니다. 500명이면 남쪽이 250명, 북쪽이 250명, 1천명이면 남쪽이 500명, 북쪽이 500명이 될 것입니다.

그럴 경우 공산당이 제일 먼저 들고 나올 의제가 무엇이나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외군철수 결의안을 들고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 공산당은 어떻게 계산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들이 몰고 나온 수는 뽕뽕 뭉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고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대표들 중에는 정부를 욕하는 사람도 있으니 잘 공작만 하면 몇 표가 자기네 쪽에 슬쩍 동조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50대 50으로 했는데 이쪽에서 몇 표가 그 쪽으로 가담을 하면 결국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외군 철수 결의안이 통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들의 계산은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여 이것을 하나의 정치적인 선전도구로 전체 조선인민의 남한에 있는 외군철수를 지금 이렇게 결의했는데도 안 나가고 있다. 이렇게 떠들기 위해서 「대 민족회의」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 「남북연방제」라는 것은 무엇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받아 들일지도 없지만 만약에 우리가 연방제를 같이 의논해 보자 하고 응한다면 제일 먼저 들고 나오는 것이 미군 철수 문제일 것입니다.

미군이 있는 한은 「연방제」이고 무엇이고 남북대화가 안 된다. 이제 우리끼리 「남북연방제」를 만들어 가지고 하나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자고 그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외군이다.... 그래서 미군을 내 보내자는 것입니다. 아까 말한 UNC(주한 유엔군사령부)해체란 것도 UNC가 없어질 그 때에는 그 것발아래 있는 미군도 나가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노리고 있는 이 모든 정치적 외교적 선전의 최고 목표, 투쟁목표가 주한 미군 조기철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군을 철수시켜 놓고 나서 무엇을 하자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짐작이 갈 것입니다.

또 우리 한·미 두 나라 정부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음흉한 흥계와 저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현 단계에 있어서 주한 미군을 철수해서는 안 된다하는 것이 양국간에 완전히 합의된 견해입니다.

나는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공산주의자들에게 몇 가지 제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에 한 이야기를 종합한 이야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공연히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지 말고 진심으로 평화를 원하거나 「남북 상호불가침협정」 제의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6·23선언」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통일이 될 때까지는 유엔에 남북이 같이 가입을 하자.

세 번째는 휴전협정의 효력이 그대로 존속되어야 한다는 방안에 동의를 한다면 유엔군 사령부 해체에 우리는 반대하지 않겠다.

다음에 남북대화를 빨리 정상화시키는데 좀더 성의를 표시하라.

끝으로 또 한가지 더 제의하고 싶은 것은 만약에 북한측에서 우리와 같이 유엔에 가입하는데 대해서 끝내 반대한다면 우리 대한민국만이라도 가입해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유엔에 들어갈 당당한 자격을 가졌다고 우리는 봅니다. 따라서 북한이 들어가기 싫으면 우리가 들어가는 데 대해서 굳이 반대나 방해를 하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 제4부 자 료 편

##### 제29차 유엔총회 한국문제 결의안(전문)

총회는,  
한국민의 자유로이 표현된 의사에 입각한 한국의 평화적 통일목표 달성을 위하여 진전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서울과 평양에서의 1972년 7월 4일자 공동성명 발표와 상호대화를 계속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천명된 의사에 대한 총회의 만족을 상기하고,

그러나 한국에 있어서의 긴장은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며, 1953년 7월 27일자 휴전협정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전유지에 계속 불가결함을 주지하며,

국제연합은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헌장상의 목적과 원칙에 따라 한반도에서 이 목표가 달성되도록 보장할 계속적인 책임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면서,

1. 총회에 의하여 1973년 11월 28일자로 채택된 합의성명에 표현된 회원국의 여망을 재확인하고,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이 그들의 대화를 계속할 것을 촉구한다.
2. 안전보장 이사회가 휴전협정의 계속 준수와 이 지역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의 철저한 유지를 보장해야 될 필요성을 감안하여, 두 개의 한국정부간에 항구적 평화를 이룩하기 위한 교섭과 화해가 이루어질 때까지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휴전협정의 유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과 함께 「유엔」 군사령부의 해체를 포함하여 동리사회의 책임에 속하는 한국문제의 제 국면에 관하여 직접 관계 당사자들과의 협의 하에 적절한 시기에 심의할 것을 희망하는 바이다.

# 남북대화 제9호

(1975. 3. ~ 1975. 12)

# < 목 차 >

제1부 박대통령, 대화 재개를 촉구 .....	3
1. 남북공동성명 3주년 특별담화 .....	3
2. 제30주년 광복절 경축사 .....	7
제2부 남북대화의 현황 .....	13
1. 남북관계 1975년의 개황 .....	13
2.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 중단 .....	21
3.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 경과 .....	26
제3부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와 한국의 기본입장 .....	33
1. 정치위원회에서의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연설문 .....	33

## 제1부 박대통령, 대화 재개를 촉구

### 1. 남북공동성명 3주년 특별담화

“ 「민족자해」 · 전쟁준비 · 간접침략 즉각 중지, 조절위본회의 · 적십자회담 재개하라”

<7·4 남북공동성명 발표 3주년인 1975년 7월 4일 박정희 대통령은 특별담화를 발표, 남북공동성명이 한반도의 안정된 평화와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대한민국정부의 줄기찬 노력의 결정체임을 강조하고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중단시키고 있는 남북대화의 조속한 정상화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남북공동성명 3주년에 즈음한 특별담화전문이다.> -편집자 주-

친애하는 국내외 동포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염원하는 5천만 겨레의 한결같은 여망과 전세계 평화애호 국민들의 성원 속에서 역사적인 7·4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한지 3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미 다 아는 바와 같이 7·4 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남북간에 서로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하자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3년이 지난 오늘,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놓여 있으며 한반도의 긴장은 그 어느 때보다도 고조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는 이날을 맞이하여, 우리가 그 동안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을 위해 노력해온 발자취를 되돌아보면서 평화통일을 위한 우리의 줄기찬 의지와 정책을 다시 한 번 내외에 천명하고자 합니다.

돌이켜보건대 북한공산침략주의자들은 일찍이 6·25 남침전쟁을 일으켰으며, 휴전후에도 계속 우리에게 대해 온갖 무력도발을 자행해 왔습니다.

특히 1968년 1월에는 청와대습격기도사건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월의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 침투사건, 그리고 1969년 12월의 대한항공 여객기납북사건 등 1970년을 전후하여 한반도의 긴장은 한층 고조되었을 뿐 아니라 전쟁재발의 위험마저 높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1970년 8월,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서 전쟁의 참화가 되풀이되는 것을 막고 평화를 유지해야 하겠다는 생각에서 8·15 선언을 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나는 그 선언을 통하여 만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유엔」의 권위와 권능을 수락한다면, 「유엔」에서의 한국문제 토의에 그들도 우리와 함께 참석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겠다는 것을 밝히고

그들에게 대하여 개발과 건설과 창조의 부문에서 선의의 경쟁을 하자고 촉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1971년 8월에 우리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제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북한침략주의자들의 6·25남침으로 말미암아 산산히 흩어진 이산가족들의 인간적 고통을 하루속히 덜어주고 그들의 재회를 실현시키기 위한 동포애의 발현이었습니다.

이어서 나는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하여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하겠다는 충정에서 만남을 무릅쓰고 평양에까지 사람을 보냈고, 그 결과로써 1972년 7월 4일에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얼마 안 가서 남북대화는 북쪽의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에 침체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이에 나는 1973년 6월, 대화의 진전에 또 하나의 계기를 마련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국제조류 속에서 우리의 제반 여건을 현실적인 것으로 개선하고자 6·23 평화통일 외교정책선언을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남북대화에 성실과 인내로써 노력하는 한편, 북한이 우리와 함께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참여하는데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호혜평등의 원칙 아래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한다는 등 7개항의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선명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침략주의자들은 이 같은 우리의 정당하고도 현실적인 평화정책에 대하여 성의있는 응답은 커녕, 소위 「연방제」니 「대 민족회의」니 하고 비현실적이고도 상투적인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중상과 모략으로 맞서고 나왔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같은 해 8월 28일, 반공법과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는 등 우리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요구조건과 구실을 내세우면서 일방적으로 남북대화를 중단시키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그 같은 무도한 행위에 대해서도, 오직 조국의 평화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인내에 인내를 거듭하여 그들을 타이르면서 남북적십자 본회담과 조절위원회 본회의의 재개를 촉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공산집단은 대화의 정상화는 거부한 채 오히려 서해상의 우리 도서에 도발행위를 가해오다가 하면, 휴전선일대에 각종 군사시설을 계속 강화하여 남침위협을 한층 격화시켰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 아래서 나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1974년 1월 18일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을 제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8·15 광복절을 기해 나는 남북상호불가침협정체결을 다시 한 번 촉구하고 상호문호를



개방할 것과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바탕으로 자유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을 이룩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현성 있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통일을 무력에 호소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며, 이는 기필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결연한 민족적 의지의 표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의 성의있는 평화제외와 설득에도 불구하고 북한침략주의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남북대화를 거부할 뿐 아니라, 최근에 와서는 심지어 실무급 접촉마저도 천연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전복과 무력통일이라는 망상을 달성하고자 광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의 동포 여러분!

북한침략주의자들은 해방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 소위 「남조선 무력혁명」이라는 기본전략을 추호도 바꾸는 일없이 집요하게 추구해 왔습니다.

그들이 우리와 더불어 남북적십자회담을 추진하고 7·4공동성명을 발표하는 바로 그 시각에도 휴전선일대의 지하에서 남침공격용 대규모 땅굴을 파내려 오고 있었다는 사실로 보나, 우리와 남북대화를 하고 있던 그 시간에도 대한민국을 전복할 목적으로 무장공비와 저격범 등을 침투시켜 반민족적이고 야만적인 도발행위를 계속적으로 자행해 왔다는 사실로 보나, 그들이 무력혁명노선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침략주의자들이 말하는 「평화」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바라는 평화가 아니라, 남침전쟁과 폭력혁명을 은폐하기 위한 기만술책에 불과한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언필칭 「자주성」을 되풀이하면서도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의 첫걸음이 되는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동족끼리 한 자리에 앉아서 겨레의 장래문제를 토의하는 남북대화를 기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멀리 제3국에 돌아다니면서 거짓 선전으로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비방·중상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만 보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평화」와 「자주」라는 용어가 한낱 기만에 불과하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그리고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져 있는 책임도 전적으로 그들에게 있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간의 신뢰회복을 위한 민족적인 노력을 외면하고, 오직 폭력과 무력에 의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하여 광분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민족」이니 「평화」니 또는 「조국의 평화통일」을 운위할 자격마저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오늘 이 기회에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해 두고자 합니다.

그들이 만일 진심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침략전쟁의 준비와 일체의 간접침략행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동족을 혈뜯는 민족자해행위 등을 즉각 중지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본회의와 적십자본회담을 하루속히 재개함으로써 중단되고 있는 남북대화를 정상화시킬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

지금 우리 세대가 당면하고 있는 시급한 과업은 북한침략주의자들의 무력남침을 단호히 저지하면서 이 땅에 굳건한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튼튼한 국력을 배양해야 하고, 그 막강한 국력은 바로 남북대화를 뒷받침하는 필수적 요건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남북대화와 평화통일의 추진력이 되는 국력배양을 위해 총화 단결로써 가일층 헌신합시다.

## 2. 제30주년 광복절 경축사

“광복은 통일·자주·독립의 역사적 계기, 민족사 정통성 받들어 평화통일 이루자”

<1975년 8월 15일 우리나라는 광복 30주년을 맞이 했으며 이로써 비극적인 국토분단도 만 30년을 접어들게 되었다. 박정희대통령은 이날 경축사를 통해 험란했던 광복 30년사를 회고, 그 동안 각고의 노력의 결정으로 이루어진 국력의 비약적 신장과 분단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정부가 기울여온 줄기찬 노력을 열거하고 불변의 의지로 평화통일을 이룩하여 진정한 광복을 완수할 것을 다짐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광복 30주년 경축사 전문이다.> - 편집자 주 -

친애하는 남북의 5천만 동포 여러분 !

오늘은 우리 겨레가 일제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어 국권을 되찾은지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30년전 오늘 우리가 맞이했던 이 광복의 참뜻은 우리들도 이 강토 위에 부강하고 통일된 자주 독립국가를 건설하여 민족사적 정통성을 이어 나가면서 세계평화와 인류의 발전에 적극 기여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를 다시 찾았다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광복의 의의를 구현하고자 그날의 감격을 오늘의 건설로 승화시키고, 그날의 희망을 오늘의 헌신으로 발전시키면서 민족중흥을 위한 줄기찬 노력을 다하여 온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같은 노력은 피땀어린 각고의 결정이며, 또한 보람찬 것이기 때문에, 비록 광복 30주년을 맞는 오늘, 조국의 현실이 아직도 분단의 비애를 극복하지 못한 안타까운 상태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찬란한 겨레의 내일을 위하여 이날을 민족의 축전으로 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나는 오늘 이 감회 깊은 광복절을 맞이하여 동포 여러분과 함께 그 동안 우리가 걸어온 발자취를 돌이켜 보면서 조국의 번영과 평화통일을 위한 민족적 결의를 다시 한 번 굳게 다짐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동포 여러분 !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내외의 도전과 시련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민족의 발전 번영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하여 부단한 전진을 계속해 왔습니다.

광복 그 당시 우리 경제는 지극히 빈약한 것이었으며, 설상가상으로 북한공산집단의 기습남침은 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전 국토를 초토화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불퇴전의 용기와 피땀어린 노력으로 세 차례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여, 어제의 폐허를 오늘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번영의 터전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운동이 온 국민의 정신혁명운동으로 퍼져나가는 가운데, 바다를 메워서 농토를 만들었고, 낱알이 늘어나는 공업단지에는 세계수준을 자랑하는 대규모공장들이 입추의 여지없이 들어서서 이제 국토는 완전히 그 모습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뻗어나는 고속도로의 건설은 전국을 일일생활권으로 개편함으로써 유통구조의 개선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크게 촉진하여 도시와 농촌의 구별도 점차 없어지고 우리 모두가 빈곤을 없애고 보다 더 행복한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선진복지국가로 지향할 수 있는 세계 속의 한국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으며, 조국의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의 기초를 다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귀중한 건설과 창조를 위한 노력을 한시라도 멈출 수 없으며, 더우기 이처럼 피땀어린 노력의 열매를 또다시 전화로 송두리째 상실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만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찍이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북한공산집단에 대해 남침의 망상을 포기하고 그들도 개발과 건설과 창조를 위한 선의의 경쟁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고,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대화를 주도하여 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더욱 확고한 궤도 위에 올려놓고자 6·23평화통일외교정책을 선전하였으며, 남북 상호불가침협정을 체결하도록 제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평화가 정착되고 남북이 대화와 교류를 증대하여 상호신뢰를 회복하게 되면, 이를 토대로 하여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 하에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남북자유총선거를 실시함으로써 통일정부를 수립할 것 등을 밝히는 평화통일 3대 기본원칙을 천명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지난 30년 동안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추구될 것이며, 반드시 성취되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추구해 왔습니다.

그들은 평화를 파괴하는 침략을 기도했으며, 민족의 이익을 배반하고 이질적인 외래사상을 광신하면서 오직 한반도의 공산화와 민족사의 단절만을 획책해 왔습니다.

일찍이 그들은 신탁통치를 찬성하였고, 「유엔」이 건의한 남북총선거마저 거부함으로써 민족분열과 국토분단의 씨를 부렸던 것입니다.

더욱이 그들은 6·25남침을 일으켜 동족을 무참히도 대량살육함으로써 반민족적인 범죄행위를 저질렀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희원하는 민족적 여망을 배반하였습니다.

그들 전범집단은 휴전 후에도 여전히 침략주의적 망상에 사로잡혀 북한동포를 혹독하게 착취하

면서 이른바 「4대군사노선」을 강행하여 북한전역을 완전히 병영화하고 침략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 그들은 북한동포를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극악한 개인우상숭배의 노예로 만들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말살함으로써 우리 조상전래의 도의와 미풍양속, 그리고 민족적 동질성마저 파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대해서는 6·25남침전야와 동일한 방법과 술책으로, 한편으로는 무력과 폭력을 통한 침략적 도발행위를 지속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짓 평화선전을 통한 기만선동을 격화시키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청와대습격기도사건과 울진·삼척지구 무장공비대거침투사건, 대한항공여객기납북사건 등은 아직도 우리의 기억에 생생히 남아 있는 그들의 무력도발의 사례입니다.

그들은 최근에 이르러서도 우리의 서해오도 해역침범사건과 작년 광복절 경축식전에서의 대통령저격기도사건, 그리고 10여 개의 남침용 지하땅굴을 파는 등 계속 무력침략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침략주의자들은 1972년 우리의 남북대화제의를 수락하던 그 시각에 이미 뒷전에서는 남침용 지하땅굴을 파내려 오기 시작했으며, 1973년 대화가 시작 된지 불과 일년도 못되어 엉뚱한 구실과 조건을 내세워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키고 말았던 점 등으로 미루어 보면,

그들은 처음부터 남북대화를 상호신뢰의 회복과 교류의 증대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대한 침략의 방편으로 악용하여 왔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작금에 와서는 인도지나사태에 고무되어 「제2의 6·25」를 획책하려 했으나, 우리의 총력안보태세가 공고해지고 또한 국제여론이 그들을 비난하게 되자, 그들은 침략의 기회가 도래할 때까지 거짓 선전으로 침략기도를 은폐하려고 갖은 간계를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들의 선전이 얼마나 거짓에 가득 차 있는가 하는 것은, 남침용 지하땅굴의 경우만 보더라도 능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들 지하땅굴에 대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하자는 우리의 제안을 아무런 정당한 이유도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 선전의 기만성을 단적으로 입증하는 사례라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

우리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광복 30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반도의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이 비록 이처럼 시련과 도전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한시라도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조국의 평화통일은 너 나 할 것 없이 우리 겨레 모두가 가슴 속 깊이 지니고 있는 한결같은 염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민족적 염원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역사적 사명입니다.

그러나 조국통일이 아무리 시급하고 절실한 과업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결코 폭력이나 무력에 의해 추구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조국통일은 반드시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룩되어야 한다는 것이 나의 소신이며, 우리 대한민국이 추구하고 있는 통일정책의 기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국통일을 이룩하고자 하는 것은, 동족간에 유혈을 강요하고 민족발전의 터전을 송두리째 파괴하면서까지 다만 휴전선을 없애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대는 물론이려니와 우리 후손에게까지 항구적인 평화와 번영의 터전을 물려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북한에 대해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통일을 위하여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우리의 기본입장을 이 기회에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혀두고자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북한공산집단이 우리의 평화통일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잘못 이해하고 사태를 오판하여 또다시 침략을 해 온다면, 우리는 단호히 이를 격멸하고 말 것임을 아울러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국민 여러분 !

지금 우리에게서 평화정착보다 더욱 절실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곧 겨레의 발전과 번영을 위한 것이며,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에 평화적 통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평화는 한낱 이상적인 구호나 일방적인 소망만으로 이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평화를 위해서는 튼튼한 국력이 배양되어야 하고 국력배양에는 고귀한 희생과 노력이 있어야만 합니다.

국력배양을 위한 희생은 곧 겨레의 번영과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한 고귀한 희생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이 뜻깊은 날을 기하여 30년전 그날의 그 감격과 그 희망을 오늘의 단결과 헌신으로 승화시켜서 각기 맡은 바 직분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국력배양을 가속화하여 평화통일과 민족중흥에 적극 이바지할 것을 다같이 굳게 다짐합니다.

또한 나는 북한측에 대하여 그들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남북대화를 무조건 재개하라는 우리의 촉구에 응해야 하고, 특히 이산가족들의 상호방문과 재결합문제와 같은 긴급한 인도적 문제는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폐쇄된 북한의 암흑사회를 하루 속히 개방하고, 북한동포들을 전체주의 독재체제와 개인우상숭배의 노예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최소한의 자유와 기본권만이라도 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나는 누차 천명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국제협력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통일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과도적 잠정조치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에 남북이 서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을 재차 천명하는 바입니다.

「유엔」의 역사를 보더라도 「유엔」가입 그 자체가 국가의 통합이나 분리에는 직접 관계가 없는 것이며, 당초 2개의 회원으로 가입했다가 후일에 하나의 회원국으로 통합된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북이 평화통일을 달성할 때까지 과도적 잠정조치로서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결코 분단의 영속화가 아니라 남북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보다 굳건히 함으로써 오히려 조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을 강조해 두는 바입니다.

따라서 나는 북한측에 대하여 국제사회에서의 민족적 권익과 정당한 발언권을 포기하고 방해하는 반민족적 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아울러 경고하는 바입니다.

또한 나는 우리 우방제국이 앞으로도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조국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계속 지원해 줄 것으로 확신하면서, 이들과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갈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과도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상호문호를 개방함으로써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유지에 상호협력해 나갈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친애하는 남북 동포 여러분 !

우리의 조국은 하나요 또한 우리 민족은 그 어떤 힘으로도 분단할 수 없는 영원한 단일생명체입니다.

우리 모두 30년전 그날의 감격과 그 환희를 되새겨, 남쪽에서는 우리의 민족사적 정통성을 굳게  
뒷받침할 국력배양을 위해 더욱 헌신 분발하고,

북녘 동포들은 이질적인 사상과 시대착오적인 우상숭배를 감연히 타파하고 민족의 동질성을 끝  
까지 지킴으로써 조국의 평화통일을 위해 다같이 힘차게 노력해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참다운 광복 조국통일을 이룩하여 민족중흥의 찬연한 새 역사  
를 창조해 나아갑시다.



## 제2부 남북대화의 현황

### 1. 남북관계 1975년의 개황

남북대화에 있어서 1975년은 새로운 후퇴의 한 해로 기록되게 되었다.

왜냐하면 1973년 8월 28일 이른바 「김영주성명」에 의하여 정상 운영이 중단된 남북조절위원회는 1975년에 들어와서 그 동안 그나마 남북조절위원회의 명맥을 이어주고 있던 부위원장회의마저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이다.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를 중단시키려는 평양측의 노력은 이미 1974년 11월 15일 고량포 북방 휴전선비무장지대에서 북한측이 파고있던 남침용 땅굴이 최초로 발견되면서부터 시작되고 있었다. 이때 남북조절위원회는 제9차 부위원장회의를 12월 4일에 열 예정으로 있었다. 제9차 부위원장회의를 앞두고 땅굴사건이 터지자 평양측은 전화통지문과 쌍방 대변인회합을 통해 부위원장회의를 『잠정적으로』 중단하고 이를 쌍방 대변인간의 실무자 접촉으로 대체할 것을 끈덕지게 요구해 왔다. 서울측은 이러한 평양측의 일방적이고도 부당한 요구를 당연히 거부했다.

그러자 평양측은 제9차 부위원장회의의 무기연기를 획책한 끝에 결국 동 회의를 1975년 1월 8일로 연기시키는데 성공했다.

평양측은 1월 8일의 회의를 이틀 앞둔 1월 6일 남북조절위원회의 평양측부위원장을 일방적으로 교체했음을 서울측에 통고해 왔다. 1972년 11월 남북조절위원회 발족당시 평양측은 노동당 조직지도부 부부장이었던 유장식을 부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서울측 장기영부위원장의 상대역으로 삼았다. 그러나 평양측은 이제 유장식을 물러나게 하고 그 대신 조명일을 후임으로 임명한 것이다.

조명일은 본래 1971년 남북적십자예비회담 시작과 더불어 북한적십자회간부(문화선전부장, 출판보도부장, 참사, 상무위원, 서기장 등)의 자격으로 북적측의 남북적십자회담 예비회담 3석대표, 본회담 3석대표겸 대변인으로 회담에 참여해 왔으며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남북적십자회담실무회의의 북적측 2석대표겸 대변인이었다. 결국 평양측의 부위원장 교체는 교체 그 자체가 부위원장 회의의 격하를 의미한 것이다.

1975년에 들어와서 남북간에는 두 차례의 부위원장회의(제9차 1월 8일, 제10차 3월 14일)가 열렸다. 3월 14일의 제10차 부위원장회의에서 쌍방은 제11차 부위원장회의를 5월 30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된 회의일자 하루 전인 5월 29일 평양측은 제11차 부위원장회의의 「무기연기」를 일방적으로 서울측에 「통고」해 옴으로써 부위원장회의의 진행을 무기한 중단시켰다. 이로써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남북대화는 접촉의 통로가 두절되었으며 다만 서울·평양간을 연결하는 남북직통전화의 운영만이 계속되어 서로 일방통행식의 전화통지문을 주고받는데 이용되고 있을 뿐이다.

한편 남북적십자간의 적십자회담 실무회의만은 1975년에 들어와서도 중단 없이 계속되어 남북간의 유일한 접촉의 통로로 되어 있으며 금년에만도 8회의 실무회의가 관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에서 진행되었다. 가장 최근의 남북적십자회담실무회의는 11월 28일(제14차)에 있었다.

그러나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에서도 북한적십자회측은 실무회의 본래의 과제인 본회담재개 문제와 본회담의제의 예비토의는 완강하게 외면하고 있으며 이른바 『본회담재개를 위한 선행조건』이라는 구실을 앞세워 대한민국의 대내외정책에 대한 중상·비방과 시비만으로 시종하고 있다.

#### 인지전의 종결과 새로운 무력남침 위협

남북대화에 임하는 북한측의 태도는 금년 4월 17일의 프놈·펜 함락과 4월 30일의 사이공 함락으로 이어진 인도지나사태의 비극적인 종말과 함께 급격히 경화되었다.

김일성은 북한에서는 년중 최대의 「명절」로 통상 요란한 「경축행사」가 한 달은 끌기 마련인 그의 생일(4월 15일) 이틀 뒤이자 프놈·펜이 함락된 날인 4월 17일 급거 북경방문길에 올랐다. 4월 18일 북경에 도착한 김일성은 이날저녁 중공국무원이 주최한 만찬석상에서의 연설에서 전례 없이 호전적인 발언으로 그를 지켜보는 세계의 이목을 경악하게 했다.

김일성은 『「제국주의식민지체제」가 전면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오늘 「남조선」에서도 「미제의 식민지통치」는 결코 무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하면서 『「남조선」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는 하나의 민족으로서 그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을 것이며 「남조선인민」들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김일성은 또 남북한간에 새로이 전쟁이 일어날 경우 『이 전쟁으로 우리가 잃는 것은 군사분계선이며 얻는 것은 조국의 통일』이라고 장담했다.

인지전이 공산측의 승리로 종결되자 해방이후 30년간, 더욱이 처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을 초래했던 6·25전쟁이후에도, 계속 무력에 의한 전한반도 적화에 집요하게 미련을 두어 온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한반도에서도 인지에서와 같은 이른바 「민족해방전쟁」 전술을 시도해 볼 호기를 마지했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이다. 김일성은 지난 7월 17일 평양을 잠행 방문한 일본 자민당 소속의 말쑥 많은 친북한 로비스트 宇道宮德馬 중의원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인도지나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었으니 이제는 우리의 통일문제의 차례』라고 주장함으로써 그가 인지전방식의 전술을 한반도에 원용하는데 강한 유혹을 느끼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이러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동향과 관련시켜 본다면 북한측이 인지전 종결을 계기로 하여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를 중단시켰다는 것은 결코 시기의 우연한 일치는 아닌 것이다.

인지사태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사용 유혹을 크게 자극 고무하는 또 하나의 측면효과를 발생시켰다. 미국의 대외안보공약의 공신력이 크게 땅에 떨어졌다는 것이 곧 그것이다. 원래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배치되어 있는 주한미군의 존재를 그들이 목표하고 있는 적화통일을 달성하는데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로 간주해 왔다. 왜냐하면 적화통일의 달성은 궁극적으로 무력의 사용에 의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믿고 있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언제나 오직 주한미군의 존재 때문에 그러한 무력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만 생각해 왔기

때문이다. 해방이후 3년동안 북한지역 주민들을 기만, 통치하는데 사용해온 「도그마」에 스스로 포로가 된 그들은 대한민국의 막강한 자주국방능력과 태세를 과소 평가하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한 나머지 주한유엔군과 주한미군등의 전쟁억지장치와 외부지원능력만 제거된다면 적화통일을 위한 무력남침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망상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적화통일을 지향하는 그들의 노력에 있어서 주한·미군의 철수는 주한유엔군사령부의 철수와 함께 언제나 「제1의 선결과제」로 강조되어 왔다.

그러나 인지전 종결의 충격적인 과중에 선 미국의 존재는 적어도 아시아 지역에서는 하나의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으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눈에 투영되게 되었다. 이것은 대단히 심각한 사태를 의미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과거 「푸에블로호」 사건과 「EC121」 사건, 그 보다도 1950년 6월 25일 전야에 그랬든 것처럼 미국의 의지가 약해졌다고 그들이 판단했을 때, 그것이 설사 오판이라 할지라도 서슴치 않고 군사도박을 감행 할만큼 무모한 자들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김일성은 북경에서 요란스런 총 칼 소리로 화약냄새를 피우기 시작했다. 한반도에는 또다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것이다.

물론 그 뒤의 한반도내외의 정세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전개되지는 않았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우선 그들의 정세판단에 있어서 너무나도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적화통일 야망은 그 자체가 한반도의 객관적 현실을 놓고 볼 때 도저히 달성 불가능한 목표의 설정이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그러한 비현실적인 목표에 타당성을 부여하고 달성 불가능한 목표를 달성 가능한 것처럼 분식하기 위해 주어진 정세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것을 거부하고 오로지 주관으로만 이를 평가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다. 그 결과 그들은 대한민국의 막강한 국력과 철통같은 자주국방태세를 과소 평가하는가 하면 남한지역내에서 그들의 교사와 선동에 의한 폭력적 대중봉기(「남조선혁명」)를 발생시켜 이것을 그들의 무력남침을 합리화시키는 구실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인지전 종결 후 자타가 공히 시인할 정도로 명백해진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위협스런 움직임은 또 그대로 방치되지도 않았다.

미국은 「마야게즈호」 사건에 단호히 대처함으로써 「종이 호랑이」가 아니라 「상처 입은 호랑이」임을 행동으로 보여주었다.

「포드」 대통령과 「키신저」 국무장관, 「슐레진저」 국방부장관 등은 대한민국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을 철저히 준수·이행할 것임을 기회 있을 때마다 다짐하여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예측할 수 없는 망동에 썩기를 막았다.

또한 대한민국은 인지전 종결과 더불어 자주국방태세를 보다 완벽하게 만들기 위한 일련의 정력적인 조치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새로운 위협에 직면하여 국내에는 굳건한 국민총화에 입각한 전례 없는 정치적·사회적 안정이 조성되었고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명실상부한 자주국방태세의 정비·강화에 커다란 진전을 이룩해 왔다.

박정희대통령은 8월 21일 「뉴욕·타임스」 동경지국장 「리차드·헬로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5년 후면 대한민국은 북한이 중공이나 소련의 도움 없이 남침을 해 올 때 미국의 공·해·지상군은 물론 병참지원이 없이도 이를 격퇴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만약 지금 당장 북한이 남침을 해오더라도 북한에 대한 외부의 지원만 없으면 우리는 미 지상군의 도움 없이 적절한 공군 및 해군화력지원과 병참지원만 가지고도 이를 능히 격퇴시킬 수 있다』는 자신을 표명했다. 박대통령은 『우리는 우리의 방위능력 개선을 무한정 미국에 의존할 수 없음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우리의 희망은 조속한 시일 안에 우리의 국토를 우리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있는 방위능력을 완비하는 것』이라고 말해 정부의 자주국방 달성노력을 강조하고 『나의 견해로는 우리는 앞으로 5년 안이면 그러한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 거듭되는 대화재개촉구와 계속되는 거부

박대통령은 이보다 앞서 남북공동성명 발표 3주년이 되는 지난 7월 4일 특별담화(제1부참조)를 발표,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 및 평화통일의 촉진을 위하여 중단된 남북대화의 재개에 동의할 것을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박대통령은 이 특별담화에서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은 남북간에 서로 대화를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자주적인 통일의 길을 모색하자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박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남북대화를 거부할 뿐 아니라 심지어 최근에 와서는 실무급 접촉마저 천연시키면서 대한민국의 전복과 무력통일이라는 망상을 달성하려고 광분하고 있으며 이러한 그들의 비협조적 자세로 말미암아 남북공동성명 발표 3년 후인 지금에 와서는 『남북대화는 교착상태에 놓여 있고 한반도의 긴장은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는 안타까운 실정』이라고 개탄했다.

박대통령은 『만일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진심으로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원하고 있다면 그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침략전쟁의 준비와 일체의 간접침략행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동족을 혈똥는 민족자해행위를 즉각 중지해야 한다』고 말하고 이와 아울러 『남북조절위원회본회의와 남북적십자본회담을 하루 속히 재개함으로써 중단된 남북대화를 정상화시키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이러한 성의 있는 대화재개촉구에 대한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마이동풍이었다. 7월 17일 평양에서 일본의 우도궁덕마의원과의 만남 김일성은 한쪽으로는 여전히 평화통일을 운운하면서도 다른 한쪽으로는 박정희대통령과는 『전혀 얘기가 통하지 않는다』면서 『남한측에 「서로 얘기가 통할 수 있는 인물」이 집권을 해야만 대화를 하겠다』고 말함으로써 그의 속셈이 남북대화를 통한 남북관계의 원만한 개선·해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정부의 전복과 타도에 있음을 명백히 했다.

일본자민당 「유지의원단」을 인솔하고 평양을 방문, 7월 27일 김일성을 만나고 돌아간 전춘 원중의원의원은 8월 22일자 「조일저널」에 게재한 김일성과의 회견보고기사에서 김일성이 『대한민국의 민주공화당과도 「합작」을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화상대방의 국가원수인 박정희대

통령과는 얘기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고 말함으로써 김일성의 전후발언이 자가당착의 모순을 들어내고 있음을 명쾌히 지적했다. 김일성은 다시 지난 10월 9일 북한의 이른바 「노동당 창건 30주년기념식」에서의 보고 연설에서도 북한판 평화통일론을 가지고 장광설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그의 말은 여전히 전후가 상반되는 모순에 찬 자가당착의 궤변이었다. 김일성은 한편으로 『우리는 「남조선」의 「인민」과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사회단체, 개별인사들과 어느 때든지 조국통일문제를 가지고 협상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있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기 위해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반공소동을 그만두어야 하며 반공법을 없애고 공산주의자들과 「애국적 인민」들을 「탄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이 『반공정책을 「연공」 정책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변하고 있다.

김일성의 이러한 발언은 사실상 대한민국더러 자유민주주의를 버리고 스스로 공산화의 길을 택하라고 요구하는 강탈적인 주장이다. 이러한 강탈적인 요구를 소위 「대화정상화의 선행조건」으로 삼고 있으면서도 그가 『민주공화당을 포함...』 운운하고 있는 것은 결국 김일성의 발언자체가 세상의 이목을 현혹시키는데만 목적을 둔 한낱 사기발언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다.

김일성은 또 같은 「보고연설」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합리적 방도』라는 구실아래 『남북의 현 정치체도를 당분간 그대로 두고』 남북의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최고민족회의」를 소집하여 민족의 공동관심사가 되는 문제를 통일적으로 해결하는 「남북연방제」』를 주장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공화국북반부」인민들과 「남조선」의 노동자·농민·청년학생·언론인·종교인·정치인을 비롯한 각계각층 「인민」들로 「민족통일전선」을 형성하여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일성의 이들 발언 역시 그 전후단이 서로 용납될 수 없는 자가당착의 궤변이다. 전단의 발언에서 김일성은 분명히 대한민국의 현정부를 상대로 하는 이른바 「연방」안을 주창했다. 반면 전단의 발언에서 김일성은 이른바 「통일전선」전술에 입각하여 대한민국정부의 전복과 타도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김일성이 말하는 「대한민국정부의 타도」는 단순한 대한민국 「현정부」의 「교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김일성이 요구하는 것은 대한민국에서의 이른바 「인민민주주의혁명」의 수행이며 이것은 곧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뜻한다. 결국 김일성의 궤변의 정체는 너무나도 명백하다. 이른바 「연방」운운은 세상의 이목을 현혹시키는데 목적을 둔 또 하나의 기만선전이며 그의 진심은 어디까지나 폭력과 무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적화와 한반도의 적화통일을 기도하는데 있는 것이다.

### 30차 유엔총회와 한국문제 토의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속셈은 금년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과정에서 더 한층 분명하게 부각되었다.

1973년의 제28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합의성명」과 1974년의 제29차 유엔총회에서 다수표에 의해 채택된 한국문제 결의안(서방측안)을 모두 외면함으로써 유엔의 권능과 권위에 계속 도전해온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금년의 제30차 유엔총회에서 또다시 한반도의 현실과는 전적

으로 유리된 이른바 결의안을 제출하고 이를 통과시키기 위해 발광적인 득표운동을 벌여왔다. 제 30차 유엔총회에 내 놓은 공산측결의안(A/C, I/L, 709)은 『주한유엔군사령부의 해체 및 유엔기치하에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외국군」의 철수』와 아울러 『한국휴전협정의 「진정한 당사자」들간의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의 체결』을 요구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러한 공산측 결의안의 허구성은 일목요연하다. 동 결의안은 한국휴전협정의 대안 없는 폐기를 초래하여 1953년의 한국전쟁휴전이후 한반도의 불안정한 평화를 유지하는데 있어서 필수불가결의 유일한 제도적 장치였던 휴전체제의 대안 없는 와해를 요구하는 것이며 아울러 대한민국과 미국의 엄연한 국가주권에 대한 용납 못할 침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유엔군사령부의 대안 없는 해체는 자동적으로 휴전협정의 폐기를 의미한다는 것은 자명한 논리적 귀결이다. 한국휴전협정은 일방의 유엔군사령부와 타방의 북한군 및 중공군을 체결당사자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의 대안 없는 해체는 협정의 체결 당사일방의 소멸을 뜻하며 이것은 필경 휴전협정 자체의 소멸을 결과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자명한 현실논리를 감안하여 대한민국은 우방제국들과의 협의아래 남북한에게는 남북대화의 계속을, 그리고 한반도문제에 관한 『모든 직접관계당사자』들에게는 『휴전협정을 대체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항구적 평화를 보장할 새로운 약정을 위한 교섭의 시행』을 촉구하는 한편 그러한 약정에 관한 교섭이 완결될 때까지는 한반도의 평화유지를 위해 현존 휴전협정의 유지가 필수불가결함을 인정, 『우선 제1단계조치』로서 『모든 직접관계당사자』들이 1976년 1월 1일까지 유엔군사령부의 해체이후에도 휴전협정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여 동 일자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수 있게 하자는 한국문제 결의안(A/C, I/L, 708/Rev. 1)을 이미 유엔사무국에 접수시켜 놓고 있었다.

이에 부연하여 미국의 키신저국무장관은 9월 22일 유엔총회에서의 연설에서 「한미양국정부」의 「공동제의」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한 뒤에도 휴전협정을 존속시키는 방안을 토의하기 위해』 휴전협정의 「당사자」들인 대한민국과 미국, 북한과 중공이 4자 회담을 가질 것을 제안했다. 키신저장관은 또 만약 그러한 4자 회담이 성립된다면 대한민국과 미국은 한반도문제의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확대(국제)회의를 소집하는 문제 등 한반도의 긴장완화를 위한 다른 방안들도 토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한반도의 안보문제에 관한 토의에 대한민국의 참여를 배제하려는 어떠한 제의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이에 앞서 8월 17일 유엔에 보낸 「외교부각서」에서 『주한미군도 주한유엔군의 일부』라고 독단하면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주한미군도 철수해야 된다』고 강변하는가 하면 공산측 결의안에 언급된 『휴전협정의 「진정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만을 의미하며 따라서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은 미국과 북한사이에서만 체결되어야 한다』는 터무니 없는 억지를 썼다.

주한미군은 한미양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양국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대한민국에 배치되어 있으며 그들의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의 법적 지위는 역시 양국의 헌법절차에 따라 체결된 한미행정협정에 의하여 규제되고 있다. 따라서 주한미군의 문제는 제3국이 간여할 수 없

는 한미양국의 주권사항인 것이며 유엔군사령부문제와는 엄연히 구별되는 전혀 별개의 문제인 것이다.

『휴전협정의 「진정한」 당사자는 미국과 북한뿐』이라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주장은 더 한층 황당무계한 억지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이 주장은 휴전협정체결당시 대한민국은 협정의 서명당사자가 아니었다는 형식논리 때문에 동협정의 「진정한」 당사자가 아니라는 것이며, 공산군측의 휴전협정 서명당사자였던 중공은 이제는 한반도로부터 모든 중공군을 철수시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동협정의 「진정한」 당사자로서의 자격이 소멸되었다는 글자 그대로 『내것도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라는 식의 강탈적인 궤변에 논거를 두고 있다. 대한민국과 중공의 휴전협정 당사자로서의 「자격」을 「박탈」하기 위하여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사용하고 있는 논거는 보편성이 결여된 선택적인 것으로 각기 다른 쪽 논거를 부정하는 모순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하여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분명히 계획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하나의 「사실」을 간과할 것을 기도하고 있다. 그것은 휴전협정은 관계당사국의 정부간에 체결된 협정이 아니라 현지의 최고군사령관간에 체결된 협정이라는 「사실」이다. 휴전협정체결당시 유엔군측 서명관은 「유엔군사령관」이지 「미군사령관」이 아니다. 당시 대한민국국군은 작전상의 필요에 의하여 유엔군의 단일화된 지휘체계 속에 통합되어 있었다. 이러한 작전지휘체계를 염두에 둘 때 쌍방의 최고군사령관을 서명관으로 하는 휴전협정의 체결에 있어서 대한민국국군이 유엔군사령관에 의하여 대표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 휴전협정은 일방의 서명당사자가 「미군사령관」이나 「대한민국국군사령관」이 아닌 「유엔군사령관」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안이 마련됨이 없이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될 때는 서명당사 일방의 소멸로 말미암아 휴전협정 자체의 소멸을 가져오는 법률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사리로 인하여 휴전협정 서명 여부와는 상관없이 대한민국은 휴전협정의 실제당사자일 뿐 아니라 주당사자라는 사실에 있어서 이론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법적으로나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주한미군을 『유엔군의 일부』로 간주하고 또 휴전협정 당사자로서의 대한민국의 「자격」을 부인하겠다는 공산측의 한국문제 결의안은 하자과 모순으로 가득찬 불합리하고도 불법적인 결의안이다. 이 결의안이 노리는 것은 이미 박동진 주유엔대사가 정곡을 찔러 논평했듯이 북한의 김일성정권이 『한반도전체를 대표하는 합법정부』라는 그릇된 국제적 인식을 조성함으로써 앞으로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적화통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감행할 때 이를 『한국의 「내정」에 속하는 문제』(소위 「민족내부문제」)로 강변하여 그러한 침략을 격퇴·옹정하기 위한 유엔의 개입명분을 박탈하는 한편 그들이 그러한 무력남침의 실제적 장애물이라고 생각하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강요할 명분을 확보하는데 있을 뿐인 것이다.

공산측 결의안이 이러한 무리와 불합리, 그리고 무력남침을 위한 음모를 내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산, 비동맹, 제3세계세의 야합에 의한 다수의 횡포가 절정에 다다른 금년의 유엔총회는 이미 이성애 입각하여 한반도문제를 토의할 정상적 한계를 벗어나고 있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그들의 불순한 한국문제 결의안을 이번 유엔총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광적인 득표행각을 벌였다. 10월 24일자 베네주엘라 일간지 「엘·우니버살」은 알젠틴 주재 북한대사 정광순이 공산측 한국문제 결의안에 대한 지지표를 「매수」하기 위해 알젠틴의 무성 국제기구국장 부인에게 미화 1,000달러를 주려 했다가 거절당했을 뿐 아니라 『강력한 경고

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11월 1일자 중앙일보는 또 전통적으로 대한민국지지국인 아프리카 모국에 북한이 「특사」를 보내 그곳 외상서리를 미화 500달러로 매수, 동 외상서리는 대통령도 모르게 동국 주유엔대사에게 『이번 유엔총회에서는 공산측 결의안에 찬성투표하라』고 지시하는 대통령이름의 전문을 보냈으며 이를 의아하게 생각한 동대사의 조회전문 때문에 비로소 이러한 매수사건을 알게된 동국대통령이 대노, 문제의 외상서리를 좌천시키는 한편 부랴부랴 서방진영의 한국문제 결의안에 찬성 투표하도록 동국 주유엔대사에게 재훈령하는 웃지 못할 촌극마저 있었음을 보도했다.

이번 제30차 유엔총회는 11월 19일 한국문제에 관한 표결을 실시한 끝에 서방측 결의안을 찬성 59, 반대51, 기권29로 통과시키는 한편 공산측 결의안도 찬성 54, 반대43, 기권42로 역시 통과 (10월 30일에 실시된 정치위원회에서의 표결결과는 서방측 결의안이 찬성59, 반대51, 기권29 공산측 결의안이 찬성 51, 반대38, 기권50)시키므로써 한국문제에 관해 내용이 상반되는 두 결의안을 함께 통과시키는 유엔사상 초유의 이변을 만들어 냈다. 유엔의 이러한 결정은 분명히 한국문제에 관한 유엔의 권능과 권위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었다. 유엔은 서방측 결의안과 함께 공산측 결의안도 함께 채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가뜩이나 북한공산주의자들의 기피와 불응으로 중단되고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마저 저해하고 장차에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적시라고 판단할 때 무력남침을 감행하도록 면허장을 써준 것이 될지도 모른다. 예측했던 대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서방측 결의안이 보다 많은 표로 통과된 사실은 아예 묵살하고 공산측 결의안의 통과 사실만을 마치 공산측의 『일방적 승리』인양 왜곡, 선전하면서 북한지역 주민들을 선동, 오도하는가 하면 주한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새로운 선전공세를 격화시키고 있다.



## 2.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 중단

1975년 5월29일 서울측에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평양측은 5월 30일의 제11차 부위원장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시키는 것은 대한민국이 『반공소동, 승공소동; 멸공소동으로 남북간의 긴장상태와 전쟁분위기를 고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인지사태 종결이후의 남북관계의 현실양상을 놓고 볼 때 평양측의 이러한 주장은 실로 터무니없는 적반하장의 생트집이 아닐 수 없었다.

5월 30일의 제11차 부위원장회의가 끝내 유산되자 서울측의 이동복대변인은 성명을 발표하여 평양측 주장의 부당성을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이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사실의 전도입니다. 월남실함을 전후하여 북한측이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야욕을 채울 목적으로 월남전유형의 무력남침을 시도할 긴밀한 기도아래 휴전선일대에 병력과 화력을 집결시키고 공군과 해군력을 전방으로 전진전개하며 동서해에서 공격적 도발을 계속 자행하고, 비무장지대 땅굴공사를 계속 추진하는 등 무모한 전쟁도발준비에 광분하고 있는 사실은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동향을 주시하고 있는 전세계 이목에 의하여 이미 부인할 여지도 없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최고당국자는 최근 북경과 루마니아, 알제리아 등을 돌아다니면서 「전쟁이 일어나면 잃는 것은 군사분계선이며 얻는 것은 통일」이라느니, 「인도지나 이후 무너질 곳은 남한」이라느니, 「남한에서 혁명이 일어나면 좌시하지 않겠다」느니 「남한에서 미군을 몰아 낸 뒤 기필코 적화통일을 달성하겠다」느니 하는 도발적이고도 호전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지금 무슨 망집에 사로 잡혀 있으며 무슨 음모를 획책하고 있는지는 우리도 알고 전세계가 알고 있는 공지의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무모한 기도를 간파하고 국민총화의 실을 바탕으로 굳건한 국방태세를 다짐으로써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오만에 의하여 또다시 동족상잔의 도전을 도발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북조절위원회의 서울측은 그 동안의 부위원장 회의에서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땅굴공사를 비롯한 모든 전쟁도발준비행위를 즉각 중지하고 무장간첩의 남파 등 이른바 대남폭력혁명의 망상을 즉각 포기할 것을 촉구하여 왔으며 남북간에 안정된 평화를 다지고 진정한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공동노력에 함께 나서기 위하여 하루속히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정상화시킬 것을 역설해 왔고 또 지금도 계속 이를 역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이번 제11차 부위원장회의를 일방적으로 유산시키는 저의는 회의에서 그들의 무모한 전쟁도발준비양상이 거론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여러 가지의 물증이 제시되어 변명의 여지가 없는 궁지에 몰리는 것을 두려워 한 나머지 부위원장회의 개최 자체를 기피하려는 것이라고 우리는 단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7·4남북공동성명 발표 3주년 전야인 7월 3일 평양측은 김영주 공동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악랄한 비방, 중상을 퍼부으면서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남조선 당국자」들이 「근본자세」를 고쳐야 한다』고 강변하고 남북대화 재개의 조건으로 ① 주한미군의 철수 ② 대한민국의 반공정책의 중지 ③ 인지전 종결이후 강화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제반 국

가안보조치의 철회 등을 요구했다. 평양측은 또 이 성명에서 「남조선당국자」들이 이러한 요구를 수락하지 않을 때에는 『그들은 자리에서 물러나고 「진정으로 조국통일을 지향하는 애국적 민주인사」가 정권에 올라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레야만 『남북대화가 진행될 수 있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평양측의 당면목표는 대한민국의 전복·타도이지 대화의 재개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서울측의 장기영공동위원장대리는 7월 5일 평양측 김영주공동위원장 앞으로 연기된 제11차 부위원장회의를 7월 15일에 열 것을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보내고 이에 부연하여 7월 9일 성명을 발표, 최근의 남북관계의 제반 양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장공동위원장대리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해 1973년 6월 제3차 회의가 열린 이래 정상 운영이 정지되어 있는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회의를 광복 30주년이 되는 금년 8월 15일 이전에 무조건 개최하여 중단된 남북조절위원회에서의 남북대화를 재개하자고 제의했다. 이 성명에서 장공동위원장대리는 남북조절위원회 운영 정상화 문제에 관한 그의 견해를 다음과 같이 피력했다.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화를 위해 남북 쌍방간에 새로운 합의가 필요한 문제는 제4차 회의 일자뿐입니다. 제4차 회의의 개최장소는 기왕에 합의된 차례에 따라 평양이며, 따라서 회의일자만 결정되면 본인과 우리측 위원일동은 지체없이 회의에 참석할 것입니다.

평양측은 지난 7월 3일 김영주 공동위원장의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하여 대화중단의 책임을 오히려 우리에게 전가하고자 하는가 하면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화 문제에는 일언반구의 언급도 없이 소위 「대민족회의」, 「남북정치협상회의」를 하자는 상투적인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남북조절위원회라는 기존의 대화기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기존의 대화기구는 제쳐놓고 엉뚱하게도 수백명내지 수천명의 인원이 참가하는 「군중집회」식의 소위 「대민족회의」나 「남북정치협상회의」나 하는 것을 하자는 황당무계한 억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이산가족들의 애틋한 고통을 인도적 견지에서 우선적으로 해소시켜 주기 위한 적십자회담마저도 터무니없는 정치적 주장을 앞세워 교착시킴으로써 천하의 인륜까지도 오로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제물로 삼고 있다는 것은 우리국민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들이 있는 대화기구는 마다하고 되지도 않을 소위 「대민족회의」나 「남북정치협상회의」나 하는 것을 들고 나온다는 것은 결국 그들의 의도가 진정한 대화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들이 추구하는 대남폭력혁명의 수단과 방편으로만 대화를 이용해 보려고 급급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남북조절위원회는 이미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남북 쌍방이 엄숙히 서명, 합의한 바 있는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에 근거하여 통일문제를 포함한 남북간의 모든 문제를 협의, 해결하는 기능과 임무와 책임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에 임하는 우리의 기본입장은 남북간의 모든 문제는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이 대화기구 내에서 제기되고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7·4남북공동성명의 기본정신인 것입니다. 본인은 그러한 뜻에서 북한측이 즉각 무조건 대화의 광장으로 되돌아 올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러나 평양측의 반응은 여전히 부정적이었다. 평양측은 7월 14일 서울측에 보내온 전화통지문에서 제11차 부위원장회의를 7월 15일에 열자는 서울측의 제의를 한마디로 거절하면서 대한민국이 ①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을 취소하고 ② 반공정책을 중지하며 ③ 자주국방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중지하는 때라야 남북대화의 재개는 가능하다는 종래의 입장을 또 다시 반복했다.

서울측의 장기영공동위원장대리는 8월 8일에도 제11차 부위원장회의일자를 8월 25일로 제의하는 전화통지문을 평양측에 보냈으나 이번에는 평양측은 가부간 회답도 하지 않았다.

서울측의 장기영공동위원장대리는 다시 10월 13일 평양측의 김영주공동위원장에게 전화통지문을 보내 평양측이 거둬들이는 서울측의 대화재개 제의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크게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다시 한번 촉구했다.

장공동위원장대리는 남북조절위원회 제4차 회의가 쌍방간의 기존 합의에 의거하여 평양에서 열릴 차례인데도 불구하고 평양측이 이의 개최를 거부함으로써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운영이 2년간이나 중단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만약 평양측이 평양에서 회의를 열 수 없는 사정과 형편이 있다면 제4차 회의를 쌍방간 중립지대인 판문점에서 열자』는 타협안을 제시하고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제11차 부위원장회의를 10월 20일에 열 것을 제의했다. 장공동위원장대리는 이날 전화통지문에서 다음과 같이 평양측의 태도변화를 촉구했다.

『우리의 남북관계가 처해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귀측의 태도는 실로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은 이미 1973년 8월 28일 남북조절위원회의 정상운영을 일방적으로 중단시킨 이래 7·4남북공동성명을 정면으로 유린하면서 우리에게 대한 갖가지 폭력 및 군사도발을 자행함으로써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나날이 격화시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금년 봄의 인지전 종결후 귀측은 무력에 의한 통일문제해결을 공공연하게 호언하는가 하면 새로운 전쟁도발의 구실로 삼으려는 명백한 기도하에 대한민국 내에서의 폭력사태의 발생을 교사, 선동하는데 혈안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 남북조절위원회 부위원장회의의 개최마저 거부하고 있는 귀측의 태도를 이상의 그 동안의 귀측의 전반적인 동향과 관련시켜서 생각할 때 본인은 귀측의 태도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귀측은 남북대화의 계속을 거부하는 이유로 우리의 국내 및 대외정책을 시비하면서 이른바 대화재개조건이라는 것을 운위하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대한민국의 현정부와는 대화를 할 수 없다는 등 자가당착의 궤변을 놓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간에는 해결하지 않으면 안될 문제들이 산적해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직접 당사자들인 남북 쌍방간의 대화와 협의, 그리고 합의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남북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 쌍방이 합의하여 엄숙하게 서명, 발표한 남북공동성명은 바로 그러한 남북관계의 현실인식에 바탕을 두었던 것이며, 조국의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처리하기 위한 남북공동기구로 남북조절위원회를 발족시켰던 것입니다. 남북 쌍방이 1972년 11월 4일 합의, 서명하여 내외에 공표한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는 남북조절위원회의 기능을 (1) 자주적 평화통일의 실현 (2) 남북간의 정치적 교류 실현 (3) 남북적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교류와 협력의 실현 (4)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시키는 조치의 강구 (5) 대외활동에서의 공동보조 추진 등으로 명문화시켜 놓았습니다.

위에서 본인이 인용한 두 문건은 우리 쌍방이 서로 엄숙히 준수를 서약한 역사적 합의문서들입니다. 우리 쌍방에게는 이들 합의문서들의 명문조항들을 성실히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들 합의문서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합의서의 관계명문조항들에 의거하여 남북조절위원회를 성실하게 운영하면서 남북간에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들을 남북조절위원회내에서 제기되고 협의하고 타협하여 쌍방이 함께 동의할 수 있는 원만한 해결을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평양측은 이번에도 서울측 장기영공동위원장대리의 제의를 역시 거부했다. 평양측은 10월17일 서울측에 보낸 전화통지문에서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 대해 금년 봄의 인지사태 종결이후 국내외 이목의 우려에 찬 주목의 대상이 되어 온 북한에 의한 무력남침위협이 대한민국에 의해 『조작된 것』임을 {시인}이라고 강변하는가 하면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반공정책을 [연공]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측의 이동북대변인은 평양측의 이러한 부당한 태도에 대해 10월20일자 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평양측은 지난 17일자 회답전문에서 비단 우리 자유대한의 이념과 체제, 국방태세 그리고 6·23 평화통일외교정책에 대한 상투적인 비방을 되풀이하면서 이들 대한민국의 대내외정책의 [폐지]또는 [철회]를 남북대화 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웠을 뿐 아니라 이번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남북대화가 재개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반공정책을 연공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등 남북공동성명을 위배하는 주장을 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의 국방태세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무력남침야욕을 억제하여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고 남북의 5천만 겨레로 하여금 다시는 동족상잔의 전화를 입지 않게 하는 전쟁억지력입니다. 우리의 반공정책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사회를 폭력으로 전복, 이를 공산화하려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끊임없는 음모와 책동을 봉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6·23평화통일 외교정책은 현실상황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조국의 진정한 평화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이며, 현명한 통일접근정책입니다. 이들 정책은 대한민국의 생존과 안전, 한반도의 평화를 확고하게 지키면서 진정한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요소들인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대내외정책을 평양측이 시비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천부당 만부당한 내정간섭 행위입니다. 더구나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켜 놓고 대화의 테두리 밖에서 그러한 일방적이고 부당한 주장들을 대화재개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우는 평양측의 처사는 7·4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송두리채 파기하는 행위라고 우리는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평양측은 남북대화 정상화의 조건으로 우리의 반공정책을 연공정책으로 바꿀 것을 요구함으로써 그들이 우리와 대화를 하는 목적은 한반도의 평화나 남북관계의 개선 등 진정한 평화통일의 추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추구하는데 있음을 명백히 자인했습니다. 이러한 평양측의 태도는 결국 평양측의 기도가 남북간의 현안문제들을 대화를 통하여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화를 빙자하여 그들의 야욕을 우리에게 강요하려는 것임을 입증하는 것이며, 바로 이 점에서 평양측은 7·4남북공동성명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양측은 이렇게 함으로써 그들이 국내외로 선전하고 있는 [평화통일]운운이 양두구육의 기만적인 위장선전에 불과함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

### 3.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 경과

“추석·신정 성묘방문을 즉각 실천하자” 한적, 본회담재개·사법착수를 거듭 촉구

<1975년 중에 남북적십자간에는 도합 8회 (제7차 : 1월 24일, 제8차 : 2월 28일, 제9차 : 3월 26일, 제10차 : 5월 8일, 제11차 : 7월 21일, 제12차 : 8월 22일, 제13차 : 10월 23일, 제14차 : 11월 28일)의 본회담실무회의를 판문점에서 개최했다. 그러나 본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본회담의제사업을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실시하자는 대한적십자사측의 거듭된 제의는 북한적십자회측에 의해 한결같이 거부되었다. 북적측은 실무회의 본연의 임무는 계속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내외정책 등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을 비방중상하는데만 온 정력을 쏟아왔다. 김연주 한적 교체수석대표는 10월 23일의 제13차 실무회의에서 그 동안의 적십자회담 경과를 전반적으로 개관하면서 적십자회담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북적측의 성의를 거듭 촉구했다. 다음은 이날 김대표의 발언 내용(전문)이다.> -편집자 주-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오래동안 중단된 본회담을 조속히 재개하고 본회담 의제의 실질적 토의를 진척시키기 위하여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귀측은 우리가 토의 해결하기로 되어 있는 실무회의 의제 즉, 본회담의 조속한 정상화와 본회담 의제의 예비적 토의에 대하여 이른바 [분위기 문제], [조건 환경론]과 같은 선행조건을 계속 앞세우면서 동포들이 고대하고 있는 적십자 인도주의 사업의 실천을 기피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나는 오래 전부터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과 5천만 동포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는 귀측의 이와 같은 무성의한 회담 자세가 하루속히 시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 번 촉구한 바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무조건 조기 정상화와 1천만 이산가족 찾기 사업의 조속한 실현을 위하여 귀측의 성의있는 태도표시를 다시 한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본회담 재개문제에 대하여 말한다면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남북적십자 본회담이 중단된 원인은 1973년 7월, 평양에서 열렸던 제7차 본회담 이후, 귀측이 쌍방 합의대로 서울에서 개최해야 할 제8차 본회담을 계속 거부해 온데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지난 2년 동안 제8차 본회담을 무조건 조속히 서울에서 개최할 것을 여러번 촉구하였으며 무려 다섯 차례에 걸쳐 구체적인 서울 회담일자를 제안하여 귀측 대표단의 회담참가를 정중히 초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그때마다 제8차 본회담의 개최를 거부하였습니다.

귀측이 제8차 본회담의 서울 개최를 거부하는 구실은 {분위기가 나쁘기 때문에 서울에서 개최하는 인도주의 회담에 참가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귀측의 이와 같은 대화 거부적인 구실은 사실과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가당착의 모순을 스스로 범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귀측의 이러한 주장은 쌍방간의 엄숙한 합의사항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대화중단의 책임을 회담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것입니다. 남북적십자 쌍방은 1971. 10. 6. 제3차 예비회담에서 {본회담은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가며 개최}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또한 1973. 7. 평양에서 열렸던 제7차 본회담에서도 제8차 본회담은 당연히 {서울에서 개최}하고 다만 회담 일자만을 추후에 협의 결정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귀측은 이와 같은 엄연한 합의사항을 어기고 {서울의 분위기가 나쁘기 때문에 제8차 본회담에 참가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귀측이 합의사항을 수정하려 한다면 [분위기]문제 같은 구실을 앞세워 대화중단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려는 잔꾀를 부릴 것이 아니라 먼저 본회담을 재개하고 본회담 석상에서 정정당당하게 합의사항의 수정을 제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둘째로, 귀측은 서울에서 개최된 남북적십자 본회담에 이미 세 차례나 참가한 경험을 갖고 있으며 우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도 네 차례나 평양회담에 참가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 평양사이를 왕복한 남북적십자 쌍방의 이와 같은 충분한 회담경험은 곧 [분위기 문제]때문에 {본회담 재개에 호응할 수 없다}는 귀측의 주장을 합리화할 수 없음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서울은 귀측 주장처럼 {회담 분위기가 나쁜 곳}이 아니라 오히려 평양보다 더 좋은 곳입니다. 귀측도 여러 차례 서울에 와서 직접 목격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은 모든 조건과 시설 면에 있어서 세계의 어느 나라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으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도시로 더욱 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9일부터 30일까지 사이에는 15개국에 달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청소년 적십자 지도자 회의가 서울에서 성대히 개최되어 적십자 사업의 국제협조 분야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그밖에도 서울에서는 연일 대규모의 국제회의와 행사가 쉼 없이 열리고 있으며 소련, 중국, 동구라파 등 공산국가의 시민들까지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귀측 대표단만은 서울에 올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의 정중한 초청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태평양지역 청소년 적십자 지도자 회의에조차 참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곧,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정상화를 지연시키고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고의적으로 기피하는 귀측의 속셈을 그대로 드러내 놓은 것이라고 밖에 달리 해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을 오래도록 주시해온 우리의 동포들과 전세계는 귀측의 그러한 억지와 거짓말에 속을 만큼 어리석지는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뜻에서 귀측이 자신의 그릇된 회담자세를 시정하고 지금과 같은 궤변과 책임전가 발언을 중지하며 합의사항을 준수하여 조속히 서울회담에 동의해 올 것을 촉구하는 바이며 그렇게 되면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이어서 평양에서 개최될 제9차 본회담에 기꺼이 참가할 것을 명백히 해두는 바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동포애와 적십자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남북적십자 본회담의 무조건 조기 정상화를 위한 귀측의 성의를 촉구하는 바이며, 하루속히 제8차 본회담이 서울에서 열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나는 1천만 이산가족들을 하루라도 빨리 찾아주기 위한 본회담체제의 실질적 토의에 있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대한적십자대표단은 1971년 9월이래 귀측과 회담을 시작한 그날부터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자는 입장에서, 우선 그들이 요구하고 있는 긴급한 문제와 실현 가능한 사업부터 한가지씩 토의 해결할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에 따른 구체적인 해결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우리측은 1972년 10월, 제3차 본회담에서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 쌍방적십자 기관이 주관하는 심인사업 방식을 제의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산가족들의 자유의사에 따라서 당사자들이 요청하는 심인의뢰서와 심인회보서를 남북적십자사가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써, 국제적으로도 널리 통용되고 있는 보편적인 심인사업 방식입니다.

그런데 귀측은 엉뚱하게도 이른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개선}이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이산가족들을 찾아줄 수 없다는 정치적 선행조건을 앞세워 이산가족찾기 사업의 실질적 진전을 가로막았습니다. 귀측의 이러한 주장은 이산가족 문제를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한 술책으로써 인도주의 문제를 악용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귀측의 이와 같은 부당한 태도로 말미암아 그후 회담은 교착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1973년 7월 제7차 본회담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는 동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회담의 교착상태를 타개하기 위하여 남북의 이산가족과 친척들로 구성되는 성묘 방문단을 민족적 명절인 추석을 기해서 서로 교환할 것을 제의하였습니다.

만약 귀측이 진정으로 인도주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자세였다면 이러한 {추석 성묘 방문단의 상호 교환}은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도 능히 받아들일 수 있는 제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이러한 우리측의 인도주의적인 제안과 호소를 이른바 {지엽적인 문제}라는 이유로 반대함으로써 이산가족들과 동포들의 간절한 소망을 외면하였습니다.

1천만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리측의 성실한 노력은 본회담이 중단된 이후에도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

우리 대표단은 1974년 7월 10일 판문점에서 열린 제1차 실무회의에서 이산가족 문제의 전반적 해결을 외면하고 있는 귀측 태도와 귀측 사정을 고려해서, 우선 노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이산가족찾기 사업만이라도 먼저 착수하자고 제안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판문점에 이산가족들의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를 즉각 설치할 것도 아울러 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우리의 이러한 제의마저도 이른바 [조건환경]을 앞세워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그후 우리측이 제의한 이산가족들의 사진교환사업까지 반대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남북적십자회담은 시작된지 만 4년이 경과하였으나 실질적인 심인사업을 하지 않겠다는 귀측 입장 때문에 계속 공전만을 거듭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나는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과 5천만 겨레가, 그리고 전세계 평화 애호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진정으로 바라고 있는지를 귀측이 다시 한번 냉정하게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귀측이 이른바 [조건환경론]과 같은 정치적 문제를 남북적십자회담 석상에서 거론함으로써 인도주의 회담을 지연시키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으며, 대한민국을 공산화하기 위한 전략전술



의 일환으로 인도주의 문제를 희생시키는 것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남북으로 흩어진 혈육들의 생사여부와 주소를 확인하고, 서로 편지를 주고 받으며, 또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인도적인 문제의 해결을 열망하고 있으며 그럼으로써 이 나라에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이루어지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을 찾아주고 그들의 재회를 도모해주는 인도적인 사업은 어디까지나 법률이전, 정치이전, 체제이전의 숭고한 문제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인도주의 사업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없으며 또 정치적 이유를 앞세워 그것을 반대할 수도 없습니다.

대한적십자사가 지난 1971년 8월 12일, 귀 적십자회에 대하여 적십자회담을 제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인도적 목적을 달성하자는 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남북의 상이한 정치체제나 사회환경이 실제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아무런 장애도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인도적인 사업을 한가지씩 합리적으로 전개하여 나감으로써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상호의 불신을 해소하며, 평화정착과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도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측의 이와 같은 일관된 입장과 주장이 그 얼마나 정당하고 합리적인가 하는 것은 최근 {조총련계 제일 동포들의 모국방문}사업에서 명백히 실증되고 있습니다.

이미 보도를 통해서 알려진 바와 같이, 대한민국에는 금년 추석 명절을 기해서 수십년만에 그리운 조국 땅을 밟고, 잊었던 혈육을 되찾는 조총련계 제일동포들의 감격적인 모국 방문이 대대적으로 전개되었습니다.

사상과 이념을 달리하던 1천명 이상의 조총련계 제일동포들이 이미 추석을 전후해서 자기 고향을 다녀갔으며, 앞으로도 그들의 모국 방문은 계속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조총련계 제일동포들의 모국 방문은, 그들에게 사실상 제2의 광복의 환희를 안겨준 민족적인 경사였습니다.

이것은 곧, 지금까지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해소해주려는 대한민국의 꾸준한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된 것이며, 우리가 추진해온 남북의 이산가족찾기 사업이 우선 제일동포 사회에서 먼저 실현되었다는 것을 말하여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저해하는 그 어떠한 조건·환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직접당사자들의 증신을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우리는 과거, 본의 아니게 조국 대한민국을 등지고 살아온 제일동포들에 대해서 그들의 과거와 현재를 일체 불문에 붙이고, 언제든지 고국땅을 자유롭게 밟을 수 있고 또 자기 혈육들과 자유롭게 재회할 수 있도록, 모든 인도적인 조치와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조총련계 제일동포들의 모국방문은 시종 감동과 경탄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국 땅에 첫발을 내디딜 때부터, 눈부신 조국의 발전상을 목격하고 자기의 눈을 의심하였고, 수십년만에 처음으로 상면한 가족, 친척들과 환희의 눈물로 첫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게 된 노부모와 딸이, 형과 아우가 서로 부등켜안고 재회의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이산가족들의 그 동안의 고통이 그 얼마나 쓰라린 것이었으며, 재회의 기쁨이 또한 얼마나 큰 것인가를 보여준, 참으로 감동적인 정경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고향 산천을 찾고, 몽매에도 잊지 못한 가족, 친척들을 만나고, 조상의 무덤에 성묘까지 하고 난 그들이,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남긴 말은 한결같이 {이제 죽어도 한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을 혈투는 허위와 기만 선전에 속아 살아온 그들은 지난 날을 후회하면서 늦게나마 참된 조국을 되찾게 된 것이 무엇보다도 기쁘다고 하면서 하루속히 남북적십자회담이 타결되어 남북의 이산가족들도 그들과 똑같은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기원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들은 조국 강산을 자유롭게 여행하고 그리운 가족들과 친척, 친구들을 다 찾아본 다음 전원 무사히 일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다시 자기 고향을 찾을 때, 조국의 품은 언제나 그들에게 활짝 열려 있으며, 자유롭게 찾아와서 자유롭게 여행하고 또 자유롭게 돌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곧, 우리 대한민국에는 이산가족 문제의 해결을 저해하는 그 어떤 조건이나 환경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백히 입증한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이 먼저 개선되어야만 1천만 이산가족찾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귀측 주장의 허구성을 입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또한 지난 9월 2일, 귀측 해안 부근에서 발생한 일본어선 [쇼세이마루]에 대한 총격 및 납치사건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과연 그러한 총격 및 납치사건이 어떻게 해서 발생했으며 어느 편에 과실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따지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일본어선에 대한 총격 및 납치 사건의 처리과정에서 귀 적십자회가 직접 관여했던 만큼 사건처리 과정에서 취한 귀측 태도에 대해서 주목했던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몇 가지 중대한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첫째로, 귀측은 사건직후, 일본어선 [쇼세이마루]에 대해서 그것이 {일본배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배인 것으로 잘못 알고 총격을 가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귀측의 이러한 공식 발표를 중대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배라면 그것이 어선이거나 조난된 선박이거나 불문하고 총격을 가한단 말입니까?  
그것이 귀측에서 주장하는 동포애이며 인도주의란 말입니까?

우리는 귀측의 이와 같은 반민족적이며 비인도적인 사고방식에 대하여 아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둘째로, 귀측은 어부 송환문제 있어서도 비동포애적이며 사대주의적인 태도를 취하였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1974. 2. 15 서해 공해상에서 어로 작업 중 귀측에게 피랍된 우리측 어선 수원 33호와 어부들을 송환해 줄 것을 여러번 촉구하였으며 그것이 어렵다면 가족들의 면회나 편지 교환만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귀측은 사건 발생 후, 1년 반이 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도 이에 대한 대답 한마디 없었습니다. 귀측은 일본 어부들에 대해서는 사건 발생후 불과 열흘도 못되어 이들을 송환하고 사망자에게 보상금까지 지급하면서도 동족인 대한민국의 어부들에 대해서는 그들을 [간첩]으로 조작, 1년 반 이상이나 계속 억류 감금해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 뿐이 아닙니다.

귀측은 우리의 여객기 두 대를 납북하여 그 승객과 승무원을 아직껏 억류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30여 척의 어선과 400여명의 어부를 납치해놓고 그 생사 여부조차 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귀측에 납치되어 억류중인 이들 어부들과 승객, 승무원들에 대한 생사여부를 알려주고 조속한 시일 내에 이들을 송환할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어떠한 [이데올로기]나 정치체제도 그것이 한 핏줄을 갈라놓을 수는 없었으며 인도주의 사업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남북의 현 체제나 환경이 아무리 다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동포애와 적십자 인도주의정신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고 또 극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북한 적십자회 대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남북적십자회담을 지연시킬 수 없으며 동포애를 저버리고 1천만 이산가족들과 5천만 겨레의 염원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남북적십자 본회담을 정상화 해야 하며 그럼으로써 합의된 본회담 의제들을 실질적으로 토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나는 이러한 뜻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조속한 실천을 귀측에게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남북간의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의 조치로서 귀측은 피랍된 어부들과 여객기 승객, 승무원들의 근황을 알려주어야 하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전원을 송환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1973년 7월 평양에서 개최된 제7차 본회담 이후 중단상태에 놓여있는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무조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며 제8차 본회담은 쌍방 합의사항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에서 개최되고 이어 제9차 본회담은 평양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셋째, 남북적십자 쌍방이 토의 해결하기로 합의한 본회담 의제 제1항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주소와 생사를 알아내며 알리는 문제}를 전제조건 없이 구체적이며 실질적으로 토의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만약, 귀측 사정으로 본회담 의제 제1항 전반에 대한 사업토의가 곤란하거나 우리측이 제의한 바 있는 보편적인 적십자 심인사업을 아직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 다음과 같은 긴급한 인도적 사업을 우선 착수해야 합니다.

- 1) 남북적십자 쌍방은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과 신정을 기해서 우선 [성묘 방문단]을 상호 교류토록 한다. 그 제1차 사업은 1976년 신정을 기하여 실시한다.
- 2) 남북적십자 쌍방은 1천만 이산가족들 중에서도 우선 {노부모들과 그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심인사업을 실시하며 그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관문점에 [면회소]와 [우편물 교환소]를 공동으로 설치 운영한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최근의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사업이 성공적으로 실현된 사례에 비추어 이상과 같은 인도적 사업이 아무런 장애 없이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귀 적십자회의 성의있는 호응이 있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 제3부 유엔의 한국문제 토의와 한국의 기본입장

#### 1. 정치위원회에서의 김동조 외무부장관의 연설문

<제30차 유엔총회에서 한국문제 토의에 참가한 대한민국 수석대표 김동조 외무부장관은 1975년 10월 21일 정치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대한민국정부의 기본입장을 천명하는 기조연설을 했다. 다음은 김장관이 행한 연설의 내용(전문)이다.>—편집자 주—

본인은 대한민국 대표를 본 토의에 참가하도록 초청하여 준데 대하여 본 위원회에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또한 본인은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정부와 국민들에게 이해와 지지를 표명해 주신 다수 평화애호국의 고명하신 정치가들에게 사의를 표하고자 합니다.

금번 총회에서 그들이 보여주신 호의에 대하여 대한민국 국민은 항상 그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동시에 본인은 유엔에 부합하는 이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몇몇 연사의 중상적이며 모욕적인 발언에 대해 이를 단호히 배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작년 본 위원회에서 토의후 총회는 한국의 평화통일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북한당국간의 대화의 계속을 촉구하고, 휴전협정의 계속유지를 저해함이 없이 유엔사를 해체할 수 있도록 희망을 표시한 결의 3333호를 압도적으로 채택한 바 있습니다.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동 결의에 따라 남북대화를 재개하며 유엔사 해체를 가능케 하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코자 모든 노력을 경주하여 왔음을 본 위원회에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금년 6월 27일 본인은 모든 문제를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휴전유지와 관련된 직접 당사자회의를 제의하였습니다.

금년중 수차에 걸쳐 본인의 정부는 남북대화의 무조건 재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겠지만 박정희대통령께서는 1973년 6월 23일 『평화통일을 위한 신외교정책 성명』을 발표하고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며 평화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제안한 바 있습니다.

또한 1974년 1월 박대통령께서는 남북간 불가침협정체결을 정식 제의하였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건설적 제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과가 없음을 보고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같은 제안은 북한측으로부터 아무런 긍정적인 반응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북한당국은 우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설과 도발을 자행하였습니다. 대결과 고조된 긴장이 한반도를 계속 뒤덮고 있으며 전쟁재발 위협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는 아직도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1950년 6월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한 불법침략을 감행한지도 4반세기나 흘러갔습니다. 북한의 남침이야말로 우리나라에 막대한 인명피해와 파괴를 초래한 범죄 행위였습니다. 그 이후 상존하는 북한의 재침위협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오로지 전쟁의 상처를 아물게 하고 폐허화된 조국을 재건하며 국민의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제를 튼튼히 하고 급속히 발전시키는데 온갖 노력을 경주하여 왔습니다.

이같은 우리의 노력은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경제분야에서만 보더라도 과거 10년간에 걸쳐 국민총생산에 있어 연평균 성장율 10.3%, 연평균 수출증가율 44.7%의 성과를 거둔바 있습니다.

1980년까지 우리는 자립경제와 현대공업국의 위치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하한 기준에서 보더라도 괄목할 성과인 것이며 모든 한국민은 의당 이를 자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한국민은 정치, 경제, 문화분야에서 이룩한 발전이 북한의 또 다른 침략에 의해 전화로 소실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세계 모든곳 특히 동부아세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발전에 대해 계속 경계와 주의를 기울여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우리는 부단한 경제야말로 평화와 독립의 대가라는 교훈을 배웠습니다.

한국민에게 통일은 민족지상의 염원입니다. 한국민의 장구하고 자랑스러운 역사, 문화의 단일성과 민족적 동질성은 우리 민족의 공동운명을 기약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민은 남과 북을 막론하고 조국이 재통일될 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장 고귀하고 긴박한 민족적 지상 명령으로서 평화를 소망하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닙니다. 한국민은 전쟁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어 왔습니다. 또다른 전쟁은 과거 20년간 이루어 놓은 업적을 송두리채 파괴할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는 인간적 고통과 인명의 희생을 초래할 것이라는 것을 한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유때문에 통일은 우리의 지상목표이지만, 평화는 가장 긴급한 민족적 지상명령입니다.

한국민에게 통일없는 평화는 불안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평화없는 통일은 민족적 참화를 초래케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국민의 가장 높은 민족적 목표는 통일있는 평화입니다. 즉 그것은 평화적 방법에 의해 이룩된 통일인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한결같이 평화와 평화통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북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을 위하여 사용하려고 하는 방법에 관해 검토해 봅시다. 전세계는 1950년 북한이 어떠한 정책을 취하였으며 북한이 어떠한 수단을 사용했는지를 기억할 것입니다. 즉 그것은 남한에 대한 노골적이며 불법적인 무력침략인 것입니다.

또한 전세계는 그 결과를 기억하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즉 그것은 바로 북한 침략자에 대한 전대한민국 국민의 영웅적이며 성공적인 투쟁입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하여 북한정권은 한국민이 결코 그들의 지배에 굴복하지 않을 것임을 확실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무력통일을 집요하게 추구하고 있습니다. 남한의 우리들 한국민들이

평화를 신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북한정권은 폭력을 신봉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맹목적 정복욕에 빠져 그들의 침략정책으로 인하여 전 한국민에 끼치고 있는 치명적 위협을 분명히 모르고 있거나 단순히 개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한반도에 계속되고 있는 긴장의 근본적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작년 본인은 북한에 의해 비무장지대를 가로 질러서 남쪽으로 구축된 땅굴을 발견한데에 관해서 본위원회에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그 당시 북한대표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은 북한정권에 대해 「광란적인 소동」을 피우려고 꾸민 「조작된 사실」이라고 하였습니다. 그후 우리는 또 다른 땅굴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아축정보소식통에 의하면 비무장지대 밑에 10여개 이상의 그와 유사한 땅굴이 있다는 것이며 북한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발표할 것에 합의한 바로 그 당시에도 이같은 땅굴을 구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인은 휴전협정에 대한 가장 중대한 위반인 이들 땅굴에 대한 합동조사를 계속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이를 일언지하에 거부하였다는 사실을 보고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땅굴들은 분명히 군사목적 을 위한 것입니다.

본인은 고명하신 대표 여러분께서 우리나라에 오셔서 여러분 자신이 이 땅굴들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땅굴들이 남침을 촉진시키기 위한 군사목적외의 다른 목적을 위해서 구축되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땅굴은 북한의 의도에 대해 가장 확고한 최근의 증거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이 땅굴들은 북한이 고의로 저지른 휴전위반사건 가운데 가장 최근에 기록된 위반사건입니다. 그러나 본인은 앞으로 이러한 위반사건이 그칠 것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북한에 의한 악명높은 휴전위반사건 기록 가운데에는 비무장지대의 불법요새화와 무모한 파괴 및 우리 대통령에 대한 암살임무를 띤 무수한 결사무장 게릴라의 남파가 있습니다.

더욱이 북한은 오직 남한을 침공할 목적만으로 유례없이 막대한 군비를 증강하는데 모든 힘과 자원을 투입시키고 있습니다.

경제개발과 국민생활향상에 계속 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국방을 위해서 국민총생산고의 단지 4%를 소비하고 있는 반면, 북한정권은 매년 군사적 목적을 위해서 국민총생산고의 14% 이상을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일성의 철두철미한 전체주의정권은 북한지역을 하나의 병영으로 전환시켰습니다. 이같은 전쟁태세와 준비 그리고 전쟁에 대한 집념은 우리의 긴 역사상 유례를 발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있듯이 백마디의 말보다 행동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북한의 평화선전도 본인이 여러분 앞에 보고드린 사실을 변경시킬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에 있어서의 대결은 2개의 호전적인 국가사이의 대결이 아닙니다. 그것은 평화애호국인 대한민국과 침략과 전쟁에 광분하고 있는 북한정권과의 대결인 것입니다.

1975년 시초부터 북한정권의 지도자들은 점점 더욱 당돌하고 호전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와의 대화를 거부하였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공공연히 위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북한정권의 수괴인 김일성은 지난 4월 외국방문중에 『전쟁이 일어나면 잃는 것은 휴전선이며 얻는 것은 통일이다』라고 기고만장하여 공언하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 승배에 도취한 자의 언동이며 전쟁과 폭력에 몰두한 자의 언동인 것입니다.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전쟁의 검은 구름이 우리 머리위에 감돌고 있다는 현실을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러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남북대화의 재개문제와 휴전협정을 보전하는 문제 및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보다 항구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문제에 대처하여야 하겠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한 북한측의 입장은 부정적입니다. 분명히 북한당국은 「평화」나 「평화통일」이니 요란스럽게 떠들어 대고 있습니다. 그들의 정책이 폭력에 기초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평화가 세계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이 마당에 있어서 그들이 위선과 기만과 역설을 늘어 놓을 수 밖에 없는 것은 어쩔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그들에게는 제2의 천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평화」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그들의 저의를 폭로시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들은 민족 자결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민족 자결 원칙을 평화적으로 적용하는 유일한 실제적 방법인 남북대화의 진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그들의 결의안 본문에서 대화에 관하여는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유엔군사령부의 즉각 무조건 해체를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같은 조치가 그들 주장대로 휴전협정의 종료 나아가서는 휴전체제전체의 와해를 초래할 것이라는 사실을 개의치 않습니다.

그들은 미국과 대안을 협상하겠다고 말하고 있으나 대한민국과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휴전협정의 보전을 저해함이 없이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를 허용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해 협상할 수 없다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전반적인 입장은 평화를 위한 교섭의 선행조건으로서 한반도에서 전쟁의 재개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평화를 성취하는데 전쟁수단에 호소하여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들은 1975년 8월 17일자 각서에서 북한과 미국만이 휴전협정의 「실제당사자」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보다 장기적인 조치는 차치하고라도 휴전협정의 보전을 위한 조치에 관하여 대한민국과 협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민족자결을 지지한다는 북한이 어떻게 휴전협정 내지 한반도의 평화에 관한 제반문제를 단지 북한과 미국 사이의 문제라고 주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체 한국민 3분의 2이상의 인구를 포용하는 대한민국을 배제한 한반도 평화조치에 대하여 운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대한민국이 휴전의 불가결한 당사자이며 평화유지의 주당사자임은 누구에게나 명백한 일이며 그이상 설명



을 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론은 대표 여러분의 지성에 대한 모독이며 그것은 평화에 대한 북한측의 터무니 없는 모욕적 태도를 여지없이 나타내는 것입니다. 북한은 쌍무적인 협상을 통하여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해소할 「실제적 조치」를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들 이야기가 진실이라면 그들은 남북대화의 즉각 재개에 동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북한이 그들 결의안에 열거된 「실제적 조치」를 협상하겠다고면서 양측의 직접협상을 위한 유일한 통로를 재개할 것을 아직도 거부한다는 것은 위선에 찬 언사라고 밖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시종일관 그들의 입장은 이러한 자가당착과 뻔한 불성실과 기만으로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들의 결의안이 채택된다면 한국에는 휴전의 파괴와 전쟁의 재발이 초래될 것입니다. 북한 정권이 말하는 「통일」이란 평화적 방법으로 두 개의 실체로 하여금 자유로운 합의하에 결합시킨다는 자발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통일」이란 침략을 통하여 일방이 타방을 강제적으로 흡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북한은 또한 대한민국으로부터 모든 외군을 철수시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요구는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이 향유하는 고유의 주권행사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며 이는 유엔헌장의 가장 신성한 원칙중의 하나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간섭을 단호히 배격합니다. 북한의 주장은 북한으로부터 모든 외군이 철수하였으니 남한에 주둔하고 있는 외군도 철수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이비 논리로는 한반도의 군사적, 지정학적 현실을 아는 사람을 누구도 속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만일 필요하다면 북방국경을 바로 건너 주둔하고 있는 외군에 의존할 수 있기 때문에 구태여 실제적으로 그들의 땅에 외군을 주둔시킬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1950년 한국동란때 유엔이 한국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제공하는데에 2개월 이상이 걸렸으나, 외군이 북한을 돕기 위하여 대대적으로 개입하는 데에는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왕에 즉 대한민국 정부수립직후 우리나라 국회는 주한미군 철수요구 결의를 채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의에 부응하여 모든 미군은 1949년말까지는 대한민국에서 철수하였습니다. 그후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은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비극적이고 무분별하며 잔인한 기억일 것입니다. 즉 그로부터 6개월후 북한은 남한에 대해 대대적인 군사적 침략을 감행하므로써 3년간에 걸친 쓰라린 한국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이처럼 적나라한 그리고 불법적인 침략행위는 유엔의 정신을 우롱한 무력행사로서 유엔으로 하여금 사실상 유엔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행동을 취하도록 박차를 가하게 한 것입니다. 이성있고 양식있는 사람들과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침략을 격퇴하기 위하여 단합하였으며 그 결과로 나온 한반도에 대한 집단안전보장조치는 유엔의 역사에 하나의 명예로운 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유엔이 똑같은 교훈을 두번 다시 배우지 않기를 경건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과거를 기억할 수 없는 사람은 전철을 밟게 된다』는 현명한 말이 있습니다. 본인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지만 북한이 바로 북방국경선 넘어 인접하고 있는 2개의 강대국과 군사동맹을 맺고 있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이러한 사실과 함께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와 침략적인 정책이야말로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남·북간의 군사적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은 북괴로부터의 심각한 군사적 위협이 지속되는 한 우리 자신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우리 고유의 주권을 계속 행사할 것임을 이 회의장에서 명백히 밝혀 두고자 합니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모든 주권국가의 권리이며, 국가가 그 국민을 보호해야 할 신성한 의무에 직접 연유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유엔헌장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그의 주권행사에 대한 어떠한 외세간섭도 이를 단호히 배격합니다. 본인은 북한측에 이 사실을 분명히 하여 둡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오산도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평화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우리의 약점으로 오산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와 국민은 단합되어 있으며 어떠한 침략에 대하여도 우리나라를 지킬 것입니다.

금년 8월 15일 박정희대통령께서는 광복절 치사를 통하여 『과거와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통일을 위하여 폭력이나 무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우리의 기본입장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반도의 평화정착보다 더욱 절실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곧 평화적인 조국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평화가 정착되지 않은 곳에 평화적 통일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라고 언명하였습니다. 이러한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평화를 정착시키고 평화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조치로서 다음 사정을 제의코자 합니다.

첫째는 현행 휴전협정을 보전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휴전체제는 한반도 평화의 기초입니다. 우리의 일차적이고 가장 긴급한 과제는 어렵게 이루어진 그리고 불안정하나마 귀중한 이 협정을 보전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 정부는 현행 휴전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와 그 산하 유엔군 철수에 동의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휴전협정의 유지에 직접 관련된 당사자들 간에 회의를 개최하자는 것입니다. 본인이 금년 6월 27일 언명한바 있거니와 우리는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라도 타방 당사자들과 회동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와 유엔군의 철수가 1976년 1월 1일까지는 완료될 수 있도록 금년말 이전에 문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우리는 진정으로 희망합니다.

셋째로, 우리 정부는 휴전협정을 대치하고 남북간의 긴장을 완화하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보다 근본적인 조치를 위한 협상을 포함하여 기타조치를 고려할 용의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 우리가 남북대화를 주도했던 때와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은 남북간의 관계개선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북한측이 협상을 위한 이러한 건설적 제의를 신중히 고려하고 수락할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긴장완화와 궁극적 화해를 위한 유일한 실제적 방법인 남북대화를 즉각 재개하자는 것입니다. 남북대화 없이 민족 자결이니 민족문제의 자주적 해결이니 하는 북한의 모든 언동은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화를 통해서만 전쟁의 상처와 우리에게 강요된 분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화를 통해서만 남북한은 한없는 적대와 대결로부터 벗어나 화해의 희망찬 광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에 의하여 설치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대화는 1973년 8월 북한측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그리고 무기한 중단되었습니다. 한주일 전인 지난 10월 13일 남북조절위원회의 서울측 공동위원장 대리는 북한측 공동위원장에게 보낸 통지문을 통하여 거듭 조절위원회의 조기 재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희망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우리의 남북대화조기재개제의를 10월 17일 다시 한번 거부함으로써 우리를 크게 실망시켰습니다. 본인은 남북대화가 중단되어 있는 한 남북간에 현존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해결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우리정부가 대화의 재개에 어떠한 선행조건도 붙이지 않고 있음을 밝히고자 합니다. 북한당국이 그 무슨 구실을 내세울지라도 그들이 우리의 제의를 정당하게 거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의장 그리고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이것이 우리정부의 입장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조국통일을 열망하여 평화를 지상명령으로 생각하는 전체 한국민의 염원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러한 입장을 전인류의 평화와 민족자결에 대한 염원에 전적으로 부응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우방국들이 제안하여 여러분 앞에 제시된 결의안(A/C, 1/L, 708/Rev.1)은 한국민의 이러한 정당한 입장을 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이 이 결의안을 전폭적이며 압도적으로 지지해 줄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상대방이 제출한 결의안은 만일 이것이 채택될 경우 이는 한국의 현재 휴전체제를 파괴하고 전쟁발발 가능성을 증대시킬 것이라고 확신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결코 『평화통일을 위한 유리한 여건』을 조성시킬 수 없습니다. 이 결의안은 전혀 반대의 효과를 자아 낼 것입니다. 이 결의안의 채택은 오직 북한정권의 비타협적이고 침략적인 태도를 북돋아 줄 뿐이며 따라서 비극적인 조국 분단을 장기화 시키게 될 뿐입니다. 본인은 유엔회원국들이 그들의 지혜를 모아 이 결의안에 포함된 허위와 기만성을 직시하고 이를 단호히 거부하여 줄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북한 정권에 대하여 직접 한마디 하고자 합니다. 본인은 그들에게 대화만이 전쟁과 민족적 비극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합니다. 당신들은 이러한 전쟁의 공포를 다시금 재연시켜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들은 역사와 온 인류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다같이 평화적인 대화의 광장으로 돌아갑시다. 그리하여 민족적 화해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길로 매진합시다.

# 남북대화 제10호

(1975. 12. ~ 1976. 3)

# < 목 차 >

제1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 .....	1
1.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	1
2. 「독매신문」 질문에 대한 박대통령의 답변 .....	5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19
<남북조절위원회> .....	19
서울측, 평양에 새해 첫 전화통지문 .....	19
서울측, 평양에 위원교체를 통고 .....	21
<남북적십자 회담> .....	22
제15차 실무회의 판문점서 개최 .....	22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 소식 .....	28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성묘 방문: .....	28
더·타임스가 본 김일성 우상화 .....	35
외국인들이 본 북한의 외교행각 : .....	37



김포공항 대합실에서 수없이 점멸한 재회의 장면들은 하나하나가 심장이 메어 터지는 감격과 감동의 순간들이었다. 1976년 1월 24일 조총련계 재일동포 귀성단의 일원으로 명고옥로부터 귀국, 1926년에 헤어진 후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만나는 78세의 누님의 출영을 받은 김반윤씨(68세)의 얼굴은 환희의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코리아·헤럴드 제공】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은 누구나 고향의 선산, 양지바른 산비탈을 영면의 장소로 그리는 것이 한국인의 귀심이다. 39년전에 고향을 떠 뒀 일본에 정착, 76세의 나이로 이미 고향을 훨씬 넘긴 병고현의 조제수 노인은 18년전에 세상을 뜨면서 『고향의 선산』을 그리던 어머니의 뜻을 받들어 어머니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김포공항에 내렸다. 【한국일보 제공】



재회의 순간은 왜 이렇게 더디와야 했는가? 소년·소녀로 헤어졌다가 이제는 주름살이 곱을 이루는 노안으로 재회하는 오누이는 하늘을 우러러 통곡하면서 그들의 재회를 가로 막았던 지나간 기만의 세월을 후회한다. 【서울신문 제공】





잃었던 고향을 되찾는 감격은 같아도 사람마다 그 감격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르다. 즐거운 경사에는 잔치가 따르고 잔치는 흥겨운 춤을 곁들이는 것이 한국인의 인정이다. 김포공항에 도착하여 40년만에 되찾는 고국땅을 밟은 한 조총련계 재일동포 할머니는 신바람나는 덩실춤으로 그의 기쁨과 감격을 노래한다. 【신아일보 제공】



중화학공업 분야의 약진상을 눈여겨보는 조총련계 제일동포 모국방문단 (기아산업의 제작과정)  
【코리아·헤럴드 제공】

"조선입국"- 한국산 26만톤급 유조선의 거대한 선체에 조국의 밝은 앞날을 그려보는 조총련계  
모국방문단 (현대조선소에서) 【코리아·헤럴드 제공】



극성스런 조총련의 역선전으로 비행기안에서까지 일말의 불안감을 느껴야 했던 조총련계 재일 동포들의 표정은 김포공항의 비행기에서 내려, 고국의 땅을 밟는 순간 귀심여시의 무한히 밝은 표정으로 바뀐다. 【한국일보 제공】

해마다 명절때면 조상의 산소에 성묘하는 것이 한국인들에게는 전대의 미풍이다. 수십년만에 고향을 되찾은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은 고향 마을을 찾는 즉시 반기는 가족, 친척들과 앞서거니 뒤서거니 선산으로 달려가 그동안 누적된 불효를 없드려 사죄했다. 【코리아·헤럴드 제공】

## 제1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통일

### 1.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남조선혁명」·「적화통일」의 기회는 왔다. 고집·망상 버리고 남북대화에 호응하라

<박정희대통령은 1976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대화의 진전이야말로 한반도에서 전쟁재발을 미연에 방지하고 상호 신뢰를 회복하여 평화를 정착시키고 조국의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첩경』이라고 단언하고 『우리는 북한측의 일방적인 거부로 말미암아 교착상태에 빠진 남북대화를 조속히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새해에도 계속 최선의 노력으로 북한측을 설득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통령은 이어서 1월 15일 새해들어 처음으로 가진 국내기자들과의 회견에서 대한민국은 인내와 성의로써 남북대화의 계속을 추구해 나갈 결의임을 분명히 다짐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중 남북대화에 관한 대목을 발췌한 것이다.>—편집자 주—

<문> 남북대화는 북한 공산집단측의 무성의와 일방적인 거부행위로 인하여 정체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대통령각하께서 정체상태에 빠져 있는 남북대화를 타개하기 위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이 기회에 밝혀주시시오.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중단상태에 있는 남북대화를 정상화시키는데 어떤 뾰족한 묘안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전에도 여러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북대화에 있어서는 우리의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인내와 성의로써 그들이 대화의 광장에 나올 수 있게끔 여러가지 방법을 통해서 촉구해야 되겠으며, 또 상대방이 응해 올 때까지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기다리는 도리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참고 기다리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북간의 문제를 과연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그 관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지금 대화가 중단상태에 있다든지 정체상태에 있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좀더 인내하여 기다린다면 문제가 안되며, 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들이 겉으로는 평화운운하지만 실은 평화가 아닌 무력이나 폭력을 가지고 대결하겠다는 속셈이라면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기다리고 참아 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일이며, 또 대화를 백번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시간낭비일 뿐입니다.

그들은 입버릇처럼 평화, 평화하고 있지만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볼 때는 그 소리를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7·4공동성명」이 발표된 바로 직후에 그들은 땅굴을 파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은 그것이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라고 잡아떼고 있으며 오히려 우리가 남쪽에서 땅굴을 파가지고 조작을 한 것이라고 거꾸로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제작년 광복절에 문세광을 보내어 테러를 했는데 그 테러에 대한 지령을 언제 했느냐 하는 것을 뒤에 알아보니까 「7·4공동성명」이 발표된 그해 가을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그들은 자기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남한에서 조작한 것이라고 억지를 쓰고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원래 거짓말을 밥먹듯이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자들이 한 것을 그렇게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고 구태여 닦할 필요도 없을줄 압니다마는, 더욱이 6·25남침만 해도 자기네들이 한 것이 아니고 남에서 북침했다고 아직까지도 억지를 쓰는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남북대화가 한창 진행중에 있을 때에도 그들은 무장간첩을 내려보낸다든지, 또는 우리 사회의 학원 등 각계에 간첩을 침투시켜 지하당을 조직하여 내부교란을 획책한다든지, 또는 전세계를 돌아다니며 우리에게 대한 중상, 비방 등 갖은 악선전을 하는 것을 볼 때에 그들이 평화 운운하는 말을 과연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지금 어떤 허황된 망상에 사로잡혀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솔직이 그들에게 충고를 하고 싶은 것은 그들의 허황된 망상은 도저히 실현불가능한 망상이라는 것을 지금이라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그들이 말하는 「남조선 혁명」이니, 「적화통일」이니 하는 잠꼬대같은 소리는 이제 깨끗이 집어치우는 것이 좋겠다. 그러한 무모한 모험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보기에는 이미 지나갔다.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은 길은 우리가 싫든 좋든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쉬운 일부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면서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남과 북이 다같이 노력하는 길, 이것 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통일이 될 수 있는 여건을 하나하나 같이 협력해서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히려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제창하는 평화통일에 대한 3대원칙과도 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만약 이 시기에 남북이 또다시 전쟁을 한다면 누가 이기고 누가 지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남북통일은 적어도 약 50년은 더 늦어질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하한 일이 있더라도 이 전쟁만은 피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이 시기에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인 것입니다. 평화정착입니다. 그래야만 통일문제가 더 빨리 해결이 되어 나가고 실마리가 풀려 나갈 것입니다.

평화정착없는 통일, 바꾸어 말하면 무력을 가지고 통일을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남북문제는 무슨 방법으로든지 남북이 서로 대화를 해서 서로 합의하고 양해를 이루지 않으면 해결되는 문제가 하나도 있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유엔에서 표대결을 수십번 해보았지마는 남북간에 어떤 합의나 양해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표가 아무리 많이 나와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지지하던 서방측 안이 늘 압도적으로 유엔에서 승리했지마는 공산측에서 반대를 하니 아무 소용이 없지 않았습니까.

작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공산측 안이 간신히 서방측 안과 같이 통과되었다고 해서 그들이 좋아 날뛰는지 모르지마는, 통과되어 보았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와 합의되고 양해되지 않으면 그것은 백번 통과되어 보았자 실효도 없고 아무 구속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남북대화를 다시 재개하자고 여러번 촉구를 했는데 그때마다 북한측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운 조건을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따져보면 하나도 이치에 맞지 않는, 또 우리로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난제를 들고 나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대화하기 싫다는 얘기가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회담을 하자고 하면 서울의 분위기가 나빠서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서울의 공기가 평양보다 나쁜 것은 사실이겠지요. 서울은 평양보다 자동차가 더 많기 때문에 공기가 좀 나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남북대화가 안될 리가 없습니다.

최근에 북한 공산집단의 산하에 있는 일본의 조총련계 동포들이 작년 추석부터 수천명이 우리나라를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이 모두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우리나라에는 수천명의 외국인 관광객과 많은 외국인사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지만 아무 일도 없습니다. 서울의 분위기가 나쁘다는 것이 무어냐 이겁니다.

또 법적, 사회적 환경을 고치라느니 무슨 민주애국인사를 석방해야만 회담에 응하겠다는 소리 하는 것 같은데, 이 법적, 사회적 환경을 고치라는 소리는 솔직히 말해서 대한민국의 반공체제를 전부 걷어치우라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을 없애버리고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대로 활개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라는 소리인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그런 소리를 하면 우리도 할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한의 그네들도 똑같이 할 수 있느냐, 또 이 사람들이 무슨 민주애국인사를 석방하라느니 하는데 민주애국인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모르지만, 또 공산주의자들이 볼 때는 그들을 민주애국인사라고 보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그들은 국가에 반역을 한 큰 국사범들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인 간첩, 공산주의에 협력한 자들을 어떻게 우리가 석방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이북에 있는 소위 우리들이 보는 민주애국인사, 그동안에 수없이 많이 숙청당한 사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풀어놓으라고 한다면, 공산당들이 들어줄 수 있느냐, 안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이런 난제를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들고 나와서 이것을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대화에 응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화가 중단된 책임은 남한에 있다고 하는데 이런 억지 소리를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이런 쓸데없는 고집과 망상을 버리고 대화의 광장으로 조건없이 나

을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권고합니다.

이 길만이 우리 민족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우리 동포를 아끼고, 또 나아가서는 평화적인 통일을 앞당기는 길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또한 이것이 남북에 있는 우리 5천만 동포들의 한결같은 염원이라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 2. 「독매신문」 질문에 대한 박대통령의 답변

남북대화는 문제해결의 유일한 방도 제3국의 "이니셔티브"는 위험한 발상

<박정희대통령은 1976년 1월 26일자 일본 독매신문에 전문게제된 동지와의 서면회견에서 『한반도문제의 평화적 해결은 당사자인 남북 쌍방간의 대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없다』고 갈파하면서 북한측에 의하여 정돈되어 있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거듭 촉구했다. 박대통령은 「독매」의 爲郷恒淳편집국장이 제출한 서면회답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및 통일 등 전반적인 한반도 문제에 대한 그의 견해와 입장을 명쾌하고도 소상하게 밝혔는데 이에 대해 「독매」는 회견 기사에 곁들인 해설기사에서 박대통령이 『비장하게 위기를 호소하기 보다는 오히려 자신감에 찬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면서 『북한쪽이 대미직접교섭을 주장하면서 남북대화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고 있고 유엔총회가 남북쌍방지지의 2개 결의안을 동시채택하는 등 불모의 국제환경 속에서도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대화를 통해 하나씩 쉬운 것부터 해결해 가면서 이 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남과 북이 서로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는 박대통령의 말은 현실적으로 무게를 가지고 있다』고 논평했다. 다음은 박대통령의 「독매」 서면회견내용 전문이다.> —편집자주

<문 1> 1970년대 후반기를 맞이하여 파란 많은 아세아정세 가운데 한국을 포함한 극동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어떠한 「어프로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컨대 종래의 기본적 노선을 다소라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답> 한반도는 역사적으로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가장 민감하고 중요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전의 유지는 동북아 및 세계의 평화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평화를 위한 노력에 있어서 대화이외의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한다. 또 대화없이 평화가 이루어졌다는 예를 듣지 못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반도에 있어서 보다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1970년대 전반기에 평양과의 대화를 시도하였던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4반세기가 넘는 분단상태속에서 특히 1950년 북한 공산집단의 기습남침으로 인한 비극의 체험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그들과의 대화를 시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다.

더구나 1960년대 후반기는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대남 무력도발이 급증하여 한반도에 긴장이 가장 고조된 시기였으므로 그러한 상황속에서 북한과의 대화를 시도하기로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한 각오가 필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면 될수록 모종의 해결 방안을 하루속히 발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믿었으며, 그리고 어떠한 해결방안을 발견하건 그것은 반드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자간에 대화와 합의를 전제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결국 남북대화를 시도하기로



작정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리하여 남북적십자회담에 이어 1972년 7월 4일 남북공동성명을 계기로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정치적 차원에서의 대화가 시작되었다.

한걸은 더 나아가 7·4성명의 정신에 입각하여 나는 1973년 6월 23일 새로운 평화통일 외교정책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여기에 그 요지를 다시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의 지상과업이다. 우리는 이를 성취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계속 경주한다.

둘째, 한반도의 평화는 반드시 유지되어야 하며, 남북한은 서로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을 하지 않아야 한다.

셋째, 우리는 남북공동성명의 정신에 입각한 남북대화의 구체적 성과를 위하여 성실과 인내로써 계속 노력한다.

넷째, 우리는 긴장완화와 국제협조에 도움이 된다면 북한이 우리와 같이 국제기구에 참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다섯째, 국제연합의 다수 회원국의 뜻이라면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우리는 국제연합 가입전이라도 대한민국 대표가 참석하는 국연총회에서의 "한국문제"토의에 북한측이 같이 초청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여섯째, 대한민국은 상호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리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한다.

일곱째, 대한민국의 대외정책은 평화정책에 그 기본을 두고 있으며, 우방들과의 기존 유대관계는 이를 더욱 공고히 해나갈 것임을 재천명한다.

이와 같이 나는 한반도에서의 평화정착을 위하여 모든 외교관계에 있어서 이념과 체제의 차이를 초월하여 "호혜평등의 원칙"을 적용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던 것이며, 현재에도 이러한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이미 다 잘 알다시피 북한측은 우리의 이같은 제안을 전적으로 거부하면서 남북대화 자체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적반하장격으로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진 책임이 한국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들은 남북대화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이 우선 대화를 위한 법률적 사회적 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체적으로 반공법을 없애고 반공체제를 포기해야 한다고 강변한다.

이러한 논리를 적용한다면 대화의 선행조건으로 북한측이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우선 채택해야 한다고 우리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주장이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는 결과밖에 초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남북대화는 주어진 현실을 출발점으로 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에 있어서 기본문제는 어떻게 하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을 하여금 폭력으로 현상을 파괴해 보겠다는 환상적 혁명주의를 탈피케 하고, 현실 인정을 출발점으로 하는 합리적 자세를 취하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그런데 1970년대 전반기에는 우리의 대화를 통한, 그리고 대화를 위한 꾸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은 대화와 협상을 위한 우리의 일련의 제의를 계속 거부해 왔다.

따라서 1970년대 후반기에도 우리는 대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면서 동시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환상적 혁명노선을 포기하도록 한반도와 동북아에 있어서의 힘의 균형을 유지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들로 하여금 침략도발의 그릇된 생각을 갖지 못하게 하기에 충분하리만큼 한국의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는 것이며, 또한 남북한간의 힘의 균형을 위하여 동북 아세아 전반에 걸쳐 세력균형이 유지되도록 자유 우방들이 협조하는 일일 것이다.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조선 혁명」, 「적화통일」 등의 망상을 버리고, 이제 남은 길은 싫든 좋든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해서 쉬운 일부터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이땅에 평화를 정착시키는데 남과 북이 다같이 노력하는 길 밖에 없다는 사실을 하루속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반도에서 그들의 재차의 무모한 모험이 성공할 수 있는 기회는 이미 지나갔으며, 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을 그들은 분명하게 깨달아야 할 것이다.

<문 2>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는 긴장격화 내지는 전쟁으로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북한측은 「남진」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답> 우리는 1970년대 전반기에 평화정착 노력을 부단히 시도하여 왔으나 1970년대 후반기에 접어드는 이 시점에서 한반도에 긴장이 완화되었다고는 할 수 없는것이 우리들의 냉혹한 현실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한반도에서 긴장이 완화되려면, 폭력적 방법이나 혁명적 수단으로 현상을 파괴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확립되어야 하는데 북한공산집단은 아직도 이러한 원칙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처럼 평화의 원칙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무력적화통일의 망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서 긴장이 격화되고 전쟁이 재발할 위험은 항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물론 말로는 그들은 "남침"을 안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진실로 그들이 남침야욕이 전혀 없다면 남북한 간에 상호 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들은 미국과 평화조약을 체결하자고 엉뚱한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만일 대한민국에 대하여 전쟁을 도발할 의도가 정말로 없다면, 왜 대한민국과는 전쟁을 포기하고 평화를 준수하겠다는 엄숙한 동족간의 선서를 할 것을 거절하는 것인가?

그들이 6·25 기습남침을 통하여 전쟁을 도발했던 대상은 우리 대한민국이었으며, 휴전 이후 무수한 도발행위를 자행했던 대상도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었는데, 이제와서 그 전쟁과 적대관계를 매듭짓는 이른바 "평화협정"은 제3자인 미국정부와 체결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비현실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들의 상투적인 위장평화 공세의 일단을 백일하에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그들은 1953년 휴전 이후 무려 2만여회에 걸쳐 휴전선 일대에서 불법적인 도발행위를 자행해 왔다.

그들은 또한 무장간첩 남파, 서해안 5개도서 주변해역에 대한 무력도발, 현충문 폭파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우리의 후방 교란을 획책했고, 1974년 8월에는 대통령에 대한 저격까지 기도했다는 것은 그들이 유례없이 호전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

더욱이 그들이 운위하는 "평화"의 허구성은 그들이 1972년 7·4남북공동성명에 서명했던 바로 그 무렵에 휴전선 전역에 걸쳐 비무장지대 밑으로 남침 땅굴을 파내려오기 시작했다는 엄연한 사실이 이를 입증하고 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남침 땅굴이 최소한 10여개에 달할 것으로 보고 탐색과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2개의 남침땅굴에 대해서는 우리 국내 언론은 물론 일본을 포함한 우리의 우방 및 중립국 등 세계 각국의 우수한 신문, 방송 등이 현지 답사를 통하여 상세하게 보도한 바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남침땅굴에 대한 공동조사를 촉구한 우리의 제의를 거부했으며, 한술 더 떠서 "조작" 운운하면서 시치미를 떼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의 유력한 언론과 전세계의 권위있는 신문, 방송들이 지금까지 북한공산주의자들이 판 남침 땅굴에 대해 거짓 보도를 했다는 말인가?

새해의 벽두부터 그들은 오늘의 전반적 국제정세가 그들의 "혁명"과 "세 계혁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 있다고 오판하여, 소위 "혁명역량"의 강화, "인민군대의 동원 태세 견지" 등 호전적이고 도발적인 구호 등을 외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물론 우리는 그들의 어떠한 도발행위에 대해서도 이를 격퇴하고 한국의 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만반의 방위태세를 갖추고 있다.

따라서 그들이 현실을 바로 본다면, 그들은 감히 전쟁을 도발하는 무모한 짓은 또 다시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가 개탄하는 바는 어떻게 그들은 공산주의라고 하는 외래적 교조를 위하여 또 다시 동족의 피를 흘리게 해야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들의 광신적 호전성은 시대 착오적인 비극이 아닐 수 없다.

나는 새해에는 그들도 민족의 양심을 되찾고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대화의 광장으로 무조건, 조속히 되돌아 올 것을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이 길만이 남북간의 평화공존을 실현하고 이 현실적 바탕위에서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유일한 길이 될 것이다.

<문 3> 한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관건의 하나는 남북한을 지지하는 국제적 배경의 동향에 달렸다고 여겨집니다.

작년 「유엔」 총회가 남북한 지지의 모순된 두 개의 결의를 동시 채택한 사실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리고 금후의 「유엔」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실 것인지요?

<답> 작년 「유엔」 총회는 한국 문제에 관하여 내용이 상치되는 두 개의 결의안을 동시에 채택하고 말았다.

이것은 「유엔」을 위해서도 매우 유감스러운 사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며, 더욱이 한반도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제사회에서도 불필요하고 비생산적인 경쟁과 대결만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지하다시피 「유엔」에서 우리는 신축성 있는 협상과 협의의 자세를 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한반도의 긴장완화는 남북대화를 거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며, 1971년 남북대화가 시작된 이래 계속 「유엔」은 남북대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런 취지에서 1971년 1972년에는 한국문제 토의를 보류하였고, 1973년에는 표대결없이 합의 성명을 채택하였고, 1974년에는 역시 남북대화의 진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1975년 「유엔」 총회는 북한과 그를 지지 동조하는 나라들의 책동으로 공산측 결의안도 동시에 채택하고 말았다.

공산측안은 「유엔」 군사령부의 무조건 해체와 주한 미군의 즉각 철수를 주장하고 있는데, 일본을 포함한 자유국가들이 제안한 결의안은 「유엔」 군사령부를 대체할 새로운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을 개시할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엔」 군사령부가 해체되는 경우, 한반도에서의 현 휴전상태를 어떻게 유지해 나갈것인가 하는 법적 및 행정적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있는 대안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단순히 현존 휴전협정을 무효화 및 백지화하고 현존하는 균형상태를 일방적으로 파괴하려고만 하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태도이며, 이것이 바로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특히 1954년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하여 한국에 주둔하는 미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것은 한국과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내정간섭행위이며, 「유엔」 헌장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현재 다수의 「유엔」 회원국들이 취하고 있는 입장보다 상충되는 것이다.

주한 「유엔」 군과 주한미군은 그 지위에 있어서 엄연히 구분된다. 주한 미군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우리의 요청에 의하여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는 어디까지나 한·미간의 쌍무적인 문제인 것이다.

우리는 작년 「유엔」 총회에서 통과된 서방측 결의안에 따라 「유엔」 군사령부 문제를 다루기 위한 휴전 당사자회의 및 현존 휴전협정을 대체하기 위한 관계 당사자간의 확대회의가 조속히 개최될 것을 바라고 있다.

분명히 말해서 「유엔」에 관한 한, 한국은 1947년 「유엔」 총회에 한국문제가 상정되었을 때부터 「유엔」 위원단 감시하의 선거를 포함하여 6·25당시의 집단안전보장행동, 그리고 최근의 남북대화 촉구결의에 이르기까지 예외없이 「유엔」과 협조하여 왔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북한 공산집단은 지난 30년간의 역사를 통하여 「유엔」과 협조한 경우가 한번도 없었다.

그들은 그 동안의 「유엔」 결의를 예외없이 묵살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그들은 「유엔」 총회를 무책임한 일방적 선전장으로만 악용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유엔」에서의 남북한간의 불필요한 대결과 비생산적인 경쟁을 피하고 그야말로 「유엔」이 한국문제의 실질적인 해결을 위한 대화와 화해의 광장이 될 것을 원하고 있다.

「유엔」은 하루속히 창설 당시의 정신으로 되돌아가 참다운 국제평화기구가 될 것을 기대한다. 그렇게 됨으로써 「유엔」은 남북한을 다함께 「유엔」에 가입시키든지, 아니면 한민족의 3분의 2 이상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고, 민족사적 정통성을 확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유엔」가입을 실현시킬 것을 바란다.

이 길만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문 4> 작년말 최규하 전 외무부장관을 수반으로 하는 신내각이 성립되었는데 신내각의 목표와 구체적인 정책 방침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최규하총리를 수반으로 하는 신내각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추구해 온 기본정책 목표이다.

첫째, 총화 안보체제의 구축이다.

유례없이 호전적인 북한공산집단이 무력적화통일의 야욕을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하여 총화단결하여 국력을 가속적으로 배양하고 총력안보체제를 다져 나가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자신의 생존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길인 것이다.

그리고 총화안보체제와 관련하여 작년부터 실시해온 서정쇄신을 앞으로도 계속 안보적 차원에서 밀고 나갈 것이다.

공무원 일부의 부정부패는 물론, 우리 사회 일각에 도사린 부조리와 퇴폐 풍조를 척결하는 작업은 휴전선 너머로 호시탐탐 남침기회를 노리고 있는 우리의 적을 격퇴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내부의 적을 격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둘째, 새 내각은 우리 나라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계속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작년과 같은 세계적인 불황 속에서도 연간 7.4%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였다.

수출도 15%의 신장을 보였다. 이같은 성과는 우리 국민이 피땀흘려 일한 결과였다고 본다.

금년은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마무리 짓고, 내년부터 착수되는 제4차 5개년 계획을 위한

준비의 헤이기도 하다.

우리 나라는 제4차 5개년 계획을 계기로 중화학 공업국가로서 선진 공업국가의 대열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최총리 내각은 우리 나라의 경제발전 단계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시점에 출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의 지속적인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한다.

끝으로 새마을 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이다.

1970년대 초부터 요원의 불길처럼 전국 방방곡곡에 번져간 새마을운동은 이제 1970년대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농촌소득 증대운동의 차원을 넘어서서 도시 새마을 운동으로 발전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정신계발운동으로 추진되고 있다.

새 내각은 근면, 자조, 협동의 새마을정신을 전국민이 생활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새마을 정신이야말로 우리 전통의 훌륭한 정신유산을 오늘에 되살려 평화롭고 번영하는 근대 산업국가를 슬기롭고 조화있게 건설하기 위한 민족정신의 기조인 것이다.

<문 5>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주변 제국이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구상의 하나로서 「교차 승인안」이 제창되고 있는데 이것이 실효적인 구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 나는 이미 1973년 6월 23일에 대한민국은 호혜평등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이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하는 정책을 천명하였다.

그리고 또한 나는 남북한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는 것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이른바 "교차승인안" 그 자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북한측의 부정적 태도때문에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교차승인안"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주변 제국이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구상"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과잉기대일 뿐만 아니라 위험한 사고방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북한이 폭력적 수단에 의한 현상파괴를 계속 노리고 있는 한반도와 같은 상황하에서 소위 국제적 보장이 현실적으로 성공한 예는 역사적으로 찾아 볼 수도 없거니와 상식적으로도 생

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유진영 쪽에서 "교차승인안"을 공산측의 호응도 없이 일방적으로 서둘게되면 오히려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에서의 균형이 깨어져 평화정착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이 지역에서의 힘의 균형을 깨뜨리지 않고 평화정착에 기여하는 한반도문제 해결을 모색하기 위하여 하루속히 관계 당사국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다만 교차승인이나 관계 당사국회의 같은 제안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모든 안에 대하여 북한측이 계속 일방적으로 거부하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이처럼 전적으로 협상과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이 한반도에 있어서 평화정착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나는 차제에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하루속히 폭력에 의한 한반도 공산화의 야욕을 버리고 긴장 완화를 위한 건설적 제안들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로 나올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바이다.

<문 6> 한반도 문제의 어떠한 해결책에도 당사자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지만, 남북 대화의 재개를 저지하고 있는 상호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차제에 새로운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필요하다면 김일성과 만날 수도 있다고 작년가을에 말씀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만…?

<답> 질문의 논리가 오히려 거꾸로된 느낌이 있다. 남북대화를 재개하기 위하여 상호 불신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불신을 제거하기 위하여 나는 남북대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북대화의 재개를 위하여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지 않고 있다.

우리의 입장은 남북대화는 무조건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한반도의 평화에 도움이 되고 필요하다면 김일성과도 만날 수 있다고 기자 질문에 답했던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왜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는가 하는 그들의 동기가 중요하다고 본다.

그들은 주지하다시피 남북대화를 시작했고 7·4공동성명을 발표하던 때부터 남침용 땅굴을 파기 시작했으며, 남북대화 중에도 계속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을 중상, 비방하고, 대한민국 내에서 내부 혼란을 조장하여 반체제 폭동이나 공산혁명을 일으키려고 집요하게 기도하여 왔다.

그들은 처음부터 대남적화전략의 일환으로 역이용하고자 남북대화에 응했던 것이며 남북대화에



대하여 성실한 태도로 나왔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그들은 직접 한국에 와 보고 한국에서 그들이 기대했던 공산혁명의 소지를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오히려 그들의 대표가 한국의 발전상을 보고 겁을 집어먹은 나머지, 그들의 대표들의 왕래가 자기들의 폐쇄체제 유지에 불리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특히 한국측이 남북한사회를 상호개방할 것을 제의하였을 때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매우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남북대화를 일방적으로 중단하기로 결정했던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북한측으로 하여금 대화재개에 동의하도록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우리는 대화재개에 대하여 아무런 조건도 요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는 양보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할" 여지가 없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그들의 무력공산화통일의 야욕을 스스로 포기하지 않을 수 없도록, 그들의 야욕이 하나의 환상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식시켜 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의 무력에 의한 공산화의 야욕을 분쇄할 수 있는 우리 스스로의 힘을 배양하는 방법밖에 다른 묘안이 없다고 본다.

그리하여 그들이 우리의 힘을 인식하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그들도 평화의 필요성을 깨닫게 될 것이며, 대화의 광장에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국력배양을 위한 피눈물 나는 노력은 바로 한반도에 있어서의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보다 실질적인 노력이 된다고 나는 확신하는 것이다.

현시점에서 우리의 당면한 관심사는 통일이 아니라 평화이다.

우선 한반도에서 평화정착이 이루어져야만 통일문제가 더 빨리 해결될 수 있고, 구체적인 실마리가 풀려 나갈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정착은 우리의 국력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남북대화의 추진을 통해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믿는다.

이와 관련하여 1974년 8·15경축사에서 밝힌 우리의 평화통일 3대기본원칙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은 상호불가침 협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간에 상호문호를 개방하고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남북대화를 성실히 진행시켜야 하며,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이 바탕위에서 공정한 선거관리와 감시하에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남북한 자유 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을 이룩한다.

이와같은 우리의 평화통일기본원칙이야말로 오늘 국제환경 속에서 무력이 아닌 평화적인 방법으로 분단된 조국을 통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실현성 있는 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문 7> 북한과 중·소 양국간의 관계를 어떻게 보십니까?

이 관계가 남북대화 재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답> 주지하다시피, 북한은 중·소간의 악화된 관계를 이용하여 북경과 모스크바로부터 경쟁적으로 경제 및 군사적 지원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중·소의 원조없이 그들은 오늘날과 같은 군비강화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중공이나 소련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현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은근히 바라고 있다는 관측도 없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북경이나 모스크바가 모두 상호대립관계 때문에 평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북한의 입장에 반대되는 입장을 취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상황하에서는 소련이나 중공이 북한에 대하여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동의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의 혁명적 노선을 추종하는 형편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만약 북한 공산집단이 침략을 도발할 경우 중·소는 싫든 좋든 북한을 지원할 것이라는 견해가 아마도 현실적일 것이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중·소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현명한 처사가 못 될 것이다.

<문 8> 한·일관계는 오늘까지 각 종의 불상사를 겨우 극복은 해왔습니다만, 끊이지 않은 마찰로 상호불신을 초래하기 쉬운 소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양국간의 기본적 유대인 경제협력에 있어 한국 측에 강한 불만이 있다고 듣고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한·일 양국간에는 과거에 불행한 관계도 있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다는 대국적견지에서 1965년 한·일국교를 정상화한 이후 우리 두 나라는 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긴밀한 우방으로서 우호관계를 돈독하게 다져 왔다고 본다.

지난 10년간 한·일 양국간의 경제협력과 무역은 대폭 증가되었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자본투자 와 차관이 우리의 경제건설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다.

그동안 양국간에는 몇몇 불행한 사건으로 다소의 마찰이 있기도 하였다.

그러나 현재 한·일 우호관계는 밀접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일간의 경제협력에 있어서 얼마간의 불만이 있다면 우리 나라의 대일무역수지적자가 연간 10억불이 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같은 불균형한 무역관계에 대하여 일본정부와 기업은 한·일양국의 공존공영을 위하여 그 개선책을 과감하게 강구해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는 기본적으로 일방통행적이 아닌 상호주의적인 관계이다. 두 나라는 평화공존과 상호의존성을 기조로 하는 현대 국제사회에 함께 존립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안보는 일본의 안보에 불가결하다는 점을 일본의 많은 지도층인사들이 시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경제협력에 임하는 일본은 대승적이고 상호주의적인 기본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다.

한·일간의 우호협력관계는 동북 아시아에서의 평화정착의 기초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문 9> 솔직히 말씀 드려서 한국에서의 정부비판에 대한 제약이, 일본측에서는 신뢰관계의 확립에 방해가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답>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우리 나라에는 기본적으로 정부비판에 대한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의 신문, 방송 내용을 접하거나 우리 국회에서의 토론과 대정부질문을 들어본 사람이라면 정부의 정책과 시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비판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정부전복을 기도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를 파괴하는 언행에 대해서는 법에 의하여 이를 규제하고 있다.

이와같은 규제는 제도의 차이를 막론하고 어느 나라에서나 당연한 일이 아닌가?

더욱이 우리 나라는 수도 서울에서 불과 25마일 떨어진 곳에 우리의 생존 자체를 파괴하려고 노리는 호전적인 북한공산주의자들이 도사리고 있다.

우리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당연한 일이라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한국에서는 정부비판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현실을 왜곡하고, 이것이 한·일간의 신뢰관계 확립에 방해가 된다는 식의 극소수 일본인의 사고는 본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편향과 대한민국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이들 몇몇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해소될 것이라고 나는 기대한다. 왜냐하면, 남북한을 공정하게 비교한다면 어느쪽이 일본의 진지한 우방이며 실제로 남북의 어느쪽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천하고 있는가는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남북의 어느쪽이 보다더 평화롭고 번영된 사회를 이룩할 것인지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이다.

나는 경제, 사회적측면에서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남북한간의 격차에 주목할 것을 일본 국민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생산, 경제건설, 사회복지 등 모든 면에서 우리는 북한을 앞지르고 있다.

이처럼 북한을 능가하여 성장일로에 있는 우리의 국력은 한·일간의 더욱 깊은 신뢰확립의 바탕이 될 것으로 믿는다.

<문 10> 끝으로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금후의 일본에게 어떠한 역할을 기대하십니까?

<답> 한반도 문제는 한민족 스스로가 해결할 수 밖에 없다. 즉 남북대화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문제는 일본을 포함한 어떤 다른나라도 우리를 대신하여 해결해 줄 수는 없는 것이다.

오히려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해 제3자가 마치 「이니시야티브」를 취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그것은 매우 비현실적이며 위험한 생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한반도를 둘러싼 균형을 파괴하는 어떤 성급한 행위도 그것은 이 지역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일본에게 기대하는 것은 일본이 우리와의 기존 협력관계를 계속 증진해 나아감으로써 한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고,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전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각도에서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한·일양국간의 원활한 경제협력, 문화교류, 등의 협조 관계를 더욱 증진시키도록 힘쓸 것이며, 한편 일본도 이에 상응한 노력이 있기를 기대한다.

## 제2부 남북대화 소식

### <남북조절위원회>

위원회운영 즉각 무조건 정상화하자  
서울측, 평양에 새해 첫 전화통지문

남북조절위원회 장기영 서울 측 공동위원장대리는 1976년 1월 26일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평양 측의 김영주 공동위원장에게 보낸 새 해 들어 첫 전화통지문에서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즉각, 그리고 무조건 정상화할 것을 거듭 제의했다.

장 공동위원장대리의 전화통지문 내용은 전문 다음과 같다.

『본인은 이제 또 하나의 새해를 맞이하면서 남북 5천만 민족의 염원구현을 위한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에 있어 그 공백상태가 과도하게 장기간 계속되고 있는데 대하여 심심한 우려를 표명하는 동시에 남북조절위원회의 조속한 운영 정상화를 위한 귀측의 성의있는 태도를 다시 한 번 촉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귀측은 작년 5월 30일로 쌍방간에 합의되었던 남북조절위원회 제11차 부위원장 회의를 일방적으로 「무기 연기」시켰을 뿐 아니라 그 이래 우리측의 거듭된 부위원장회의 속개제의를 번번이 거부 또는 묵살하는 가운데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인은 귀측의 이러한 계속되는 대화거부자세로 말미암아 오늘날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제반 정세의 심각성을 고려할때 그러한 귀측의 평화부정적 태도를 추궁하지 않을 수 없으며 거래와 조국의 앞날을 위해 귀측의 심심한 반성을 요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남북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는 남북간에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를 정착시키고 안정된 평화의 토대위에서 쌍방간에 오해와 불신요인을 제거하여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진정한 자주평화통일의 대로를 넓혀 나가는 일입니다.

물론 이러한 작업은 어느 일방의 정치적 선전, 편동이나 일방적 주장과 조건을 상대방에게 강요함으로써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긴장의 완화와 상호 이해의 증진은 우선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사업의 영역과 분야를 하나 하나 구체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해결하고 넓혀나가는 과정에서 비로소 가능해 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남북조절위원회를 구성하고 또 발족시켰습니다. 오늘의 남북관계의 현실상황을 놓고 볼 때 본인은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이 더 이상 정돈상태를 계속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앞에 제기되어 있는 당면의 과업으로서 최근 다시금 격화되고 있는 각종 비방행위를 중지시키는 문제, 더욱 빈번해지고 있는 각종 도발행위를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는 문제, 적십자 회담

을 촉진시켜 1천만 이산가족의 고통을 하루 빨리 덜어주는 문제, 그리고 남북간에 선의의 교류와 협력의 문호를 열어서 같은 민족으로서 공통의 이익에 기여하고 쌍방간에 상호 사회적 개방을 촉진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오늘날 남북관계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러한 문제들은 그 어느 것이나 남북 쌍방을 당사자로 하고 있으며 당사자 쌍방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어떠한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은 하나의 상식입니다. 따라서 남북관계의 진정한 자주적 평화적 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이 정상화되고 이를 통한 남북대화가 재개되어야 한다는 것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본인은 이러한 자명한 사리에 입각하여 귀측이 더 이상 지체함이 없이 대오반성하고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즉시 무조건 정상화하는데 동의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귀측이 본인의 이 거듭된 대화 정상화 제의를 받아들일 때 그것은 이제 또 하나의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한 남북의 5천만 겨레에게 민족적 긍지와 아울러 조국의 무궁한 장래에 대한 희망의 소생을 안겨 주는 값비싼 선물이 될 것임에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측이 만약 우리 남북문제의 당사자 해결이라는 너무나도 당연한 원리를 끝내 외면하고 남북대화의 정상화를 계속 거절한다면 진정한 자유평화통일의 방해자라는 낙인을 길이 민족 역사에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회답을 조속히 보내 오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평양 측은 장공동위원장대리의 거듭된 위원회 운영 정상화 제의를 묵살하고 장공동 위원장대리의 1월 26일자 전화통지문에 회답도 보내 오지 않았다.>

다만 평양 측은 서울 측의 무조건 대화재개제에 대한 간접적인 반응의 표시로 이른바 「통일신보」 기사를 인용한 2월 6일자 평양방송보도에서 엉뚱하게도 『서울측이 남북조절위원회의 운영을 파탄으로 이끌었다』고 강변하면서 대한민국이 ①반공정책의 포기 ②6·23평화통일외교정책의 철회 ③공산주의자들의 처벌 중지 ④자주국방강화 노력의 중지 등 북한 측의 요구 조건을 수락하여야만 대화재개에 응하겠다고 주장함으로써 서울 측의 무조건 대화재개제의를 또 다시 거부했다.>

최규하 위원 후임에 이용희 특보 임명  
서울측, 평양에 위원교체를 통고

남북조절위원회 서울 측은 1976년 2월 10일 지난 연말의 개각때 국무총리 서리로 취임하면서 남북조절위원회 서울 측 위원직을 사임한 최규하 위원의 후임으로 이용희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임명하고 이를 남북직통전화를 통해 평양측에 통보했다.

<남북조절위원회 서울 측 위원으로 새로이 임명된 이용희씨(1917년생)는 3·1운동때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중 아직 생존해 있는 유일한 인사인 이갑성 씨의 영식으로 연희전문을 졸업하고 1963년 서울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수여 받았으며, 1950년 이래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교수로 재직하면서 한국국제정치학회장, 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장을 역임한 뒤 1975년 대통령특별보좌관에 임명된 우리 나라 국제정치학계의 태두이다.

주요저서로 「일반국제정치학」 「국제정치학원론」 「정치와 정치사상」 등이 있다.>



## <남북적십자 회담>

### 제15차 실무회의 판문점서 개최

본회담 재개로 서울~평양통로 다시 열자 한적, 새해 첫 실무회의서 회담진전촉구

<남북적십자대표들은 1976년 2월 12일 판문점 중립국감독위원회 회의실에서 새 해 들어 첫 본회담실무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 대한적십자사대표들은 ①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방문 사업에 대한 북한 측의 방해와 비방 중상을 중지할 것 ② 기존합의에 따라 제8차 본회담을 조속히 서울에서 열어 폐쇄된 서울~평양통로를 재개할 것 ③ 본회담의제토의를 아무런 전제조건없이 진전시키고 「노부모사업」, 「성묘방문단교환」 등 긴급하고 용이한 인도주의문제 해결에 조속히 호응할 것 등 3개 항목을 제의하고 북한적십자회 측의 수락을 촉구했다. 그러나 북한적십자회 대표들은 여전히 이른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 운운의 정치적 주장을 앞세워 본회담재개와 의제토의를 거부했으며 심지어는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방문은 『민족분열을 조장하는 매국적 협작극』이라고 생떼를 쓰는가 하면 모국을 방문하는 재일동포들 가운데 조총련계 동포는 『한 사람도 없다』고까지 강변했다. 쌍방은 다음 제16차 실무회의를 4월 10일에 열기로 했다. 다음은 이날 제15차 회의에서 있었던 김연주 대한적십자사 교체수석대표의 발언문 전문이다.>-편집자 주

우리는 오늘 1976년 새해에 들어와 처음으로 남북적십자회담 실무회의를 갖게 됩니다. 대한적십자 대표단은 오늘 열다섯번째 실무회의를 맞이하면서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과 5천만 동포가 한결같이 고대하고 있는 회담의 성과가 올해에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라면서 이 회의에 나왔습니다.

돌이켜 보면 우리가 남북으로 흩어진 혈육들에게 재회의 기쁨을 안겨줌으로써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디딤돌이 되자고 하는 "민족적 여망"을 달성하기 위하여 남북적십자회담을 시작한지도 벌써 6년째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남북의 상이한 체제와 이념을 초월하고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를 바탕으로 하여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의 고통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일에 우리의 열과 성의를 다하여 왔습니다.

우리측의 이와같은 꾸준한 노력과 5천만 동포의 간절한 소망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평양을 왕래하면서 진행되어 오던 남북적십자 본회담은 중단된지 2년반이 지나도록 아직도 열리지 못하고 있으며, 더구나 교착된 회담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이 실무회의마저도 그동안 계속 공전을 거듭하여 왔습니다. 우리의 인도주의 회담이 이렇게 지연되고 있는 것은 실로 가슴 아픈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남북적십자회담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인도적 사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우리의 인도적 사업은 남북간의 누적된 오해와 불신을 해소하고 긴장을 완화함으로써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

도록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과 같이 남북간의 긴장 상태가 날로 고조되어 가고 있고 또 상호 불신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남북적십자인들이 과연 어떻게 하면 1천만 이산가족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마음만 먹는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첫째로, 우리 남북적십자인들이 대화에서부터 서로 합의 사항을 성실하게 지킴으로써 상호 신뢰의 바탕을 튼튼히 다져 나가는 일입니다. 남북 쌍방이 대화에서부터 상호이해와 신뢰를 쌓아 나가는 것은 곧 남북간에 누적된 불신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는 첩경인 것이며 기초적 작업인 것입니다. 상호이해와 신뢰는 서로 합의 사항을 잘 지킴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만약에 명문으로 규정된 엄연한 합의사항을 헌신짝 버리듯 파기하고 엉뚱한 선행조건들을 내세워 아침에 약속한 것을 저녁에 지키려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를 회복하며 민족적 단결을 촉진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남북적십자 쌍방은 1971년과 1972년 사이에 진행된 예비회담 과정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이 지닌 중대한 역사적 의의를 명심하고,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본 회담을 서울과 평양에서 번갈아 개최할 것"에 합의하였으며, 이러한 합의 원칙에 따라 남북 적십자 쌍방은 이미 일곱 차례나 "서울~평양"을 왕래하면서 회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남북적십자 쌍방 대표단의 "서울~평양" 왕래가 시작됨으로써 우리 민족은 4반세기 동안 막혀 있던 분단의 장벽을 터놓았습니다. 그것은 비록 좁은 통로이기는 했지만, 장차 남북의 1천만 이산가족들이 혈육간의 재회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5천만 겨레 모두가 상호 왕래할 수 있는 민족적인 "신뢰의 가교"로 발전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했습니다.

그것은 실로 분단의 장벽을 넘어선 인도주의의 승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쌍방이 합의한 원칙을 지킴으로써 이 통로를 잘 가꾸고, 튼튼히 다져 나간다면 그것은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 친척들만이 왕래하는데 그치지 않고, 바로 우리 나라의 평화 정착과 민족 통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래하였던 "서울과 평양간의 통로"는 단순히 남북적십자회담만을 하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보다 차원 높은 민족적 화해를 촉진시키기 위한 통로로서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 우리 남북적십자인들은 엄연한 합의사항과 약속이 잘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스스로 닦아 놓은 길을 오랫동안 왕래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곳 판문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회의마저 계속 공전을 거듭함으로써, 그 길이 언제 또 다시 열리게 될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회담의 정체 상태는 우리가 추구했던 당초의 목적에 어긋날 뿐 아니라, 쌍방이 합의한 원칙에도 부합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쌍방간의 합의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제8차 본 회담을 하루 속히 서울에서 개최해야 하며, "서울~평양"왕래를 재개함으로써, 중단된 남북 대화를 무조건 조속히 정상화하고, 상호 신뢰의 길을 다지며, 또한 넓혀 나가야 하겠습니다.

둘째는, 남북적십자회담의 목적과 임무와 책임을 명심하는 것입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남북적십자회담은 남북으로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들을 찾아 주는 것을 기본 목적으로 삼고 있으며 쌍방이 합의한 본 회담 의제에도 명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이 숭고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는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남북적십자회담에 임하는 태도는 마땅히 적십자 본연의 자세를 갖추고 인도주의의 정도를 밝아 나가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사회적 전제 조건들을 앞세워 문제 해결을 기피할 것이 아니라 무조건 조속히 이산가족 문제를 실질적으로 토의 해결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남북의 상이한 체제와 이념에서 야기되는 정치 문제나 사회문제 또는 군사 문제를 다루는 회담이 아닙니다. 남북 간의 정치, 사회, 군사 문제는 7·4 남북 공동 성명에도 명백히 밝혀져 있는 바와 같이 마땅히 그것을 다루어야 할 회의체가 남북간에 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남북적십자회담은 정치, 사회, 군사적 조건들을 초월하여 남북의 이산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인도적으로 덜어 주는 데 전력을 다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남북적십자인들의 대화가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과 동포애를 지침으로 원만히 잘 진행되어 간다면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한 분단의 장벽도 얼마든지 극복될 수 있으며, 오히려 인도주의적 대화가 그러한 장벽을 하나 하나 실질적으로 해소시켜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오늘의 현실을 토대로 하여 남북의 이산가족 문제를 시급히 그리고 인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정치적, 사회적, 전제 조건들을 철회하고 하루 속히 합의된 의제 토의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산가족들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긴급을 요하는 문제와 실현하기 쉬운 문제부터 하나 하나 해결함으로써 경험과 신뢰의 기반을 쌓고, 사업을 점차 확대하여 나가는 것이 능률적이며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측은 지금까지 이와 같은 적십자 본연의 자세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해서 모든 문제를 현실적이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힘써 왔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이 제의한 바 있는 "쌍방 적십자 주관하의 심인 사업 방식"을 비롯하여, "노부모 문제의 우선적 해결 방안", "이산가족 성묘 방문단의 상호 교환" 그리고 "이산가족 사진 교환"들은 모두 남북의 상이한 체제나 정치적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언제 어디서나 실천할 수 있는 인도적 사업이며, 남북의 이산가족 당사자들도 한결 같이 요구하고 있는 긴급한 사업들입니다.

우리측이 제의한 이와같은 인도적 사업들이 실제로 전개된다면, 1천만 이산가족들의 자유로운 남북 왕래와 더불어 남북간에는 인적, 물적 교류도 점차 확대될 수 있으며, 오해와 불신을 제거하고 상호 이해와 신뢰를 회복하는데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국제 사회의 전반적 조류는 모든 국가들이 이념과 체제를 초월하여 문호 개방과 상호 협력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변화와 발전은 결국 모든 나라들이 무모한 폭력과 이념적 대결을 배격하고 발전과 평화를 지향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나라는 일찍이 이같은 국제 사회의 객관적인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세계 모든 국가들과의 문호개방 정책을 채택하고, 특히 경제, 문화 분야에서부터 교류와 협력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이미 세계 모든 나라와 우편 통신망을 유지하고 서로 소식을 교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오직 북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 세계 흩어진 가족, 친척들과 언제 어디서나 서로 안부와 소식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지난해 추석 명절을 기해서 시작된 조총련계 재일 동포들의 모국 방문은 금년 구정 때에 만 해도 3,000여명에 달하였으며, 수십 년만에 자기 고향과, 혈육을 찾는 감격적인 행렬은 지금도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이 30년 이상이나 본의 아니게 조국과 혈육을 등지고 살아 온 사람들로서 지금까지 마음 속으로 갈망해 오면서도 정치적 방해와 허위 선전에 속아서 한번도 모국 방문을 이루지 못한 우리 동포들입니다.

그들은 조국과 혈육에 대한 정을 더 이상 달랠 길 없어 "이젠 죽어도 고향에 가서 죽겠다"는 결심으로 기만과 협박의 굴레를 벗어나 조국으로 되돌아 오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맞이하는 조국 대한민국의 품속은 너무도 따뜻하고 자랑스러웠으며 그리운 가족, 친척들과의 상봉은 그야말로 감격과 기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고향을 잃은 실랑민도 아니며 이산가족도 아닙니다. 조총련계 재일 동포들도 이제 는 뗏뗏이 내 조국, 내 고향을 가진 우리의 동포이며 아무런 장벽도 없는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재일 동포들의 모국 방문은 비인도적인 협박과 회유, 납치와 보복 등 조총련의 일부 망동 분자들에 의한 조직적인 방해 속에서도 지금 계속 불어나고 있으며 이미 고국을 방문하고 돌아간 조총련계 재일 동포들의 수는 5,00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체제와 이념보다 더 소중한 것이 바로 "혈육의 정"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정치를 초월하는 인도주의를 과시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누구도 조국과 혈육을 찾아오는 재일동포들의 앞길을 가로막을 수 없습니다. 그들의 모국 방문을 가로막는 것은 "혈육의 정"을 가로막

는 비인간적 비인도적 처사이며 그러한 반민족적 민족분열 행위는 하루속히 중지되어야 합니다.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자유로운 모국 방문은 이산가족 문제의 인도적 해결을 촉구한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의 그동안의 주장이 얼마나 정당하고 합리적이었는가를 명백히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정치적 사회적 "조건 환경" 때문에 인도주의 사업을 실시할 수 없다는 주장이 얼마나 사리에 맞지 않는 억지 주장인가를 구체적 사실로써 입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직 회담을 지연시키기 위한 궁색한 구실에 불과 하다는 것을 아울러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 해외의 여러 신문 방송들도 우리 재일동포들의 모국 방문에 대해서 "정치를 넘어선 인도주의의 승리"라고 보도하면서 대한적십자사가 추진하고 있는 남북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 재일동포 사회에서부터 그 활로가 열리게 되었다고 논평하고 있습니다.

귀측도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처럼 국토가 분단되어 있는 동독과 서독은 벌써 오래 전부터 정치를 초월해서 이산가족의 재회문제를 인도적으로 해결하였으며, 서방 세계와 공산국가간에도 이른바 "헬싱키 선언" 이후 인적 교류의 증대가 약속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어디를 막론하고 인도주의가 있고 혈육의 정이 통하는 곳에는 국경도 열리고 정치적 이념적 장벽도 허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곳이라야 정말 사람이 사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북의 사태 발전은 이와 같은 바깥 세상의 흐름과는 반대로 극도의 긴장 상태가 조성되고 있으며, 혈육의 정을 갈라놓는 인위적 장벽은 좀처럼 걷히지 않고 더욱 두터워 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7·4 남북공동성명 정신에 입각해서 탄생한 남북조절위원회는 귀측 당국자들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중단되었고 1천만 이산가족들의 고통을 인도적으로 풀어주기 위한 남북적십자회담도 귀측의 이른바 "정치적, 사회적 전제조건" 때문에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남북대화 이후에도 귀측 당국자들이 계속 추구하고 있는 이른바 "남조선 해방", "남조선 혁명"이라는 무모한 폭력노선과 "4대 군사노선" 때문에 남북간의 군사적 긴장 상태는 더욱 격화일로에 있습니다.

귀측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른바 "해방"이나 "혁명"과 같은 시대 착오적인 논리로 폭력과 전쟁을 합리화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어떠한 도전도 물리칠 수 있는 강력한 국방력과 국민 총화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민족이 함께 생존하고 번영하는 길은 체제와 이념의 차이를 초월, 남북이 서로 대화를 통하여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이 땅에 평화를 정착시켜 조국의 자주적 평화적 통일을 이룩하는 것입니다.

우리 남북적십자인들이 이와 같은 평화 정착과 통일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길은 하루속히 제8차 본 회담을 서울에서 개최함으로써 이미 닦아 놓은 "서울~평양간의 통로"를 다시 열어놓는 것이며, 5천만 동포의 간절한 소망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루속히 남북으로 흩어진 가족들과 친척

들의 고통을 인도적으로 덜어주는데 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대표단은 금년이야말로 1천만 이산가족들에게 반드시 재회의 기쁨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남북적십자회담의 정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하여 귀측의 호응이 있기를 촉구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첫째: 남북간의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민족적 신뢰를 회복하는 노력의 일환으로서 귀측은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 방문사업에 대한 일절의 방해 행위와 비방 증상을 중지할 것

둘째: 귀측은 쌍방이 합의한대로 서울에서 제8차 본 회담을 하루속히 개최함으로써 폐쇄된 "서울~평양간의 통로"를 다시 열 것

셋째: 본 회담 의제 토의를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진전시키고 "노부모 사업", "성묘 방문단 교환" 등 긴급하고도 용이한 인도주의 문제의 해결에 조속히 호응할 것.

나는 우리측의 이와 같은 정당한 주장들이 이 실무회의에서 진지하게 토의되기를 바라며, 귀측의 긍정적인 호응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 제3부 그 밖의 남북관계 소식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성묘 방문:

일본서 메아리 친 인도주의의 개선 추석·구정에 5천 재일동포 성묘귀향

『한국에서 지난 20일은 추석이였다. 일본의 「분」이나 「피안」 절 때처럼 한국 사람들은 추석이면 가족이 모여 조상의 산소에 성묘를 한다. 그런데 금년에는 예년에 없던 광경이 더 해졌다. 일본으로부터 오는 성묘객 가운데는 8백여 명의 「조선」적 사람들이 섞여 있었던 것이다.

64만 명의 재일 「한국」·「조선」인들은 조국의 분단을 반영하여 「한국」과 「조선」의 2개의 적으로 나뉘어서 서로 눈을 흘기며 살아 왔다. 전자는 「남」의 후자는 「북」의 체제를 선택했던 것이다. 그런 가운데 금년 봄부터 한국정부는 「조선」적의 사람들에게도 문호를 열었다. 아무런 조건도 없다는 부르짖음에 호응해서 이미 추석전에 3백여 명이 고향의 땅을 밟고 밟았다.

이들이 일본을 출발하기 전에는 많은 얘기가 있었다. 『가면 일본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협박도 있고 해서 마치 인당수에 몸을 내던지는 심청이와 같은 결심으로 비행기에 오른 사람도 많았다고 들린다. 이렇게 해서 김포공항에 도착한 한 사람인 59세의 한 부인은 79세의 모친의 출영을 받았다. 34년만에 만나면서도 딸의 얼굴을 알아 본 어머니는 『이게 정말 꿈이 아니냐』라면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한국의 신문들은 전하고 있다.

고향에 돌아간 이들은 그들 스스로의 눈으로 한국의 참 모습을 보았다. 그들이 본 광경은 일본에서 듣던 것과는 다른 별세계였다. 일본이, 미국이, 소련이, 중국이 천국이 아닌 것처럼 한국도 천국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결코 지옥도 아니었다. 남과 같이 공장이 서고, 농촌이 전화되고, 풍족한 생활을 위해 모두가 노력하는 그러한 사회였다.

이러한 당연한 사실을 깨닫는데 「비상한 결심」을 필요로 하게 하는 지금의 일본이란, 재일 「조선」인들에게는 확실히 기묘한 세계이다. 소련에 사는 소련국적의 「조선」인들도 서울에 지하철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적어도 일본에 살고 있다면 보다 정확한 사정을 알고 있어야 할 것이나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다.

일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기성품의 지식에 기성품의 관념을 포괄 조선문제 논의가 횡행하고 있는 것이다. 현실을 바로 보지 않는 사고와 행동이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위험한 것인가는 이미 30년 전에 몸으로 체험한 일이 있는데도 말이다.』-1975년 9월 24일 일본 매일신문 「여록」란

아마도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성묘 방문과 관련된 내외의 보도 가운데 위에 소개된 일본 매일신문의 1975년 9월 24일자 「여록」기사는 저간의 사정을 가장 간명하고도 정확하게 그려 낸 기사였던 것 같다.

일본에 있는 60여만의 재일동포들은 그 대부분이 일제하에서 징용이라는 이름아래 강제로 끌려간 뒤 해방이후에도 귀국의 기회를 놓쳐 일본에 정착한 실향동포들로 대부분이 고향을 대한민국에 두고 있다. 1945년의 해방은 이들 재일한국인사회를 2개의 대립된 진영으로 갈라 놓았다. 재일거류민단과 조총련이 그것이다.

재일한국인들의 불우한 사회적 환경, 즉 일본인들에 의한 민족차별과 법적 지위의 불안 및 경제적 빈곤, 장기간 지속되는 한일간의 비정상적 관계와 역불급으로 인한 본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 결여 등은 재일한국인사회안에 조총련이라는 이상세포조직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요인이 되었다. 선전·선동과 조직을 장기로 삼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은 일본 좌익세력의 공공연한 비호와 협조 하에 이들 재일한국인들의 불우한 사회환경을 집요하게 파고 들어 가서 한국은 물론 일본에 대한 반체제집단으로 조총련의 조직을 부식하는데 혈안이 되어 왔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은 특히 조총련을 적화통일의 달성을 위해 부단하게 망상을 가꾸어 온 이른바 「남조선 혁명」, 즉 폭력에 의한 대한민국의 전복을 추진하는 중계 내지 우회공작기지로 육성해 온 것이다. 바로 이러한 도양 속에서 그동안 수없이 발생한 일본을 거점으로 하는 간첩사건들이나 1974년 8월 15일 대통령 영부인 고유영수여사의 생명을 앗아간 문세광사건 같은 것들이 움모되고 준비되고 실천에 옮겨졌다.

한번 조총련의 울가미 속에 들어간 재일동포들은 그 조직의 거미줄에 얽매어 그들의 핏줄의 고향이 있는 대한민국과의 끊을 수 없는 인연을 스스로 단절해야만 했다. 조총련은 그들에게 본명이 김성주인 지금의 김일성이 전설적인 항일 독립운동가인 김일성과 동일인물이며 6·25 전쟁은 대한민국이 일으켰고 오늘의 북한은 지상낙원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기아와 빈곤, 실업과 수탈이 판을 치며 자유라고는 없는 암흑사회라는 등 엄연한 사실을 완전히 전도시키는 세뇌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매일신문이 보도한 것처럼 사실을 그들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데 조차 「비상한 결심」이 필요한 그러한 풍토를 조성해 놓은 것이다. 그들 가운데 근 10만 명은 노동력부족으로 격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북한공산주의자들의 감언이설과 강제에 의하여 「복송」되어 강제노동에 투입되었다. 한번 간 그들의 발걸음은 돌아 올 수 없는 불귀의 발길이며 일단 「복송」된 후 그들의 운명은 아무도 모른다. 이들 가운데는 한국인 남편과 「복송」된 이후 일본의 친정 가족들과 왕래는 물론 서신교환조차 못하고 있는 6천여명의 일본인 처들이 있어 단장의 사연이 되고 있다.

광복 30주년이 되는 1975년에 들어 와서 대한민국 정부는 이러한 조총련계 재일동포들로 하여금 인간다운 생활을 되찾게 하기 위한 극적인 조치를 취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75년 추석을 기점으로 하여 그들의 전향여부와 상관없이 신청하는 모든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성묘모국 방문을 허용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잃었던 고향을 되찾고 가족·친척의 품안으로 되돌아 올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인도적 조치에 대해 조총련은 북한으로부터의 엄격한 지령아래 격렬한 방해·저지공작을 전개했다. 북한은 일본·북한간을 왕래하는 비정기연락선 「만경봉」 호편에 수십명의 정치공작원을 일본에 파견하여 조총련의 저지 공작을 현지에서 독찰했으며 조총련은 전조직에 비상을 걸고 중앙간부들을 각 지방에 보내는 한편 조총련계 각급 학교들을 임시 방학시키고 학생들을 동원하여 방한 예상자의 조사·회유·설득·선심공세 협박과 가정방문과 농성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하여 조총련계 동포들의 방한을 방해 저지하는데 전력을 기울였다. 조총련은



처음에는 방한예상자들에게 『한국에 가면 바로 체포되어 두번 다시 일본 땅을 밟지 못한다』는 말로 겁을 주어 그들의 번의를 설득했다. 일단 방한했던 조총련계 동포들이 무사히 일본에 귀환하여 그러한 말의 기만성이 드러나자 이번에는 『단체여행이니까 무사했지만 단독으로 가면 붙들린다』 『두번째까지는 놓아 보내지만 세번째부터는 못돌아 오게 한다』는 터무니 없는 말로 이들의 발목을 붙들려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조총련은 그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방한했던 조총련계 동포들에게는 조총련계 신용조합인 「조은」을 통해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내년까지는 통일이 될 터이니 고향에를 가더라도 내년까지만 기다렸다 가라』고 회유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방해와 저지에도 일단 이들 재일동포들의 마음 속에 불붙기 시작한 망향의 불길을 끌 수는 없었다. 1976년 9월 20일의 추석을 전후해서 도합 2천여 명의 조총련계 동포들이 모국을 다녀갔으며 1976년 1월 31일의 구정을 전후해서는 도합 3천여 명이 다녀갔다. 일단 물길이 터진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귀향대열은 앞으로도 계속될 뿐 아니라 그 수도 급격하게 증가될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들 재일동포들의 성묘귀향을 돕기 위한 모금운동이 벌어진 결과 9억3천만원이 본국에서 모금되어 1976년 1월 21일 박정희대통령에게 전달되었으며 박대통령은 즉석에서 이 돈을 관계당국에 보내면서 『정성 어린 이 성금은 넉넉지 못한 재일동포들이 모국을 방문하는데 공정하고 정확하게 나누어 도와주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또 「조선」 적으로부터 「한국」 적으로 전향하고자 하는 재일동포들의 취적·정정 등 호적사무를 돕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추석과 구정을 기해 모국을 찾은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에서의 체험은 경탄 그것이었고 동시에 회한 그것이었다. 이들은 2주일의 모국 방문기간중 서울과 부산시내 관광과 함께 아산현충사, 안양기아산업자동차공장, 경주의 각종 사적, 포항종합제철, 울산현대조선 등을 시찰했으며 1주일엔 각자 개별 행동으로 고향을 찾아 성묘와 함께 오랜동안 헤어져 살았던 고향의 가족·친척·친지들과 참으로 즐거운 재회의 한때를 가졌다. 이들은 하나같이 일본에서 조총련으로부터 교육 받았던 것과는 달리 모국에서의 생활이 험벗고 가난한 암흑사회가 아니라 산업구조가 고도로 현대화되고 자유롭고 명랑한 개방사회임을 목격하고 경탄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년의 지나간 세월을 조총련의 거짓 선전에 속아 살아왔다는 허무한 사실의 깨달음 앞에서 속절없는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이들의 고향을 찾는 발길은 하나 같이 30년 또는 그 이상의 단절을 뛰어 넘고 있었으며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1945년의 감격의 해방을 이제서야 맞이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재일한국인사회내에 그어진 38선을 뛰어 넘어 왔으며 그런 뜻에서 그들의 마음 속에서는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이 기다려지기도 했다.

○...조총련경도상공회 부회장 노길부씨가 난생 처음으로 찾는 귀향 발길은 순탄치가 않았다. 조총련계의 극렬한 방해공작 때문에 노씨는 몰래 혼자서 도망하듯이 비행기에 올라야 했다. 【조선일보 제공】

30년 또는 40년의 단절을 넘어 모국을 찾는 이들의 감회는 어떤 것이었나. 몇몇 본인들의 입을 빌어 그 감격을 들어보자

- 노길부 (38세, 조총련경도상공회부회장, 경도조은신용조합총대, 광양산업경영, 고향은 경남 김해군 생림면 금곡리, 「김일성훈장」 2개 · 조총련감사장 3회수령, 조총련의 방해 때문에 1976년 1월 27일 단독 입국)

『일본에서 들던 것과는 고국의 모습이 너무나 달라 마치 꿈을 꾸는 것 같다. 일본의 가족에게 모국이 조총련의 선전과는 달리 크게 발전했으며 자유로운 모습에 감탄했다고 전화로 알렸다. 처음 찾는 내 조국이지만 이곳에 나의 뼈를 묻고 싶다.』 <1976년 1월 31일자 한국일보 · 조선일보>

- 권중석 (56세, 조총련계 각급학교 24년재직, 동경도부생시웅천정 거주, 북한 「국기훈장」 수령, 고향은 전북)

『조총련은 언필칭 민주주의 민족교육을 운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변조된 김일성 유일사상과 적화통일 교육에만 전념하고 있다. 이번에도 조총련계동포들은 한국에 입국하는 즉시 구금한다는 조총련의 허위선전에 불안한 마음으로 비행기에 올랐다.』 <1976년 1월 31일자 조선일보>

○...수십 개의 「훈장」, 그리고 어떠한 협박도 인간의 길을 막을 수 없었다. 자가현의 유력한 조총련간부였던 이형식씨가 고국에 돌아와 노모(좌) 및 부인(우)과 눈물의 해후를 하고 있다. 【서울신문 제공】

- 이형식 (59세, 자가현조은신용조합부이사장, 청목신용조합부이사장, 자가현근강팔번시 거주, 「김일성훈장」, 「국기훈장」, 기타 「표창」 「훈장」 등 도합 14개 수령, 고향은 경북영일군 청하면)

『사람이 부모나 친척을 찾는데 정치가 개입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이번 구정 귀성단 방문은 조총련이 크게 놀라 방해 공작을 하는 바람에 많은 동포들이 오지 못했다. 조총련측에는 이제 명분이 없다.』 <1976년 1월 28일자 코리아 · 헤랄드, 서울신문> 『나는 이제 한국인이다. 일본에 돌아가서는 조총련의 방해공작으로 조국을 찾지 못하고 있는 동포들에게 조국의 비약적인 발전상을 널리 전하겠다.』 <1월 30일자 서울신문>

- 권홍 (20세, 동지사대학 경제과 2학년)

『일본의 국 · 중 · 고교를 나온 우리는 국사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옛 조상들의 이야기는 전혀 모르고 있다. 이번 여행길에서 자랑스러운 옛 조상들의 영웅담과 빼어난 유물을 보고 놀랐다. 되도록이면 나이 많은 분들을 초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에 접할 기회를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다.』 <1976년 1월 30일자 신아일보>

- 고평훈 (73세, 대판시 생야구 거주)

『서울은 생전 처음 와 본다. 조총련의 협박을 많이 받고 망서리기도 했으나 조국이 발전한 모습을 보니 역시 오기를 잘했다.』 <1976년 1월 25일자 한국일보>

○ 강능수 (60세, 대판시 생야구 거주, 고향은 제주도 서귀포)

『나 같은 조총련계 사람에겐 한국은 건너 갈 수 없는 땅, 지척이면서 만리이역이었다. 이제 이렇게 자랑스럽게 머무는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 가서 주위 사람에게 소식을 전하겠다. 자식들을 모아 놓고 뽕넝만한 고국이 있다는 걸 알려 주어야 하겠다.』 (1976년 1월 26일자 서울신문)

○ 편용덕 (62세, 북구주 거주, 경북청도 출신)

『입국 첫순간부터 조총련의 선전이 모두 허위였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 조국이 이렇게 발전한 줄은 몰랐다. 일본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다.』 <1975년 12월 27일자 서울신문>

○ 심재돈 (55세, 천기시 거주, 식품업, 전조총련분회장, 경남진양군 출신)

『30년만에 고향을 찾은 감격에 아직도 밤잠을 설친다. 직장에서 귀가해서는 고향에서 찍은 사진 앨범을 펴보는 것이 요즘은 생활의 즐거움이다. 서울서 사 온 가곡집도 자주 듣는다. 이럴 때마다 나도 모르게 눈물이 불을 타고 흐른다. 마음놓고 고향의 친지들에게 편지도 쓰고 있다. 고향에 다녀 온 얘기를 이웃의 조총련계 동포들에게 전할 때는 서로 마음의 장벽이 무너져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1975년 12월 4일자 중앙일보>

○ 고창현 (33세, 동경도황천구 거주, 고향은 제주도)

『시골에도 전기가 켜져 있는데 놀랐다. 그리고 모두가 신발을 신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빌딩도 즐비했고 고속도로도 있으며 배도 만들고 자동차도 생산하고 있는데 놀랐다. 그들 (조총련)의 말은 송두리채 거짓이었다.』 <1975년 12월 4일자 조선일보>

이상에 소개된 소감들은 그동안 추석과 구정 성묘를 위해 모국을 다녀간 5천 명에 가까운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이 쏟아 놓은 수많은 소감 가운데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이상에 소개한 몇 사람의 소감은 이번에 정부의 결단으로 문이 열린 조총련계 재일동포 모국방문사업의 의의를 웅변해 주고도 남음이 있다.

당초 고향을 등진 채 살고 있는 이들 재일동포의 문제는 남북에 흩어진 1천만 이산가족의 문제와 함께 남북적십자회담에서 다뤄질 예정이었다. 그러나 1971년에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은 터무니없게도 『남한에는 자유분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른바 「법률적 조건」과 「사회적 환경」의 조성을 선행조건으로 요구하는 북한적십자회측에 의하여 1973년 여름이래 사실상 중단되고 있다. 1975년부터 시작된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방문은 이러한 북한적십자회의 이른바 「조건·환경」 시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엉뚱한 생떼인가를 단적으로 입증해 준 것이다.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방문이 본격화되자 북한 공산주의자들은 예상했던대로 발악적이고도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의 평양방송은 1월 26일 『인도주의를 내걸고 재일동포들에게 강요하는 이른바 고향방문은 비열한 정치적 모략행위』라고 역지를 부리면서 『우리 모두

가 36년 전 적의 흉탄이 빗발치는 속에서 자신의 몸으로 수렁을 막아 보위한 김정숙여사 (김일성의 전처·김정일의 생모로 1949년 9월 22일 출산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처럼 조총련 조직을 목숨으로 지켜 나가야 한다.』(1월 29일자 동아일보·경향신문)고 조총련 조직의 동요 진정을 호소했다. 또한 1976년 2월 12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적십자회담 제15차 실무회의에서 대한적십자사 대표들이 북한적십자회 대표들에게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성묘방문에 대한 북한측의 방해중지를 요구하자 북한적십자회 대표들은 『귀측은 마치도 조총련 산하 동포들이 이른바 고향방문으로 「남조선」을 간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한 날조극이다... 최근 이른바 고향방문으로 갔던 동포들 가운데 조총련산하 동포는 하나도 없고 모두가 민단체 사람이거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러한 행위는 모략과 사람잡이에 이골이 난 불한당들만이 할 수 있는 추악한 사기협잡행위이다』라고 길길이 뛰었다.

그러나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억지 생떼는 이미 들통이 난지 오래임은 물론이다. 조총련의 한 간부는 그의 4촌동생이 1975년 추석성묘단에 참가하여 방한하려 하자 처음에는 『한국에 들어가면 간첩으로 몰려서 잡혀 죽는다』고 만류하다가 이 만류가 통하지 않자 이번에는 『내가 가면 내가 죽는다』고 읊소를 했다. 그러나 조총련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문제의 4촌동생 임용택씨 (27세, 천기시 중도정 거주, 요식업, 고향은 경남 남해군 창선면)는 『제 고향을 찾겠다는데 친척이 어떻게 그 길을 가로막느냐』고 만류를 뿌리치면서 그래도 『가면 잡혀서 죽는 것이 아니냐』는 일말의 불안감이 가지지 않은채 비행기에 올랐다. (1975년 12월 4일자 조선일보) 그러나 그는 무사히 안전하게 고향방문을 끝내고 일본으로 돌아 갔고 『조국에 영주귀국해도 내가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는 누님의 아들인 정경일씨 (27세, 천기시 대도정 거주)를 설득하여 모국방문을 시킴으로써 「그와 모국방문 소감을 함께하는 친척동지를 갖게 되었다. (1975년 12월 4일자 중앙일보)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방문은 일본은 물론 전세계의 주요 매스·컴들이 인도주의의 일대 고가로 이를 보도하여 이제는 세계적인 뉴스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번 조총련계 재일동포들의 모국방문이 지니는 진정한 의의는 아이러니컬하게도 일본 신나현 일·조우호협회회장이자 일·조의원연맹회장으로 「북송」이라는 이름아래 수많은 재일동포들을 죽음의 가교로 내 모는데 일역을 담당했던 자민당 소속 현의회의원 반진조환씨 (68세)의 말에 잘 살아 있다. 반전의원은 『9만여 명의 재일조선인들이 북송된 후 그동안 15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나는 네 차례나 북한을 방문했으나 그곳에서 북송된 조선인들은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다. 이것은 그곳에서의 그들의 생활이 비참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되어 가슴이 아프다. 참다운 의미에서의 인도주의 사업은 이번 한국 정부의 모국방문사업이라고 생각된다.』(1975년 12월 3일자 경향신문)라고 슬회하고 있다.

더·타임스가 본 김일성 우상화

북한 독재자를 「인류의 태양」으로 분포 관제언론, "「김사상」이 어획량을 늘렸다"

<오늘날 북한지역에 존재하는 김일성개인독재체제의 오명은 이미 세계공지의 사실이다. 북한에서 그동안 진행되어 왔고 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김일성우상화 즉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의 내용은 광적일뿐 아니라 다분히 무신적 지경에 이르고 있으며 그 때문에 심지어는 공산세계안에서도 오늘날 북한의 체제는 이미 「공산주의체제」가 아니라 「김일성 개인의 왕조」라는 비평이 나오고 있다. 김일성은 자신의 신격화를 위해 스스로의 이력을 날조했을뿐 아니라 그의 조상의 행적 또한 터무니없이 변조하여 북한판 「용비어천가」를 창작해 냈으며 최근에 와서는 그의 아들을 후계자로 옹립시키는 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김일성우상화의 광태를 촌탁하는 하나의 자료로서 본 「남북대화」는 제5호에 북한노동당의 「정치이론기관지」 「근로자」 제4호 (1974년 4월호)에 게재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우리 인민의 끝없는 영예와 행복」이라는 제목의 논문가운데 한 대목을 인용하여 북한지역 주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쳐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것이 더없는 영광, 최고의 행복, 가장 신성한 의무』이고 『수령님을 절대화하고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건결히 옹호·보위하면서 수령님의 교시를 무조건 끝까지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 드려야』하며 또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신념을 갖어야 한다』고 교육되고 있음을 소개한바 있다. 지난 2월 4일 세계적으로 저명한 영국의 일간지 더·타임스는 동지 동경특파원 피터·헤이즐허스트의 기명기사로 북한에서 벌어지는 개인우상화의 광태를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다음은 더·타임스기사 전문이다.>-편집자주

북한의 방자한 김일성은 그가 구축하고 있는 개인우상화에 있어서는 스탈린이나 모택동주석 또는 심지어 레닌이나 맑스까지도 능가하려 들고 있다.

북한노동당의 당기관지에 의하면 시대조류의 변화에 조심스럽게 영합하는 김일성 「동지」는 이제 『동서고금을 통해 그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혁명사상가이며 인류의 태양』이라 한다.

평양의 공식어록에서 이제 「공산주의」란 말은 사라지고 있으며 그대신 「김일성주의」라고 공식으로 명명된 주의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당국이 지배하는 보도기관들은 「김일성주의」에 의해서 전세계의 수억 인민들이 해방되었으며 또한 이 주의에 의해서 북한은 전세계에서 가장 선진적인 교육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독재적 지도자를 신격화시키기 위하여 북한의 The People's Korea(「인민의 조선」) 최근 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 있다. 『세계의 모든 인민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게 영원한 감사를 드리고 한때 억압받고 학대받던 지구상의 수억 인민들로 하여금 역사 속에서 그들의 위치를 차지하게 인도한 「위대한 수령」 「인류의 태양」에게 존경을 보내고 있다... 「혁명의 영재」이며 「뛰어난 사상가」이며 「이론가」이며 「무쌍의 전설적 영웅」인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여 감사합니다』라고.

북한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십만어의 과대망상적인 이념문학에 담긴 단어 한마디 한마디는 거의 예외없이 김 「동지」에 관한 거창한 표현으로 끝을 맺고 있다. 그것은 「경애하는 위대한 수령」 「온정어린 나라의 아버지」 「경애하는 수령이며 혁명의 영재」라는 것 등등이다.

The People's Korea는 예컨대 『작년에는 「수령님」의 「탁월한 사상」의 「인도」 때문에 어획량이 많아 졌고 시멘트생산량이 목표량을 초과했으며 공업생산이 18퍼센트나 늘어났다』는 식의 주장을 늘어놓고 있다.

김일성을 신격화시키려는 수작의 대표적인 예로 북한노동당중앙위원회가 하는 말을 인용해 보자. 그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오늘날 「공화국북반부」에서는 「김일성주의」의 기치아래 오로지 「위대한 수령」 하나만을 중심으로 전당과 전사회의 그 어느 누구도 꺾 수 없는 단결과 단합이 성취되었다.』

『전당과 나라 전체, 그리고 전인민이 마치 오로지 「위대한 수령」의 혁명적 사상에 따라 숨쉬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하나의 생명체처럼 굳게 뭉쳐 있다.』

『이것이야말로 동서고금을 통해 그 전례가 없으며 오직 「김일성주의」의 나라에서만 가능한 높은 수준의 사상적 단결이 인류역사상에 이루어진 산증거이다.』 운운.....

다른 공산국가들과는 달리 최근 수년간 북한은 데일리·엑스프레스, 더·타임스, 뉴욕·타임스와 같이 일반적으로 공산권에서는 적대시되고 있는 미국과 서구라파 신문들에 김일성의 「사상」을 「유료광고」로 내기 위하여 막대한 액수의 외환을 사용하고 있다.

북한소식에 정통한 관측통들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의 동기는 서방세계를 「김일성주의」로 개종시키려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광고」내용을 거꾸로 북한주민들에게 알려 주는데 주목적 이 있는 것임을 알고 있는데 문제는 북한주민들은 이들 「광고」 기사를 가지고 마치 서방세계 신문들이 김일성의 「사상」을 크게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들이 본 북한의 외교행각 :

한국과의 긴장완화 노력은 전혀없어 난폭한 외교행태로 도처에서 말썽만

<1971년 남북대화의 시작은 호전적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양의 가족을 입혀 주었다. 양 가족속의 늑대격이 된 북한공산주의자들은 때마침 밀어닥친 국제정세의 변화, 즉 중공의 유엔참여와 신생 제3세계 국가군의 급격한 양적 팽창 등에 편승하여 분에 넘친 국제무대 진출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뜨거운 외교대결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이 이러한 외교진출을 통해 추구하는 목표는 물론 통상의 의미에서 외교의 개념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북한공산주의자들의 경우 외교는 『「남조선혁명」을 위한 국제적 지원세력의 확보』에 목적을 둔 것으로 『혁명기로서로서의 북한에서의 사회주의체제 완성』 『남한에서의 혁명세력 지원』 등과 함께 소위 「3대혁명역량」의 하나로 오로지 대한민국의 적화를 추진하는 수단으로 구실하는데에서만 그 의의가 인정되는 것임은 물론이다. 그러면 밖에서 벌이고 있는 북한의 외교행각의 실태는 어떠한가. 이에 대해서는 영국의무성의 해외공보기관인 「대영제국 홍콩지역공보처」가 제작·배포하고 있는 월간 「아시아분석」의 1975년 12월호가 「북한의 외교」라는 제목으로 전반적인 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다음은 동지 12월호에 게재된 문제의 기사전문이다> - 편집자 주

『북한은 보다 광범위한 외교망을 구축하고 김일성을 세계적 지도자로 분장시키려 하고 있지만 남한과의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징후는 전혀 없다』

1975년중에 북한은 외교관계를 확장하고 유엔에서의 지지를 얻는데는 약간의 성공을 거두었지만 그들이 사용한 외교의 수법은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특히 호주의 당시 외상 윌리시 상원의원은 1975년 11월 11일 『평양정권은 평양과 수교하는 나라들은 어느 나라든지 반드시 평양정권의 대남한정책에 추종해야 한다고 고집하고 있다』고 개탄한바 있다. 주호북한대사관의 철수와 주평양호주공관의 추방에 언급하면서 윌리시 외상은 그의 정부는 이미 당초 북한과 수교를 결정했을 때 『북한과 수교를 한다고 해서 호주의 정책을 바꾸거나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위축시킬 생각은 없음을 명백히 한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1974년에는 북한정권도 이러한 호주정부의 입장 천명을 양해했었다고 말하고 『그러나 북한만이 알고 있는 무언가 그 나름의 이유 때문에 이것을 1975년에는 양해할 수 없었던 모양』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북한의 행동은 화해의 정신에도 부합되지 않거니와 한반도문제의 평화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었음은 물론이다.

11월 6일 북한외교부는 주평양호주대리대사에게 주평양호주대사관이 『조직적인 전복활동』을 벌여왔으며 또한 『끊임없이 우리의 사회주의체제를 중상·비방하고 우리의 사회질서를 문란시키고 있다』고 비난하는 「각서」를 수교했다. 윌리시외상은 북한측의 주장에 의하면 불과 3명의 직원을 가진 공관이 북한이라는 고도로 통제된 사회에서 겨우 일곱달의 기간동안에 「각서」에서 비난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활동을 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라고 비꼬았다. 북한측의 주장은 너무나도 어처구니가 없는 거짓말이기 때문에 과연 그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관습에 따라 행동할 용의가 있으며 또 그렇게 할 능력이 있는가에 대한 심각한 의문을 제기해 주고 있다. 호주정부는 또한 주호북한대사관이 『협박과 공갈』을 당했다는 북한측 주장을 일소에 붙였다.

북한의 이러한 행동은 유엔에서의 한국문제에 관한 표결때 호주정부가 북한에 불리한 투표를 하리라고 예상한데서 취한 조치로 짐작된다. 10월 22일 주유엔호주대사는 유엔총회에서 발언을 통해 호주정부는 총회표결때 한국지지결의안에는 찬성표를 북한지지안에는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예고한바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주일후 정치위원회에서의 표결때 호주는 북한지지안에 기권표를 던졌다. 그러나 11월 13일자 캔버라·타임스보도에 의하면 이미 이때 북한은 호주에서 공관을 철수할 모든 준비를 끝내놓고 있었다.

11월 18일 유엔총회는 1953년의 휴전협정이 존속된다는 조건하에 1950년 북한의 무력남침을 격퇴하기 위하여 창설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한다는 내용의 친한결의안을 찬성 59, 반대 51, 기권 29로 통과시켰다. 그러나 총회는 동시에 남한으로부터 모든 외국군을 철수시키고 1953년 휴전협정의 「진정한 당사자」(대한민국을 제외하고 미국과 북한만을 의미하는)로 하여금 휴전협정을 대체할 평화협정을 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도 아울러 채택했다. 이때의 표결결과는 찬성 54, 반대 43, 기권 29표로 호주는 이에 반대표를 던졌다. 런던에서 발간되는 선데이·타임스의 12월 14일자 보도에 의하면 이때 북한의 득표활동이 얼마나 거칠었던지 한 아시아국가의 수석대표는 중공대표단에게 이를 불평했으며 그 결과 북한대표들은 사과를 한 일이 있다.

유엔 깃발아래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의 철수는 북한과 그의 우방들이 오랜동안 갈망해 온 것으로 아마도 그들은 그렇게 되었을 때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할 경우 남한보다는 북한이 훨씬 빠른 시간안에 맹방들로부터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뿐만 아니라 미국대표가 지적한 대로 주한미군의 법적 지위는 1954년에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근거한 것이며 따라서 유엔에서 다루어질 문제는 아니다.

## <2개의 한국>

지난 2년동안 북한은 미국과 직접 대화할 것을 주장함으로써 한국을 소외시키고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약화시킬 것을 획책해 왔다. 같은 방식으로 북한은 한편으로는 한국과 함께 유엔의 산하기구에는 가입하면서도 1973년 6월 23일 박정희대통령이 제의한 남북한의 동시유엔가입에는 반대해 왔다. 1975년 8월 31일 김일성은 일본공동통신주필에게 『유엔의 전문기구나 기타 국제기구에 가입하여 「반제투쟁」에 협력하는 것과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하는 것은 전혀 별개문제』라는 궤변을 전개했다.

1975년 9월 22일 「키신저」 미국무장관은 유엔총회에서 연설에서 한국과 미국은 휴전협정의 존속과 기타 긴장완화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공과 북한이 참가하는 「당사자회의」 소집을 제의했다. 그의 생각은 남북한이 함께 유엔에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비록 한국의 외무장관은 9월 21일자 유엔안보리의장 앞으로 보낸 공한에서 한국은 90개 이상의 유엔 회원국과 국교를 맺고 있음을 상기시켰으나 안보리는 한국의 유엔가입신청을 심의하기를 거부했다. 키신저의 「당사국회의」 제안은 나중에 중공외상의 총회연설에서 거부되었는데 교관화의 주장은 『한반도문제는 외세의 간섭없이 한국인민들 자신들에 의하여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남북간에는 아직도 대화의 통로가 유지되고 있으나 성과는 아무 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1972



년에 발족된 남북조절위원회는 1973년이래 중단되고 있다. 한국측은 1975년 7월 남북조절위원회 재개를 위해 부위원장회의를 소집할 것을 제의했으나 북한측은 (7월 14일자 합동통신보도에 의하면) 남한측이 일체의 반공정책을 중지하라는 북한의 요구를 받아 들일 때까지는 상호접촉의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다. 역시 박대통령의 이니셔티브에 의하여 이산가족의 재결합을 목적으로 1972년에 시작된 남북적십자회담의 운명 또한 비슷하다. 사실인즉 남북간의 상호접촉은 이미 북한공산주의자들에게 고민을 안겨 주고 있다. 합동통신 9월 24일자 보도에 의하면 최근 재일거류민단의 주선으로 추석을 기해 모국을 성묘방문한 조총련계 재일한국인들 약 680여명은 『이 이상 더 조총련에게 속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협상에 의한 한반도문제의 해결전망은 평양측의 호전적 태도로 말미암아 더욱 시련이 부닥치고 있다. 1974년 11월과 1975년 3월 남북을 갈라놓는 휴전선비무장지대를 가로지르는 지하터널이 발견되었다. 북한으로부터의 한 귀순자에 의하면 발견된 이 두 개의 터널은 북한이 장차의 기습남침을 위해 차량과 야포까지 수송할 수 있는 규모로 비무장지대안에 구축하고 있는 더 많은 터널들의 일부라 한다. 사이공 함락 직전인 4월에 있었던 김일성의 예고없는 북경방문은 인도지나에서의 공산측의 승리에 고무된 북한이 한반도에서도 무력의 사용을 시도하는데 대한 북경당국의 지원을 얻는데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널리 알려졌다. 김일성은 4월 18일 북경에서 『만일 남한에서 혁명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같은 민족으로 이를 팔장을 끼고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남한의 인민들을 강력히 지원할 것』이라고 호언했다. (북한은 벌써 여러해 동안 남한에서 그러한 폭력사태가 일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김일성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 이른바 「남조선통일혁명당」은 살아있다는 흔적도 남기지 못하고 있다)

김일성은 중공으로부터 고무적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중공인들은 공동성명에서 원칙적으로 김일성의 대남정책을 지지하면서도 그들은 한국의 통일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될 것을 희망했다. 김일성은 중공방문에 이은 외유때도 소련방문은 하지 않았거니와 한반도문제에 대한 태도는 소련도 중공과 비슷했다. 중공은 방문하고 소련은 방문하지 않는데서 나타난 것과 같이 북한이 중·소간에서의 중립을 지양하려는 듯한 움직임은 아마도 북한이 소련의 긴장완화정책을 싫어하기 때문인 것 같다. 중공은 (10월 24일자 신화사통신보도에서) 소련이 『북한의 자주평화통일 구호를 지지하지 않고 서울과의 접촉을 확대함으로써 「2개의 한국」의 존재를 계속하는 것을 고무하고있다』고 비난했다.

5월과 6월에 있었던 김일성의 루마니아, 알제리아, 모리타니아, 불가리아, 유고슬라비아 순방은 아마도 유엔에서의 지지기반 구축이라는 장기적 포석의 일부이기에 앞서 임박했던 비동맹외상회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었던 듯하다. 8월에 리마에서 열린 비동맹외상회의는 한국의 가입은 거부하면서 북한의 가입만을 승인했다. 북한의 최근의 외교적 노력은 비록 아직 한국과의 수교국수에 미치지 못하는 못하고 있지만 그래도 80개국 이상의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열었거나 수교에 합의하는데 이르고 있다.

#### <북한을 기피하는 나라들>

비록 북한은 라틴·아메리카에서 상당한 외교적 진출을 이룩한 듯 하지만 9월 21일자 라·에스

트렐라·드·파나마지는 아마도 혁명과 전복활동의 수출을 기도했던 과거의 북한의 경력때문에 몇몇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은 그들의 나라에 북한의 상주공관을 설치하는 것을 허용하는 데는 주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지는 1966년부터 1970년사이에 북한은 쿠바와 함께 약 1천명의 라틴·아메리카 청년들에게 게릴라전 훈련을 실시했다고 추산하고 있다. 1974년 2월에 북한과 수교에 합의한 코스타리카는 코스타리카에 북한의 상주공관을 설치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으며 그 해 8월에는 코스타리카를 방문한 북한통상사절단의 일부 인원이 『국가주권에 배치되는 모종의 행동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동사절단의 출국을 요구한 일도 있다.

해외에서의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해 북한이 시도하고 있는 또 하나의 노력은 김일성과 북한공산정권의 업적을 찬미하는 유효광고를 외국의 신문에 실는 것이다. 비록 1972년 한국과의 대화가 시작되는 것과 때를 같이 하여 잠시 뜸한 때가 있기는 했지만 이 광고 캠페인은 1969년에 시작되었다. 북한은 이들 광고의 문면을 자칫하면 논설기사와 혼동을 일으킬 수 있게끔 제작하여 이를 유효광고로 내고는 이것을 다시 평양타임스가 인용보도하는 잔피를 부렸다. 인도의회는 1970년 상반기에 북한이 인도내 각 신문에 실은 이러한 광고요금으로 10만 파운드나 되는 돈을 지불했다는 사실을 보고 받은 일이 있다. 197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사이에 북한은 파키스탄내에서만 이러한 광고요금으로 약 55만루피(약 2만8천파운드 상당)를 지불한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고 주간지 이스티클랄이 9월에 보도했다. 북한이 호주와의 관계를 단절하기로 결심한 하나의 이유는 호주정부가 호주신문에 의한 이러한 정치적 광고의 게재를 금지하고 또한 한국에 대해 적대적인 간행물의 배포를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설이 있다.

#### <빛더미속의 북한>

호주는 일본과 몇몇 서구국가들과 함께 북한에 의한 수입대전체불로 골탕을 먹고 있는 나라의 하나이다. 아마도 공산권국가들에 대한 지나친 의존에서 탈피하기 위한 노력으로 북한은 1960년대부터 비공산권 선진국가들과의 교역을 추진해 왔다. 1971년 6개년 계획에 착수하면서 북한은 이에 필요한 기계와 기술은 주로 비공산권 국가에 더욱 더 의존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한 두해 사이에 북한은 아마도 경험부족, 부실경영에 기인하는 과잉발주, 수송장애와 비철금속수출가격의 하락등 여러가지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말미암아 지불연대라는 곤란한 문제에 부닥치게 되었다. 뿐만아니라 소련은 (아마도 중공은 그러지 않았지만) 북한에 공급하는 원유가를 국제시장가격으로 인상했으며 그 때문에 북한은 그들이 수출하는 비철금속과 철광석의 대부분을 소련과 중공에서 수입하는 원유대전으로 충당해야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소련과 중공 그리고 다른 동구권 국가들에게 7억불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으며 1975년 10월에 회의를 가진 비공산권 채권국들에 대한 북한의 채무는 4억3천만불에 이르는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